OPEN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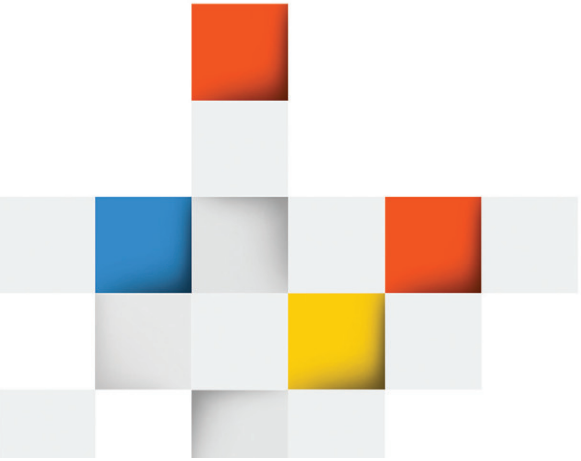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 한국의 사회동향

## Korean Social Trends 2017

http://sri.kostat.go.kr

2017



통계청
통계개발원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7

http://sri.kostat.go.kr

2017

# 『한국의 사회동향 2017』을 발간하며

통계청에서는 국민 생활의 수준을 가늠하고, 사회 각 분야별 주요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보고서인 「한국의 사회동향」을 2008년에 이어 열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활용도 높은 보고서로 자리매김 한 「한국의 사회동향」은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의 총 11개 영역의 주요 변화와 시의성 있는 주제(issues)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주제는 우리 사회 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쟁점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주제에 대해 가용한 사회지표와 승인통계를 주로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통계를 이야기 방식(story telling)으로 풀이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사회동향」은 우리사회가 각 분야별로 어떤 수준에 와 있으며, 우리 삶의 질적 수준과 이를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주요 정책 입안자에게는 우리사회 현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협력 하에 작성 되었습니다. 각 영역별 원고 작성을 맡은 집필자 및 편집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통계청장 황수경

# 목 차


## Ⅰ 인구 Population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24
저출산과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인구의 변화 김근태 | 고려대학교 36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과 변화 추이 유정균 | 한양대학교, 김두섭 | 한양대학교 44

## Ⅱ 가족과 가구 Family & Household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 서울대학교 54
가족 내 세대관계의 변화: 멀어지는 시가, 가까워지는 처가? 한경혜 | 서울대학교 64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양상 진미정 | 서울대학교 74

## Ⅲ 건강 Health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 서울대학교 82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신동천 | 연세대학교 92
청소년의 체격과 건강상태 조병희 | 서울대학교 98

## Ⅳ 교육 Education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 고려대학교 108
대학교육의 성과 김경근 | 고려대학교 119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실태 황여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7

## Ⅴ 노동 Labor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138
취약노동자는 누구인가: 최저임금과 실업보험을 기준으로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149
외환위기 후 20년,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권현지 | 서울대학교 157

## Ⅵ 소득과 소비 Income & Consumption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166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김기호 | 한국은행, 박정수 | 서강대학교 175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적 영향 유승동 | 상명대학교 183

## Ⅶ 문화와 여가 Culture & Leisure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192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과몰입 전인식 | 한국교육개발원 200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06

## Ⅷ 주거와 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 서울대학교 214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태와 거주자 특성 이영성 | 서울대학교, 유현지 | 서울대학교 222
빅데이터로 읽는 교통과 사회 장수은 | 서울대학교, 한상진 | 한국교통연구원 228

## Ⅸ 환경 Environment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36
생활화학제품 피해 및 관리 실태 신용승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5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 및 특징 조영탁 | 한밭대학교 250

## Ⅹ 안전 Safety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박두용 | 한성대학교 258
한반도의 지진 발생 현황과 특성 이희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68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특성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9

## Ⅺ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 연세대학교 290
한국인의 정치참여와 사회갈등 인식 박원호 | 서울대학교 298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박 준 | 한국행정연구원 305

## 부록 용어해설 313

# 표 목차


표 Ⅰ-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1990–2015 25
표 Ⅰ-2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0–2015 30
표 Ⅰ-3 연령집단별 사망원인 순위, 2016 31
표 Ⅰ-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5 32
표 Ⅰ-5 시도별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 1997–2016 37
표 Ⅰ-6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 하위 20개 시군구, 2016 39
표 Ⅰ-7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 상위 20개 시군구, 2016 39
표 Ⅰ-8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수, 2006–2016 46
표 Ⅰ-9 업종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 2004–2016 49
표 Ⅰ-10 출신국가별 혼인귀화자 수, 2005–2016 50
표 Ⅰ-11 난민신청자 수와 난민심사 결과, 1994–2016 51
표 Ⅰ-12 부모의 출신국가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수, 2007–2016 52

표 Ⅱ-1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1990–2045 55
표 Ⅱ-2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 1985–2015 55
표 Ⅱ-3 기혼 및 미혼 여성의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2000–2016 75
표 Ⅱ-4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12, 2015 77
표 Ⅱ-5 학년별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와 참여율, 2016 78

표 Ⅲ-1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6 85
표 Ⅲ-2 성별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2005–2015 86
표 Ⅲ-3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수, 2000–2015 88
표 Ⅲ-4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수, 2015 88
표 Ⅲ-5 지역 및 계절별 미세먼지($PM_{10}$) 성분구성 95
표 Ⅲ-6 미세먼지($PM_{10}$) 입경별 독성 영향 95
표 Ⅲ-7 미세먼지($PM_{10}$)의 급성 및 만성 인체 영향 96
표 Ⅲ-8 미세먼지($PM_{2.5}$)의 급성 및 만성 인체 영향 96
표 Ⅲ-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 실적 97

표 Ⅳ-1 성별 중 ·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2–2016 116
표 Ⅳ-2 PISA 수학 성취도 분포, 2000–2015 117
표 Ⅳ-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2011–2015 118
표 Ⅳ-4 출신국가별 4년제 일반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12–2016 131
표 Ⅳ-5 출신국가별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12–2016 131
표 Ⅳ-6 유학형태별 4년제 일반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05–2016 132
표 Ⅳ-7 유학형태별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05–2016 132
표 Ⅳ-8 전공계열별 4년제 일반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12–2016 133
표 Ⅳ-9 전공계열별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12–2016 133

표 V-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16 139
표 V-2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2016 140
표 V-3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전년 대비 증감 취업자수, 2014–2016 142
표 V-4 OECD 주요 국가의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구성비율 143
표 V-5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별 소득상승률과 고용보험 가입률, 2015 146
표 V-6 성 및 연령집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2016 146
표 V-7 최저임금 금액, 상대수준 및 미만율, 2002–2016 150
표 V-8 성 및 연령집단별 최저임금 미만율, 2016 150
표 V-9 고용보험 적용과 가입 사각지대, 2016 152
표 V-10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보험 가입률, 2016 153
표 V-11 취약노동자 비율, 2003–2016 154
표 V-12 성 및 연령집단별 취약노동자 비율, 2016 155
표 V-13 취약노동자의 성 및 연령집단별 구성비율, 2016 155
표 V-14 1990–2014년 4년제 대학 남녀 졸업자의 대학 졸업 코호트별 첫 일자리 유지기간 161

표 VI-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06–2016 167
표 VI-2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 수준, 1996–2016 177
표 VI-3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구성, 2016 179
표 VI-4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 소비지출 수준, 1996–2016 179
표 VI-5 가구주 연령집단별 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및 실제 주거비 지출 비율, 2016 181

표 VII-1 문화예술시설수, 2008–2017 193
표 VII-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11–2015 193
표 VII-3 생애주기별 여가 불만 이유, 2016 211

표 VIII-1 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 2010–2015 214
표 VIII-2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및 주택가격 비율, 2006–2016 216
표 VIII-3 거주특성별 주택만족도, 2014, 2016 216
표 VIII-4 자동차 등록대수, 2000–2017 218
표 VIII-5 도로연장, 2000–2016 218
표 VIII-6 버스 업체수, 종사자수 및 등록대수와 버스전용차로연장, 2001–2016 219
표 VIII-7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2016 220
표 VIII-8 시도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6 220
표 VIII-9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및 임대유형별 주택수, 2010, 2015 225

표 IX-1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PM_{10}$) 환경기준 달성률, 2007–2015 237
표 IX-2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와 횟수, 2005–2015 238
표 IX-3 하수, 분뇨, 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2000–2014 239
표 IX-4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5 240
표 IX-5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건수, 1991–2016 241
표 IX-6 환경예산, 1995–2015 242

표 Ⅸ-7 환경보호지출, 2004–2014 242
표 Ⅸ-8 지역 및 성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6 243
표 Ⅸ-9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종류 246
표 Ⅸ-10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 2017. 8. 247

표 Ⅹ-1 주요 강력범죄별 발생건수, 2006–2015 263
표 Ⅹ-2 청소년 폭력 피해 경험과 이유, 2010–2014 265
표 Ⅹ-3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1–2016 266
표 Ⅹ-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6 267
표 Ⅹ-5 주요 시설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비율, 2017 269
표 Ⅹ-6 한반도 주요 지진 피해 사례, 1905–2016 276
표 Ⅹ-7 내진 설계 기준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 역사, 1988–2017 277
표 Ⅹ-8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별 내진 성능 확보율, 2016 277
표 Ⅹ-9 아동 대상 범죄 및 위험요인별 발생건수와 발생률, 2012–2015 280

표 Ⅺ-1 정치효능감과 참여의 위기 302

# 그림 목차


그림 I-1 인구연령구조의 변화추세, 1960, 2017, 2065 26
그림 I-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6 28
그림 I-3 어머니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3–2016 28
그림 I-4 혼인 및 이혼 건수, 1981–2016 29
그림 I-5 수도권 순유입 및 순유출 인구의 시도별 분포, 2010–2015 33
그림 I-6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자 및 남자 배우자 수, 1990–2016 34
그림 I-7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 1993–2016 37
그림 I-8 시군구별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 2000–2016 38
그림 I-9 시군구별 인구자연증가율, 2000–2015 40
그림 I-10 주요 시도별 출생 및 사망자 수, 2000–2015 41
그림 I-11 시군구별 인구순이동률, 2000–2015 42
그림 I-12 주요 시도별 전입 및 전출자 수, 2000–2015 42
그림 I-13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와 인구 자연증가율 및 순이동률과의 상관관계, 2000, 2015 43
그림 I-14 체류외국인 수, 1998–2016 45
그림 I-15 성별 등록외국인 수, 1992–2016 46
그림 I-16 국제결혼 건수와 결혼이민자 수, 2001–2016 47
그림 I-17 출신국가별 결혼이민자 수, 2006–2016 47
그림 I-18 지역별 결혼이민자 수, 2006–2016 48
그림 I-19 성별 외국인 근로자 수, 2006–2016 48
그림 I-20 국적취득자 수, 2004–2016 50
그림 I-21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 2008–2016 51

그림 II-1 노부모의 동거가족, 1998–2016 56
그림 II-2 배우자 분거가족 가구주의 분거기간별 배우자관계 만족도, 2016 57
그림 II-3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0–2016 58
그림 II-4 20–30대 연령층의 성별 미혼율, 1995–2015 59
그림 II-5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6 59
그림 II-6 성별 동거에 대한 태도, 2008–2016 60
그림 II-7 성별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 2008–2016 60
그림 II-8 남성 이혼자의 연령집단별 이혼건수, 2005–2016 61
그림 II-9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06–2016 62
그림 II-10 남편과 아내의 가사활동 빈도, 2006, 2016 63
그림 II-11 양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거리, 2006, 2016 65
그림 II-12 양가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 2006, 2016 66
그림 II-13 양가 부모와 만나는 빈도, 2006, 2016 66
그림 II-14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67
그림 II-15 맞벌이 여부별 양가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67
그림 II-16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68

그림 Ⅱ-17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68
그림 Ⅱ-18 양가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69
그림 Ⅱ-19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에게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70
그림 Ⅱ-20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에게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70
그림 Ⅱ-21 양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71
그림 Ⅱ-22 양가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71
그림 Ⅱ-23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72
그림 Ⅱ-24 맞벌이 여부별 양가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72
그림 Ⅱ-25 OECD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간 상관관계, 1980, 2009 76
그림 Ⅱ-26 OECD 및 EU 국가의 영아(0–2세) 기관보육서비스 이용률, 2006, 2014 79
그림 Ⅱ-27 OECD 및 EU 국가의 유아(3–5세) 기관보육서비스 이용률, 2014 80

그림 Ⅲ-1 기대수명, 1970–2015 82
그림 Ⅲ-2 2주간 유병률, 2006–2016 83
그림 Ⅲ-3 당뇨병 및 고혈압 유병률, 2001–2015 84
그림 Ⅲ-4 스트레스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2007–2015 85
그림 Ⅲ-5 성별 성인 비만율, 2007–2015 87
그림 Ⅲ-6 아침식사, 적정수면 및 규칙적 운동 실천율, 2006–2016 87
그림 Ⅲ-7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2010–2015 89
그림 Ⅲ-8 한국과 OECD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2000–2016 89
그림 Ⅲ-9 시도별 종합병원 만족도, 2016 90
그림 Ⅲ-10 미세먼지 생성기전 93
그림 Ⅲ-11 한국, 미국, 영국의 미세먼지($PM_{10}$) 월평균 농도, 2012–2016년 평균 93
그림 Ⅲ-12 배출원별 미세먼지($PM_{10}$) 연간 배출량, 2004–2013 93
그림 Ⅲ-13 시도별 미세먼지($PM_{10}$) 연간 배출량, 2013 94
그림 Ⅲ-14 대기상황별 $PM_{10}$ 대비 $PM_{2.5}$의 비, 2015–2016 94
그림 Ⅲ-15 초·중·고 학생의 성별 평균 키, 1972–2015 98
그림 Ⅲ-16 초·중·고 학생의 성별 평균 체중, 1972–2015 99
그림 Ⅲ-17 초·중·고 학생의 성별 오래달리기 평균 시간, 2000–2015 99
그림 Ⅲ-18 초·중·고 학생의 성별 앉아윗몸굽히기 평균 길이, 2000–2015 100
그림 Ⅲ-19 초·중·고 학생의 성별 제자리멀리뛰기 평균 거리, 2000–2015 100
그림 Ⅲ-20 초·중·고 학생의 성별 비만율, 2007–2016 101
그림 Ⅲ-21 OECD 주요 국가의 청소년 비만율, 2013 101
그림 Ⅲ-22 중·고등학생의 성별 흡연율, 2005–2016 102
그림 Ⅲ-23 중·고등학생의 성별 음주율, 2005–2016 102
그림 Ⅲ-24 중·고등학생의 성별 신체활동실천율, 2005–2016 103
그림 Ⅲ-25 중·고등학생의 성별 채소섭취율, 2005–2016 103
그림 Ⅲ-26 중·고등학생의 성별 탄산음료섭취율, 2009–2016 103
그림 Ⅲ-27 중·고등학생의 성별 수면충족률, 2005–2016 104
그림 Ⅲ-28 중·고등학생의 성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2005–2016 104
그림 Ⅲ-29 중·고등학생의 성별 스트레스인지율, 2005–2016 105

그림 Ⅲ-30 중 · 고등학생의 성별 우울감경험률, 2005–2016 105

그림 Ⅳ-1 학교급별 취학률, 1980–2016 109
그림 Ⅳ-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6 110
그림 Ⅳ-3 연령집단별 교육기회 충족도, 2000–2016 111
그림 Ⅳ-4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08–2016 111
그림 Ⅳ-5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08–2016 112
그림 Ⅳ-6 학교급별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 2008–2016 113
그림 Ⅳ-7 부모의 학력별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2008–2016 114
그림 Ⅳ-8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0–2016 115
그림 Ⅳ-9 OECD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0, 2014 115
그림 Ⅳ-10 상용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 1995–2016 120
그림 Ⅳ-11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별 취업률, 2011–2015 121
그림 Ⅳ-12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 선택 사유별 취업상태, 2015 121
그림 Ⅳ-13 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 및 전공 선택 사유별 월평균 임금, 2015 122
그림 Ⅳ-14 대졸 취업자의 학력별 과잉학력 분포, 2009–2015 123
그림 Ⅳ-15 4년제 대학생의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인식, 2011–2015 123
그림 Ⅳ-16 QS 세계대학평가 세계 200위 이내 국내 대학수 및 최고 순위, 2004–2017 125
그림 Ⅳ-17 OECD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이수율, 2000–2016 125
그림 Ⅳ-18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수, 2008–2016 128
그림 Ⅳ-19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수, 2008–2016 128
그림 Ⅳ-20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와 비율, 2005–2016 129
그림 Ⅳ-21 성별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 2005–2016 130
그림 Ⅳ-2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 2012–2016 134
그림 Ⅳ-23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시도별 분포, 2005–2016 134
그림 Ⅳ-24 한국, 일본, 중국의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수, 2009–2015 135

그림 Ⅴ-1 연령집단별 장시간 근로자 비율, 2004–2016 139
그림 Ⅴ-2 20–24세 청년층 실업률, 2007–2016 141
그림 Ⅴ-3 OECD 주요 국가의 청년층 성별 실업률, 2016 141
그림 Ⅴ-4 청년층 첫 취업 소요기간, 2011–2016 141
그림 Ⅴ-5 OECD 주요 국가의 근로자 디지털환경 준비도, 2012 144
그림 Ⅴ-6 임금근로자의 월임금총액과 지니계수, 2008–2015 144
그림 Ⅴ-7 OECD 주요 국가의 실질 최저임금, 2000–2016 144
그림 Ⅴ-8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06–2016 145
그림 Ⅴ-9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분포, 2004–2016 145
그림 Ⅴ-10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성별 저임금 및 중저임금 근로자 비율, 2004–2016 145
그림 Ⅴ-11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임금, 2008–2016 146
그림 Ⅴ-12 성별 시간제 근로자 비율, 2007–2016 147
그림 Ⅴ-13 3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수, 2014–2016 147
그림 Ⅴ-14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만율, 2016 151

그림 V-15 OECD 주요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2013 151
그림 V-16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미만율, 2013 151
그림 V-17 OECD 주요 국가의 실업보험 수급자 비율, 2010 153
그림 V-18 실업급여 수급률, 2004–2015 153
그림 V-19 OECD 주요 국가의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2014 154
그림 V-20 직종, 업종 및 고용형태별 취약노동자 비율, 2016 155
그림 V-21 임금근로자의 성별 평균 근속년수, 1993–2016 158
그림 V-22 남녀 임금근로자의 연령집단별 평균 근속년수, 1993–2016 158
그림 V-23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1993–2016 159
그림 V-24 500인 이상 사업체 종사 남성 임금근로자의 연령집단별 평균 근속년수, 1993–2016 160
그림 V-25 4년제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의 성 및 연령집단별 월급여총액, 1993–2016 161
그림 V-26 1990–2005년 4년제 대학 남녀 졸업자의 대학 졸업 코호트별 졸업 후 10년간 노동이력 분포 162
그림 V-27 2010–2012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성별 졸업 후 3년간 노동이력 분포 163

그림 VI-1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2007–2016 167
그림 VI-2 소득 5분위 배율, 2006–2016 168
그림 VI-3 OECD 주요 국가의 소득 5분위 배율, 2014 168
그림 VI-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2006–2016 169
그림 VI-5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06–2016 169
그림 VI-6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6 170
그림 VI-7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 2016 171
그림 VI-8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06–2016 172
그림 VI-9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06–2016 172
그림 VI-10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06, 2016 173
그림 VI-11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비지출구성, 2016 173
그림 VI-12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흑자비율, 2006–2016 174
그림 VI-13 연령별 임금소득 및 소비 수준, 2000 176
그림 VI-14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의 연령별 임금소득 및 소비 수준, 2000년대 초반 176
그림 VI-15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 수준(한국복지패널 결과), 2007–2015 178
그림 VI-16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 소비지출 수준(한국복지패널 결과), 2007–2015 180
그림 VI-17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16 181
그림 VI-18 가구주 연령집단별 교육비 및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한국복지패널 결과), 2015 182
그림 VI-19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1960–2015 184
그림 VI-20 한국과 OECD의 연령집단별 상대적 빈곤율, 2013 184
그림 VI-21 청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주택소유비율, 2016 185
그림 VI-22 청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실물자산 비율, 2016 185
그림 VI-23 주택연금 가입건수, 2007–2016 186
그림 VI-24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 2008–2016 187
그림 VI-25 부모의 생활비 주 제공자, 2008–2016 187
그림 VI-26 부모부양 책임에 대한 견해, 2008, 2016 188
그림 VI-27 주택보유 노인의 보유주택 비상속의향률, 2008–2016 188

그림 Ⅵ-28 주택연금 가입자의 시도별 구성비율, 2015. 8. 189

그림 Ⅶ-1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2006–2016 193
그림 Ⅶ-2 가구의 오락문화비 월평균 지출액, 2006–2016 194
그림 Ⅶ-3 가구의 오락문화비 주요 항목별 지출액, 2006–2016 194
그림 Ⅶ-4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 2015 195
그림 Ⅶ-5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1993–2015 196
그림 Ⅶ-6 문화예술행사 직접 참여 경험률, 문화자원봉사 활동 경험률, 문화동호회 참여율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8–2016 197
그림 Ⅶ-7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2000–2015 197
그림 Ⅶ-8 스포츠관람률, 2000–2015 198
그림 Ⅶ-9 신문 읽는 비율, 2000–2015 198
그림 Ⅶ-10 여가만족도, 1993–2015 199
그림 Ⅶ-11 청소년의 학교급 및 성별 게임 이용 빈도, 2016 201
그림 Ⅶ-12 청소년의 학교급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의 종류, 2016 201
그림 Ⅶ-13 청소년의 게임행동 유형별 비율, 2012–2016 202
그림 Ⅶ-14 청소년의 학교급별 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및 게임선용군 비율, 2012–2016 203
그림 Ⅶ-15 중학생의 게임 시작시기별 과몰입군 및 과몰입위험군 비율, 2016 203
그림 Ⅶ-16 청소년의 게임행동 유형별 심리 및 정신건강 상태, 2016 204
그림 Ⅶ-17 청소년의 게임행동 유형별 학업 및 교우관계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2016 204
그림 Ⅶ-18 청소년의 게임행동 유형별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 2016 205
그림 Ⅶ-19 생애주기별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 여가시간, 2016 207
그림 Ⅶ-20 생애주기별 휴가일수, 2015–2016 207
그림 Ⅶ-21 생애주기별 여가활동비 실제 지출액과 희망 지출액, 2016 207
그림 Ⅶ-22 생애주기별 여가 시간 및 비용의 충분도, 2016 208
그림 Ⅶ-23 생애주기와 주로 이용하는 여가공간, 2016 208
그림 Ⅶ-24 생애주기별 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과 인식, 2016 209
그림 Ⅶ-25 생애주기별 여가산업에 대한 만족도, 2016 209
그림 Ⅶ-26 생애주기와 주된 여가활동, 2016 210
그림 Ⅶ-27 생애주기와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2016 210
그림 Ⅶ-28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동반자, 2016 210
그림 Ⅶ-29 생애주기별 여가 동호회 참여율, 2016 210
그림 Ⅶ-30 생애주기와 여가 동호회 종류, 2016 211
그림 Ⅶ-31 생애주기별 여가만족도, 2016 211
그림 Ⅶ-32 생애주기별 여가의 중요성과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2016 212
그림 Ⅶ-33 생애주기별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인식, 2016 212

그림 Ⅷ-1 총 주택수와 아파트수, 2000–2016 215
그림 Ⅷ-2 전국 및 수도권의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종합지수, 2000–2017 215
그림 Ⅷ-3 시도별 주택보급률, 2015 217
그림 Ⅷ-4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 2006–2016 217

그림 Ⅷ-5 공공 및 민간 부문 임대주택 재고, 2007–2015 217
그림 Ⅷ-6 철도연장, 2000–2015 218
그림 Ⅷ-7 자전거도로 노선수와 연장, 2009–2016 219
그림 Ⅷ-8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219
그림 Ⅷ-9 대중교통만족도, 2007–2016 220
그림 Ⅷ-10 총 임대주택 수와 공공임대주택 수, 2010–2015 223
그림 Ⅷ-11 총 주택 수와 공공임대주택 수, 2010–2015 223
그림 Ⅷ-12 한국과 유럽 주요 국가의 사회주택 비율, 2015 223
그림 Ⅷ-13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수, 2015 224
그림 Ⅷ-14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유형별 구성비율, 2010–2015 224
그림 Ⅷ-15 면적별 공공임대주택 수, 2010–2015 225
그림 Ⅷ-16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및 임대유형별 구성비율, 2015 225
그림 Ⅷ-1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수, 2010–2015 226
그림 Ⅷ-18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성비율, 2016 226
그림 Ⅷ-19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소득계층별 임대유형구성, 2016 227
그림 Ⅷ-20 공공임대주택 거주 특성가구별 임대유형구성, 2016 227
그림 Ⅷ-21 스마트폰 가입자 수, 2011–2016 229
그림 Ⅷ-22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230
그림 Ⅷ-23 전국 위험운전 행태지수 및 잠재 위험지수 231
그림 Ⅷ-24 어린이 보행사고 온도지수 231
그림 Ⅷ-25 서울시 자치구별 응급실까지의 차량 접근성 232
그림 Ⅷ-26 서울시 동별 통근 효율성 233
그림 Ⅷ-27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도 233
그림 Ⅷ-28 헥사셀 기반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233

그림 Ⅸ-1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5–2014 236
그림 Ⅸ-2 수도권 및 주요 지역 미세먼지($PM_{10}$) 일평균 환경기준 초과일수, 2007–2015 237
그림 Ⅸ-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14 238
그림 Ⅸ-4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5 239
그림 Ⅸ-5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5 240
그림 Ⅸ-6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1995–2015 241
그림 Ⅸ-7 영역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6 243
그림 Ⅸ-8 연령집단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6 244
그림 Ⅸ-9 화학물질 유통량, 1998–2014 246
그림 Ⅸ-10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대한 태도, 2016 248
그림 Ⅸ-11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건강 위해 가능성 인식, 2016 248
그림 Ⅸ-12 생활화학제품 피해 상담 접수건수, 2014–2016 248
그림 Ⅸ-13 생활화학제품 정보 제공 현황 249
그림 Ⅸ-14 전력소비량, 2000–2015 251
그림 Ⅸ-15 OECD 주요 국가의 1인당 전력소비량, 2001–2014 251
그림 Ⅸ-16 용도별 전력소비량, 2000–2015 251

그림 Ⅸ-17 제조업종의 전력소비량, 2000–2015 252
그림 Ⅸ-18 OECD 주요 국가의 가정 및 산업용 에너지열량가격(2005–2014년 평균) 253
그림 Ⅸ-19 계절별 전력소비량, 1990–2015 253
그림 Ⅸ-20 설비별 발전량 추이, 1990–2015 254
그림 Ⅸ-21 OECD 주요 국가별 기저발전량 비율, 2000–2014 254
그림 Ⅸ-22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율, 1990–2014 255
그림 Ⅸ-23 대기오염물질별 전력부문 배출량 비율, 2007–2014 255
그림 Ⅸ-24 OECD 주요 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비율, 2000–2015 256

그림 Ⅹ-1 성별 외인 사망률, 1985–2016 259
그림 Ⅹ-2 주요 외인별 사망률, 1985–2016 259
그림 Ⅹ-3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1985–2016 259
그림 Ⅹ-4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1997–2016 260
그림 Ⅹ-5 화재 발생건수와 사상자수, 1987–2016 260
그림 Ⅹ-6 화재 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 1987–2016 261
그림 Ⅹ-7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1998–2016 261
그림 Ⅹ-8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13 262
그림 Ⅹ-9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2008–2016 262
그림 Ⅹ-10 도시철도 사상사고 건수, 2007–2016 263
그림 Ⅹ-1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2–2015 263
그림 Ⅹ-12 주요 국가의 살인범죄율, 1995, 2010 264
그림 Ⅹ-13 범죄검거율, 2002–2015 264
그림 Ⅹ-14 범죄피해 경험률, 2008–2014 265
그림 Ⅹ-15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08–2014 265
그림 Ⅹ-16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 경험률, 2010 266
그림 Ⅹ-17 범죄에 대한 두려움, 1997–2015 267
그림 Ⅹ-18 지진 관측소 수, 1963–2016 269
그림 Ⅹ-19 세계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빈도와 피해 사망자수, 1990–2015 270
그림 Ⅹ-20 한반도 역사 지진 진앙 분포도, 1–19세기 271
그림 Ⅹ-21 한반도 역사 지진 발생 빈도, 1–19세기 271
그림 Ⅹ-22 8대 특·광역시와 경주의 역사 지진 발생 빈도, 1–19세기 272
그림 Ⅹ-23 한반도 계기 지진 진앙 분포도, 1978–2016 273
그림 Ⅹ-24 남한과 북한 지역의 계기 지진 발생 빈도, 1978–2016 273
그림 Ⅹ-25 권역별 계기 지진 발생 빈도, 1978–2016 274
그림 Ⅹ-26 8대 특·광역시와 경주의 계기 지진 발생 빈도, 1978–2016 274
그림 Ⅹ-27 한반도 계기 지진 발생 빈도, 1978–2016 275
그림 Ⅹ-28 아동학대 유형별 구성비율, 2011–2015 281
그림 Ⅹ-29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발생률, 2011–2014 282
그림 Ⅹ-30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별 구성비율, 2011–2015 282
그림 Ⅹ-31 아동학대 가해자별 구성비율, 2011–2015 283
그림 Ⅹ-32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아동의 성별 구성비율, 2011–2015 283

그림 X-33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아동의 연령집단별 구성비율, 2011–2015 284
그림 X-34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아동의 특성별 구성비율, 2015 285
그림 X-35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아동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011–2015 285
그림 X-36 아동학대 동기별 구성비율, 2015 285
그림 X-37 아동학대 빈도별 구성비율, 2015 286
그림 X-38 아동학대 피해기간별 구성비율, 2015 286
그림 X-39 신체적 학대 행위유형별 구성비율, 2015 286

그림 XI-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 1992–2017 291
그림 XI-2 주요 국가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간 관계, 2014 291
그림 XI-3 OECD 주요 국가의 타 연령층 투표율 대비 청년층 투표율의 비, 2014 292
그림 XI-4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 2016 292
그림 XI-5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율, 2013, 2016 293
그림 XI-6 대인 신뢰 수준과 신뢰의 반경범위, 2013, 2016 293
그림 XI-7 공공 제도들에 대한 신뢰, 2013, 2016 294
그림 XI-8 OECD 주요 국가의 정부에 대한 신뢰, 2014–2015년 평균 295
그림 XI-9 사회적 관계별 소통 수준, 2013, 2016 295
그림 XI-10 주요 공공기관별 국민과의 소통 수준, 2013, 2016 295
그림 XI-11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 2013, 2016 296
그림 XI-12 OECD 주요 국가의 연령집단별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 2016 296
그림 XI-13 삶에 대한 만족도, 2003–2015 297
그림 XI-14 주요 국가의 행복지수, 2005–2007년 평균, 2014–2016년 평균 297
그림 XI-15 정서 경험, 2013, 2016 297
그림 XI-16 역대 선거 투표율, 1952–2017 299
그림 XI-17 연령집단별 선거 투표율, 2007–2017 299
그림 XI-18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04–2016 300
그림 XI-19 연령집단별 투표 참여율과 진정서 서명 참여율, 2016 300
그림 XI-20 세대별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도, 2003–2016 301
그림 XI-21 연령집단별 내적 및 외적 정치효능감, 2016 302
그림 XI-22 주요 국가의 시위참여 경험과 의향, 2010년대 초반 303
그림 XI-23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2013–2016 303
그림 XI-24 연령집단별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304
그림 XI-25 소득수준별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304
그림 XI-26 부패인식지수, 2007–2016 306
그림 XI-27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공직사회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07–2016 306
그림 XI-28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0–2016 307
그림 XI-29 공무원과 일반국민 및 기업인의 공직사회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06–2016 307
그림 XI-30 주요 기관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308
그림 XI-31 연령집단별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308
그림 XI-32 직업집단별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309
그림 XI-33 민간기업 종사자와 공무원의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309

**그림 XI-34** 교육수준별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310
**그림 XI-35** 공직부패에 대한 경험과 인식, 2000–2016 310
**그림 XI-36** 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공직부패 경험과 인식 간 관계, 2016 311

# 머 리 말

올해로 「한국의 사회동향」이 발간된 지 열 번째다. 10년간 발행되면서 「한국의 사회동향」은 그 형식과 내용에서 틀이 잡혔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7」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등 사회의 주요 영역들을 모두 포함하는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은 해당 영역의 주요 동향을 개관하는 논문 1편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이슈들을 설명해 주는 주제 논문 2편씩을 수록하고 있다. 주요 동향 논문은 해당 영역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고, 주제 논문은 선정된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동향」은 매년 늘어나는 새로운 독자들에게는 독립된 한 권의 보고서로 읽힐 수 있다. 주요 동향 논문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했으며, 지난해와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내용을 압축하고 영역에 따라서는 구성 요소들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지난 보고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한 해 만에 사회의 주요 동향이 크게 바뀔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주제 논문들은 역동적 변화를 담아낼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제 발굴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안된 주제들에 대해서는 영역별 책임을 맡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주제의 시의성과 타당성 외에 객관적인 자료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집필진을 섭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구 영역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와 관련된 주제로서 '저출산과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인구의 변화'와 점증하는 글로벌화 경향과 관련된 주제로서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과 변화 추이'를 다루었다. 가족과 가구 영역에서는 부계 중심성의 약화와 양계화 현상을 다룬 '가족 내 세대관계의 변화' 주제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른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양상'도 살펴보았다. 건강 영역에서는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약해진 청소년 건강' 문제를, 교육 영역에서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실태'를 다루었다. 노동 영역에서는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그동안의 고용형태 변화를 다루었다. 또한 올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나 탈원전 논쟁을 염두에 두고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거와 교통 영역에서 다룬 '공공임대주택' 문제와 고령화 이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주택연금' 문제 모두 시의성이 높은 주제들이다. 지난 해 경주지진 이후 관심사항으로 부각된 이슈로서 안전

영역에서는 '한반도 지진발생' 실태를 다루었고, 그리고 사회통합영역에서는 최근 시행 1년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부패에 대한 인식' 문제를 다루었다. 연례 보고서가 10년차를 맞게 되면서 과거에 다루었던 이슈를 다시 반복해서 다루는 경우도 생겨났는데, 이는 새로운 변화의 동향이 충분히 관찰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몇 가지 측면에서 독특하다. 첫째, 객관적인 통계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통계치 변화의 이면에 자리 잡은 '사회 동향'을 드러내는 친절한 서술형 보고서라는 점이다. 이것은 집필을 직접 담당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평소 데이터에 관한 관심, 보고서의 공공성에 대한 동의와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보고서의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서술하되 자신의 해석과 관점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연구진의 요청에 적극 부응하였을 뿐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에서 제기된 연구진과 논평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원고를 완성해 주었다.

둘째, 「한국의 사회동향」에는 통계청이 산출하거나 승인한 자료 혹은 국제기구가 수집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료 등 가용한 최고 품질의 자료만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통계청을 비롯한 주요 국가통계 산출기관들이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를 기본 자료로 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민간기관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들만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통계가 부족한 경우를 확인했는데, 주로 경성자료보다는 연성자료가, 경제통계보다는 사회통계가 더 많이 수집되고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 수집과 활용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한국이 처해 있는 사회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국가적 성취의 결과와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삶의 질 사이에 간격이 크다는 것이다. 삶의 질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차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 상황에만 국한해서는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의 위치를 가늠해 보아야 한다. 이 연례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발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보고서를 펴내는 과정에서 영역별로 주요 동향 논문을 집필하고 주제 논문을 검토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면, 한양대의 김두섭 교수(인구 영역 담당), 서울대의 한경혜 교수(가족과 가구 영역 담당), 서울대의 조병희 교수(건강 영역 담당), 고려대의 김경근 교수(교육 영역 담당), 서울대의 권현지 교수(노동 영역 담당), 서강대의 박정수 교수(소득과 소비 영역 담당), 서울시립대의 서우석 교수(문화와 여가 영역 담당), 서울대의 장수은 교수(주거와 교통 영역 담당),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의 김종호 연구위원(환경 영역 담당), 한성대의 박두용 교수(안전 영역 담당) 그리고 연세대의 한준 교수(사회통합 영역 담당)이다. 이 보고서의 편집은 서울대의 김석호 교수, 통계개발원의 이주희 사무관과 조은숙 주무관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김대훈 실장과 신인철 실장, 이상운 팀장이 하였고, 연구간사직은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의 김월화 연구원이 맡았다. 이 외에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주제 논문의 집필을 맡아 주었다. 집필과 편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의 개발 연구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황수경 통계청장과 배영수 통계개발원장, 김경용 통계분석실장 그리고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수진 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구책임자 **이재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진의 견해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4.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개발원의 소유입니다.

# Korean Social Trends 2017
# 한국의 사회동향 2017

2017

# Popul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7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I 인 구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24

저출산과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인구의 변화 김근태 | 고려대학교 36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과 변화 추이 44

유정균 | 한양대학교, 김두섭 | 한양대학교

#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한양대학교)

- 한국의 출산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저하를 지속하여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기대수명이 선진국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자살과 아울러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등 퇴행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였다.
- 한국 인구는 2031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5년에는 1990년 인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연령의 인구는 2016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서울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수도권 인구의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의 이동 목적지는 충청남도,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많았다.
- 결혼이민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규모가 2005년 정점에 도달한 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현상은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거나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동시에 인구 현상은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범세계적 경제불황은 결혼과 출산력뿐만 아니라 사망력, 인구이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인구는 2031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주로 초저출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과 아울러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인구의 성장과 구조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출산율과 혼인율 및 이혼율의 최근 동향, 사망률의 저하와 사망원인 구조의 변화, 수도권 인구의 변화, 그리고 체류외국인의 증가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및 UN 인구 DB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 인구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지난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던 한국의 인구는 1980년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제1차 인구변천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산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망력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다. 그 결과, 이제 한국 사회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인구규모는 2015년 현재 5,101만 명으로 세계 27위에 해당되며, 인구증가율은 0.53%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장기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의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2065년에 이르면 2015년 인구보다 799만 명이 줄어든 4,302만 명이 되어 1990년의 인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령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데 있다.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2065년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유소년 인구(0-14세)는 각각 2015년 규모의 55.1%와 58.8%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15년의 2.8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2065년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가 전형적인 역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조는 성,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수준,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해 파악된다. 〈표 I-1〉에는 1990년 이후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커다란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약간 많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으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역전되어 남녀 인구가 각각 49.7%와 50.3%, 그리고 2015년에는 각각 49.9%와 50.1%씩을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1990-2015

(%)

| | 1990 | 2000 | 2010 | 2015 |
|---|---|---|---|---|
| 성 | | | | |
| 남자 | 50.2 | 50.2 | 49.7 | 49.9 |
| 여자 | 49.8 | 49.8 | 50.3 | 50.1 |
| 연령 | | | | |
| 0-14세 | 25.7 | 21.0 | 16.2 | 13.9 |
| 15-64세 | 69.4 | 71.7 | 72.5 | 72.9 |
| 65세 이상 | 5.0 | 7.3 | 11.3 | 13.2 |
| 거주지 | | | | |
| 시(동) | 74.4 | 79.7 | 82.0 | 81.9 |
| 읍 | 8.3 | 8.1 | 8.6 | 9.0 |
| 면 | 17.3 | 12.2 | 9.3 | 9.1 |
| 교육수준 | | | | |
| 초등학교 이하 | 33.4 | 25.7 | 20.3 | 17.1 |
| 중학교 | 18.5 | 13.6 | 11.9 | 10.5 |
| 고등학교 | 34.0 | 34.6 | 31.2 | 30.8 |
| 대학 이상 | 14.1 | 26.1 | 36.6 | 41.7 |
| 혼인상태 | | | | |
| 미혼 | 33.0 | 30.1 | 30.6 | 31.3 |
| 유배우 | 59.1 | 60.6 | 57.7 | 55.9 |
| 사별 | 7.2 | 7.4 | 7.6 | 7.6 |
| 이혼 | 0.8 | 1.9 | 4.0 | 5.1 |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교육수준별 인구와 혼인상태별 인구는 각각 6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199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성, 연령, 거주지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결과임. 그리고 2015년 교육수준과 혼인상태는 20% 표본조사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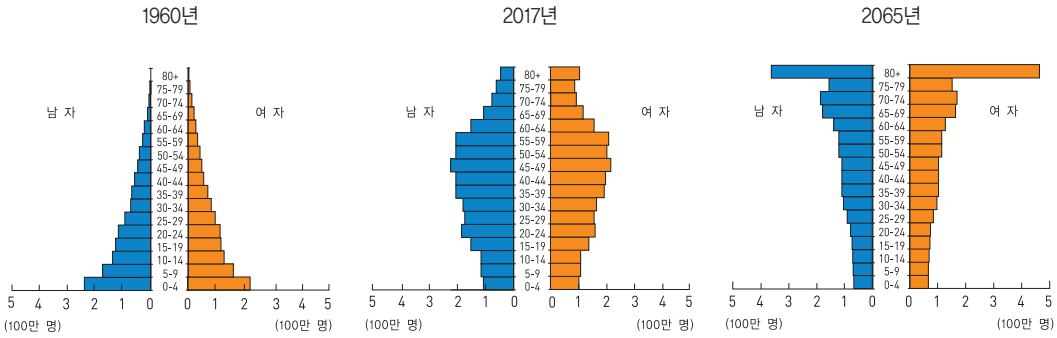
연령구성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199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I-1]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인구의 연령구조는 1960년에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였으나 2017년에는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었고, 2065년에는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표 I-1〉에서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5.7%에서 2000년 21.0% 그리고 2015년 13.9%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한편, 15-64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69.4%에서 2000년 71.7%, 2015년 72.9%로 약간씩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6년 이후 감소세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990년 비중의 2.6배로 커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 1990년에는 도시 인구 비중이 74.4%에 도달하였다. 도시 인구의 비중은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82.0%과 81.9%로 높아졌으며, 여기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시키면 그 비중이 두 해 모두 91%에 근접한다. 도시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읍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1990년 이후 8-9%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편, 농촌 인구의 비중은 1990년의 17.3%에서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9.3%와 9.1%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한국 인구의 교육수준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6세 이상 내국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3.4%이었으나 2000년 25.7%, 2015년 17.1%로 꾸준히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그 비중이 각각 10.5%와 30.8%로 집계되었다. 한편,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1990-2015년의 기간에

[그림 I-1] 인구연령구조의 변화추세, 1960, 2017, 2065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 2016.

14.1%에서 41.7%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2.0년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인구(15세 이상)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 미혼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유배우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결혼 지연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25-29세와 30-34세 인구의 미혼자 비중이 2015년에 각각 83.9%와 46.9%로 높아졌다. 사별자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이혼자의 비중은 1990년 0.8%에서 2000년 1.9%, 2010년 4.0%, 2015년 5.1%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연령집단별 이혼자의 비중은 50-54세에서 10.8%로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 인구의 이혼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 출산력과 혼인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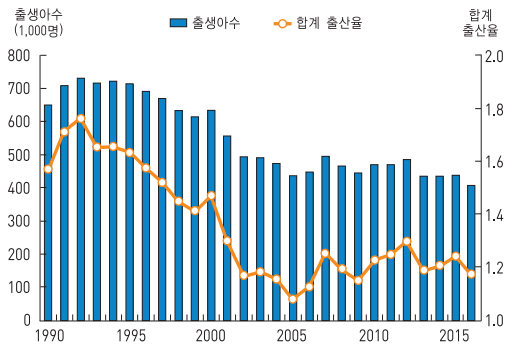
한국 인구의 출산력변천은 1960-1985년 기간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된다. 제1차 출산력변천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은 출산력 변천을 크게 촉진시켰다.

제2차 출산력변천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제1차 출산력변천에서와는 달리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에 들어와 유명무실해졌고, 출산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 제도를 포함하여 인구성장 억제정책이 폐지되었다. 초저출산으로의 제2차 변천에서는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대두,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일어난 급격한 출산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다.

한국에서 출산력 저하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가속화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I-2]를 보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각각 43.5만 명과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의 폭과 속도는 인구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이 그림에서 2000년에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반짝 증가한 것은 '새천년 베이비붐'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림 I-2]에서 주목할 것은 출산수준이 200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약간이나마 반등의 조짐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출생아수는 2006

[그림 I-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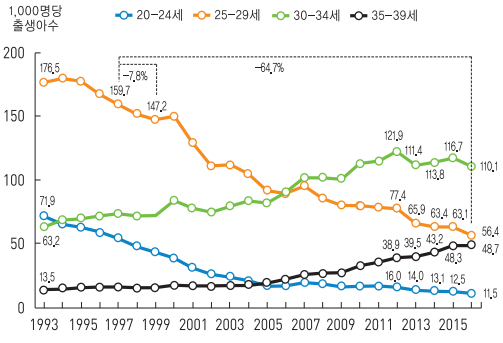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년 44.8만 명, 2007년 49.3만 명으로 반등한 후 2009년 44.5만 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2년 48.5만 명, 2014년 43.5만 명, 2015년 43.8만 명, 2016년 40.6만 명으로 소폭의 증가와 감소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5, 2010년 1.23, 2012년 1.30, 2015년 1.24 그리고 2016년 1.17로 집계되었다. [그림 I-2]에서 2006년과 2007년, 2012년에 출산수준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쌍춘년, 황금돼지띠 및 용띠의 해 등 출산연도 선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인구가 2000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게 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높은 실업률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이 해체되고 장년층의 출산이 줄어든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통계청의 혼인신고 집계결과에 따르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에 24.8세였으며 이후 매년 0.1-0.4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30.1세에 도달하였다. 여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 자녀를 낳은 평균 출산연령과 전체 자녀에 대한 평균 출산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각각 31.4세와 32.4세에 이르렀다. 그리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도 26.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된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림 I-3]에서 여자 20-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29세 집단의 출산율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불과 2년 동안 7.8%, 그리고 2016년까지 무려 64.7%가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자의 출산율은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따

[그림 I-3] 어머니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3-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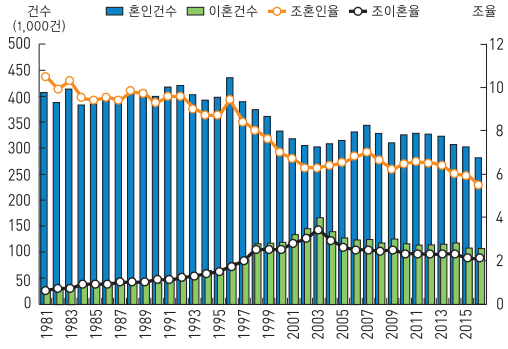



주: 1) 연령집단별 출산율=(산모의 연령집단별 출생아수÷해당 연령집단의 여자 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라 2007년부터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5-29세 집단에서 30-34세 집단으로 바뀌었다. 또한 35-39세 집단의 출산율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20-24세 집단의 출산율보다 높아졌으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 인구의 출산수준 저하는 혼인 양상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 크다. [그림 I-4]에서 보는 것처럼,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1996년에 각각 43.5만 건과 1,000명당 9.4건의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3년에 이르기까지 급속하게 감소했다. 조혼인율은 그 후 황금돼지띠의 해였던 2007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한편, 조이혼율은 1981년 1,000명당 0.6건에 불과한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상승을 지속하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2003년 1,000명당 3.4건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점진적인 감소 추세가 관찰된다.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2016년 현재 각각 1,000명당 5.5건과 2.1건이다.

[그림 I-4] 혼인 및 이혼 건수, 1981-2016




주: 1)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과 이혼의 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최근에는 결혼의 지연이나 기피로 인한 미혼율의 증가와 함께 무자녀 가정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30대 연령집단의 미혼율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3.4%로 집계되었으나 2010년 29.2%, 2015년 36.3%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전국출산력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5년 현재 30대 기혼 여자의 10.9%가 출산 경험이 없으며 이들의 16.5%는 장래에도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확고하게 뿌리내린 소가족 지향의 태도와 규범들이 앞으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뚜렷한 경제적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젊은 세대가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도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져 출산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앞으로 한국 인구의 출산력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반등 추세를 이어나가 초저출산 상태를 탈피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경제적 여건의 전개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망률 저하와 사망원인구조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사망력은 선진국의 평균 수

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조사망률은 2004–2009년 기간 동안 1,000명당 5.0명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16년 1,000명당 5.5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수 역시 2006년 24.2만 명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28.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망률과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2016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녀 인구 모두 60대 및 70대 이상 연령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한국 인구의 사망력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2〉를 보면, 한국 인구의 조사망률은 세계 인구와 개발도상국,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 역시 선진국 평균값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기대수명을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남녀 각각 2.7년과 2.8년이 더 긴 것으로 확인된다.

〈표 I-2〉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0–2015

| | 조사망률 (1,000명당) | 영아사망률 (1,000명당) | 기대수명(세) | |
|---|---|---|---|---|
| | | | 남자 | 여자 |
| 세계 인구 | 7.7 | 35 | 68.6 | 73.1 |
| 선진국 | 9.9 | 5 | 75.2 | 81.6 |
| 개발도상국 | 7.2 | 38 | 67.2 | 71.1 |
| 아시아 | 7.0 | 31 | 69.9 | 73.8 |
| 한국 | 5.5 | 3 | 77.9 | 84.4 |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2017.

일반적으로 사망률은 성, 연령을 비롯한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서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 수는 2016년 남자 15.3만 명, 여자 12.8만 명이며, 1,000명당 사망자 수는 각각 6.0명과 5.0명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0세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다. 연령별 사망률은 1세 이후 10세 정도까지 낮아지며, 그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또한, 2016년 사망통계에서는 남녀 인구의 사망률 격차가 50세를 넘으면서 급격하게 벌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극대화된다.

사망력의 수준은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서도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가 많은 지역은 2016년에 경기도(5.5만 명), 서울(4.4만 명)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사망자가 11.3만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0.2%를 차지하였다. 조사망률(1,000명당)은 전라남도(8.8)와 경상북도(7.8) 및 전라북도(7.6)가 높고, 울산(4.2)과 경기도(4.4) 및 서울(4.4)이 낮다. 그러나 각 지역의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은 울산과 강원도, 충청북도 및 전라남도가 가장 높고, 서울과 경기도 및 제주도가 가장 낮다.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을 수반하고, 그 전환은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사회발전 과정에서 전염병이나 기생충 감염에 의한 사망은 줄어든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퇴행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진다.

한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이 감소한 반면, 암이나 심장 질환, 폐렴에 의한 사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자살률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증한 이래 빠른 속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1997년 13.1명에서 2016년 25.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사망원인의 구조는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변화는 연령구조의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만, 동일한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구조의 변화는 사회환경의 변화, 음주나 흡연 등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인하는 바 크다.

〈표 I-3〉 연령집단별 사망원인 순위, 2016

| 연령 | 사망원인 순위 | | | | |
|---|---|---|---|---|---|
|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20-29세 | 자살 | 운수사고 | 암 | 심장질환 | 추락 |
| 30-39세 | 자살 | 암 | 운수사고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 40-49세 | 암 | 자살 | 간질환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 50-59세 | 암 | 자살 | 심장질환 | 간질환 | 뇌혈관질환 |
| 60-69세 | 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자살 | 간질환 |
| 70-79세 | 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폐렴 | 당뇨병 |
| 80세 이상 | 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폐렴 | 만성하기도질환 |

출처: 통계청, 「2016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2017. 9. 22.

〈표 I-3〉에서 보는 것처럼, 20대와 30대에는 자살과 운수사고가 전체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이 높아지면 퇴행성 질환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진다. 고령집단에서도 자살의 비중이 높게 관찰되나 암이 40대 이후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 1위이다. 노인집단에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 만성하기도 질환에 의한 사망이 두드러진다.

##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의 변화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산업화에 수반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2015년 도시 인구의 비중이 81.9%에 도달하였다. 읍 지역 인구를 제외하면 농촌 인구의 비중은 9.1%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시 인구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절대 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도시화의 특징은 도시 인구의 성장이 모든 도시에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I-4〉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도시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서울 인구는 1990년 1,061만 명을 기록한 이후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2015년 「인

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10년보다 11만 명이 증가한 9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의 면적은 605㎢로 전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서울 인구의 비중은 2015년 19.4%에 달한다. 또한, 서울 인구에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는 2015년 현재 전국 인구의 49.5%에 해당하는 2,527만 명에 이른다.

〈표 I-4〉를 보면, 서울과 서울대도시권,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의 인구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서울과 이 두 도시 위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서울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가 서울 근교로 확산되고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로 확산되면서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70–1980년 기간에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3%와 4.2%에 달하였다.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그 후에도 지속되며 1990–2015년 기간에 70.9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서울 이탈 현상은 취학 자녀가 없는 30대 부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산업단지의 조성과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한 인구의 확산으로 대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5

(1,000명)

| 연도 | 서울 | 서울 대도시권 | 수도권 | 시(동)부 | 군(읍/면)부 | 전국 |
|---|---|---|---|---|---|---|
| 1960 | 2,445 | 2,938 | 5,194 | 6,997 | 17,992 | 24,989 |
| 1970 | 5,433 | 6,327 | 8,730 | 12,710 | 18,173 | 30,882 |
| 1980 | 8,364 | 10,744 | 13,298 | 21,434 | 16,002 | 37,436 |
| 1990 | 10,613 | 16,508 | 18,586 | 32,309 | 11,102 | 43,411 |
| 2000 | 9,895 | 19,441 | 21,354 | 36,755 | 9,381 | 46,136 |
| 2005 | 9,820 | 20,960 | 22,767 | 38,515 | 8,764 | 47,279 |
| 2010 | 9,794 | 21,875 | 23,836 | 39,823 | 8,758 | 48,580 |
| 2015 | 9,904 | 23,132 | 25,274 | 41,678 | 9,392 | 51,0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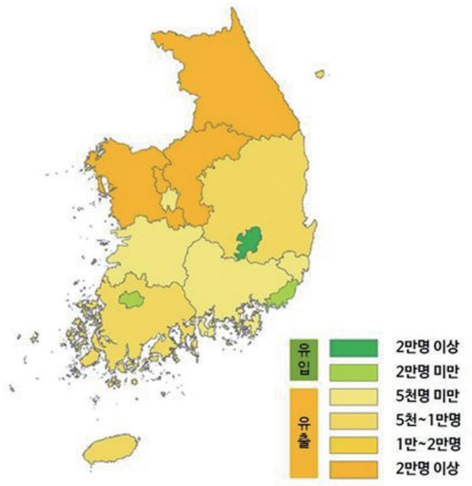
주: 1) 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함.
2) 서울대도시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시(동)부 인구를 포함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를 포함함.
4) 196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최근 수도권 인구의 유출이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현상이다. 지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이후 5년 동안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전입한 인구보다 16.3만 명이 많았다. [그림 I-5]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 인구의 이동 목적지는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1960–2015년 기간에 네 배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 인구는 무려 7.9배가 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의 인구도 같은 기간에 네 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 700만 명에 불과하던 시(동)부 인구는 2015년 4,16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도시 인구의 이러한 팽창은

기본적으로 농촌으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군(읍·면)부 인구는 같은 기간 1,799만 명에서 93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I-5] 수도권 순유입 및 순유출 인구의 시도별 분포, 2010–2015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이동, 통근·통학, 활동제약」, 보도자료, 2017. 4. 18.

정부는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이 각종 도시문제와 병리현상의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1964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2년 이후에는 다양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지방에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지속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다양성

전통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던 한국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 국제결혼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통합이 사회정책적 관심의 중요한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관한 통계는 행정기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작성되어 활용된다. 체류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출입국사무소에 의하면 2016년 말 현재 204.9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주민등록인구 5,169.6만 명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체류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및 거소 신고 여부에 따라 장기 체류자(153.1만 명)와 단기 체류자(51.9만 명)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규모가 20.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 5년간 매년 8%가 넘게 증가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단기체류 관광객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대상 확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과반수로 가장 많고,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일본의 순이다. 체류목적별로는 방문취업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외동포, 결혼

이민자, 영주 등으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1990–2016년 기간에 외국인 배우자와 이루어진 혼인의 누적 규모는 56.4만 건에 달한다. 이 기간에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 40.2만 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국제결혼의 71.2%에 해당된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은 같은 기간 16.3만 건이며, 지난 사반세기 동안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 추세를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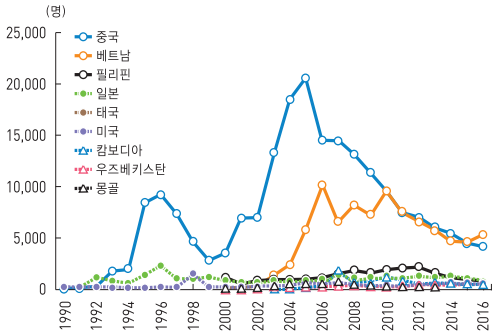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진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에 42,356건의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그 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어 2016년 20,591건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해에 신고된 전체 결혼건수에 대한 국제결혼의 비중도 1990년의 1.2%에서 2005년 13.5%로 높아졌으며, 2016년에는 7.3%로 집계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그 동안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중국 조선족 출신 여자 배우자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여자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 여러 국가로 다양해졌다. [그림 I-6]에서 중국인 여자 배우자와의 결혼건수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로 반전된 것은 중국 조선족이 친지 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함에 따라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인 여자 배우자의 출신지역은 2016년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베트남 다음으로 중국, 필리핀, 일본, 태국, 미국,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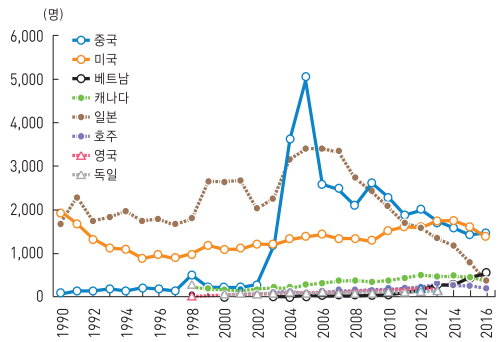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에 비해 현재 그 사례수가 현저하게 작다. 외국인 남자 배우자의 출신국적 역시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일본 국적 남자와의 결혼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2016년 현재 중국, 미

[그림 I-6]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자 및 남자 배우자 수, 1990–2016

1) 여자배우자




2) 남자배우자




출처: 김두섭, 「한국인의 국제결혼과 외국인 배우자의 적응」, 2015.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016.

국, 베트남,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순으로 많으며, 이들 여섯 국가가 전체의 75.9%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 여자와 베트남 남자의 결혼은 대부분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는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체류외국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이 고용허가제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노동하며, 2016년 현재 54.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남자와 여자가 각각 76.9%와 23.1%를 구성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의 5개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국가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등 16개 국가로 제한된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며, 이들은 가족 동반이나 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국제이동자 통계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입국자의 63.6%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자격은 취업(31.8%), 단기방문(30.4%), 유학(13.1%), 재외동포(12.8%)의 순이었다. 최근에는 특히 유학 및 연수 입국자와 재외동포 입국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앞으로 한국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체류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세대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출산과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인구의 변화

김근태 (고려대학교)

- 20–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비는 인구 재생산성의 잠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이 상대비가 1.0 이하로 감소하면 향후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의 20–39세 여성은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13.3%에 이르고 있어 2016년 현재 이 두 연령층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 두 비율의 변화 추이에 따르면 이 둘의 상대비는 1.0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59.8%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20–39세 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 인구의 자연 감소(출생<사망)를 경험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이 42.2%에 육박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과 광역시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 2000년대 초반 많은 인구 유출을 경험했던 지방 자치단체들이 2015년에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용을 피해 이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2016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이와 동시에 인구의 고령화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노인부양비가 상승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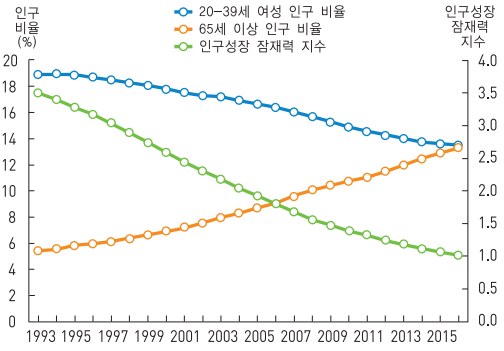
지역 단위에서의 급속한 인구변동은 해당 지역의 존립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국과 비슷한 인구변동을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는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지방 소멸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도 있다. 지역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뿐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위축되고 생활 안정성이 낮아지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은 인구성장 잠재력을 전국과 지역 단위에서 살펴본 후 인구이동이 지역인구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 인구성장 잠재력 변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출산을 담당하는 20세부터 39세까지의 젊은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인구 재생산성의 잠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에 대한 젊은 여성 인구 비율의 비가 1.0 이하로 감소한다는 것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I-7]은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율과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 그리고 두 비율의 상대비를 보여준다. 1993년에 20-39세 여성층은 전체 인구의 18.8%를 차지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인구의 5.4%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여 왔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율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각각 13.4%와 13.3%로 둘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그림 I-7]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 1993-2016




주: 1)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대한 20-39세 여성 인구 비율의 비로서, 그 값이 1보다 클수록 인구성장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하며, 1과 같거나 작을수록 인구감소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지난 1993년에는 젊은 여성 비율과 고령층 비율의 상대비가 3.5였으며, 이는 젊은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에 비해 약 3.5배 많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후 상대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2016년 현재 1.0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 인구의 기록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상대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인구성장 잠재력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단위에서의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지역 단위에서는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이 관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 I-5〉에 제시한 바와 같이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광역시도별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1990년대 후반(1997-2000년)에는 전 지역에서 20-39세 여성 비율과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의 상대비가 1.0 이상이었다. 특히, 울산의 경우

〈표 I-5〉 시도별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 1997-2016

| 시도 | 1997-2000 | 2001-2005 | 2006-2010 | 2011-2016 |
|---|---|---|---|---|
| 서울 | 3.94 | 3.01 | 2.10 | 1.44 |
| 부산 | 3.38 | 2.40 | 1.56 | 1.04 |
| 대구 | 3.55 | 2.60 | 1.73 | 1.17 |
| 인천 | 3.86 | 2.90 | 2.06 | 1.50 |
| 광주 | 3.59 | 2.86 | 2.02 | 1.42 |
| 대전 | 3.76 | 2.94 | 2.12 | 1.48 |
| 울산 | 5.25 | 3.88 | 2.58 | 1.75 |
| 세종 | - | - | - | 1.09 |
| 경기 | 3.67 | 2.85 | 2.08 | 1.51 |
| 강원 | 1.91 | 1.43 | 0.99 | 0.73 |
| 충북 | 2.02 | 1.56 | 1.16 | 0.90 |
| 충남 | 1.51 | 1.19 | 0.97 | 0.80 |
| 전북 | 1.69 | 1.31 | 0.94 | 0.71 |
| 전남 | 1.33 | 0.99 | 0.70 | 0.55 |
| 경북 | 1.64 | 1.26 | 0.93 | 0.70 |
| 경남 | 2.21 | 1.74 | 1.31 | 0.98 |
| 제주 | 2.42 | 1.85 | 1.31 | 0.96 |

주: 1)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대한 20-39세 여성 인구 비율의 비로서, 그 값이 1보다 클수록 인구성장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하며, 1과 같거나 작을수록 인구감소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함.
2) 통계치는 해당기간 연도별 인구성장 잠재력지수의 평균값임.
3)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이 비율이 5.25에 달해 젊은 여성의 비율이 고령층의 비율보다 약 5배 높았다. 전남도 이 시기에는 두 비율의 상대비가 1.33을 나타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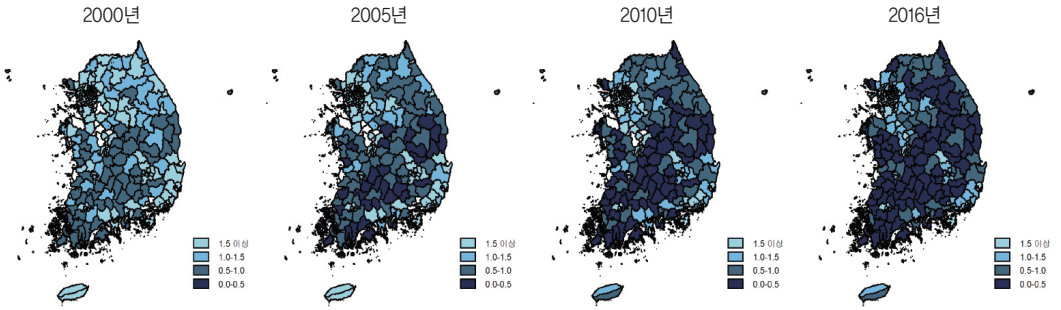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지역에서 이 지수가 감소하여 가장 최근 시기(2011–2016년)에는 1990년대 후반 수준의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은 울산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역에서 이 지수가 1.0 이하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남의 지수가 0.55으로 가장 낮고 경북이 0.70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서울 및 경기 지역과 광역시 지역은 상대비가 모두 1.0 이상이지만 그 밖의 도 지역은 모두 1.0 이하라는 점이다. 이는 미래 인구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대도시와 그 밖의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8]는 주요 시점별(2000, 2005, 2010, 2016년) 전국 시군구의 20–39세 여성 인구 비율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상대비를 보여준다. 2000년에는 전국 230여 개 시군구 중 25.7%만이 1.0 이하였다. 그러나 그림의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도 전남과 전북 그리고 경북 산간 지역은 이미 이 수치가 1.0 이하였다. 반면, 서울과 경기 및 광역시 지역은 1.0을 훨씬 웃돌고 있었다.

이후 2005년에는 1.0 이하의 수치를 보이는 지역이 충남과 강원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전국적으로 239개 기초자치단체 중 37.2%가 1.0 미만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더해 2000년에 이미 1.0 미만의 수치를 보인 전남, 전북, 경북 지역은 그 수치가 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44.7%가 1.0 미만에 해당되어 서울과 경기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성장 잠재력이 급감하였다. 2016년 현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넘는 59.8%의 지역에서 상대비가 1.0 미만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8] 시군구별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 2000–2016




주: 1)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대한 20–39세 여성 인구 비율의 비로서, 그 값이 1보다 클수록 인구성장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하며, 1과 같거나 작을수록 인구감소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표 I-6〉와 〈표 I-7〉에는 2016년 현재 20-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비가 가장 낮은 20개 기초자치단체와 가장 높은 20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인구 감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이며, 그 뒤를 전남 고흥, 경북 군위, 경남 남해, 경남 합천 등이 잇고 있다. 하위 20개 지역 중 3곳의 충청권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경북, 경남, 전남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표 I-6〉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 하위 20개 시군구, 2016

| 시도 | 시군구 | 시군구수 |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 분포 |
|---|---|---|---|
| 경북 | 의성군, 군위군,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청도군, 예천군 | 8 | 0.17-0.23 |
| 전남 | 고흥군, 신안군, 보성군, 함평군, 곡성군 | 5 | 0.18-0.24 |
| 경남 | 남해군, 합천군, 산청군, 의령군 | 4 | 0.19-0.22 |
| 충남 | 청양군, 서천군 | 2 | 0.23-0.24 |
| 충북 | 괴산군 | 1 | 0.24 |

주: 1)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대한 20-39세 여성 인구 비율의 비로서, 그 값이 1보다 클수록 인구성장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하며, 1과 같거나 작을수록 인구감소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한편, 상위 20개 지역 중에서는 3.02를 기록한 수원 영통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이 지역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와 같은 산업시설과 대학교 등이 집중되어 있어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 그 뒤를 창원 성산구, 천안 서북구, 울산 북구, 경북 구미 등이 잇고 있다. 이 지역들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이다.

〈표 I-7〉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 상위 20개 시군구, 2016

| 시도 | 시군구 | 시군구수 |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 분포 |
|---|---|---|---|
| 경기 |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권선구, 오산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화성시, 시흥시, 안양시 동안구 | 8 | 3.02-1.63 |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거제시 | 2 | 2.50-1.72 |
| 충남 | 천안시 서북구 | 1 | 2.19 |
| 울산 | 북구, 동구 | 2 | 2.16-1.75 |
| 경북 | 구미시 | 1 | 2.09 |
| 대전 | 유성구 | 1 | 2.07 |
| 광주 | 광산구 | 1 | 1.84 |
| 인천 | 서구, 연수구, 계양구 | 3 | 1.77-1.68 |
| 충북 | 청주시 흥덕구 | 1 | 1.65 |

주: 1)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대한 20-39세 여성 인구 비율의 비로서, 그 값이 1보다 클수록 인구성장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하며, 1과 같거나 작을수록 인구감소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 출산 및 사망에 의한 지역인구의 변화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서 0과 t시점 사이에 발생한 인구변동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인구(t) = 인구(0) + 출생(0, t) - 사망(0, t) + 전입(0, t) - 전출(0, t). 이 식에서 앞부분의 출생과 사망의 차이는 인구의 자연증가분이 되고, 뒷부분의 전입과 전출의 차이는 인구의 순유입분이 된다. 지역별로 인구의 변화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식을 사용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인구변동을 분해한 결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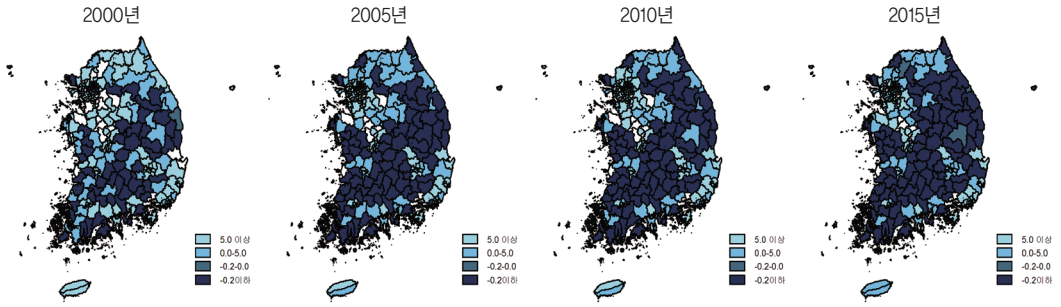
[그림 I-9]과 [그림 I-11]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그림 I-9]에서 짙은 색은 인구가 자연 감소(출생〈사망)한 지역을 나타내며, 반대로 옅은 색은 인구가 자연 증가(출생〉사망)한 지역을 나타낸다.

지난 2000년에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25.5%에서 인구의 자연 감소를 경험하였다. 경북 군위, 경남 합천, 경북 의성 등에서 가장 큰 폭의 자연 감소가 진행되었고, 감소 규모는 인구 1,000명당 약 7명 정도였다. 반면, 수원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등에서는 가장 큰 폭의 자연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규모는 인구 1,000명당 약 40여 명에 달하였다. 앞서 살펴본 인구 고령화 추이와 비슷하게 2000년에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지에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있었고, 서울과 경기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인구의 자연 증가가 있었다.

이후 2005년에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를 경험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이 38%로 많아졌다. 이에 더해 인구의 자연적 증가를 경험한 지역도 그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폭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난 수원 팔달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35명에 머물렀다. 이러한 추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의 격차가 한층 심화된 것이 이 시기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이다. 특기할 점은 2010년까지 이러한 패턴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인구의 자연 감소를 경험한 기초자치단체는 37.2%로 2005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15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인구의 자연 감소를 경험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42.2%에 육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대도시와 그 밖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그림 I-9]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 및 경기 지역과 광역시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

[그림 I-9] 시군구별 인구자연증가율,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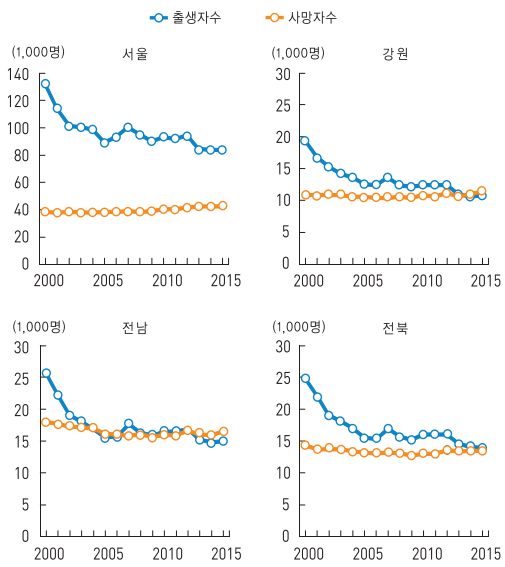



주: 1) 인구자연증가율=(해당연도 출생자수-해당연도 사망자수)÷해당연도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한 결과는 전국 단위에서의 인구 증감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인구 증감 추이는 다소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대도시와 그 밖의 지역 간 인구 증가의 격차가 향후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10]에는 주요 광역시도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시도 지역 간 출생자와 사망자 수의 규모는 매우 다르지만, 그 변화 양상은 매우 유사하다. 이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망자의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출생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아울러 대다수의 지역에서 2015년까지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

[그림 I-10] 주요 시도별 출생 및 사망자 수, 2000-2015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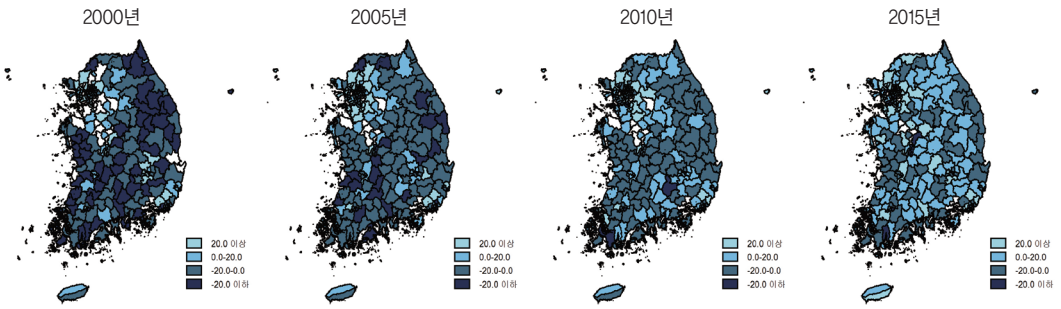
까지는 인구의 자연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지역의 경우 2012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졌으며, 강원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현상이 201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북 지역은 2015년 현재 사망자 수와 출생자 수가 거의 동일하지만 머지않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인구이동에 의한 지역인구의 변화

전국 수준에서 인구의 이동이 인구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지역 수준에서는 그 영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I-11]에는 인구의 해외 유입과 유출을 제외한 국내 지역 간 인구이동의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2000년에는 전북 무주가 인구이동으로 가장 많이 감소(인구 1,000명당 85명)하였고 경기 오산이 인구이동에 의해 가장 많이 증가(인구 1,000명당 185명)하였다. 대체로 전남과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인구의 자연 증감에서 확인한 수준으로 대도시와 그 밖의 지역 간의 뚜렷한 격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 경기를 비롯한 광역시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유입보다 많았다. 이 시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73.4%가 인구 유출에 의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였다.

그 뒤로 2005년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그림 I-11] 시군구별 인구순이동률,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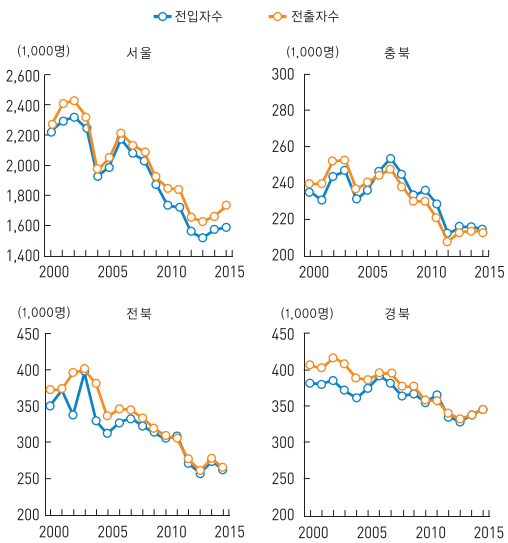

주: 1) 인구순이동률=(해당연도 전입자수–해당연도 전출자수)÷해당연도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1,00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68.8%가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겪었으며, 인구 유출 정도가 심했던 경북과 전남 지역의 인구 유출이 완화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광역시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까지 지속되었다. 대도시 지역의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2015년에 들어서면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즉, 인구이동으로 인구 감소를 겪는 기초자치단체의 비중이 51.9%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폭의 인구 유출이 서울 강동구(인구 1,000명당 45명), 안산 단원구(인구 1,000명당 43명) 등에서 나타나고 가장 큰 폭의 인구 유입이 세종(인구 1,000명당 252명), 부산 강서구(인구 1,000명당 149명) 등에서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세종시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기존의 인구 유출을 경험한 많은 지역들이 인구 유입 지역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인구 유입을 경험한 지역들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인구의 유입에 인한 것이며,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귀농을 택하는 과정에서 지가와 주거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12]에는 주요 광역시도별 인구 유입과 유출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2015년

[그림 I-12] 주요 시도별 전입 및 전출자 수, 2000–2015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에 약 159만 명의 인구 유입과 173만 명의 인구 유출을 기록했으며,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유출의 규모가 지난 15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전남과 경북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구 유입과 유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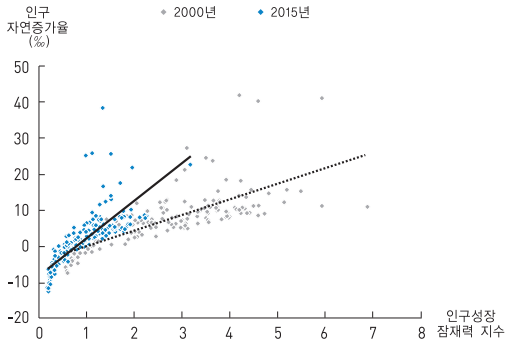
## 지역인구의 성장 잠재력과 변동의 관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와 인구의 자연 증감률 및 인구이동으로 인한 증감률의 상관관계가 [그림 I-13]에 제시되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관관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2000년과 2015년 두 시점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우선, 인구성장 잠재력과 인구의 자연 증감률은 뚜렷한 정비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2000년보다 2015년에 인구성장 잠재력과 인구의 자연 증감률의 상관관계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인구성장 잠재력과 인구이동으로 인한 증감률의 상관관계는 2000년에 정비례의 관계를 보였으나 2015년에 들어서는 매우 약화되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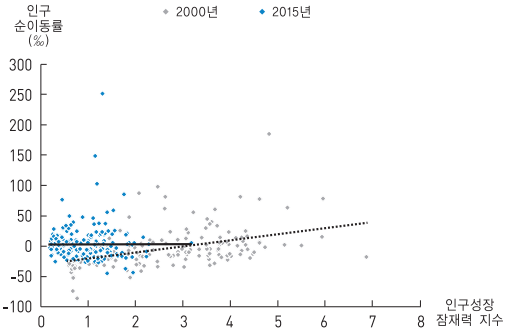
향후 단기간에 급격한 출산율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 사회 전체의 인구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모든 지역에서 균등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지역 간 인구변동에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13]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와 인구 자연증가율 및 순이동률과의 상관관계, 2000, 2015

1)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와 인구자연증가율




2)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와 인구순이동률




주: 1) 인구성장 잠재력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대한 20-39세 여성 인구 비율의 비로서, 그 값이 1보다 클수록 인구성장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하며, 1과 같거나 작을수록 인구감소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함.
2) 인구자연증가율=(해당연도 출생자수-해당연도 사망자수)÷해당연도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1,000.
3) 인구순이동률=(해당연도 전입자수-해당연도 전출자수)÷해당연도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1,000.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과 변화 추이

**유정균** (한양대학교)
**김두섭** (한양대학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전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체류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규모로는 단순기능인력이 가장 많고, 증가율로는 유학생과 영주자격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높다.
- 결혼이민자의 누적 규모는 2016년 15만 2,374명으로 지난 15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국제결혼의 감소 추세로 인해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의 대다수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으로 인해 농축산업과 어업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국적취득자 수는 2009년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2010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감소하고 있다.
-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20만 1,333명으로 2007년에 비해 4.5배 증가하였다. 앞으로 국제결혼의 감소 또는 안정세 유지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증가 속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외국인 거주자의 유형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한국 인구의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정책적 수요를 증가시킨다. 외국인의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체류 목적이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외국인 거주자의 유형별로 변화 추이와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거주자에 관한 통계는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작성된다. 이 글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거주자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들의 구성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인구동향조사」, 「교육기본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일관된 개념이나 용어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동일한 집단을 두고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통계는 행정기관에 따라 통계

에 포함되는 외국인의 범주와 작성방법이 저마다 다르다. 따라서 우선 외국인 거주자에 관한 정확한 용어 정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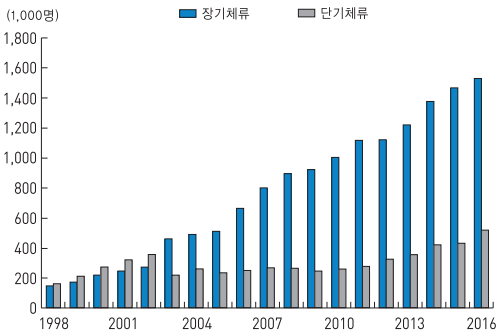
외국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법무부에서 공표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 현황, 외국 국적 동포, 불법체류자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이 자료에서 외국인주민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혼인귀화자 등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는 국제결혼과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며,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외국인 거주자는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국적취득자,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한다. 체류외국인과 등록외국인은 외국인 거주자의 전반적인 규모를 알려준다.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는 다른 집단과 달리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을 통해 인구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외국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국내 경제구조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는 그들의 적응과 교육이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간주된다.

## 체류외국인과 등록외국인의 추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998년 31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체류외국인은 등록 여부에 따라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로 구분된다. [그림 I-14]에서 보는 것처럼 2016년 현재 장기체류자는 153만 명, 단기체류자는 52만 명으로 추산된다. 장기체류자의 비중은 199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재외동포 자격대상의 확대와 영주자격 신청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외국인의 비율 역시 1998년 0.7%에서 2016년 4.0%로 꾸준히 높아졌다.

[그림 I-14] 체류외국인 수, 1998-201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표 I-8〉과 같이 구분된다. 단순기능인력은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을 지칭하며, 2016년 현재 54만 9,000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영주자격(F-5)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13만 명, 유학(D-2) 및 한국어 연수(D-44/41) 등의 학업 목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11만 6,000명이다.

〈표 I-8〉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수, 2006-2016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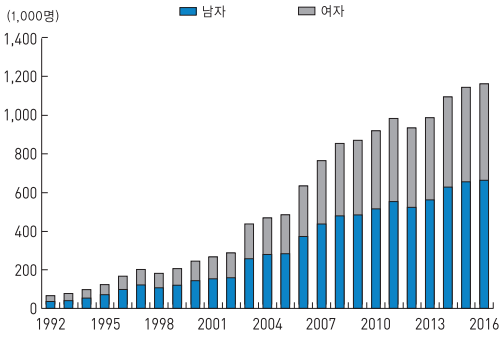
| 연도 | 유학생 | 전문인력 | 단순기능인력 | 영주자격 |
|---|---|---|---|---|
| 2006 | 39 | 30 | 232 | 14 |
| 2007 | 56 | 35 | 443 | 16 |
| 2008 | 72 | 38 | 511 | 19 |
| 2009 | 81 | 41 | 511 | 22 |
| 2010 | 87 | 44 | 514 | 45 |
| 2011 | 88 | 48 | 547 | 65 |
| 2012 | 84 | 50 | 479 | 84 |
| 2013 | 82 | 50 | 499 | 100 |
| 2014 | 86 | 50 | 568 | 113 |
| 2015 | 96 | 49 | 577 | 123 |
| 2016 | 116 | 48 | 549 | 130 |

주: 1) 유학생은 유학(D-2), 외국어연수(D-47), 한국어연수(2009년 이전 D-44, 2010년 이후 D-41) 등을 포함함.
2) 전문인력은 단기취업(C-4), 교수(E-1)~특정활동(E-7) 등을 포함함.
3) 단순기능인력은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을 포함함. 연수취업은 2009년까지 해당됨.
4) 영주자격은 영주권(F-5) 비자를 포함함.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출신국가별로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이 102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15만 명, 미국 14만 명, 타이 10만 명 등의 순이다. 중국 출신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재외동포(F-4) 자격을 지닌 체류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I-15]는 등록외국인의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1998년 18만 명에서 2016년 116만 명으로 약 6.4배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남자이기 때문이다.

[그림 I-15] 성별 등록외국인 수, 1992-201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등록외국인을 지역별로 보면, 2016년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체의 32.2%인 37만 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서울 27만 명(23.5%), 경남 8만 명(7.0%), 충남 6만 명(5.2%) 등의 순으로 많다. 이는 내국인의 지역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민등록인구의 2016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19.2%, 부산 6.8%, 경남 6.5%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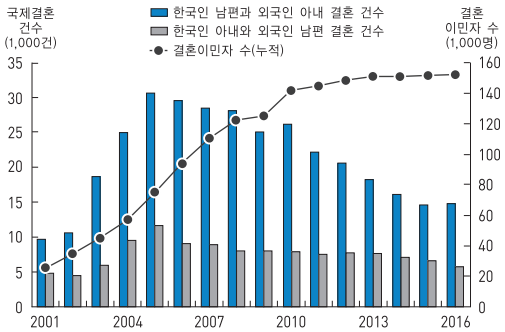
## 결혼이민자의 추이와 분포

결혼이민자는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I-16]에는 국제결혼 건수와 결혼이민자 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국제결혼은 연도별 건수이며 결혼이민자는 누적 규모를 나타낸다. 결혼이민자의 규모는 2001년 2만 5,18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15만 2,374명으로 약 6.1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비중은 2001년 4.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1.2%로 정점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7.4%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의 비중 감소는 국제결혼의 변화 추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제결혼은 2005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중국 조선족에게 방문취업이 허용되면서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김두섭, 2015).

[그림 I-17]는 출신국가별 결혼이민자 수를 보여준다. 중국 출신이 5만 6,93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4만 1,803명, 일본 1만 3,110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결혼이민자 중 중국 출신의 비중은 2006년에 60.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2016년에는 37.4%로 낮아졌다. 반면,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꾸준히 늘어나 2016년에는 27.4%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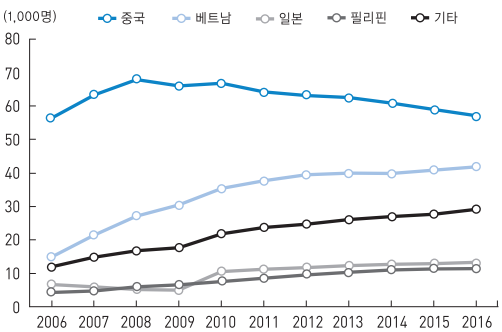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비중은 국제결혼 건수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에서 2009년까지는 중국 출신 아내와의 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베트남 출신 아내와의 결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적은 2016년에도 베트남이 5,37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이 4,198명이다. 최근에는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유입

[그림 I-16] 국제결혼 건수와 결혼이민자 수, 2001-201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I-17] 출신국가별 결혼이민자 수,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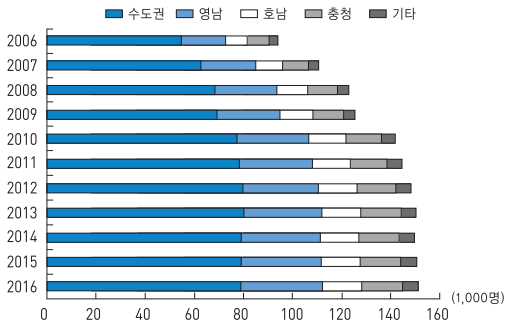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되는 여성이민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림 I-18]에서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다음으로 영남, 충청, 호남 지역의 순으로 많이 거주한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가 27.8%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서울(18.2%), 경남(6.6%), 인천(6.2%)의 순이다.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은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 출신국가, 남편의 직업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낸다.

[그림 I-18] 지역별 결혼이민자 수,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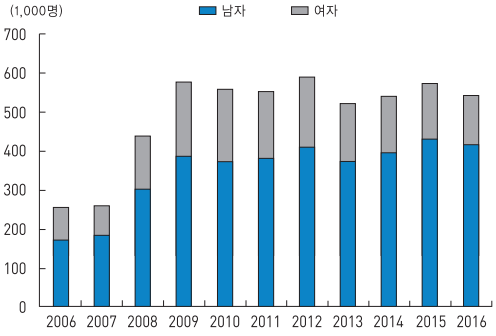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함.
2) 영남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을 포함함.
3) 호남은 광주, 전북, 전남 등을 포함함.
4) 충청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을 포함함.
5) 기타 지역은 강원, 제주 등을 포함함.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 외국인 근로자의 추이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국적을 지니지 않고 지자체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출입국관리법상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해당된다.

[그림 I-19]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후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전체 규모는 2016년 현재 54만 1,673명이며, 이 중 남자가 41만 6,357명으로 76.9%를 차지한다. 출신국가별로는 남녀 모두 한국계 중국 출신이 가장 많고, 이 외에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이 대부분이다.

[그림 I-19] 성별 외국인 근로자 수, 2006-2016




주: 1) 2015년부터 기준시점이 기존 1월 1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됨.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연도.

한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순수 외국인을 고용 허가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나누어진다.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 국가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를 포함한 16개 국가이며,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의 5개 업종이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6개 국가 3,167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005년 3만 1,658명으로 급증하였고 2008년에 7만 6,505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5만 9,822명으로 집계되었다. 출신국가별로는 캄보디아 출신이 8,288명으로 가장 많고 네팔 8,019명, 베트남 7,100명, 스리랑카 6,619명 등의 순이다.

〈표 I-9〉는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구성과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데, 2016년 기준으로 전체의 약 80%가 이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농축산업 7,018명, 어업 2,718명, 건설업 2,593명, 서비스업 68명 등의 순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004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에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급격한 고령화와 젊은 노동력의 도시 이동으로 부족해진 농어촌의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다.

〈표 I-9〉 업종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 2004-2016

(명)

| 연도 |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산업 | 서비스업 | 어업 | 합계 |
|---|---|---|---|---|---|---|
| 2004 | 3,124 | 0 | 43 | 0 | 0 | 3,167 |
| 2005 | 31,114 | 84 | 419 | 41 | 0 | 31,658 |
| 2006 | 28,180 | 42 | 699 | 52 | 0 | 28,973 |
| 2007 | 31,242 | 740 | 2,333 | 48 | 425 | 34,788 |
| 2008 | 67,259 | 3,364 | 4,515 | 53 | 1,314 | 76,505 |
| 2009 | 54,596 | 4,345 | 2,332 | 65 | 1,355 | 62,693 |
| 2010 | 31,804 | 2,412 | 3,079 | 56 | 1,130 | 38,481 |
| 2011 | 40,396 | 2,207 | 4,557 | 124 | 1,846 | 49,130 |
| 2012 | 45,632 | 1,269 | 4,931 | 107 | 1,699 | 53,638 |
| 2013 | 48,967 | 1,606 | 5,641 | 70 | 2,227 | 58,511 |
| 2014 | 40,874 | 2,299 | 6,047 | 91 | 2,245 | 51,556 |
| 2015 | 40,223 | 2,228 | 5,949 | 71 | 2,548 | 51,019 |
| 2016 | 47,425 | 2,593 | 7,018 | 68 | 2,718 | 59,822 |

주: 1) 통계치는 해당연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 수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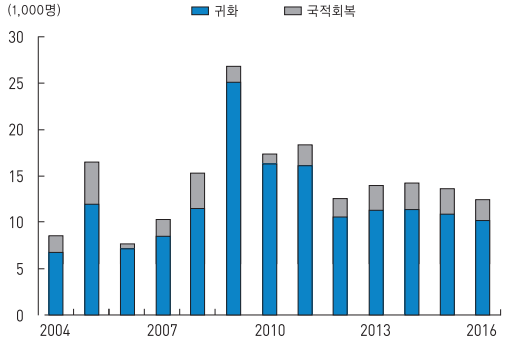
## 국적취득자의 추이

국적취득은 귀화와 국적 회복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귀화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국적 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국적취득자의 80% 이상이 귀화자에 해당된다.

[그림 I-20]에서 국적취득자 수를 보면, 2009년에 2만 5,04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현재 1만 명 수준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적취득자 수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크

다. 귀화의 대상이나 조건이 정책과 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적취득 요건을 구비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2010년부터 영주자격 취득이 허용되면서 귀화 대신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또한 2011년에는 영주 귀국하는 고령의 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함에 따라 국적 회복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최근 5년 동안은 큰 변화 없이 귀화자 1만 명, 국적 회복자 2,500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I-20] 국적취득자 수, 2004–201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귀화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결혼이민자이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귀화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표 I-10〉에서 혼인귀화자 규모를 보면, 2009년 1만 7,141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16년에는 6,375명으로 감소하였다. 혼인귀화자가 2010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외국 국적 동포들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계(조선족) 비중이 높은 중국 출신 혼인귀화자가 약 50% 감소하였다.

〈표 I-10〉 출신국가별 혼인귀화자 수, 2005–2016

(명)

| 연도 | 중국 | 베트남 | 캄보디아 | 필리핀 | 기타 | 전체 |
|---|---|---|---|---|---|---|
| 2005 | 5,572 | 344 | - | 728 | 431 | 7,075 |
| 2006 | 2,644 | 222 | - | 302 | 176 | 3,344 |
| 2007 | 3,109 | 439 | - | 314 | 328 | 4,190 |
| 2008 | 5,812 | 1,115 | - | 550 | 439 | 7,916 |
| 2009 | 11,744 | 3,754 | - | 809 | 834 | 17,141 |
| 2010 | 6,154 | 2,981 | - | 436 | 700 | 10,271 |
| 2011 | 6,023 | 3,056 | - | 488 | 1,166 | 10,733 |
| 2012 | 3,668 | 2,935 | 357 | 327 | 446 | 7,733 |
| 2013 | 3,457 | 3,914 | 500 | 513 | 637 | 9,021 |
| 2014 | 3,817 | 2,904 | 397 | 360 | 604 | 8,082 |
| 2015 | 3,121 | 2,645 | 405 | 258 | 537 | 6,966 |
| 2016 | 1,983 | 3,165 | 469 | 317 | 441 | 6,375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혼인귀화자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2016년 현재 베트남 출신이 3,16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출신 1,983명, 캄보디아 출신 469명 등의 순이다. 전체 혼인귀화자 중 이들 세 국가 출신의 비중은 88.1%에 달한다. 혼인귀화자의 누적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15년 현재 9만 2,316명으로 2007년 3만 8,991명에 비해 2.4배 늘어났다. 그러나 증가 속도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국제결혼 건수가 감소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귀화자 중 난민인정자의 수가 적은 것도 한국적 특징의 하나이다. 〈표 I-11〉에서 난민 현황을 보면,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총 난민신청자 2만 2,792명 중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신청자가 전체의 77.8%를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파키스탄 출신이 3,601명으로 가장 많고 이집트 출신 2,503명, 중국 출신 2,226명 등의 순이다.

난민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난민인정률과 난민보호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난민인정률은 심사 종료자 중 인정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난민보호율은 인도적 체류까지 포함한다. 유엔난민기구가 밝힌 세계의 난민인정률은 약 37%인데, 2016년 기준 한국의 난민인정률과 난민보호율은 각각 1.8%와 6.4%에 불과하다.

〈표 I-11〉 난민신청자 수와 난민심사 결과, 1994–2016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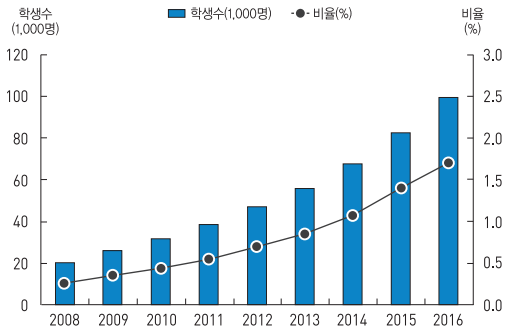
| 연도 | 난민 신청자 수 | 난민심사 결과 | | | | | |
|---|---|---|---|---|---|---|---|
| | | 심사 종료 | | | 심사 중 | | 철회 |
| | | 인정 | 인도적 체류 | 불인정 | 1차 심사 | 이의 신청 | |
| '94~'03 | 251 | 14 | 13 | 50 | 0 | 0 | 39 |
| 2004 | 148 | 18 | 1 | 7 | 0 | 0 | 9 |
| 2005 | 410 | 9 | 13 | 79 | 0 | 0 | 29 |
| 2006 | 278 | 11 | 13 | 114 | 0 | 0 | 43 |
| 2007 | 717 | 13 | 9 | 86 | 0 | 0 | 62 |
| 2008 | 364 | 36 | 14 | 79 | 0 | 0 | 109 |
| 2009 | 324 | 70 | 22 | 994 | 0 | 0 | 203 |
| 2010 | 423 | 45 | 35 | 168 | 0 | 0 | 62 |
| 2011 | 1,011 | 42 | 20 | 277 | 0 | 0 | 90 |
| 2012 | 1,143 | 60 | 31 | 558 | 0 | 1 | 187 |
| 2013 | 1,574 | 57 | 6 | 523 | 0 | 0 | 331 |
| 2014 | 2,896 | 94 | 539 | 1,745 | 129 | 241 | 363 |
| 2015 | 5,711 | 105 | 194 | 1,835 | 511 | 976 | 280 |
| 2016 | 7,542 | 98 | 246 | 5,050 | 3,075 | 1,928 | 731 |
| 계 | 22,792 | 672 | 1,156 | 11,565 | 3,715 | 3,146 | 2,538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 다문화가정 자녀의 추이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의 학생을 포함한다. [그림 I-21]에서 보는 것처럼,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08년 2만 180명에서 2016년 9만 9,186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0%를 넘어섰고 2016년 현재 1.7%에 이른다.

[그림 I-21]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 2008–2016




주: 1)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전체 초·중·고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임.
2) 다문화가정 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 출생 자녀+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등을 포함함.
출처: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혼인이주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

학년의 비중이 높다. 2016년 기준 6세 이하가 11만 3,50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12세가 5만 6,768명, 13–15세가 1만 7,453명이다. 부모의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의 자녀가 가장 많다. 〈표 I-12〉에서 보는 것처럼, 베트남 출신의 자녀는 2007년 5,062명에서 2016년 5만 6,468명으로 약 11.2배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한국계 중국, 필리핀 출신 순으로 많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수는 국제결혼 양상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앞으로 국제결혼의 감소 또는 안정세 유지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증가 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12〉 부모의 출신국가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수, 2007–2016

(명)

| 연도 | 중국 | 중국(한국계) | 베트남 | 필리핀 | 일본 | 기타 |
|---|---|---|---|---|---|---|
| 2007 | 7,716 | 14,201 | 5,062 | 6,013 | 6,016 | 5,250 |
| 2008 | 10,889 | 16,681 | 8,194 | 6,378 | 6,508 | 9,357 |
| 2009 | 35,932 | 18,669 | 22,491 | 10,687 | 6,838 | 13,072 |
| 2010 | 29,800 | 31,404 | 27,517 | 11,926 | 5,734 | 15,554 |
| 2011 | 34,852 | 33,186 | 34,256 | 13,937 | 14,510 | 20,413 |
| 2012 | 33,231 | 39,278 | 41,238 | 15,820 | 16,237 | 22,779 |
| 2013 | 37,084 | 42,294 | 49,458 | 18,020 | 17,806 | 26,666 |
| 2014 | 38,824 | 43,890 | 54,737 | 19,568 | 18,185 | 29,000 |
| 2015 | 40,351 | 35,439 | 57,464 | 19,918 | 7,773 | 36,605 |
| 2016 | 37,963 | 36,610 | 56,468 | 20,146 | 9,485 | 40,661 |

주: 1) 부모의 국적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결혼가정 자녀(국제결혼이주자,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를 모두 포함함.
2) 2015년부터 기준시점이 기존 1월 1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됨.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연도.

**참고문헌**

김두섭. 2015. 「한국인의 국제결혼과 외국인 배우자의 적응」. 집문당.

2017 Family & Household

Korean Social Trends 2017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Ⅱ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 서울대학교 54

가족 내 세대관계의 변화: 멀어지는 시가, 가까워지는 처가? 64
한경혜 | 서울대학교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양상 진미정 | 서울대학교 74

#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서울대학교)

- 가족규모의 축소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는 1인가구와 1세대가구의 증가,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거가구의 비율 증가와 관련이 있다.
- 최근 전체 가족 중 분거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후반까지 증가하여 다양한 가족구조 유형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 만혼화와 미혼율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남녀에 따라 연령대별 미혼율 변화 추이가 달라서 20대 미혼율의 증가폭은 여성이 더 큰 반면, 30대 미혼율의 증가폭은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 결혼을 당위적으로 보는 시각이 약화되고 동거에 대한 허용적 시각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혼외출산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이혼은 2003년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중년기 이혼의 증가로 평균 이혼연령은 꾸준히 높아졌다.
- 근래로 올수록 가사노동이 남녀 모두의 몫이라는 인식은 상당히 일반화되었지만 가사노동 분담에서 실제 행동의 변화는 느리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 가족의 광범위한 변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족의 주요 변화 추이와 현주소를 가족구조, 가족형성, 가족관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가족구조 영역에서는 가구규모의 축소와 1인가구의 증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분거가족의 증가와 같은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가족형성 영역에서는 결혼 지연 경향, 혼외출산과 동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혼율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성역할 변화에 따라 가사분담 태도나 양상이 어떻게 부부관계를 변화시켰는지 남녀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가족구조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가족구조의 변화로는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가구의 소규모화와 구조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 가구구성의 변화와 1인가구의 증가

가구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90년 3.7명에서 2015년 2.5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통계청은 2017년 「장래가구추계」에서 2045년에는 평균 가구원 수가 2.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가구규모의 축소는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이 줄어들고 1세대가구나 1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과 관련된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과거 30여 년간 60%대를 유지해 오던 핵가족가구의 비율이 2015년에는 58.6%까지 감

소하였다. 반면에 1인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5년 27.2%로 2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1인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4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6.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Ⅱ-1).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미혼율이 증가하고 노년층에서 노인독거가구가 늘어난 결과이다.

〈표 Ⅱ-1〉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1990-2045

| 연도 | 평균 가구원수 (명) | 세대별 구성비율(%) | | | | |
|---|---|---|---|---|---|---|
| | | 1인 가구 | 1세대 가구 | 2세대 가구 | 3세대 이상 가구 | 비혈연 가구 |
| 1990 | 3.8 | 9.0 | 10.7 | 66.3 | 12.5 | 1.5 |
| 1995 | 3.4 | 12.7 | 12.7 | 63.3 | 10.0 | 1.4 |
| 2000 | 3.1 | 15.5 | 14.2 | 60.8 | 8.4 | 1.1 |
| 2005 | 2.9 | 20.0 | 16.2 | 55.4 | 7.0 | 1.4 |
| 2010 | 2.7 | 23.9 | 17.5 | 51.3 | 6.2 | 1.2 |
| 2015 | 2.5 | 27.2 | 17.4 | 48.8 | 5.4 | 1.1 |
| 2017 | 2.5 | 28.5 | 17.9 | 47.4 | 5.1 | 1.2 |
| 2025 | 2.3 | 31.9 | 20.2 | 42.5 | 4.1 | 1.3 |
| 2035 | 2.2 | 34.6 | 22.6 | 38.3 | 3.4 | 1.2 |
| 2045 | 2.1 | 36.3 | 23.1 | 36.4 | 2.9 | 1.3 |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미혼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2017년 이후 자료는 추계치임.
5)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2015; 「장래가구추계」, 2017.

연령별 1인가구 비율의 증가는 젊은 연령층인 20대 가구주에서 두드러진다. 2015년에는 20-24세 가구주의 80%가량과 25-29세 가구주의 60% 이상이 1인가구였다. 20대 가구주의 경우 1인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인 것이다(표 Ⅱ-2). 이는 학업 혹은 직업상의 이유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젊은 층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결혼 전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결혼 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따로 살려고 하는 젊은 층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반영한다.

〈표 Ⅱ-2〉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 1985-2015

(%)

| 연령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
| 20-24세 | 29.7 | 38.4 | 49.6 | 55.7 | 64.0 | 70.8 | 79.3 |
| 25-29세 | 10.4 | 17.5 | 25.9 | 31.7 | 45.7 | 53.5 | 63.0 |
| 30-34세 | 3.2 | 5.5 | 9.3 | 13.6 | 22.5 | 29.6 | 36.2 |
| 35-39세 | 2.4 | 3.6 | 6.0 | 8.8 | 13.5 | 18.9 | 23.3 |
| 40-44세 | 2.3 | 3.2 | 5.3 | 7.7 | 10.8 | 14.5 | 19.5 |
| 45-49세 | 2.6 | 3.4 | 5.4 | 7.8 | 10.9 | 13.9 | 17.8 |
| 50-54세 | 3.9 | 4.5 | 6.6 | 8.6 | 11.5 | 14.9 | 18.3 |
| 55-59세 | 7.0 | 7.5 | 9.4 | 11.3 | 13.2 | 16.7 | 20.0 |
| 60-64세 | 10.6 | 13.1 | 15.3 | 15.8 | 17.5 | 19.8 | 22.1 |
| 65-69세 | 14.0 | 17.2 | 23.6 | 23.9 | 23.6 | 25.3 | 25.6 |
| 70-74세 | 18.1 | 20.7 | 28.9 | 33.8 | 32.1 | 32.0 | 29.8 |
| 75세 이상 | 23.2 | 25.5 | 34.9 | 41.4 | 43.6 | 45.1 | 41.1 |

주: 1) 1인가구 비율은 해당 연령집단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집단은 65세 이상 연령집단이다. 이들의 경우 1인가구 비율이 1985년에서 2015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7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가구는

전체 가구의 6.3%를 차지한다. 이는 2000년의 3.7%에 비해 1.7배 증가한 수치이며, 약 30년 후인 2045년에는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이 1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세대가구를 구성하고 살던 노인층이 배우자 사별 후에도 혼자 거주하기 때문에 노인독거가구가 늘어난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독거가구 비율이 41.1%에 달하는 것, 그리고 70세 이상 1인가구 중 여성 가구주 비율이 79.3%로 높게 나타나는 것도 남성보다 수명이 긴 여성 노인의 독거와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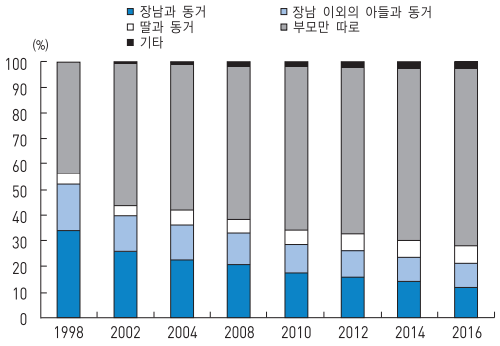
노인층에서의 1인가구 증가는 독립적 노인이 늘어난 반면 전통적 가족 규범은 약화된 데 기인한다. 70대 이상 고령자층은 건강 악화에 따른 돌봄의 필요성이 큰 집단이므로 고령자 독거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회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한편, 노부부만 따로 사는 노인단독가구의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그림 Ⅱ-1).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출산율이 높았던 세대로 자녀수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세대관계가 크게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과거 산업화 초기에는 자녀의 도시이주로 인해 농촌 노인 가족을 중심으로 비자발적 별거가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거주유형에 대한 규범과 태도가 변화하여 자발적 별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독립 주거에 필요한 건강과 자원을 가지지 못한 노인들이 비자발적으로 별거하는

[그림 Ⅱ-1] 노부모의 동거가족, 1998-2016




주: 1)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신 30세 이상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은 누구와 함께 살고계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통계치는 해당 범주의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들만 생활할 때 생기는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불안감(25.8%), 아플 때의 간병 문제(25.6%), 심리적 불안감(21.7%) 등이 주를 이루었다. 약 49%의 노인들이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대부분의 노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통계청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18-65세인 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12.3%인데 노인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65.4%에 이른다. 처분가능소득 빈곤율도 근로연령 가구는 10.7%, 노인가구는 49.1%로 확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비율은 특히 여성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여성 수급자 중 고령 수급자의

비율은 2001년과 2015년 각각 31.0%과 33.5%에 이르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각각 14.7%와 19.0%에 그친다. 여성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남성 노인보다 훨씬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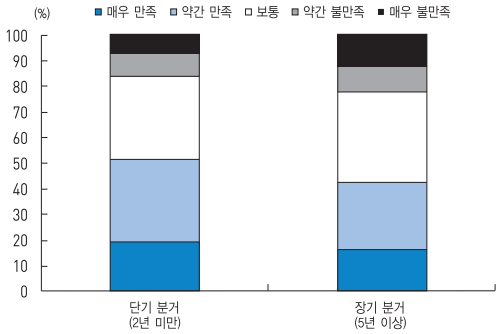
## 분거가족의 증가

전체 가족 중 분거가족의 비율은 2010년 15.1%에서 2012년 19.6%로 증가하였고 이후 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18.7%와 1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분거가족의 비율은 시기에 따라 등락은 있지만 10% 후반대로 유지되어 왔다. 분거가족 중 국외 분거가족은 10% 내외이며 국내 분거가족이 절대 다수이다.

분거가족은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경우보다는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 2012년과 2014년 그리고 2016년 모두 분거가족의 80% 이상이 미혼 자녀의 분가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와 분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이다. 직장으로 배우자와 분거하는 비율은 2012년 72.3%, 2014년 68.0%, 2016년 72.6%에 이른다. 한편, 가족 간 불화 때문에 배우자와 분거하는 비율은 2012년 8.7%, 2014년 10.1%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2016년에는 7.9%로 감소하였다. 자녀 교육을 위해 배우자와 분거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자녀와 분거하는 가장 큰 이유도 직장이다. 직장 때문에 자녀와 분거하는 비율은 2012년 53.5%, 2014년 52.7%, 2016년 54.9%에 달한다.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분거도 적지 않은데, 이 비율은 2012년 38.2%, 2014년 37.2%, 2016년 34.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림 Ⅱ-2] 배우자 분거가족 가구주의 분거기간별 배우자 관계 만족도, 2016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6.

가구주가 배우자와 분거하고 있는 기간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1-2년 미만이 24.0%로 가장 많았고 2012년과 2014년에는 6개월 미만의 단기 분거가 각각 22.1%와 24.6%로 가장 많으며, 2016년에는 1-2년 미만이 22.7%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의 장기 분거도 2010년 14.4%, 2012년 17.0%, 2014년 15.8%, 2016년 18.8%로 적지 않다. 최근 줄어들던 분거 기간은 다시금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구주가 자녀와 분거하는 기간은 배우자와 분거하는 기간보다 더 길다. 자녀와의 분거는 5년 이상의 장기 분거가 가장 많은데, 이 비율은 2010년 26.1%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14년 30.3%까지 늘어났다가 2016년 29.5%로 다소 줄어들었다. 분거가 오래 지속되

면 가족 구성원 간 동반자 의식이나 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

가구주가 배우자와 5년 이상 떨어져 사는 장기 분거가족과 2년 미만 떨어져 사는 단기 분거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단기 분거가족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가 7.2%에 불과하지만 장기 분거가족은 그 비율이 12.5%로 훨씬 높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이 장기 분거를 가져 온 요인일 수도 있지만 장기 분거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나 자녀관계 만족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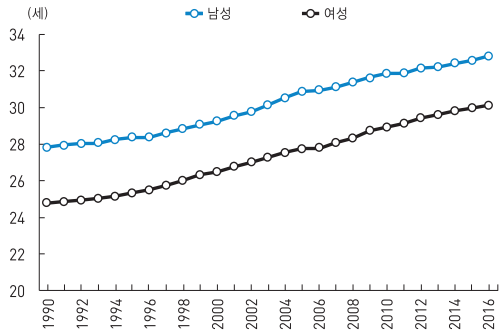
## 가족형성

최근 한국 가족의 가족형성과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만혼화와 미혼율의 증가, 이혼 양상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 만혼화 경향과 미혼율의 증가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만혼화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현상이지만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2016년 남성 32.8세, 여성 30.1세로 2000년에 비해 남성은 3.5세, 여성은 3.6세 정도 늦어졌다(그림 Ⅱ-3).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청년실업과 취업난이 가중되어 결혼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것이 최근 초혼연령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림 Ⅱ-3]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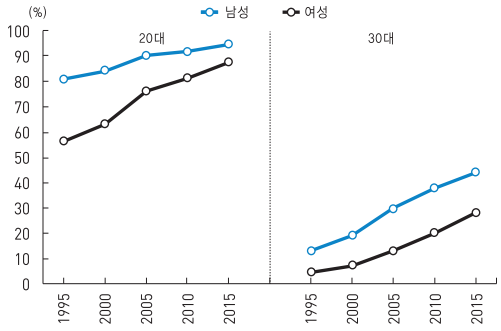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초혼연령의 상승과 만혼화는 미혼율의 증가로 나타난다. 특히, 20-30대 연령층의 미혼율 증가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미혼율은 1995년 39.2%에서 2015년 61.9%로 증가하였다. 즉, 20-30대의 절반 이상이 미혼 상태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29세의 미혼율은 2015년 91.3%에 달한다. 30-39세의 미혼율은 2015년 36.3%로 1995년 이후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35-39세의 미혼율은 1995년 5.0%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26.2%로 증가하여 30대 후반까지도 결혼하지 않은 인구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혼율의 증가 추세는 남녀 간에 다르게 나타난다. 2015년 기준 20대 남성과 여성의 미혼율은

각각 94.7%와 87.5%로 남성의 미혼율이 7.2%p 더 높다. 그러나 미혼율의 증가폭은 여성이 더 크다. 이와 달리 30대의 미혼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30대 남성의 미혼율은 1995년 13.1%에서 2015년 44.2%로 31.1%p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미혼율은 5.0%에서 28.1%로 23.1%p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림 Ⅱ-4). 결혼연령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결혼적령기 연령 규범에 대한 압박이 여성에게 더 큰 것이 미혼율 증가 추세에서의 남녀 차이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4] 20-30대 연령층의 성별 미혼율, 199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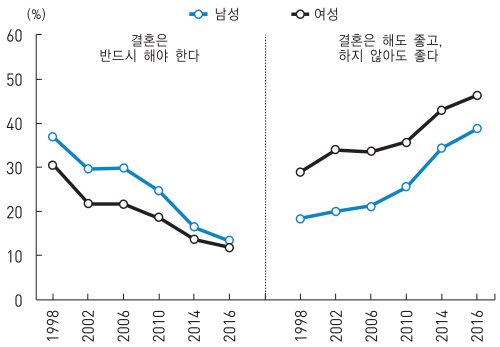

주: 1) 미혼율은 해당 집단 인구 중 미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결혼 관련 가치관의 변화

만혼화 경향과 미혼율의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독신율이 극히 낮은 보편적 결혼(universal marriage) 사회였던 한국에서 결혼을 당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8-2016년 사이에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998년에는 남성의 36.9%와 여성의 30.5%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016년에는 이 응답 비율이 남녀 각각 13.5%와 11.9%로 감소하였다. 남녀 모두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 비율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1998년에는 남성의 18.4%와 여성의 28.9%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2016년에는 이 응답 비율이 남녀 각각 38.8%와 46.3%로 증가하였다(그림 Ⅱ-5). 2016년 현재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림 Ⅱ-5]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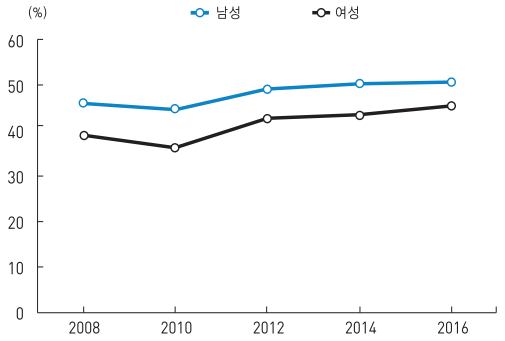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여기에서는 결혼에 대한 당위적 태도와 선택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률만을 제시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응답이 43.2%로 가장 많고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아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 제도에 대해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동거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만혼화와 미혼율의 증가와 함께 동거에 대한 태도가 더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남성의 50.5%와 여성의 45.1%가 '약간 동의' 혹은 '전적으로 동의'라고 응답하였다(그림 Ⅱ-6). 일반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통념과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동거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거에 대한 가치관은 남녀 모두 과거에 비해 보다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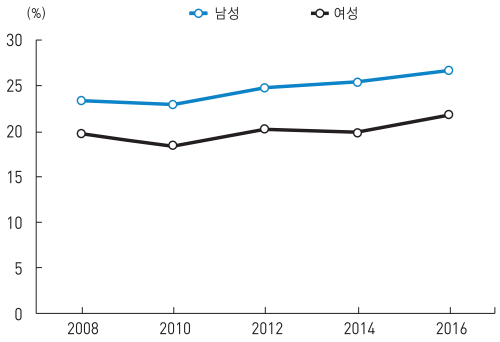
[그림 Ⅱ-6] 성별 동거에 대한 태도, 2008-2016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는 그다지 허용적이지 않고 큰 변화도 없다. 2016년 현재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약간 동의' 혹은 '전적으로 동의'라고 응답한 남녀는 각각 26.6%와 21.8%에 그친다(그림 Ⅱ-7). 남성이 여성보다 혼외출산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남녀 모두 동의하는 비율이 25% 내외로 비교적 낮다. 혼외출산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2008년 이후 약간 증가하였으나 남녀 모두 그 증가폭이 미미하다.

[그림 Ⅱ-7] 성별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 2008-2016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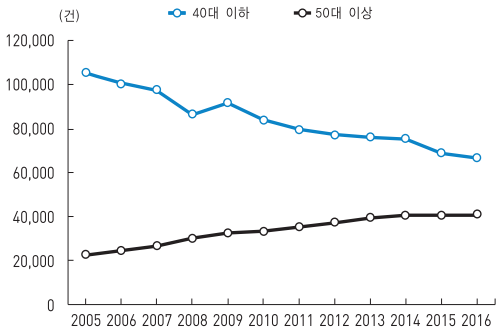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만혼화 경향이 가족형성의 지연을 나타낸다면, 이혼율은 형성된 가족의 해체와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조이혼율과

이혼건수는 2003년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이혼건수는 10만 7,328건으로 2010년 11만 6,858건에 비해 9,530건 감소하였다.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유배우 이혼율도 2016년 4.3건으로 2010년 4.8건보다 0.5건 감소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남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47.2세로 2005년에 비해 5.1세 증가하였고 여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43.6세로 같은 기간 5.0세 증가하였다. 이혼연령의 증가는 만혼으로 인해 결혼연령 자체가 높아진 탓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의 이혼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실제 40대 이하의 조이혼율은 감소하였으나 50대 이상의 조이혼율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남성 이혼자의 연령에 따른 이혼건수를 보아도 연령대별 차이가 관찰된다. 40대 이하 남성의 이혼건수는 2005년 10만 5,206건, 2010년 8만 3,692건, 2016년 6만 6,490건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50대 이상 남성의 이혼건수는 2005년 2만 2,829건에서 2010년 3만 3,166건 그리고 2016년 4만 8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Ⅱ-8).

결혼과 가족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중년세대의 이혼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베이비붐 세대가 중년층으로 진입하면서 50대 이상 인구집단의 규모 자체가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수명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위하여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이혼억제 요인인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난 후에 중년세대가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Ⅱ-8] 남성 이혼자의 연령집단별 이혼건수, 2005-2016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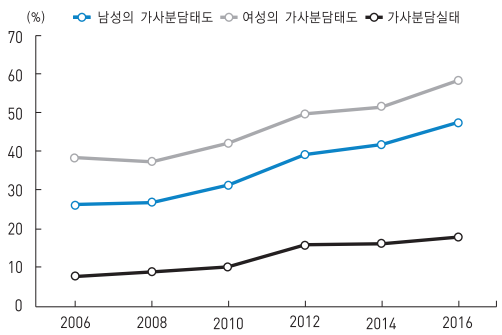
가족구조 및 가족형성의 변화와 함께 가족 내 전반적인 관계도 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함께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약화되면서 가족 내 젠더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가사분담 태도와 양상의 변화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은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남성 47.4%, 여성 58.3%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가사분담 행동은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가사분담 실태를 살펴보면,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2016년 현재 17.8%에 그친다. [그림 Ⅱ-9]는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오히려 커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태도와 실제 행동사이의 간극이 커지는 이유는 공평한 가사분담에 동의하는 비율의 증가폭이 실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의 증가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즉, 부부가 실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2006년 7.7%에서 2016년 17.8%로 10.1%p 증가했지만 공평한 가사분담을 지지하는 태도만큼 빠르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사참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9]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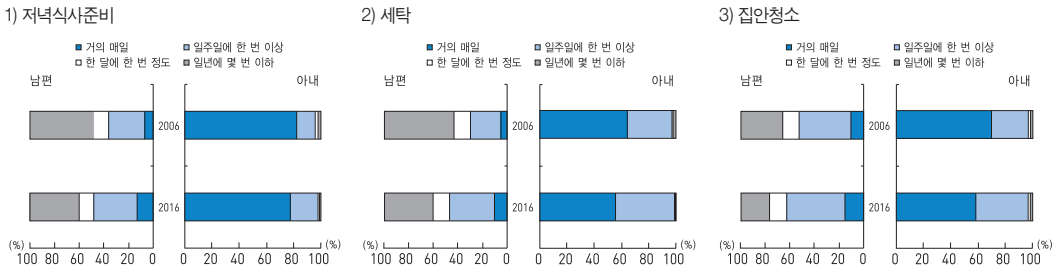



주: 1)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부부간 가사분담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응답한 결과로, 이들 중 평소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실제 가사분담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6년과 2016년 자료를 이용한 성별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가사활동인 저녁식사 준비, 세탁, 집안 청소를 하는 빈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사활동이 여전히 아내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남편의 가사활동 참여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저녁식사를 거의 매일 준비하는 비율은 아내 77.5%, 남편 12.9%로 아내가 주로 저녁식사 준비를 담당했다. 남편의 경우 저녁식사를 1년에 몇 번 정도만 준비하는 비율이 40.0%에 달한다. 하지만 2006년과 비교하면 남편이 저녁식사 준비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이 저녁식사를 1주일에 한 번 이상 준비하는 비율은 29.2%에서 35.2%로 지난 10년간 6.0%p 증가하였고, 남편이 저녁식사를 거의 매일 준비하는 비율도 6.7%에서 12.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세탁을 거의 매일 또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비율은 아내 98.7%, 남편 47.2%로 세탁도 주로 아내가 담당했다. 하지만 남편의 경우 이 비율이 2006년에 비해 16.9%p 증가하여 남편

[그림 Ⅱ-10] 남편과 아내의 가사활동 빈도, 2006, 2016




주: 1) 만 18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기혼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의 참여도 지난 10년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집안 청소는 남편의 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집안 청소를 거의 매일 또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남편의 비율은 62.7%로 다른 가사활동에 비해 남편의 참여 정도가 높다. 아울러 이 비율은 2006년에 비해 10%p 증가하였다(그림 Ⅱ-10).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가사노동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청이 20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수집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남성의 하루 평균 가정관리 시간은 1999년 25분에서 2014년 38분으로 늘어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214분에서 189분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가정관리 시간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길다. 부부 간 가사분담에서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가족 내 부부관계의 현실이라고 하겠다.

# 가족 내 세대관계의 변화: 멀어지는 시가, 가까워지는 처가?

한경혜 (서울대학교)

- 결혼한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동거 여부 및 거주 근접성으로 보면, 거주지 선택에 있어 여전히 시가 중심적이다.
-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연락 및 만남 빈도에서 시가와 처가 간의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 줄었다.
-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은 처가보다 시가에 더 많이 제공하지만 그 차이가 지난 10년간 크게 줄어들었다.
- 2016년 현재 처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시가로부터 받는 지원의 두 배를 넘는다. 시가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은 감소하고 처가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에서 처가부모의 도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리적 이동성의 증가와 가족규범의 변화, 수명 연장에 따른 세대 간 관계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한국 가족 내 성인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세대관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부계 중심성이 약화되면서 부계와 모계 혈족을 동등하게 대하는 양계화의 방향으로 세대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시가와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처가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모계 중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6년과 2016년 자료를 분석하여 지난 10년간 한국 가족 내 세대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거주 형태와 접촉 빈도, 세대 간 지원 교환 행동을 부계(시가)와 모계(처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본다. 여기에서 분석 대상은 현재 기혼자이면서 양가 부모세대에 각각 적어도 한 분의 노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성인자녀로 하였다.

## 부모와의 동거 및 거주 근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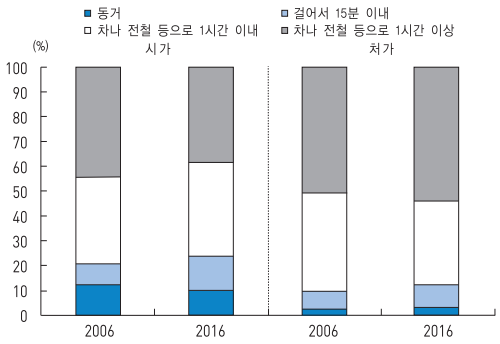
먼저, 결혼한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동거 양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부계 중심적 규범이 점점 약화되었으며 3세대 동거가족이 감소하고 결혼한 자녀가 독립거주를 하는 핵가족이 빠르게 정착되었다. 그리고 시가와의 동거가 줄어들면서 처가에 살거나 처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6년과 2016년 자료

를 분석하여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는지 살펴본 결과,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핵가족 형태가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노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을 시가와 처가 간에 비교해 보면, 시가와 동거하는 비율(10.3%)이 처가와 동거하는 비율(3.4%)보다 약 3배 정도 높다(그림 Ⅱ-11). 노부모와의 동거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부계 중심적 경향이 관찰된다. 다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처가살이를 하는 남성은 1990년 1만 8,088명에서 2015년 4만 7,789명으로 증가한 반면 시집살이를 하는 여성은 1990년 44만 4,634명에서 2015년 18만 6,257명으로 감소하였다. 현재로는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가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보다 더 많지만 장기적 추세로는 부거제가 꾸준히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거주 근접성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을까? 시가와 처가 부모 중 어느 쪽 부모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지는 거주지 선택에 있어 부거제 규범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Ⅱ-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가와 처가 모두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증가하였다. 이 비율은 2006년 시가 8.4%, 처가 7.3%에서 2016년 시가 13.7%, 처가 9.1%로 각각 5.3%p와 1.8%p 증가하였다. 동거와 더불어 15분 이내 근거리 거주 비율도 처가보다 시가의 경우가 더 높다.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잦은 접촉을 유지하는 가족 형태를 수정확대가족이라고 하는데, 처가보다는 시가와 수정확대가족의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부모와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사는 비율은 2016년 조사 결과 시가(38.2%)보다 처가(53.8%) 경우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양가 부모와의 동거 및 거주 근접성을 비교한 결과를 종합하면, 거주지 선택에 있어 여전히 시가 중심적인 경향이 관찰된다.

[그림 Ⅱ-11] 양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거리, 200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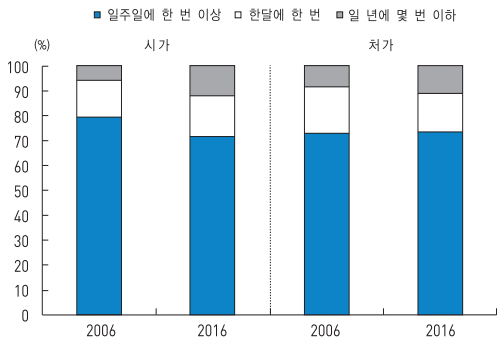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는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옆집, 같은 건물 또는 집근처', '걸어서 15분미만 거리', '차나 전철 등으로 15-30분미만 거리', '차나 전철 등으로 30분-1시간미만 거리', '차나 전철 등으로 1-3시간미만 거리', '차나 전철 등으로 3시간 이상 거리', '해외 거주' 등 8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 부모와의 접촉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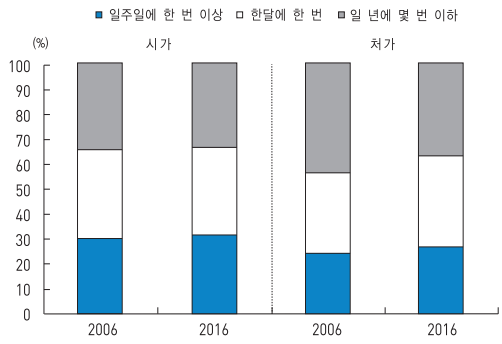
다음으로 양가 부모와의 연락 및 만남 빈도를 비교해 보자. 기존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친족의 의례적 기능은 부계 중심으로 상당 정도 유지

[그림 Ⅱ-12] 양가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것 외에 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거의 매일',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 년에 몇 번', '일 년에 한 번 정도', '일 년에 한 번 미만' 등 7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그림 Ⅱ-13] 양가 부모와 만나는 빈도, 200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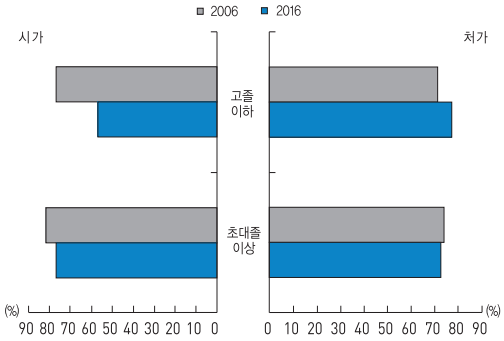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직접 만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거의 매일',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 년에 몇 번', '일 년에 한 번 정도', '일 년에 한 번 미만' 등 7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되면서도 일상생활 속 상호작용에서는 부계 중심성이 약화되고 처가와의 유대가 강화되는 방향의 변화가 1980년대부터 이미 진행되었다고 지적한다. 양가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시가 79.4%, 처가 72.9%로 시가 쪽이 더 높았으나 2016년에는 이 비율이 시가 71.5%, 처가 73.4%로 처가 쪽이 더 높다. 즉, 지난 10년 사이에 잦은 연락을 하는 비율이 시가 쪽은 감소하고 처가 쪽은 소폭이지만 증가하여 2016년 현재는 처가와의 잦은 연락 비율이 시가의 경우보다 높다(그림 Ⅱ-12).

양가 부모와 만나는 빈도를 살펴보아도 처가 쪽과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6년에는 1년에 몇 번 이하로 만나는 비율이 친가 34.6%, 처가 43.9%로 처가 쪽이 훨씬 더 높았으나 2016년에는 이 비율이 친가 33.5%, 처가 37.1%로 양가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비율은 2006년에 시가 쪽이 더 높았으나 2016년에는 처가 쪽이 더  높아졌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비율은 시가 쪽(1.4%p)에 비해 처가 쪽(2.7%p)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Ⅱ-13). 세대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시가와 처가 간의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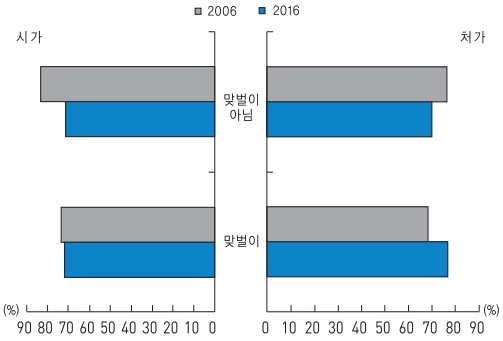
세대 간 접촉 빈도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성인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수준별 부모와의 연락 비

[그림 Ⅱ-14]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것 외에 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그림 Ⅱ-15] 맞벌이 여부별 양가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것 외에 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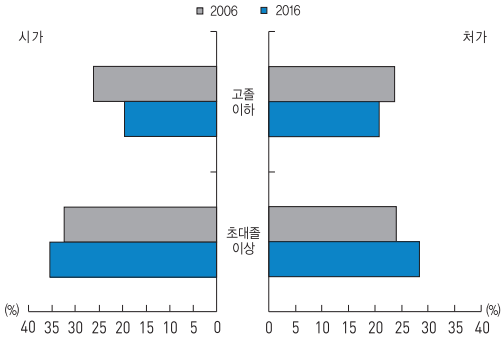
율을 보면, 지난 10년간 고졸 이하 집단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고졸 이하 집단의 경우 2006년 대비 2016년에 시가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비율은 19.7%p 감소하였으나 처가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비율은 5.7%p 증가하였다(그림 Ⅱ-14). 처가 쪽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고졸 이하 학력집단에서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 여부별로 부모와 자주 연락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외벌이 부부는 시가와 처가를 막론하고 부모와의 잦은 연락 비율이 지난 10년간 감소하였다. 외벌이 부부가 시가부모에게 자주 연락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12.1%p나 감소하였다. 맞벌이 부부는 시가부모와의 잦은 연락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처가부모와의 잦은 연락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처가부모에게 1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에 8.5%p 증가하였다(그림 Ⅱ-15).

[그림 Ⅱ-16]은 양가 부모를 만나는 빈도를 통해 살펴보면 고학력 집단에서 부계 중심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졸 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 양가 부모를 1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잦은 만남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교육수준별 차이는 시가부모를 만나는 비율에서 더 두드러진다. 가령 2016년에 시가부모를 1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비율은 초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15.8%p나 높다. 한편, 고졸 이하 집단은 2006년에 시가부모를 자주 만나는 비율이 처가부모 쪽보다 높았지만 2016년에는 그 차이

가 역전되었다. 이 집단은 고학력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계 중심성이 약하고 처가와의 접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16]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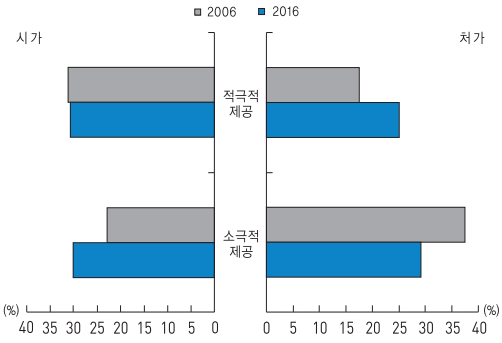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직접 만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 부모에 대한 경제적 · 도구적 지원

지금부터는 성인자녀가 양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및 도구적 지원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그림 Ⅱ-17]은 2006년과 2016년에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정도를 보여주는데, 이 그림에서 양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지난 10년간 상당히 양계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드러난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비율은 2016년에 시가 30.6%, 처가 24.9%로 시가 쪽이 더 높다. 자녀들이 처가보다 시가에 경제적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2006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계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모습이다. 2006년에는 시가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비율이 31.2%에 이른 반면 처가의 경우에는 17.6%에 그쳤었다. 지난 10년 사이 양가의 격차가 13.6p%에서 5.7%p로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소극적인 경제적 지원 비율은 2006년에 시가 22.8%, 처가 37.3%로 처가 쪽이 훨씬 더 높았는데, 2016년에는 이 비율이 시가 29.9%, 처가 29.2%로 오히려 시가 쪽이 조금 더 높아졌다. 종

[그림 Ⅱ-17]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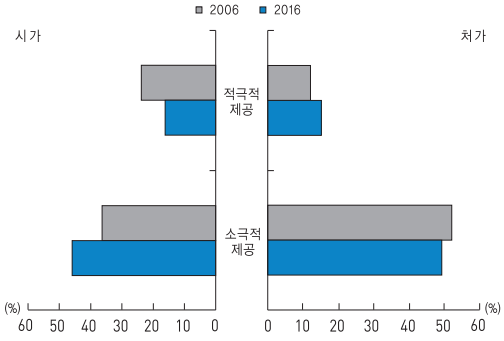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자주 해드렸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드렸다'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적극적 제공'은 '매우 자주 해드렸다'와 '자주 해드렸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소극적 제공'은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와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합하면, 지난 10년 동안 처가에는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증가하고 시가에는 소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시가와 처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양가 부모에게 청소, 식사준비 등의 집안일 수행이나 병원 모시고 가기 등의 도구적 지원을 제공한 정도를 살펴보았다.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비율은 2006년에 시가 23.7%, 처가 11.9%로 시가 쪽이 11.8%p 더 높았고, 같은 해 도구적 지원을 소극적으로 제공하는 비율은 시가 36.4%, 처가 52.1%로 처가 쪽이 15.7%p 더 높았다. 즉, 처가에 비해 시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더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여전히 시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10년 사이에 많이 줄어들었다. 도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비율은 시가 16.3%, 처가 14.8%로 지난 10년 사이에 양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했다. 도구적 지원을 소극적으로 제공하는 비율도 시가 45.7%, 처가 49.1%로 거의 비슷해졌다(그림 Ⅱ-18).

[그림 Ⅱ-18] 양가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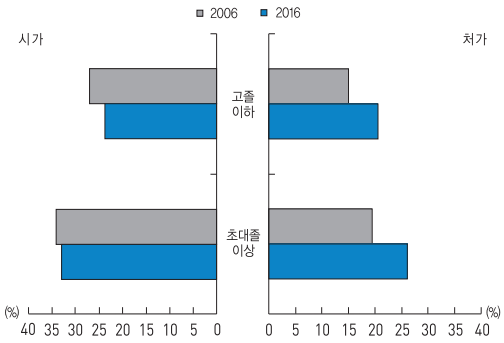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봐드리기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드렸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드렸다'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적극적 제공'은 '매우 자주 해드렸다'와 '자주 해드렸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소극적 제공'은 '거의 해드리지 않았다'와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이제 양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및 도구적 지원 양상을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살펴보자. 먼저 교육수준별 경제적 지원 양상을 보면, 지난 10년간 양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초대졸 이상 집단과 고졸 이하 집단 모두에서 관찰된다. 고졸 이하의 경우 2006년과 2016년 사이 시가에 대한 적극적 지원 비율은 3.2%p 줄어들고 처가에 대한 적극적 지원 비율은 5.6%p 늘어났다. 초대졸 이상의 경우도 같은 기간 이 비율이 시가 쪽은 1.4%p 감소하고 처가 쪽은 6.8%p 증가하였다(그림 Ⅱ-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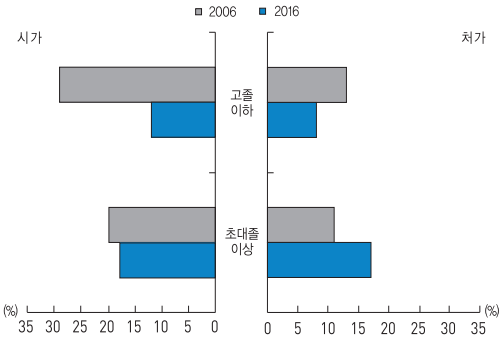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양상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과 유사하게 고졸 이하 집단과 초대졸 이상 집단 모두에서 양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고졸 이하의 경우 2006년과 2016 사이 시가에 대한 적극적 지원 비율은 17.1%p 줄어든 데 비해 처가에 대한 적극적 지원 비율은 4.8%p 줄어드는 데 그쳤다. 초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 비율이 시가

[그림 Ⅱ-19]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에게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자주 해드렸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드렸다'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자주 해드렸다'와 '자주 해드렸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그림 Ⅱ-20]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에게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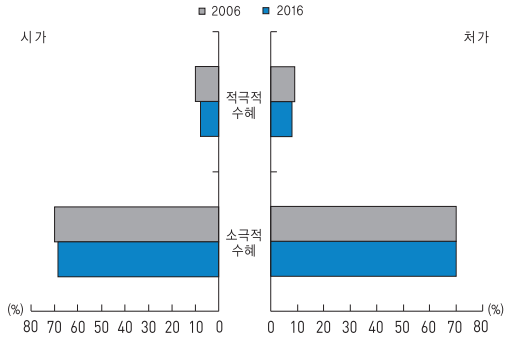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봐드리기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드렸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드렸다'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자주 해드렸다'와 '자주 해드렸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쪽은 2.0%p 감소한 반면 처가 쪽은 오히려 6.1%p 증가하여 양가에 대한 지원 수준(시가 17.8%, 처가 17.1%)이 거의 비슷해졌다(그림 Ⅱ-20). 한편, 맞벌이 여부에 따른 도구적 지원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 도구적 지원

이번에는 성인자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및 도구적 지원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그림 Ⅱ-21]은 성인자녀가 시가부모와 처가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 양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는 비율은 2006년에 시가 9.6%, 처가 9.3%였으나 2016년에는 시가 7.3%, 처가 8.1%로 그 차이가 역전되었다. 부모로부터 소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는 비율의 경우 시가는 69.7%에서 67.8%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처가는 70.5%에서 변화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양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는 정도는 지난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도가 지난 10년 동안 적지 않게 변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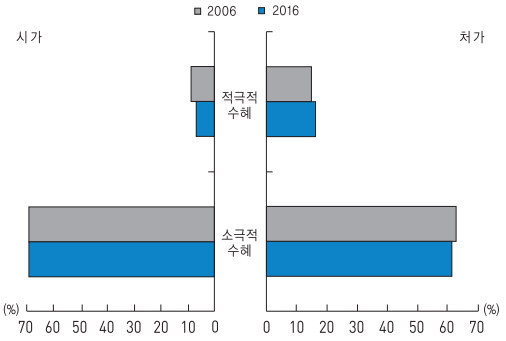
[그림 Ⅱ-21] 양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주셨다'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적극적 수혜'는 '매우 자주 해주셨다'와 '자주 해주셨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소극적 수혜'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와 '거의 해주시지 않았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그림 Ⅱ-22] 양가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봐주기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주셨다'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적극적 수혜'는 '매우 자주 해주셨다'와 '자주 해주셨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소극적 수혜'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와 '거의 해주시지 않았다'를 합한 응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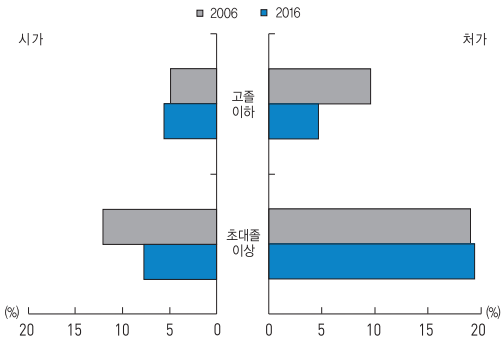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림 Ⅱ-22]는 양가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 양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6년과 2016년 사이 시가로부터 받는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 비율은 9.0%에서 7.1%로 1.9%p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처가로부터 받는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 비율은 15.0%에서 15.6%로 0.6%p 증가하였다. 그 결과 처가와 시가로부터 받는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 정도의 차이는 2006년 6.0%p에서 2016년 8.5%p로 커졌다. 2016년 현재 부모로부터의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은 처가로부터 받는 비율이 시가로부터 받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부모로부터 받는 소극적인 도구적 지원에서는 시가와 처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시가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이 감소함으로써 도구적 지원의 처가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에 있어 처가부모의 도움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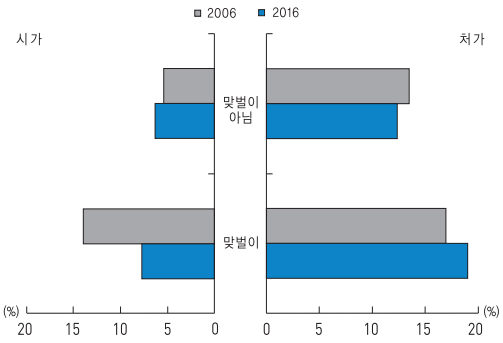
[그림 Ⅱ-23]은 양가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에 있어 교육수준별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초대졸 이상 집단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 처가로부터의 적극적 지원은 19.1%에서 19.4%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시가로

[그림 Ⅱ-23] 교육수준별 양가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봐주기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주셨다'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자주 해주셨다'와 '자주 해주셨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그림 Ⅱ-24] 맞벌이 여부별 양가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2006, 2016




주: 1) 현재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각각 한 분 이상 생존해 있고, 부모와 비동거 중인 만 18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봐주기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해주셨다'까지 5개의 범주로 제시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자주 해주셨다'와 '자주 해주셨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부터의 적극적 지원은 12.1%에서 7.7%로 감소하여 도구적 지원의 모계 의존성이 심화되었다. 반면, 고졸 이하 집단의 경우 초대졸 이상 집단에 비해 부모, 특히 처가부모로부터 받는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그나마 10년 사이에 감소하였다.

[그림 Ⅱ-24]는 양가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에 있어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에 있어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에 있어 특히 맞벌이 부부는 처가 의존성이 높다. 이들이 시가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 14.0%에서 7.9%로 감소한 반면 처가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17.0%에서 19.0%로 증가하여 처가 의존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에 경제적 및 도구적 지원이 오고 가는 양상은 시가와 처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선,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보다 적다는 점은 시가와

처가에서 공통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처가보다 시가에게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은 시가보다 처가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제공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도구적 지원 교환의 경우,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은 시가와 처가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부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지원은 양가 사이에 차이가 큰 편이다. 즉, 시가와 처가에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의 정도는 비슷한데 결혼한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정도는 시가보다 처가가 크다. 이는 시가부모에게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반면 처가부모에게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기존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왜곡된 모계화, 비대칭적 양계화라 진단한 바 있다. 시가와 처가의 차이는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비대칭적 양계화 양상은 여전히 한국 가족 내 세대관계에서 관찰된다고 하겠다.

#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양상

**진미정** (서울대학교)

- 한국의 아동돌봄 서비스는 2013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가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0–5세 아동이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 0–2세 영아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하면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고 취업하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 수급률이 높다.
- 3–5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은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더 높지만 유치원 이용률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비슷하다.
- 한국의 기관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2006년에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나 서비스의 양적 확대로 2014년에는 영아, 유아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되었다.

한국의 아동돌봄 서비스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농번기 농촌 가족이나 도시 저소득 맞벌이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성격을 띠면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가정의 돌봄을 지원하였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돌봄 서비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및 인구 정책으로 확대되었다.

아동돌봄 서비스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보육서비스,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초등학생 대상의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영유아 대상의 기관보육 서비스가 가장 오래 되었고 이용 인구도 가장 많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며,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는 영유아기가 지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나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기관보육 서비스보다 이용자는 적지만 아동돌봄 서비스의 방법과 대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동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연령대뿐 아니라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이용 양상이 달라진다. 유아교육처럼 교육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영아돌봄이나 초등돌봄 서비스는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된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아동돌봄 서비스의 대상과 방법도 세분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상태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돌봄 서비스 이용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돌봄 서비스 이용 양상이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은 혼인상태와 연령대에 따라 달라진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00년, 2006년, 2016년 자료를 여성의 혼인상태와 연령대에 따라 분석하여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Ⅱ-3〉에서 알 수 있듯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1.5%에서 2016년 53.8%로 2.3%p 증가하였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2000년 45.6%에서 2016년 55.3%로 9.7%p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더 자세히 비교해 보면, 3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2016년 현재 20대는 46.5%, 30대는 51.8%, 40대는 65.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진다. 2016년 기준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68.9%, 30대 84.3%, 40대 72.2%로 같은 연령대라도 기혼여성보다 높다. 그 차이는 20대 22.4%p, 30대 32.5%p, 40대 6.7%p로 30대에 가장 크고 40대부터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는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30대가 출산과 양육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표 Ⅱ-3〉 기혼 및 미혼 여성의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2000-2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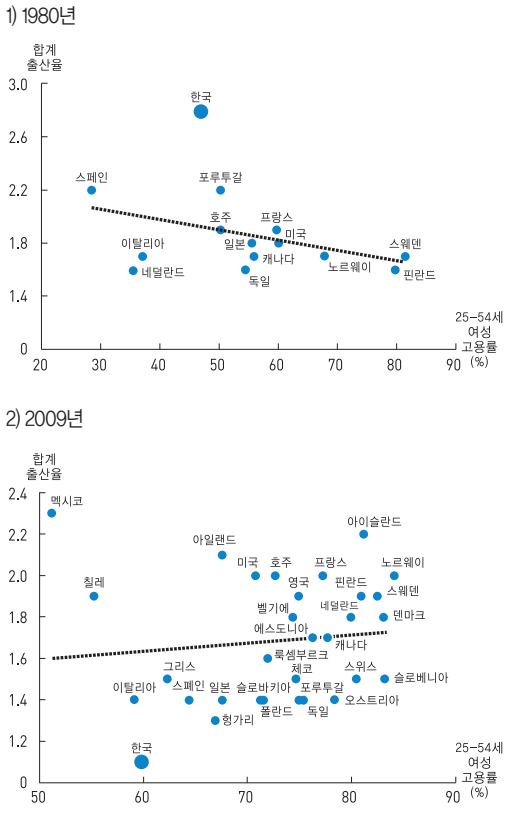
| | 전체 | 15-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
| 기혼여성 | | | | | | | |
| 2000 | 51.5 | 26.5 | 36.7 | 52.0 | 62.7 | 52.7 | 39.4 |
| 2006 | 52.0 | 29.4 | 42.1 | 51.6 | 63.1 | 52.6 | 34.0 |
| 2016 | 53.8 | 43.0 | 46.5 | 51.8 | 65.5 | 61.0 | 34.9 |
| 미혼여성 | | | | | | | |
| 2000 | 45.6 | 11.4 | 67.5 | 73.4 | 68.1 | 62.4 | 29.9 |
| 2006 | 52.5 | 8.9 | 70.1 | 81.2 | 73.1 | 69.5 | 42.6 |
| 2016 | 55.3 | 9.6 | 68.9 | 84.3 | 72.2 | 68.2 | 30.0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은 생애주기상 결혼 및 출산 결정과 맞물려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보다 낮은 것은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인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반비례 관계에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 국제 자료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사이에 오히려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Ⅱ-25]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에는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반비례 관계에 있었으나 2009년에는 정적인 관계로 바뀌었다. 2009년 그래프를 보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고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낮다. 이 같은 차이의 배경에는 공적인 아동돌봄 서비스가 있다. 공적 돌봄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제공되느냐에 따라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양육을 병행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림 Ⅱ-25] OECD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간 상관관계, 1980, 2009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 어머니의 취업상태와 아동의 연령에 따른 돌봄 서비스 이용

한국의 공적인 아동돌봄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기관보육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로 구분된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84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에게 연령별로 10-2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09년 도입 당시에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었다. 2016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93만 3,153명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받았으며 이는 대상 아동의 29.6%에 해당한다.

아동돌봄 서비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유아 기관보육은 어린이집(0-5세)과 유치원(3-5세) 서비스로 이원화되어 있다. 2016년 현재 전국 4만 1,084개 어린이집의 145만 1,215명의 아동과 전국 8,987개 유치원의 70만 4,138명의 아동이 기관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원화된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2011년 5세 대상의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2013년에는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기관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보육비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3개월-12세 아동에게 영아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인데, 2016년 기준으로 이용 가정이 6만 1,221가구에 불과하고 이용 현황에 대한 공식 자료도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일종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주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족의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돌봄(방과후-17시)과 저녁돌봄(17-22시)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돌봄교실 외

에 방과후수업과 연계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도 제공되고 있다.

아동돌봄 서비스의 이용 양상이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2년과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2013년부터 확대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2년은 정책 시행 직전에 해당하고 2015년은 정책 시행 3년 후 시점에 해당한다.

〈표 Ⅱ-4〉는 2012년과 2015년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른 서비스 이용률을 보여준다. 2015년에는 어머니의 취업상태를 비취업, 휴직, 취업, 상용직과 일용직 등으로 세분하여 살펴볼 수 있지만 2012년에는 취업여부에 따라서만 살펴볼 수 있다. 두 시기의 가장 큰 차이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의 비율에서 발견된다.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를 둔 가구 중에서 2012년에는 비취업모 가구의 6.0%와 취업모 가구의 0.8%만이 가정양육수당을 받았으나 2015년에는 비취업모 가구의 39.2%와 취업모 가구의 14.9%가 가정양육수당을 받았다. 가정양육수당을 이용하는 가구가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원대상 아동 연령의 확대와 함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가정양육수당 대상 가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자료로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휴직 중인 경우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비율이 62.0%로 가장 높고 상용직(17.1%)인 경우가 일용직(2.1%)인 경우보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표 Ⅱ-4〉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12, 2015

(%)

| |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 어린이집 | | 유치원 (유아) |
|---|---|---|---|---|
| | | 영아 | 유아 | |
| 2012년 | | | | |
| 취업 | 0.8 | 72.2 | 45.9 | 47.7 |
| 비취업 | 6.0 | 39.7 | 39.6 | 49.0 |
| 2015년 | | | | |
| 취업 | 14.9 | 78.5 | 66.5 | 41.7 |
| 상용직 | 17.1 | 75.5 | 66.5 | 37.0 |
| 일용직 | 2.1 | 96.1 | 66.9 | 50.0 |
| 휴직 | 62.0 | 43.0 | 53.6 | 42.1 |
| 비취업 | 39.2 | 52.3 | 58.6 | 44.6 |

주: 1) 영아 및 유아의 대상연령은 보육연령 기준으로 영아는 0-2세, 유아는 3-5세, 영유아는 0-5세임.
2)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을 다니게 되는 경우에 이용률이 중복 계산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012.;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원자료, 2015.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률을 살펴보면, 0-2세 영아의 경우 2012년에 비취업모 가구의 39.7%와 취업모 가구의 72.2%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고 2015년에는 비취업모 가구의 52.3%와 취업모 가구의 78.5%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다. 비취업모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12.6%p 증가한 데 비해 취업모 가구의 경우에는 6.3%p 증가에 그쳐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률이 더 크게 늘어났다. 어머니가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절반에 가까운 43.0%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3-5세 유아의 경우, 2012년에 비취업모 가구의 39.6%, 취업모 가구의 45.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고 2015년에는 비취업모 가구의 58.6%, 취업모의 66.5%, 어머니가 휴직 중인 가구의 53.6%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다. 비취업모 가구와 취업모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각각 19.0%p와 20.6%p 증가하여 영아의 경우와는 달리 증가폭이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3-5세 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을 보면, 2012년에는 비취업모 가구가 49.0%, 취업모 가구가 47.7%였는데 2015년에는 비취업모 가구가 44.6%, 취업모 가구가 41.7%로 두 집단 모두 2012년에 비해 조금씩 낮아졌다. 유치원 이용률은 두 해 모두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유치원이 어린이집과는 다른 성격의 서비스임을 암시한다.

두 시기, 즉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가정양육수당 이용 가구의 증가와 비취업모 가구의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이다.

##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이용

영유아 대상의 기관보육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에 비해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최근에 와서야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기관에 비해 초등학교는 저학년 수업시수가 적어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아동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어머니의 경력단절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정부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초등학교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이 도입된 2004년 당시에는 전국 337개 학교와 445개 교실에서 약 8,000명의 학생들이 돌봄교실 서비스를 이용하였다(조진일 외, 2015). 그러나 〈표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현재는 전국 5,998개 학교, 1만 1,920개 교실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23만 8,480명의 학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20만 6,817명(86.8%)이 1, 2학년 학생이며, 이는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약 88만 명의 23.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표 Ⅱ-5〉 학년별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와 참여율, 2016

| 학년 | 전체 학생수 (명) |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수 | | 참여율 (%) |
|---|---|---|---|---|
| | | 학생수 (명) | 구성비율 (%) | |
| 1학년 | 434,362 | 115,347 | 48.4 | 26.6 |
| 2학년 | 452,963 | 91,470 | 38.4 | 20.2 |
| 3학년 | 477,179 | 19,060 | 8.0 | 4.0 |
| 4학년 | 434,433 | 6,976 | 2.9 | 1.6 |
| 5학년 | 419,509 | 3,112 | 1.3 | 0.7 |
| 6학년 | 454,397 | 2,515 | 1.1 | 0.6 |
| 합계 | 2,672,843 | 238,480 | 100.0 | 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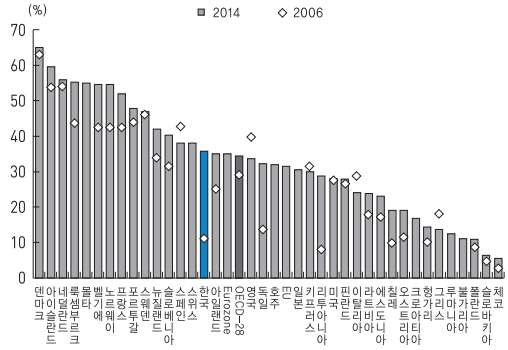
주: 1) 참여율=(해당 학년 참여 학생수÷해당 학년 전체 학생수)×100.
출처: 교육부,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2017; 「2016년 교육통계연보」, 2016.

초등돌봄교실, 특히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아닌 일반 돌봄교실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가족,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들이 1차 대상이므로 이용 학생의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가 취업 중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평균 50% 초반대임을 고려할 때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23.3%만이 돌봄교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의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자료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5.7%에 이를 정도로 돌봄교실이 매우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모 가정의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없어 자세한 실태 파악이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통계 조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 국제비교

한국의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OECD 및 EU 국가들의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기관보육 서비스 이용률을 비교하였다. OECD 자료는 영아에 대해서는 2006년과 2014년 두 해 통계를 제공하지만 유아에 대해서는 2014년 한 해 통계만 제공한다. [그림 Ⅱ-26]을 보면, OECD 28개국의 0-2세 영아 기관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2006년 29.0%에서 2014년 34.4%로 8년 사이에 5.4%p 증가하였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2006년과 2014년 각각 63.1%와 65.2%에 달하고, 가장 낮은 나라는 체코로 같은 연도에 각각 2.6%와 5.6%에 불과하다. 한국은 2006년에 11.2%로 OECD 28개국 평균보다 17.8%p 낮았다. 그러나 2014년에는 35.7%로 증가하여 전체 평균보다 1.3%p 높아졌다.

[그림 Ⅱ-26] OECD 및 EU 국가의 영아(0-2세) 기관보육 서비스 이용률, 2006,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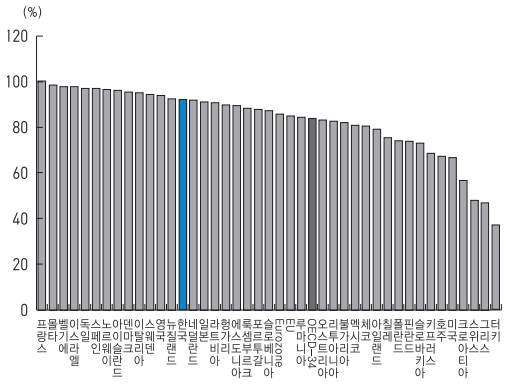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 family/database.htm).

[그림 Ⅱ-27]을 보면, OECD 34개국의 3-5세 유아 기관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평균 83.8%이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터키이다. 한국은 92.2%로 34개국 평균보다 8.4%p 높다. 이는 2013년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기관보육 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영아 기관보육 이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향상되었다.

아동돌봄 서비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안인 동시에 부모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또한 한국에서 아동돌봄은 교육 서비스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생애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아동의 연령과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적절한 아동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일·가정 균형을 확립하며 모든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Ⅱ-27] OECD 및 EU 국가의 유아(3-5세) 기관보육 서비스 이용률, 2014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 family/database.htm).

**참고문헌**

조진일·김홍원·최형주·손종렬. 2015. 「초등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7 Health

Korean Social Trends 2017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Ⅲ 건 강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 서울대학교 82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신동천 | 연세대학교 92
청소년의 체격과 건강상태 조병희 | 서울대학교 98

#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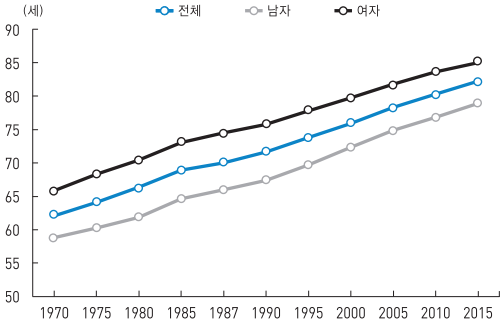
-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 비해 길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다.
-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흡연율과 음주율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며, 비만율은 상승하고 있다.
- 국민의 의료이용 빈도가 높고 경상의료비 증가 속도도 빠르다.
- 의료서비스 대기시간, 의료의 질, 치료비 등에 대한 불만이 많다.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는 국민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그리고 보건의료체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기대수명이나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은 지표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음주율이나 흡연율과 같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체계 영역에서는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의료비 지출 규모, 의료서비스 만족도 등 건강관리와 질병치료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소들을 다룰 것이다.

## 건강과 질병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 지표로 기대수명 또는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들 수 있다. 건강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라고 할 때, 기대수명이 길고 짧음은 사회적 역능성의 기본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7년 70세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82.1세가 되었다(그림 Ⅲ-1). 이는 OECD 국가 국민들의 평균수명 80.6세보다 1.5년 더 긴 것이다.

[그림 Ⅲ-1] 기대수명, 1970-2015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1970년에 남자 58.7세, 여자 65.8세로 7.1세 차이가 났고 이후 남녀 모두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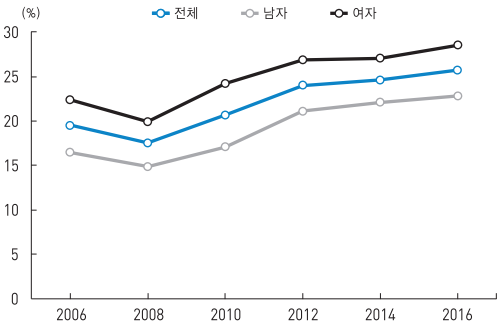
여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남녀 간 수명 차이가 6.2세로 약간 줄어들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남녀 간 수명 차이는 2015년 기준 독일 4.8세, 스웨덴 3.7세, 아이슬란드 2.6세, 덴마크 3.9세, 영국 3.6세 등으로 한국보다 적은 편이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 노년기의 삶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만성퇴행성 질환에 노출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수명은 길어졌지만 질병으로 인해 와병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고려하여 기대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을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World Health Statistics의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2세로 기대수명(WHO 기준 82.3세)과 약 9.1세 차이가 난다. 같은 해 일본의 경우 기대수명은 83.7세이고 건강수명은 74.9세로 약 8.8세 차이가 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건강수명은 69-73세 수준으로 기대수명과는 대략 10세 정도 차이를 보인다. 기대수명이나 건강수명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선진국 국민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삶의 질 측정에서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건강 영역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42.8%, 2010년 36.6%, 2013년 35.1%, 2014년 32.4%, 2015년 32.0%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에서 이 비율은 평균 약 68%인데, 한국은 그 절반 수준이다. 이는 한국인이 건강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주관적 건강 평가에서는 2014년 48.7%, 2016년 47.1%가 '좋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역시 과반에는 미달한다.

질병상태의 총괄적 지표는 유병률이다. 유병률 측정에는 통상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2주간 유병률이 사용된다. 지난 10여 년간 2주간 유병률은 10% 후반대에서 20% 중반대까지 상승하였고, 여자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다(그림 Ⅲ-2). 사망률은 남자가 높지만 유병률은 여자가 높은 것이 선진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상의 문제나

[그림 Ⅲ-2] 2주간 유병률,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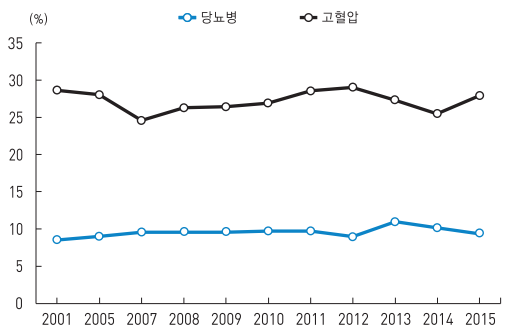



주: 1) 유병률은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사람들이 비율, 즉 활동제한율은 2015년 현재 6.8%이다.

다음으로 주요 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자. 한국인은 만성질환 중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30세 이상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1년 8.6%, 2005년 9.1%, 2013년 11.0%로 높아졌다가 2014년 10.2%, 2015년 9.5%로 다소 낮아졌다. 3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1년 28.6%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인데, 2012년 29.0%까지 높아진 후 2013년 27.3%, 2014년 25.5%로 낮아졌다가 2015년 27.9%로 다시 높아졌다. 30세 이상 성인의 1/3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그림 Ⅲ-3).

[그림 Ⅲ-3] 당뇨병 및 고혈압 유병률, 2001-2015




주: 1) 당뇨병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고혈압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이상 또는 고혈압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3) 각 유병률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5 국민건강통계」, 2016.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3년 기준 20-79세 성인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한국이 7.5%로 OECD 국가 평균 6.8%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암 발생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국립암센터의 「2014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새로 보고된 암 환자수, 즉 암 조발생률은 1999년 214.2명에서 2013년 449.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427.6명으로 감소하였다. 한 시점에서의 인구 대비 암 환자수를 의미하는 암 유병률은 2014년 기준 2.9%(남자 2.5%, 여자 3.2%)이다. 국제적으로 암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65.7명(남자 297.1명, 여자 250.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70.3명(남자 306.0명, 여자 244.2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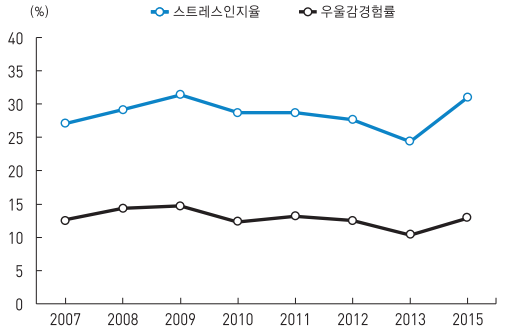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을 살펴보면, 20-24세 35.0명, 30-34세 133.2명, 40-44세 293.2명, 50-54세 532.1명, 60-64세 928.5명, 70-74세 1,544.1명, 80-84세 1,891.4명으로 나타나 고령층일수록 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 지표로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

타내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7년 27.1%에서 2009년 31.4%로 높아진 후 2013년 24.4%로 낮아졌다가 2015년 31.0%로 다시 높아졌다(그림 Ⅲ-4).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편이다.

지난 2주 이상 슬프거나 절망을 느낀 사람들의 비율인 우울감 경험률은 2007년 12.5%에서 2009년 14.7%로 높아진 후 감소하여 2013년 10.3%가 되었다가 2015년 13.0%로 다시 높아졌다(그림 Ⅲ-4). 성별로는 일관되게 여성이 더 높은 가운데, 최근 그 차이는 약 7%p 정도로 나타난다. 지난 10년 동안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유사한 증감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Ⅲ-4] 스트레스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2007-2015




주: 1) 스트레스인지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2) 우울감 경험률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을 느낀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5 국민건강통계」, 2016.

유병과 함께 사망은 건강상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표 Ⅲ-1〉은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여준다. 총 사망률은 1995년 532.1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0년대 후반 5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6년 549.4명을 기록하였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사망은 증가하지만 신생아 출산이 감소하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1.2배 높다.

〈표 Ⅲ-1〉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6

| | 1995 | 2000 | 2010 | 2015 | 2016 |
|---|---|---|---|---|---|
| 전체 | 532.1 | 517.9 | 512.0 | 541.5 | 549.4 |
| 악성신생물(암) | 110.5 | 121.4 | 144.4 | 150.8 | 153.0 |
| 내분비질환 | 18.8 | 24.8 | 22.3 | 22.9 | 21.6 |
| 순환기질환 | 138.9 | 122.7 | 112.5 | 116.9 | 118.1 |
| 호흡기질환 | 24.4 | 33.8 | 37.1 | 54.6 | 57.5 |
| 소화기질환 | 39.2 | 31.2 | 22.2 | 23.0 | 23.4 |
| 운수사고 | 38.7 | 25.3 | 13.7 | 10.9 | 10.1 |
| 자살 | 10.8 | 13.6 | 31.2 | 26.5 | 25.6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사망원인으로는 암이 1위이고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같은 순환기계 질환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암에 의한 사망은 1995년 인구 10만 명당 110.5명에서 2016년 153.0명으로 증가하였다. 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등의 순으로 높다.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1995년 138.9명에서 2009년 109.2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18.1명이 되었다. 한편, 운수사고 사망은 1995년 38.7명에서 2016년 10.1명으로 감소하였다. 교통안전 인식 제고와 교통시설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살은 1995년 10.8명

에서 2011년 31.7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 25.6명으로 감소하였다. 중장년 및 노년층의 생활고와 외로움, 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고통 등 여러 요인이 자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 건강행태

만성질환은 흔히 '생활습관 병'이라고 할 만큼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2015년 현재 22.6%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표 Ⅲ-2). 여기에서 흡연율은 '매일 흡연자'와 '가끔 흡연자'를 합한 수치이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흡연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자) 비율은 평균 18.9%인데,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한국의 흡연인구 비율은 17.3%이다. 한국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미성년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한국적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남녀 간 흡연율 차이가 크다. OECD 국가들의 남녀 흡연율은 각각 23.2%와 14.8%인데, 한국의 남녀 흡연율은 각각 31.4%와 3.4%이다. OECD 국가들은 흡연율 자체가 낮고 남녀 간 차이도 작은 반면, 한국은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녀 간 차이도 크다.

성인 음주율은 큰 변화 없이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2015년 기준 남자 86.6%, 여자 70.8%로 흡연과 달리 음주는 여자들도 하는 경우가 많다(표 Ⅲ-2). 음주로 인한 건강위험은 음주횟수와 음주량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측정한 고위험 음주율은 2015년 남자 20.8%, 여자 5.8%로 나타난다. 국제적으로는 알코올 섭취량으로 음주 수준을 측정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9.1ℓ인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9.0ℓ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표 Ⅲ-2〉 성별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2005-2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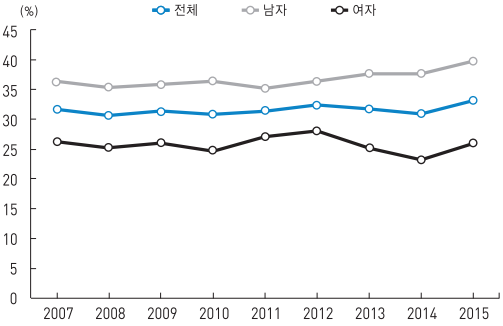
| | 2005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흡연율 | | | | | | | | | | |
| 전체 | 28.8 | 25.3 | 27.7 | 27.2 | 27.5 | 27.0 | 25.8 | 24.1 | 24.2 | 22.6 |
| 남자 | 51.6 | 45.0 | 47.7 | 46.9 | 48.3 | 47.3 | 43.7 | 42.1 | 43.1 | 39.3 |
| 여자 | 5.7 | 5.3 | 7.4 | 7.1 | 6.3 | 6.8 | 7.9 | 6.2 | 5.7 | 5.5 |
| 음주율 | | | | | | | | | | |
| 전체 | 78.4 | 74.8 | 76.4 | 77.0 | 79.0 | 79.2 | 77.1 | 77.0 | 78.1 | 78.5 |
| 남자 | 86.4 | 85.0 | 85.6 | 86.0 | 88.1 | 88.0 | 85.8 | 85.9 | 86.2 | 86.6 |
| 여자 | 70.9 | 65.1 | 67.6 | 68.4 | 70.4 | 71.1 | 69.1 | 68.7 | 70.6 | 70.8 |

주: 1) 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2) 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술을 1회 이상 마신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5 국민건강통계」, 2016.

비만은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는데, 한국에서는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한국인의 비만율은 1998년 26.0%에서 계속 상승하여 2007년 31.7%가 되었고 2015

년에는 33.2%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기준 비만율은 남자 39.7%, 여자 26.0%로 남자가 더 높다(그림 Ⅲ-5). 국제 통계에서는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비만율은 2015년 5.3%로 OECD 국가 평균 22.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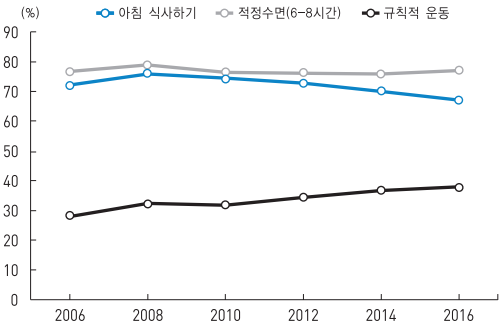
[그림 Ⅲ-5] 성별 성인 비만율, 2007-2015




주: 1) 비만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인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5 국민건강통계」, 2016.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증진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건강실천의 방법으로 아침식사 여부, 적정수면 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아침식사 실천율은 2008년 76.2%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6년에는 67.0%로 낮아졌다. 하루 6-8시간의 적정수면 실천율은 큰 변화 없이 77%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2006년 28.3%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37.8%로 높아졌다. 일상의 걷기도 건강증진에 좋은 실천방법이 된다.

[그림 Ⅲ-6] 아침식사, 적정수면 및 규칙적 운동 실천율, 2006-2016




주: 1) 각 실천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해당 건강관리행동을 평소 실천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인력의 지표는 의사 수와 간호사 수로 측정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당 전체 의료인 수는 2000년 578명에서 2015년 1,010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15년 227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간호사 수도 341명에서 664명으로 증가하였다(표 Ⅲ-3).

의사인력이 증가하였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 환자진료에 임하는 활동의사(practicing physicians)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5년 현재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활동의사 수는 2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37명보다 훨씬 적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표 Ⅲ-3〉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수, 2000-2015

| | 2000 | 2005 | 2010 | 2015 |
|---|---|---|---|---|
| 면허 의료인 | | | | |
| 전체 | 578 | 715 | 857 | 1,010 |
| 의사 | 154 | 177 | 205 | 227 |
| 간호사 | 341 | 443 | 545 | 664 |
| 활동 의료인 | | | | |
| 의사 | 130 | 163 | 198 | 224 |
| 간호사 | 298 | 384 | 461 | 594 |

주: 1) 전체 면허 의료인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함.
2)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수는 OECD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것은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진료하여 노동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인구 10만 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평균 898명인데, 한국은 594명에 불과하다. 이럴 경우 간호사 부족을 메워줄 간병인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의료시설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가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였으나 지역별로는 불균형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가 서울은 81개이고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70개 이상이지만, 강원과 충남북 등 도 지역의 경우에는 약 50개 수준으로 낮아진다. 치과병의원은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47개이지만 전남과 경북은 23개에 불과하다. 한방병의원도 서울은 36개이지만 전남은 19개에 불과하다. 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와 같은 보건기관은 도 지역에 집중 분포해 있다. 약국은 서울 및 대도시와 도 지역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인구 10만 명당 약국 수는 울산이 34개로 가장 적지만 서울 50개의 약 68% 수준으로 다른 보건의료기관의 분포에 비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표 Ⅲ-4).

〈표 Ⅲ-4〉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수, 2015

| 시도 | 병의원 | 치과 병의원 | 한방 병의원 | 보건기관 | 약국 |
|---|---|---|---|---|---|
| 서울 | 81.3 | 47.4 | 35.7 | 0.3 | 50.3 |
| 부산 | 72.0 | 34.9 | 31.5 | 0.9 | 43.1 |
| 대구 | 72.3 | 33.8 | 33.9 | 1.0 | 47.7 |
| 인천 | 53.8 | 28.5 | 21.2 | 2.2 | 35.6 |
| 광주 | 70.2 | 39.9 | 26.4 | 1.1 | 45.4 |
| 대전 | 73.7 | 33.8 | 33.4 | 1.3 | 46.8 |
| 울산 | 56.1 | 31.1 | 24.9 | 2.0 | 34.0 |
| 세종 | 48.8 | 23.7 | 19.0 | 9.0 | 38.9 |
| 경기 | 54.0 | 29.9 | 22.5 | 2.6 | 36.4 |
| 강원 | 52.2 | 23.8 | 22.1 | 15.7 | 41.4 |
| 충북 | 56.9 | 24.1 | 24.6 | 16.7 | 40.8 |
| 충남 | 55.0 | 24.5 | 23.9 | 19.2 | 43.1 |
| 전북 | 68.5 | 28.7 | 27.7 | 21.4 | 47.1 |
| 전남 | 56.2 | 23.3 | 19.3 | 29.3 | 41.0 |
| 경북 | 52.8 | 23.4 | 22.9 | 20.7 | 38.8 |
| 경남 | 53.1 | 24.8 | 22.9 | 12.3 | 35.2 |
| 제주 | 61.3 | 29.0 | 26.4 | 10.1 | 41.0 |

출처: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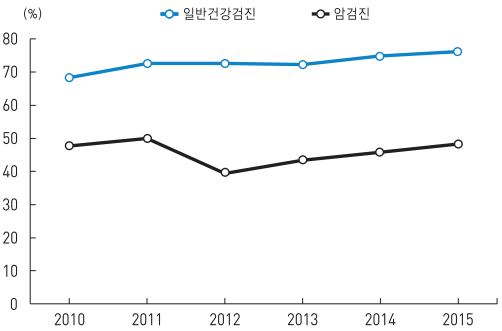
의료공급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은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로 파악할 수 있는데, 1990년 7.9일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6년 20.2일이 되었다. 국민 1인당 연 2.8일 입원하고 17.4일 외래진료를 받는 셈이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의사 진료(상담)횟수도 가장 많은 편인데, 2015년 기준

한국은 16.0회로 OECD 국가 평균 6.9회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인의 의료이용이 매우 많은 것은 단순히 병이 많아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불필요한 입원율은 1차 보건의료가 취약하여 만성적 증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지 않아도 될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자 수는 2013년 기준 한국이 310.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42.2명보다 훨씬 많고, 같은 시기 당뇨병 입원자 수도 한국이 310.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49.8명보다 두 배나 많다.

예방보건서비스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모든 국민은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받는 비율은 아직 높은 편이 아니어서 2015년 현재 일반건강검진 수검률과 암검진 수검률은 각각 76.1%와 48.3%에 그친다. 2010년에 비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약 8%p 상승하였으나 암검진 수검률은 정체 상태에 있다(그림 Ⅲ-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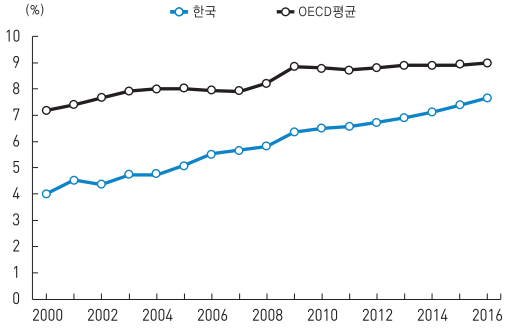
[그림 Ⅲ-7]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2010-2015




주: 1)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2)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1차 검진 기준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검진통계연보」, 2016.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경상의료비는 1990년 7조 3,000억 원에서 2006년 53조 1,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6년 125조 2,000억 원이 되었다. 한국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의료비 지출 규모 면에서는 적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 면에서는 매우 빠른 편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16년 기준 한국이 7.7%로 OECD 국가 평균 9.0%보다 낮다. 그렇지만 [그림 Ⅲ-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빠른 속도로 근접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8] 한국과 OECD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2000-2016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소득 향상에 따른 의료소비 고급화와 의료이용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원인이 된다. 2016년 말 기준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의 비중은 12.7%인데, 같은 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대상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9.1%에 달한다. 전년 대비 노인진료비 증가율은 13.5%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율 11.4%보다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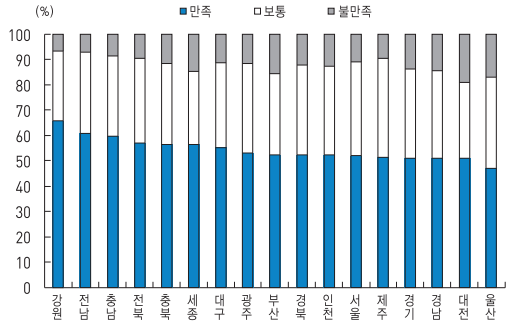
경상의료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재원 염출방식이다. 복지국가에서는 조세 또는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비 재원의 공공부담을 최대화하고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제도의 실시와 함께 의료비의 공공 부담이 확대되어 왔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1990년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공적 부담의 비율이 40.1%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 확대되어 2016년 현재 56.4%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비 비율이 평균 72.5%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은 공공 부담의 비중이 작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병원 이용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과거에는 의사나 병원의 수가 많으면 의료체계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최근에는 치료 결과 건강이 향상되었는지, 의료이용에 만족하는지 등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자궁경부암 환자 5년 생존율은 77.8%로 같은 시기 OECD 국가 평균 66.0%보다 훨씬 높다. 유방암 환자 5년 생존율도 한국이 85.9%로 OECD 국가 평균 84.9%에 비해 높다.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의 30일 치명률은 한국이 8.3%로 OECD 국가 평균 8.0%를 약간 상회하지만, 이 수치 또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의료체계 성과지표의 다른 측면은 의료이용자의 평가 또는 만족도로 측정된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만족도는 1999년 24.5%에서 2008년 54.1%로 상승하였고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6년에는 만족 53.3%, 보통 34.5%, 불만족 12.2%로 나타난다.

종합병원 만족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대전(19.0%), 울산(17.0%), 부산(15.5%), 세종(14.6%) 등은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강원(6.7%), 전남(7.0%), 충남(8.6%), 제주(9.5%), 전북(9.6), 서울(11.0%) 등은 불만족도가 비교적 낮다(그림 Ⅲ-9). 서울을 제외하면 종합병원이 많이 분포된 대도시 지역에서 불만이 높

[그림 Ⅲ-9] 시도별 종합병원 만족도, 2016




주: 1) 만 15세 이상 지난 1년 동안 아팠을 때 주로 종합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그곳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응답률이고,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6.

고 종합병원이 적게 분포된 도 지역에서 불만이 낮아 대조를 보인다.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로 파악된 의료기관 불만족 사유를 보면, 긴 대기시간(44.7%), 비싼 의료비(43.5%), 치료 결과 미흡(40.6%), 과잉진료(32.9%), 진료 불성실(25.7%) 등이 주요 불만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전문의료인력 부족(11.5%)이나 의료시설 낙후(9.4%)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진료를 받는 데 오래 기다려야 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과잉 진료로 의료비 부담은 큰데 치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다수의 환자들이 갖는 불만 요인인 것이다.

#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신동천 (연세대학교)

- 국내의 연간 미세먼지($PM_{10}$) 농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PM_{10}$)는 제조업 연소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
- 황사의 경우 미세먼지($PM_{10}$)의 기여가 높으며, 일반 대기의 경우 미세먼지($PM_{2.5}$)의 기여가 높다.
- 중국발 황사의 영향이 큰 백령도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황산염의 비중이 높으나, 대도시인 서울의 경우 유기물질의 비중이 높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독성의 영향이 커지며 입경별로 표적 장기의 독성 영향이 다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계통의 질환을 유발하며 치매, 우울증, 신장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보호 방안이 배출원 및 분야별로 마련되고 있으며, 국민 참여를 위한 위해도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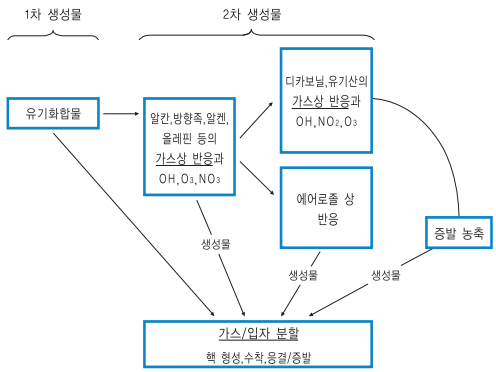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이목과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실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며, 청정한 실내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구매도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지출의 주된 이유는 미세먼지가 가지고 있는 건강 위해성 때문이다. 작은 입자일수록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관절염, 치매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세먼지($PM_{10}$, $PM_{2.5}$)의 생성 기전과 노출 경향, 주요 성분, 다양한 건강 영향과 정책적 저감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 미세먼지의 생성 기전과 노출 경향

미세먼지는 흙먼지, 식물 꽃가루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등에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산불 등에서도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1차적 먼지는 [그림 Ⅲ-10]과 같이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입자로 구분된다. 여과성 먼지는 고체나 액체 형태로 배출되는 입자로 $PM_{10}$부터 $PM_{2.5}$ 입경 범위의 크기로 존재한다. 응축성 입자는 기체 상태로 배출되나 즉시 고체 또는 액체상 입자로 변환되며 보통 $PM_{2.5}$ 또는 그보다 작은 입자로 존재한다. 1차 생성 입자는 산소, 오존, 수증기, 각종 라디칼과 같은 전구물질과 광화학 반응하여 형성된다.

[그림 Ⅲ-10] 미세먼지 생성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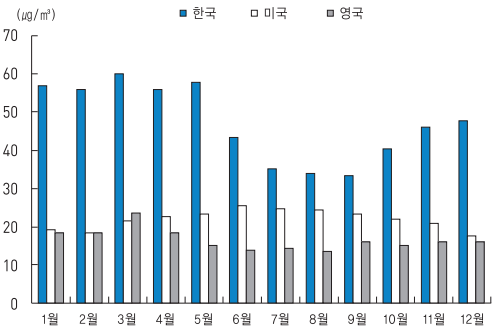

출처: U.S. EPA, *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for Particulate Matter*, 2009.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정도는 미세먼지의 농도와 배출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1]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과 미국, 영국의 월평균 미세먼지($PM_{10}$) 농도를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미세먼지($PM_{10}$) 농도는 1월부터 5월까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다가 6월부터 9월까지는 점차 감소하고 10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미세먼지 농도가 겨울과 봄에 높고 여름에 감소하였다가 가을에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미국과 영국의 월평균 미세먼지($PM_{10}$) 농도는 30㎍/㎥을 넘지 않으며 월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2배 이상 높고, 국외 요인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PM_{10}$) 배출량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Ⅲ-12). 2004년 6만 2,491톤이 발생하였고 2006년까지 소폭 증가하다 2007년 9만 8,143톤으로 전년 대비 약 3만 톤 정도 증가하였다. 이후 점점 증가하다 2011년 13만 1,176톤이 배출되었고 2012년에 배출량이 줄었으나 2013년에 다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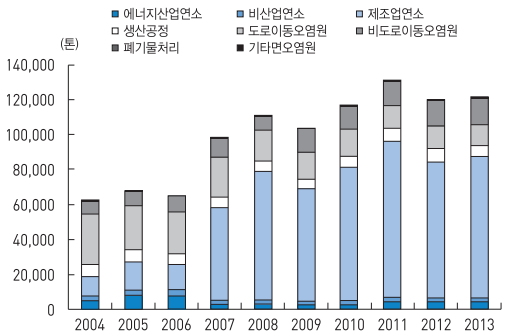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보면, 제조업 연소와 비도로이동오염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오염원에서 감소 또는 일정한 배출량을 보인다

[그림 Ⅲ-11] 한국, 미국, 영국의 미세먼지($PM_{10}$) 월평균 농도, 2012-2016년 평균




출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index).
U.S. EPA(https://www.epa.gov/).
U.K. DEFRA(https://uk-air.defra.gov.uk/).

[그림 Ⅲ-12] 배출원별 미세먼지($PM_{10}$) 연간 배출량, 2004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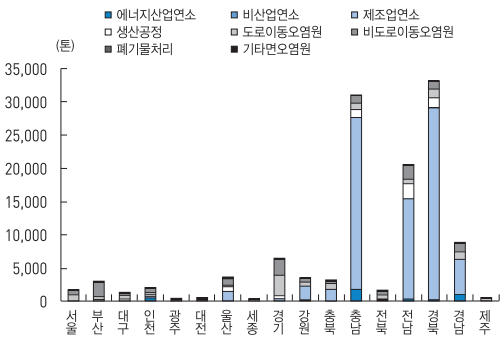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6.

(그림 Ⅲ-12). 특히 제조업연소에서 큰 폭의 배출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 발전이 미세먼지 배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내 차량대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이동오염원이 감소한 것은 엔진 연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입경 10㎛ 이하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시도별 미세먼지($PM_{10}$) 배출량을 보면, 2013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북, 충남, 전남, 경남, 경기 지역 순으로 배출량이 많다. 세종, 광주, 대전, 제주 지역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지역의 배출량도 1,735톤으로 적은 편이다(그림 Ⅲ-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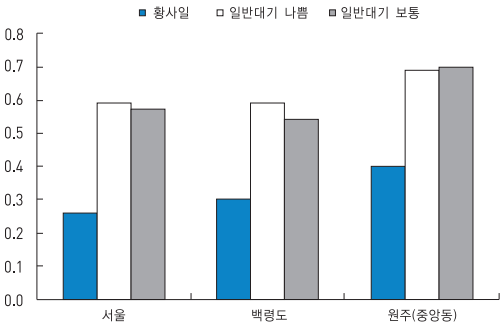
[그림 Ⅲ-13] 시도별 미세먼지($PM_{10}$) 연간 배출량, 2013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6.

황사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총 22일간 발생했는데, 황사의 $PM_{10}$과 $PM_{2.5}$ 비율은 비황사와 다르다. [그림 Ⅲ-14]와 같이 도시대기를 대표하는 서울, 청정한 도시대기를 대표하는 원주, 국가배경인 백령도 세 곳을 대상으로 황사, 일반대기 나쁨, 일반대기 보통일 때의 $PM_{10}$과 $PM_{2.5}$의 비를 비교한 결과, 황사일 때는 각각 0.26, 0.30, 0.40이었으나 일반대기 나쁨일 때는 각각 0.59, 0.59, 0.69, 일반대기 보통일 때는 각각 0.57, 0.54, 0.70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는 $PM_{10}$의 비중이 높지만 비황사의 경우에는 $PM_{2.5}$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큰 입자($PM_{10}$)의 미세먼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림 Ⅲ-14] 대기상황별 $PM_{10}$ 대비 $PM_{2.5}$의 비, 2015-2016




주: 1) 서울은 도시대기를 나타냄.
2) 원주는 청정한 도시대기를 나타냄.
3) 백령도는 인위적 요소의 간섭 없이 자연적으로만 발생하는 농도인 국가배경농도를 나타냄.
출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index).

##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과 독성

미세먼지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집합체이다.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성분은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

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등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_X$), 질소산화물($NO_X$)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하여 생성되는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발생하는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미세먼지의 성분은 지역과 계절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다. 〈표 Ⅲ-5〉는 국가배경 지역인 백령도와 도시대기 지역인 서울의 계절별 미세먼지 성분 비율을 보여준다. 백령도는 봄과 여름에 황산염의 비율이 각각 36.3%와 44.6%로 가장 높은 반면 가을과 겨울에는 유기물질의 비율이 각각 32.1%와 31.7%로 가장 높다. 서울은 봄에 황산염의 비율이 33.3%로 가장 높지만 여름과 가을, 겨울에는 유기물질의 비율이 각각 36.8%와 35.4%, 34.7%로 가장 높다.

〈표 Ⅲ-5〉 지역 및 계절별 미세먼지($PM_{10}$) 성분구성

(%)

| 계절 | 황산염 | 질산염 | 암모늄 | 염화물 | 유기물질 | EC |
|---|---|---|---|---|---|---|
| 백령도 | | | | | | |
| 봄 | 36.3 | 19.6 | 16.0 | 1.2 | 24.8 | 2.1 |
| 여름 | 44.6 | 14.6 | 16.2 | 0.8 | 21.9 | 1.9 |
| 가을 | 25.1 | 21.9 | 13.1 | 1.6 | 32.1 | 6.3 |
| 겨울 | 22.3 | 24.3 | 12.3 | 1.5 | 31.7 | 7.9 |
| 평균 | 31.0 | 20.6 | 14.3 | 1.4 | 28.0 | 4.7 |
| 서울 | | | | | | |
| 봄 | 33.3 | 18.2 | 13.0 | 1.3 | 31.4 | 2.8 |
| 여름 | 33.9 | 13.6 | 10.7 | 0.6 | 36.8 | 4.3 |
| 가을 | 20.0 | 27.5 | 10.6 | 1.8 | 35.4 | 4.6 |
| 겨울 | 18.7 | 28.3 | 10.3 | 3.0 | 34.7 | 5.0 |
| 평균 | 25.2 | 23.1 | 11.3 | 1.8 | 34.3 | 4.3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농도 대기오염사례 시 미세먼지($PM_{2.5}$)의 화학적 특성 연구(Ⅰ)」, 2014.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을수록 독성의 영향이 크다. $PM_{2.5}$와 같이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성분 구성보다 독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동일한 질량 농도에서 입자의 수가 훨씬 많고 표면적이 넓어 독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더 많이 흡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경이 작을수록 기관지를 통해 폐포를 거쳐 체내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체내로 침투한 미세먼지는 성분 구성에 따라서도 독성이 달라지는데, 유기탄소와 원소탄소의 경우 동맥혈관의 크기와 심장박동 수를 변화시킨다. 황산염과 질산염은 체내에서 강한 산성을 띄기 때문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Ⅲ-6〉은 미세먼지 입경별 표적 장기에 대한 독성 영향을 보여준다. 입경 크기가 5-10$\mu g/m^3$인 경우 안구에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각막염을 유발하며, 2-5$\mu g/m^3$인 경우 코에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킨다. 입경 크기가 1-2$\mu g/m^3$인 경우 기관지에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을 일으키며, 0.1-1$\mu g/m^3$인 경우 폐로 침투해 폐포 손상 및 염증을 유발한다.

〈표 Ⅲ-6〉 미세먼지($PM_{10}$) 입경별 독성 영향

| 입경 크기($\mu g/m^3$) | 독성 영향 |
|---|---|
| 5.0-10.0 |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
| 2.0-5.0 | 코: 알레르기성 비염 |
| 1.0-2.0 | 기관지: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
| 0.1-1.0 | 폐: 폐포 손상 유발 |

출처: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2016.

## 미세먼지의 인체 노출과 건강 영향

미세먼지는 폐포를 통과하여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주로 호흡기와 심혈관계통의 질환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PM_{10}$, $PM_{2.5}$)로 인한 급성 및 만성 피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PM_{10}$)가 10㎍/㎥ 증가하면 급성 피해로 인해 기관지 확장제 사용률이 3.1%, 기침이 3.6%, 하기도 질병이 3.2%, 호흡기 질환 관련 입원율이 0.8%, 사망률이 0.7% 증가한다. 만성적으로는 사망률이 10%, 기관지염이 29% 증가하고 어린이 강제호기량(FEV1)이 1.2% 감소한다.

〈표 Ⅲ-7〉 미세먼지($PM_{10}$)의 급성 및 만성 인체 영향

| 구분 | $PM_{10}$ 10㎍/㎥ 증가 시 |
|---|---|
| 급성 영향 | • 기관지 확장제 사용 3.1% 증가<br>• 기침 3.6% 증가<br>• 하기도 질병 3.2% 증가<br>• 호흡기 질환 관련 병원 입원율 0.8% 증가<br>• 사망률 0.7% 증가 |
| 만성 영향 | • 사망률 10% 증가<br>• 기관지염 29% 증가<br>• 어린이 강제호기량(FEV1) 1.2% 감소 |

출처: WHO, *Evolution of WHO air quality guidelines: past, present and future*, 2017

〈표 Ⅲ-8〉에 따르면, 미세먼지($PM_{2.5}$)의 급성 피해로 인해 사망률이 1.5% 증가하며 만성 피해로 인해서는 사망률이 14%, 기관지염이 34% 증가함과 동시에 어린이의 강제호기량(FEV1)이 1.9% 감소한다.

〈표 Ⅲ-8〉 미세먼지($PM_{2.5}$)의 급성 및 만성 인체 영향

| 구분 | $PM_{2.5}$ 10㎍/㎥ 증가 시 |
|---|---|
| 급성 영향 | • 사망률 1.5% 증가 |
| 만성 영향 | • 사망률 14% 증가<br>• 기관지염 34% 증가<br>• 어린이 강제호기량(FEV1) 1.9% 감소 |

출처: WHO, *Evolution of WHO air quality guidelines: past, present and future*, 2017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치매나 자살률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Jung et al., 2015; Kim et al., 2010)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미세먼지는 우울증, 불안장애, 신장 기능 저하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임산부가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태아의 허벅지와 머리 등의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하시킬 수 있다. 동일한 환경이라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및 환자와 같은 집단은 건강한 성인보다 미세먼지의 영향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미세먼지 저감 정책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배출원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이다.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관리하기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0%인 220만 대까지 보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차의 주차요금 및 통행료 할인 등 운행 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2024년까지 전기차와 같은 오염물질 무배출차(Zero Emission Vehicle)의 개발에 1,000억 원의 예산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배출허용총량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과 외교적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미세먼지를 공동 관리함으로써 중국발 및 국외 미세먼지의 기여도와 동아시아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장거리 이동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 다양한 미세먼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가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위해도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을 통해 국민의 인식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Ⅲ-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 실적

| 구분 | 대책 및 추진사업 | 실적 | 비고 |
|---|---|---|---|
| 생활 공간 |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설치지역 확대 (2008-2012년) | 2,869곳 설치 (2012년) | 전국 |
| 이동 오염원 | 무배출차(ZEV) 기술개발 투자 | 2024년까지 1,000억 원 | |
| |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 | 2020년까지 3,000기 구축 | |
| 외교 협력 | 한중 대기질 측정자료 실시간 공유(2017년) | 양국 91개 도시 관측자료 공유 (2017년) | |
| | 한일 미세먼지 공동연구 | 2017년까지 | |
| | 중기 (2015-2019) 공동연구계획 | 공동합의문 채택 | |

출처: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2016;
「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보도자료, 2015.
한국환경공단,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사업 업무편람」, 2013.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보도자료, 2016.



## 참고문헌

Jung et al., 2015. "Ozone, Particulate Matter, and Newly Diagnosed Alzheimer's Disease: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 Taiwan."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44: 573-584.
Kim et al., 2010. "Ambient Particulate Matter as a Risk Factor for Suicide." Am J Psychiatry 167: 1100-1107.

# 청소년의 체격과 건강상태

조병희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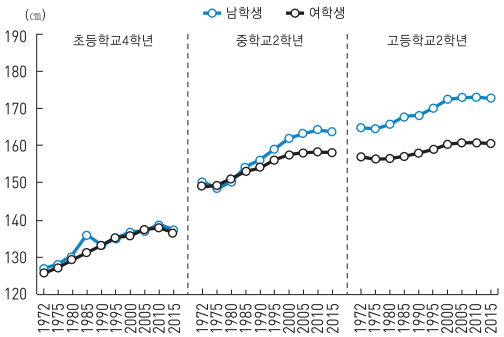
- 청소년의 체격, 즉 키와 몸무게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남학생의 체격 향상이 두드러진다.
- 청소년의 체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비만도는 높아졌다.
-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는 감소하고 신체활동은 증가했지만 채소섭취와 수면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
-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가 최근 감소했다.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는 이후 중년기와 노년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의 체격과 건강상태가 과거보다 양호해졌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건강습관과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와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이다.

## 청소년의 체격 변화

한국 청소년의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은 예전만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것은 사실일까? 체격은 키와 몸무게로 측정된다. [그림 Ⅲ-15]는 지난 40여 년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평균 키 변화를 보여준다.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키는 1972년 126.9㎝에서 2015년 137.1㎝로 10.2㎝ 커졌다. 여학생의 경우도 같은 기간 125.9㎝에서 136.5㎝로 10.6㎝ 커졌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1972년과 2015년 사이 남학생은 150.1㎝에서 163.7㎝로 커졌고 여학생은 149.2㎝에서 158.1㎝로 커졌다. 1970년대에는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의 키 차이가 약 1㎝에 불과했는데 1980년대 이후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2015년에는 약 6㎝가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지난 40여

[그림 Ⅲ-15] 초·중·고 학생의 성별 평균 키, 1972-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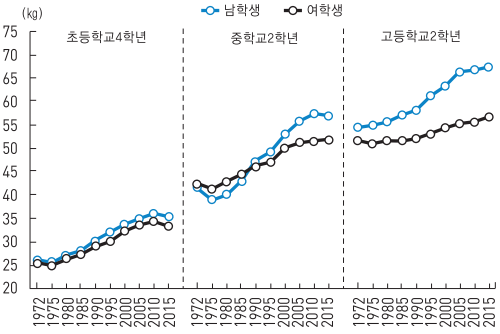



주: 1) 연령 기준으로 집계된 표본조사 결과임.
2) 초등학교 4학년생은 만 9세, 중학교 2학년생은 만 13세, 고등학교 2학년생은 만 16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년간 남학생이 164.8㎝에서 172.7㎝로 7.9㎝ 커졌고 여학생은 156.9㎝에서 160.5㎝로 3.6㎝ 커졌다. 남녀 초등학생과 남자 중학생의 키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고 여자 고등학생의 키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림 Ⅲ-16]은 1972년부터 201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평균 체중 변화를 보여준다.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은 25.8㎏에서 35.3㎏으로, 여학생은 25.5㎏에서 33.2㎏으로 각각 증가하였고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41.5㎏에서 56.8㎏으로, 여학생은 42.2㎏에서 51.7㎏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남학생은 54.5㎏에서 67.3㎏으로, 여학생은 51.6㎏에서 56.5㎏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남녀 학생 간 체중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남학생의 체중이 여학생보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6] 초·중·고 학생의 성별 평균 체중, 1972-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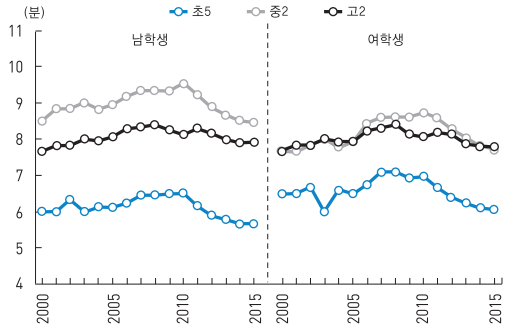

주: 1) 연령 기준으로 집계된 표본조사 결과임.
2) 초등학교 4학년생은 만 9세, 중학교 2학년생은 만 13세, 고등학교 2학년생은 만 16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청소년의 체력 변화

체력은 기본적인 운동능력을 의미하는데, 달리기, 윗몸굽히기, 윗몸말아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여러 방식으로 측정된다. 오래달리기의 경우 초등학생의 1,000m, 남자 중·고등학생의 1,600m, 여자 중·고등학생의 1,200m 달리기 시간을 재어서 시간이 짧을수록 운동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림 Ⅲ-17]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청소년의 오래달리기 능력은 2010년 무렵부터 점차 좋아지고 있다. 가령, 남자 초등학생의 2015년 오래달리기 능력은 2000년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앉아윗몸굽히기는 앉아서 윗몸을 굽혀 양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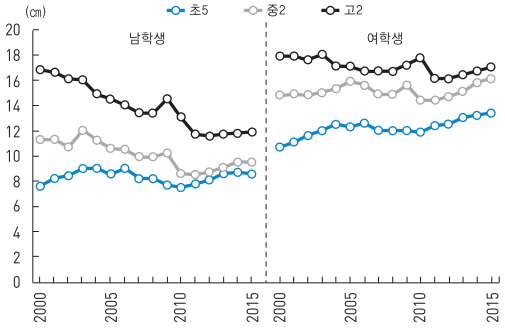
[그림 Ⅲ-17] 초·중·고 학생의 성별 오래달리기 평균 시간, 2000-2015




주: 1) 초등학생은 남녀 구분 없이 1,000m 달리기 시간이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1,200m, 남학생은 1,600m 달리기 시간임.
2) 2000-2013년 자료의 경우 연령 기준으로 집계되어 초등학교 5학년생은 만 10세, 중학교 2학년생은 만 13세, 고등학교 2학년생은 만 16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2014-2015년 자료는 학년 평균치임.
3) 2000-2012년 자료는 표본조사 결과이고, 2013-2015년 자료는 나이스 체육/PAPS 종목별 평균 기록통계(전국) 결과임.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내민 길이로 측정되는데, 멀리 내밀수록 몸의 유연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은 2000년 7.6㎝에서 2015년 8.6㎝로 늘어났으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11.3㎝에서 9.5㎝로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16.8㎝에서 11.9㎝로 급감하였다. 반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은 10.7㎝에서 13.4㎝로 늘어났고 중학교 2학년 여학생도 14.8㎝에서 16.1㎝로 늘어났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은 17.9㎝에서 17.0㎝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남자 중·고등학생의 신체 유연성 감소가 두드러진다(그림 Ⅲ-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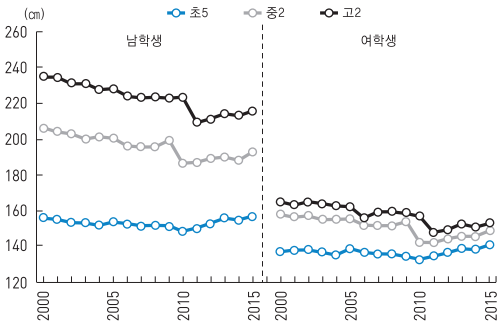
[그림 Ⅲ-18] 초·중·고 학생의 성별 앉아윗몸굽히기 평균 길이, 2000-2015




주: 1) 2회 실시하여 1mm 단위까지 기록, 평가는 높은 기록으로 함.
2) 2000-2013년 자료의 경우 연령 기준으로 집계되어 초등학교 5학년생은 만 10세, 중학교 2학년생은 만 13세, 고등학교 2학년생은 만 16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2014-2015년 자료는 학년 평균치임.
3) 2000-2012년 자료는 표본조사 결과이고, 2013-2015년 자료는 나이스 체육/PAPS 종목별 평균 기록통계(전국) 결과임.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제자리멀리뛰기는 제자리에서 앞으로 뛴 거리로 측정되며 순발력과 탄력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은 2000년 156.0㎝에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 156.8㎝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205.8㎝에서 192.9㎝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234.9㎝에서 215.4㎝로 감소하였다.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5학년은 2000년 136.9㎝에서 2015년 140.8㎝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학교 2학년은 158.1㎝에서 149.1㎝로, 고등학교 2학년은 164.7㎝에서 153.2㎝로 감소하였다. 제자리멀리뛰기로 보면, 중·고등학생의 운동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그림 Ⅲ-19).

[그림 Ⅲ-19] 초·중·고 학생의 성별 제자리멀리뛰기 평균 거리,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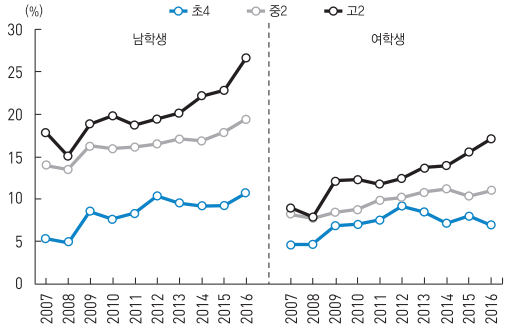



주: 1) 2회 실시하여 1mm 단위까지 기록, 평가는 높은 기록으로 함.
2) 2000-2013년 자료의 경우 연령 기준으로 집계되어 초등학교 5학년생은 만 10세, 중학교 2학년생은 만 13세, 고등학교 2학년생은 만 16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2014-2015년 자료는 학년 평균치임.
3) 2000-2012년 자료는 표본조사 결과이고, 2013-2015년 자료는 나이스 체육/PAPS 종목별 평균 기록통계(전국) 결과임.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키와 몸무게의 비(Body Mass Index)로 계산되는 비만도는 학교급과 남녀 학생에 상관없이 청소년층 전반에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초

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비만율은 2007년 5.3%에서 2016년 10.7%로 증가하였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역시 14.0%에서 19.3%로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도 17.7%에서 26.6%로 증가하였다.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초등학교 4학년이 4.6%에서 6.9%로, 중학교 2학년이 8.2%에서 11.0%로, 고등학교 2학년이 8.9%에서 17.0%로 증가하였다(그림 Ⅲ-20).

[그림 Ⅲ-20] 초·중·고 학생의 성별 비만율,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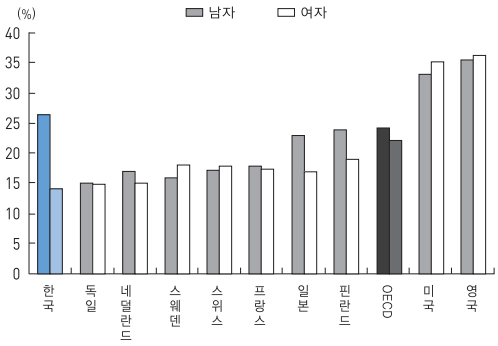



주: 1)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측정된 학생의 분율임.
출처: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각 연도.

청소년의 비만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남자 청소년은 26.4%로 OECD 평균 24.3%보다 다소 높은 편이나 여자 청소년은 14.2%로 OECD 평균 22.1%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남녀 청소년 간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한국은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그림 Ⅲ-21).

체력 검사와 비만도 측정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체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격 향상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약하면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체력 강화와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Ⅲ-21] OECD 주요 국가의 청소년 비만율,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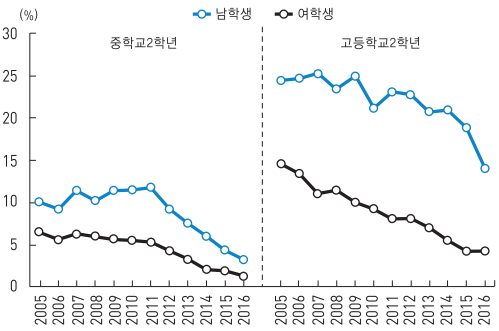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Health at a Glance 2015*, 2015.

## 청소년의 건강습관 변화

건강습관은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중독성 습관, 음식과 음료의 영양 섭취, 운동 및 신체활동 실천, 수면과 휴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Ⅲ-22]에는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경험을 의미하는 현재 흡연율이 제시되어 있다. 현재 흡연율로 보면, 중·고등학생의 전체 흡연율은 2005년 11.8%에서 2007년 13.3%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6.3%가 되었다. 이 기간 중학교 2학년 학생은 8.4%에서 2.3%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19.8%에서

9.4%로 감소하였다. 학교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기에 걸쳐 남학생의 흡연율이 여학생보다 높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 학생보다 특성화고 학생의 흡연율이 약 2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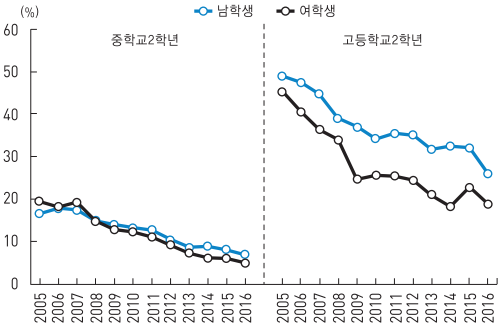
[그림 Ⅲ-22] 중·고등학생의 성별 흡연율, 2005-2016




주: 1)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6.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을 의미하는 현재 음주율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음주율은 2005년 16.5%에서 2016년 6.8%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음주율도 19.4%에서 4.9%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남학생은 49.0%에서 25.9%로, 여학생은 45.2%에서 18.7%로 감소하였다(그림 Ⅲ-23).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학생의 음주율이 일반고 학생보다 높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가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건강습관 조사가 전국의 학교 안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연과 음주가 과소 추정되었을 수도 있다.

[그림 Ⅲ-23] 중·고등학생의 성별 음주율,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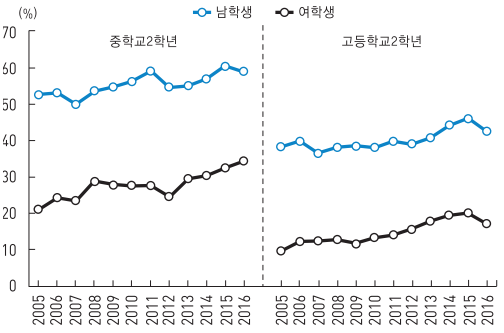



주: 1)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6.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비율인 신체활동실천율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경우 2005년 52.7%에서 2016년 59.0%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21.0%에서 34.4%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38.3%에서 42.5%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은 9.7%에서 17.0%로 증가하였다(그림 Ⅲ-24). 신체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체력 하락 현상과 상반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주일 동안 1일 3회 이상 김치 이외의 채소 반찬을 먹은 경험을 의미하는 채소섭취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완만한 감소세에 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채소섭취율은 2005년 19.5%에서 2008년 21.6%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

[그림 Ⅲ-24] 중·고등학생의 성별 신체활동실천율,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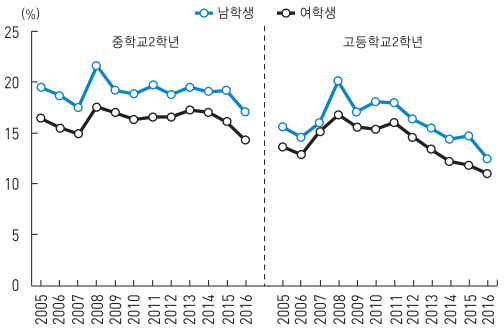

주: 1) 신체활동실천율은 최근 7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조깅, 축구, 농구, 태권도, 등산, 빠른 속도의 자전거타기, 빠른 수영,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을 20분 이상 한 날이 3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16.

여 2016년에는 17.1%가 되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2005년 16.5%에서 2016년 14.3%로 감소하여 남학생과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도 각각 15.6%와 13.7%에서 12.5%와 11.0%로 감소하였다. 청소년의 채소 섭취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Ⅲ-25). 과일섭취율도 중학생은 36.9%에서 27.8%로, 고등학생은 25.2%에서 19.4%로 감소하였다.

주 3회 이상 탄산음료섭취율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2009년 18.3%에서 2016년 24.3%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2009년 29.8%에서 2016년 33.0%로 증가하였다. 남학생의 탄산음료섭취율이 여학생보다 월등하게 높다(그림 Ⅲ-26). 채소와 과일처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식품의 섭취는 감소하고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처럼 건강에 해로운 식음료의 섭취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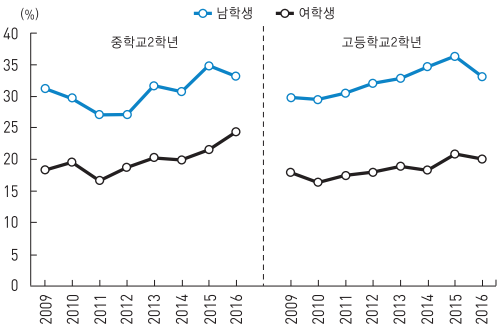
입시 중심 교육으로 인해 한국 학생들은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충분히 잤다고 생

[그림 Ⅲ-25] 중·고등학생의 성별 채소섭취율, 2005-2016




주: 1) 채소섭취율은 최근 7일 동안 1일 3회 이상 채소반찬(김치 제외)을 먹은 사람의 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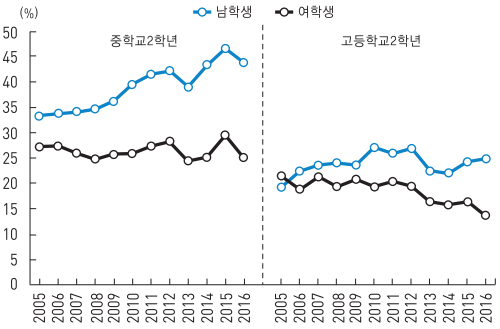
[그림 Ⅲ-26] 중·고등학생의 성별 탄산음료섭취율, 2009-2016




주: 1) 탄산음료섭취율은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탄산음료를 먹은 사람의 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16.

각하는 주관적 수면충족률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2005년 33.3%에서 2016년 43.8%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27.2%에서 24.9%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남학생은 19.3%에서 24.8%로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21.4%에서 13.7%로 감소하였다(그림 Ⅲ-27). 실제 수면시간을 보면, 2016년 기준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7.4시간과 6.7시간이고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6.0시간과 5.5시간이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수면충족률이 매우 낮고, 특히 여자 고등학생의 수면 부족이 심각하다.

[그림 Ⅲ-27] 중·고등학생의 성별 수면충족률,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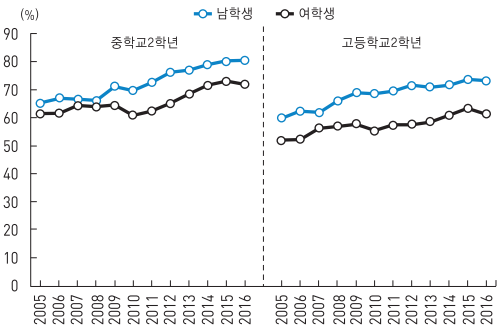



주: 1) 수면충족률은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매우 충분' 또는 '충분'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6.

## 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

청소년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점차 향상되는 추세를 보인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건강인지율은 2005년 65.0%에서 2016년 80.1%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중학교 2학년 여학생도 61.3%에서 71.6%로 높아졌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59.7%와 51.7%에서 73.0%와 61.1%로 상승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느낀다(그림 Ⅲ-28).

[그림 Ⅲ-28] 중·고등학생의 성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2005-2016




주: 1)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본인이 '매우 건강한' 또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6.

주관적 건강상태와는 달리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는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초·중·고 1학년 학생의 시력 이상자 비율은 각각 25.7%, 67.8%, 74.1%에 이른다. 시력 이상자 비율은 중학생의 경우 2006년 51.3%에서 2016년 67.8%로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59.0%에서 74.1%로 늘어났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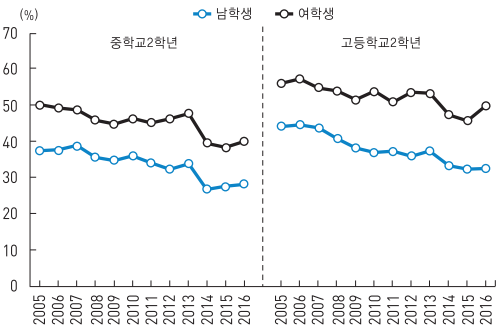
다른 대표적 청소년 질환인 치과질환의 2016년 분포를 살펴보면, 치아우식증 23.8%, 치주질환 13.9%, 부정교합 19.3% 등이다. 혈압상승률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1.6%, 중학교 1학년 3.4%, 고등학교 1학년 6.8%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정신건강은 흔히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측정된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 즉 스트레스인지율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5년 37.3%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6년 28.1%가 되었다. 이 기간 중학교 2학년 여학생도 50.0%에서 39.9%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44.0%에서 32.4%로, 같은 학년 여학생은 55.9%에서 49.8%로 감소하였다. 스트레스인지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다(그림 Ⅲ-29).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우울감경험률은 2006년 정점에 달했다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우울감경험률은 2006년 33.6%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6년 17.4%가 되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 2학년 여학생도 43.2%에서 28.5%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42.0%에서 23.0%로, 같은 학년 여학생은 50.2%에서 33.9%로 감소하였다. 우울감경험률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중학교 2학년 여학생,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순으로 높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Ⅲ-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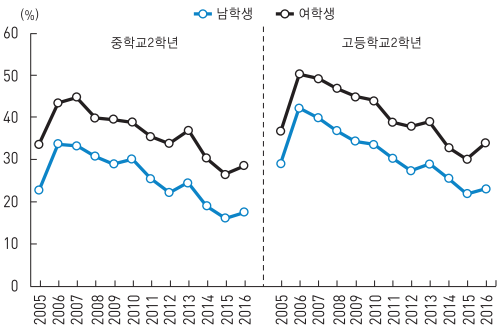
정신질환의 역학적 분포에 의하면 20대 후반과 30대에 정신장애가 가장 많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은 성인보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그림 Ⅲ-29] 중·고등학생의 성별 스트레스인지율, 2005-2016




주: 1) 스트레스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는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16.

[그림 Ⅲ-30] 중·고등학생의 성별 우울감경험률, 2005-2016




주: 1) 우울감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임.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16.

높다. 이는 한국 청소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한국 청소년은 체격이 좋아지고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지만 체력은 떨어지고 건강습관은 나쁜 편이며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의 체력 단련과 건강습관 제고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순우·황준헌. 2016. 「2016 전국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사 결과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7 Educ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7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Ⅳ 교 육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 고려대학교 108

대학교육의 성과 김경근 | 고려대학교 119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실태 황여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7

#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고려대학교)

- 유치원 취원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 처음으로 50%의 벽을 넘어섰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00년대 초반 수준인 60% 후반대로 떨어졌다.
- 전체적인 사교육 참여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나 소득계층 간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일부 학교급에서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 PISA 수학 성취도 분포의 변화 추이는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전체적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남녀 간 취업률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좋은 일자리를 얻고 소득도 높을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적절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그 기회를 살리는 데 실패한 사람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소득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진 편이다. 학력주의가 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희망의 사다리로 간주하고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 교육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교육에서 목도되는 주요 변화를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기회 영역에서는 교육단계별 취학률 및 진학률 추이와 연령대별 교육기회 충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교육단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에서는 교육단계별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효과 영역에서는 중등교육 단계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성취도 분포 변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교육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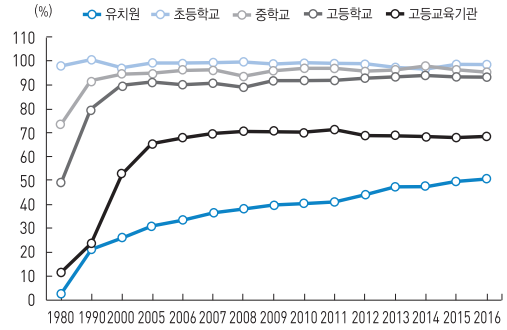
국민들이 교육기회를 얼마나 향유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취학률과 진학률이다. 그런데 최근 사교육이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사교육 참여율도 교육기회 영역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취학률, 진학률,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기회를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인 취학률은 각 교육단계별로 취학 적령 인구 중 실제 해당 교육단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로 측정한다. [그림 Ⅳ-1]에는 1980년 이후 각 교육단계별 취학률이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 97.7%로 완전 취학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한 후 매우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다가 2014년에 일시적으로 96.4%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2016년 현재는 98.1%로 보고되고 있다. 1990년에 일시적으로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상회한 것은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이나 이후에 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취학률은 1980년 73.3%에 그쳤지만 꾸준히 상승하여 1990년에는 91.6%가 되었다. 중학교 취학률은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어 2014년에는 97.7%까지 높아졌다. 2016년 현재는 94.9%로 집계된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 48.8%에 불과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교육기회의 괄목할 만한 확대가 이루어져 1990년에는 취학률이 79.4%가

[그림 Ⅳ-1] 학교급별 취학률, 1980-2016




주: 1) 취학률=(취학 적령의 재적 학생수÷취학 적령 인구)×100.
2) 취학 적령은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초등학교는 만 6-11세, 중학교는 만 12-14세, 고등학교는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만 18-21세임.
3) 취학적령인구는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하였음.
4) 1990년대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초과하는 것은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 또는 이후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더러 있기 때문임.
5)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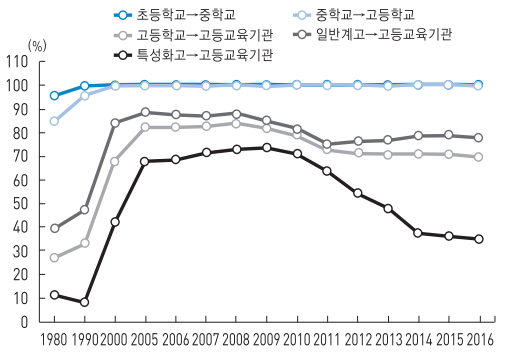
되었다. 이러한 상승세는 그 후로도 지속되어 2016년 현재 고등학교 취학률은 94.1%까지 높아졌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실질적인 보편교육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취학률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80년 11.4%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81년에 시행된 졸업정원제와 1995년에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 때문에 취학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취학률이 52.5%까지 상승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71.0%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최근에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8.5%이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취원율은 다른 교육단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유치원 취원율은 1980년 2.8%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 30%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40%를 상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처음으로 50%의 벽을 돌파하여 50.7%까지 높아졌다. 한국의 경우 미취학 아동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취원율이 낮다고 해서 많은 아동들이 조기교육에서 소외된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OECD 통계는 한국의 만 3-4세 아동 취학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취학률과 함께 진학률도 교육기회 향유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간주된다. 진학률은 각 교육단계별로 전체 졸업생 중에서 상급 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진학률은 취학률에 비해 사회변동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에서 두드러진다. [그림 Ⅳ-2]는 각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1990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100%와 다름없는 상태에 있다.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도 2000년 이후에는 꾸준히 99.6-9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1980년 27.2%에 불과했던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급속히 상승하여 2000년에는 68.0%까지 높아졌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이후로도 계속 상승하여 2008년 83.8%까지 높아졌다가

[그림 Ⅳ-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6




주: 1) 진학률=(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 연도 졸업자)×100.
2)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4)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개정되어 기존 유형 졸업자는 2013년까지 발생함.
5)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2005년부터 국외진학자 포함).
6) 일반계·전문계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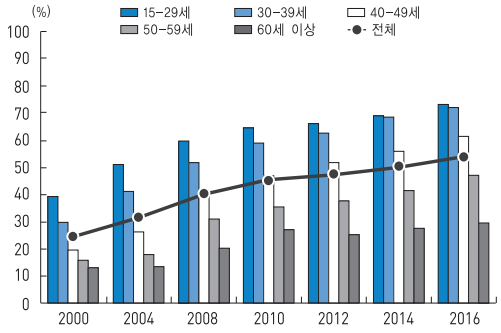
완만한 하락세로 접어들어 2016년 현재는 69.8%까지 낮아졌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특히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하락폭이 컸는데, 이는 진학률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조사기준을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추세적으로 하향세를 그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학 성향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실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75.2%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조금씩 상승하여 2016년 현재 78.0%에 달한다.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9년 73.5%로 정점에 다다른 후 점차 낙폭이 커지면서 2016년

현재 35.0%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에 보다 쉽게 진학하기 위한 통로로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행태가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라 유추된다.

한편, 교육기회 향유 정도는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는지 나타내는 교육기회 충족도라는 주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교육기회 충족도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무척 강한 한국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3]에는 2000년 이후 연령대별 교육기회 충족도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Ⅳ-3] 연령집단별 교육기회 충족도, 200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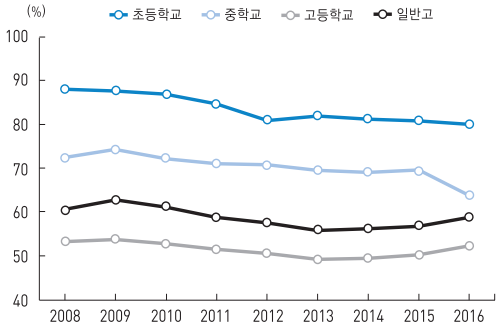

주: 1) 교육기회 충족도는 현재 학생(휴학생 및 재수생 포함)이 아닌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귀하는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모든 세대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기회 충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대체로 어떤 시점에서든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기회 충족도를 보인다. 다만, 2014년부터는 15-29세와 30-39세 연령집단 간에 교육기회 충족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최근 고등교육 진학률의 완만한 감소 경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들이 두루 반영되어 국민 전체의 교육기회 충족도는 2000년 24.5%에서 2016년에는 53.7%까지 높아진 상태이다.

최근 들어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나 대학 진학이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회 영역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사교육 참여율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공교육에 비해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가정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사교육이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림 Ⅳ-4]는 연도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완만하나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2015년에

[그림 Ⅳ-4]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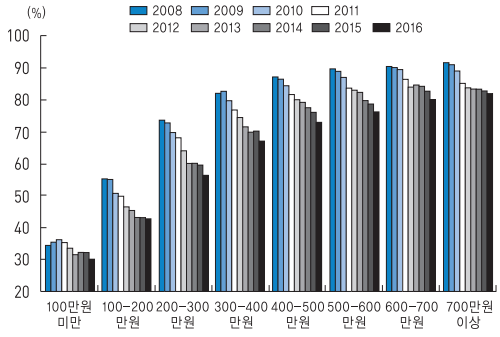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해당 학교급별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비해 2016년에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자유학기제 도입의 영향으로 유추된다.

고등학교(특히 일반고) 학생의 경우 2013년까지는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했지만, 2014년부터 추세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6년 현재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80.0%)이 가장 높고 이어 중학생(63.8%), 고등학생(52.4%)의 순으로 나타난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 학생(58.8%)이 전체 고등학생 대비 6.4%p 높은데, 이는 특성화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교육 참여율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림 Ⅳ-5]는 이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교육 참여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교육 참여율은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집단들 사이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 집단들 사이에서는 사교육 참여율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Ⅳ-5]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08-2016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한편,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목도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명문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예전처럼 성장과 승진의 기회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대학 졸업장의 사회적 효용이 이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 사교육 참여율의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사교육 참여율 하락 정도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구소득 100-200만 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8년 55.3%에서 2016년 42.8%로 8년 사이에 12.5%p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가구소득 200-300만 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17.5%p로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가구소득 600-700만 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10.4%p 하락하였고, 700만 원 이상 집단도 9.9%p 하락에 그쳤다.

이 같은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추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사교육 참여 격차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회 측면에서 그에 따른 영향을 저소득층이 훨씬 더 심하게 받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가정의 경제여건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지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질 것이다.

## 교육의 조건과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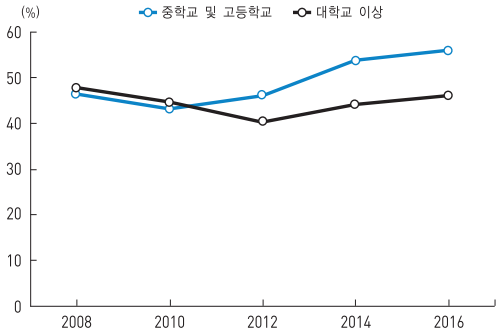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 지표들은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학생 수준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학습시간,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 학교 만족도 등이 있고, 학교 수준 지표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 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본다.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는 학교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Ⅳ-6]에는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까지는 미미하나마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비해 대학 이상 재학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는 대학 이상 재학생에 비해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만족도가 5.8%p 정도 높았는데, 2016년에는 그 차이가 9.8%p로 커졌다.

중·고등학생의 교사관계 만족도는 2008년 46.3%에서 2010년 43.2%로 낮아졌다가 2012년 46.1%로 반등한 후 2014년에는 53.5%로 크게 높아졌다. 이후로도 상승세를 유지한 결과 2016년 현재 55.9%까지 높아진 상태이다. 대학 이상 재학생의 교수관계 만족도는 2008년 47.5%에서 2010년 44.5%, 2012년 40.3%로 계속 하락하다가 2014년부터 반등하여 2016년 현재 46.1%에 도달해 있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 행위를 대표하는 자녀 학교운영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에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상승이동에 대한 열망이 투사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에서는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유리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에 적극적

[그림 Ⅳ-6] 학교급별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 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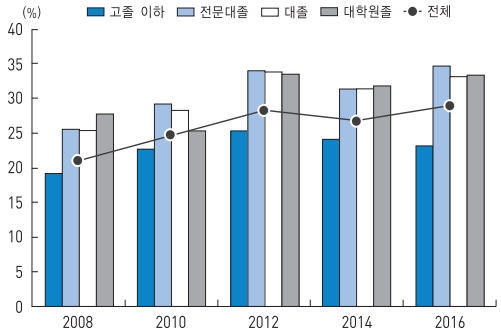



주: 1)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사(교수)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2012년도부터 조사대상이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으로 참여하고 교육과정 편성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곤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는 상당히 드문 편이다.

[그림 Ⅳ-7]에는 부모 학력별 학교운영 참여도가 제시되어 있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는 2008년 21.1%, 2010년 24.7%, 2012년 28.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4년 26.7%로 약간 하락한 후에 2016년에는 다시 29.0%까지 높아졌다.

[그림 Ⅳ-7] 부모의 학력별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2008-2016




주: 1)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수업참관, 급식배부, 학부모회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어느 정도 참여하는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임.
2) 만 30세 이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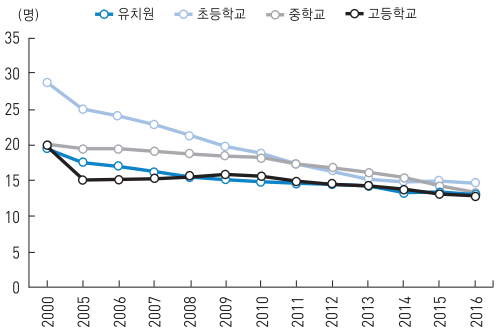
부모의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고졸 이하 19.2%, 전문대졸 25.6%, 대졸 25.5%, 대학원졸 27.8%로 부모의 학력과 학교운영 참여도 간에 선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하지만 2010년과 2012년에는 학교운영 참여도가 고졸 이하, 대학원졸, 대졸, 전문대졸 순으로 높아져 부모 교육수준과의 선형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2014년에는 고졸 이하 24.0%, 전문대졸 31.5%, 대졸 31.4%, 대학원졸 31.9%로 전문대졸 이상의 세 집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참여도를 보였고, 2016년에는 다시 전문대졸 학부모가 가장 높은 참여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문대졸 학부모가 학교운영 참여에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집단은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상승이동 열망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에서의 학생 수준 주요 지표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학교 수준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수 및 학습의 질,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Ⅳ-8]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학교급별로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학교급은 초등학교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8.7명에 달했다.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

이 격감하면서 2016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4.6명으로 낮아졌다. 2016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급은 고등학교(12.9명)이고 이어 중학교(13.3명), 유치원(13.3명), 초등학교(14.6명) 순이다. 모든 학교급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5명 이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Ⅳ-8]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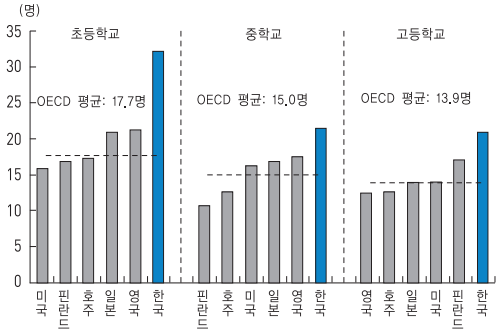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학생수÷교원수.
2) 교원수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원이 포함됨(강사 및 퇴직교원 제외, 휴직교원 포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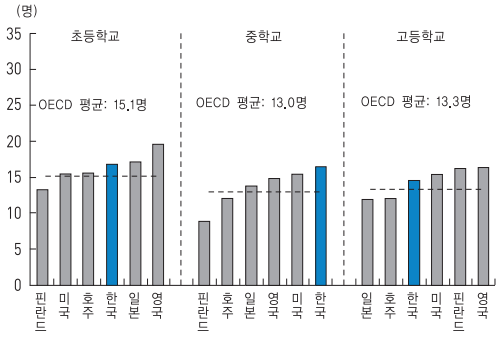
앞에서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했음을 지적했는데, 국제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실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림 Ⅳ-9]는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는 거의 모든 학교급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그 정도가 심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2014년 현재 일부 학교급에서는 선진국보다 더 양호한 수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2014년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적으며,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영국, 미국, 핀란드보다 더 적다. 심각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머지않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9] OECD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0, 2014

1) 2000년




2) 2014년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학생수÷교원수.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2, 2016.

## 교육효과

교육효과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가 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수준과 관련이 있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과 PISA 수학 성취도의 점수분포 변화 추이를 고찰한 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Ⅳ-1〉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 중·고등학생의 비율을 보여준다. 기초학력 미달은 다음 단계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학력을 말한다.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증가한다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취도가 저하되고 집단 간 교육격차도 확대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중학교(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2012년 2.2%에서 2013년 3.3%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전국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하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태도 차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이명박정부는 전수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성취도 향상을 위해 교육현장에 많은 압박을 가했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 같은 방식의 평가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일정 부분 인정하여 초등학생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학생의 평가과목도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에서는 교육현장

〈표 Ⅳ-1〉 성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2–2016

(%)

| 연도 | 중학교(3학년) | | | 고등학교(2학년) | | |
|---|---|---|---|---|---|---|
|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 2012 | 2.2 | 3.0 | 1.4 | 3.0 | 3.7 | 2.1 |
| 2013 | 3.3 | 4.4 | 2.1 | 3.4 | 4.2 | 2.4 |
| 2014 | 3.7 | 5.1 | 2.2 | 4.2 | 5.4 | 2.9 |
| 2015 | 3.5 | 4.9 | 2.0 | 4.2 | 5.7 | 2.6 |
| 2016 | 3.6 | 4.9 | 2.2 | 4.5 | 6.0 | 3.0 |

주: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2016.

에서 인위적으로라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중압감이 이전보다는 훨씬 약해져 이 비율이 미미하나마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그 차이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등학교(2학년)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2013년 3.4%로 전년도에 비해 0.4%p 상승한 데 이어 2014년에 다시 0.8%p나 높아졌다. 2016년 현재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4.5%에 달하는데, 이는 중학생에 비해 0.9%p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다. 아울러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의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남학생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2012년 3.7%에서 2016년 6.0%로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2.1%에서 3.0%로 43% 증가에 그쳤다.

다음으로 〈표 Ⅳ-2〉는 한국 학생들의 PISA 수학 성취도 분포가 2000년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PISA 성취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최근 계층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평균적인 성취도는 높더라도 그 분포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렇다면 교육결과의 평등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큰 것이다. 따라서 성취도의 절대 수준과는 별개로 그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성취도의 분포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간편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사분편차를 산출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분편차는 어떤 분포의 3사분위 값과 1사분위 값 간 차이의 1/2인데, 표준편차에 비해 극단적인 관측치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 값이 클수록 분포의 산포도도 크다.

한국 학생들의 PISA 수학 성취도 사분편차는 2000년 56.2, 2006년 63.5, 2012년 69.1로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15년에 68.3으로 약간 하락하였다. 한편, PISA 수학 성취도의 표준편차도 같은 기간 84.3, 92.6, 99.1, 99.6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보아 2000년 이후 한국에서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을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2015년에 사분편차는 감소했음에도 표준편차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전에 비해 성취도가 매우 낮은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을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2〉 PISA 수학 성취도 분포, 2000–2015

(점)

| | 2000 | 2006 | 2012 | 2015 |
|---|---|---|---|---|
| 최고점 | 809.5 | 849.2 | 888.8 | 854.0 |
| 3사분위 | 605.8 | 612.3 | 624.4 | 594.7 |
| 중앙값 | 552.5 | 550.4 | 556.5 | 529.6 |
| 1사분위 | 493.4 | 485.3 | 486.3 | 458.1 |
| 최저점 | 114.8 | 176.5 | 161.1 | 123.3 |
| 사분편차 | 56.2 | 63.5 | 69.1 | 68.3 |
| 표준편차 | 84.3 | 92.6 | 99.1 | 99.6 |

주: 1) PISA 점수는 평균이 500점이며, 표준편차가 100인 척도점수임.
2) 3사분위는 상위 25퍼센타일, 중앙값은 50퍼센타일, 1사분위는 75퍼센타일에 해당함.
3) 사분편차=(3사분위-1사분위)÷2
출처: OECD, *PISA dataset*, 2000, 2006, 2012, 2015.

마지막으로 〈표 Ⅳ-3〉은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측면에서 교육효과를 측정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취업률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큰 변화 없이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다소 상이한 양상이 관찰된다. 즉, 남성의 경우 2011년 70.7%이던 취업률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조금씩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성의 취업률은 2011년 64.5%에

서 등락은 있었지만 2015년 66.1%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남녀 간 취업률 차이도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었다.

취업률 추이를 고등교육기관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인 취업률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순으로 높다. 4년제 대학과 일반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5년에 취업률이 하락한 반면,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취업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문대를 졸업한 남성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취업률의 변화가 거의 없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전문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2.7%p 높아졌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남성의 취업률은 하락했으나 여성의 취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일반대학원을 마친 남성의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취업률이 하락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추세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는다. 남녀 간 취업률 격차는 일반대학원 졸업자 사이에서 가장 크고, 전문대 졸업자 사이에서 가장 작다.

〈표 Ⅳ-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2011–2015

(%)

| | 전체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 일반대학원 |
|---|---|---|---|---|
| 전체 | | | | |
| 2011 | 67.6 | 67.8 | 65.5 | 79.2 |
| 2012 | 68.1 | 68.1 | 66.0 | 79.1 |
| 2013 | 67.4 | 67.9 | 64.8 | 78.5 |
| 2014 | 67.0 | 67.8 | 64.5 | 77.5 |
| 2015 | 67.5 | 69.5 | 64.4 | 77.8 |
| 남성 | | | | |
| 2011 | 70.7 | 68.3 | 69.1 | 86.1 |
| 2012 | 70.6 | 68.5 | 68.9 | 84.6 |
| 2013 | 69.9 | 68.2 | 67.7 | 84.7 |
| 2014 | 69.0 | 67.5 | 67.2 | 83.3 |
| 2015 | 69.0 | 68.8 | 66.4 | 83.1 |
| 여성 | | | | |
| 2011 | 64.5 | 67.3 | 61.7 | 68.7 |
| 2012 | 65.7 | 67.8 | 63.0 | 71.1 |
| 2013 | 65.1 | 67.8 | 61.8 | 70.3 |
| 2014 | 65.2 | 68.0 | 62.0 | 69.9 |
| 2015 | 66.1 | 70.0 | 62.4 | 70.9 |

주: 1)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2) 2015년부터 취업통계조사가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2014년까지의 자료 또한 12월 31일 기준 취업률로 제시하였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 대학교육의 성과

김경근 (고려대학교)

-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매우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다.
-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공계열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흘러도 거의 해소되지 않고 있다.
- 대졸자의 취업률과 임금수준은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가장 높고 흥미나 적성을 고려한 집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 대학생활을 통해 전공분야 관련 지식과 능력은 크게 향상되지만 인문적 소양은 별로 향상되지 않는다.
- 한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구의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포괄한다. 이러한 대학교육을 통해 얻은 성과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능력주의의 확산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이 대학교육의 성과가 갖는 중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대학교육을 마친 사람은 그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다. 대졸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대졸자가 고용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량을 더 많이 갖추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기도 하지만 국가 경제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은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대학교육은 지식과 정보의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대학교육의 성과는 객관적 지표 또는 주관적 평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객관적 지표로는 고등교육 이수율, 교육수준별 임금 또는 취업률 등이 자주 거론된다. 주관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학력 미스매치 여부, 대학생활을 통한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 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앞서 소개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학교육 성과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 수준에서 관찰되는 대학교육의 성과로서 교육수준, 전공계열 및 전공 선택 사유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졸 취업자의 학력 미스매치 실태를 점검한 후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 향상했다고 평가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과 고등교육 이수율이 그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국제비교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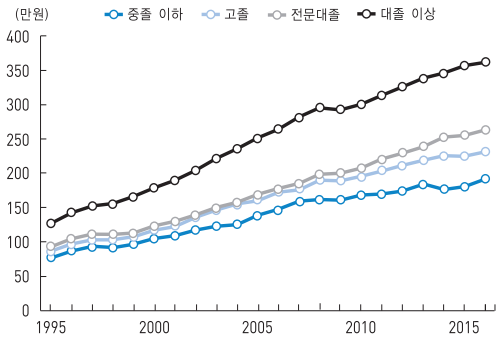
## 교육수준별 및 전공계열별 노동시장 성과

임금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반영한다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인적자본을 더 많이 축적하여 노동생산성도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른 사회문화적, 제도적 요인까지 함께 작용하게 된다면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는 단지 노동생산성의 차이만으로 합리화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림 Ⅳ-10]은 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교육수준 간 임금격차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매우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졸 이하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95년 78만 원에서 2016년 191만 원으로 지난 20여 년 사이 144.0%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고졸자는 168.8%, 전문대 졸업자는 180.9%, 그리고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는 186.3% 증가하였다. 1995년에 4년제 대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중졸 이하 근로자에 비해 61.6%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격차는 2016년에 89.6%로 증가하였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가 누리는 이 같이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모두 대학교육의 성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보상을 받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

[그림 Ⅳ-10] 상용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 199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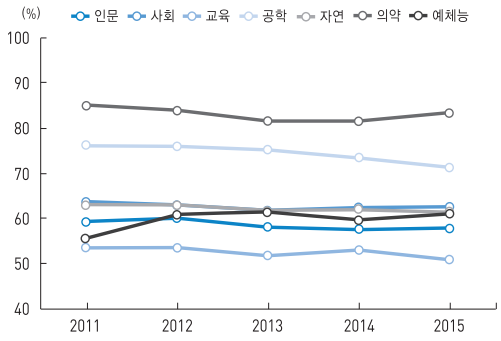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종사자를 표본으로 함.
2) 임금은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이며, 상여금(보너스) 등은 제외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처럼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은 무시한 채 대학 진학에만 몰두하는 행태가 사라지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한편 대학 졸업자가 노동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이나 성과는 전공계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률과 임금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Ⅳ-11]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공계열별로 비교되어 있다. 취업률은 의약계열이 가장 높고 공학계열이 그 다음으로 높다. 이어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인문계열의 순이며,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낮다. 2015년 현재 전공계열별 취업률은 의약계열 83.2%, 공학계열 71.3%, 사회계열 62.4%, 자연계열 61.6%, 예체능계열 61.0%, 인문계열 57.7%, 교육계열 50.8%로 집계된다.

[그림 Ⅳ-11]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별 취업률, 2011-2015




주: 1)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2) 2015년부터 취업통계조사가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2014년까지의 자료 또한 12월 31일 기준 취업률로 제시하였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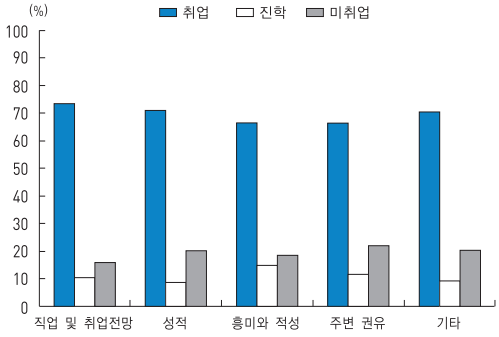
취업률의 시계열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의약계열은 2011년 84.9%에서 2013년 81.4%까지 낮아졌다가 2015년에 83.2%까지 회복하였다. 사회계열도 유사한 취업률 변화 추이를 보인다. 반면 공학계열의 경우 미미하나마 매년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다. 다른 전공계열들은 추세적 변화를 나타내기보다는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전공 선택 사유별 노동시장 성과

대학 진학 과정에서 전공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문적 흥미나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졸업 후에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노동시장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만을 중시한 전공 선택이 취업에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Ⅳ-12]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 선택 사유별 취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률은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73.5%)이 가장 높은 반면 주변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66.4%)이 가장 낮다.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의 취업률도 66.6%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 집단은 15.0% 정도가 상급학교 진학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진학률을 보인다. 한편 미취업자의 비율은 주변 권

[그림 Ⅳ-12]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 선택 사유별 취업 상태,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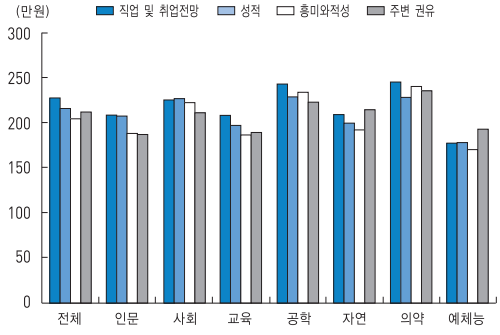



주: 1) 전공 선택 사유에서 '주변권유'는 부모님/선생님, 친구/선배의 권유에 해당함. '기타'는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때문에, 기타 등의 사유에 해당함.
2) 취업상태는 지난 4주간 주로 한 일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음. '취업'은 '일하였음', '일시휴직', '발령대기' 등을 포함하고, '진학'은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 '미취업'은 '취업준비', '진학준비', '심신장애', '결혼준비', '쉬었음' 등을 포함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2015.

유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에서 가장 높고 성적이나 사회적 평판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전공 선택의 배경은 어떤 형태로든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Ⅳ-13]에는 전공계열별로 전공 선택 사유에 따라 월평균 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월평균 임금은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한 경우가 227만 2,000원으로 가장 높고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경우는 204만 3,000원으로 가장 낮다.

[그림 Ⅳ-13] 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 및 전공 선택 사유별 월평균 임금, 2015




주: 1) 대학 졸업자는 전년도 8월과 해당 연도 2월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함.
2) 전공 선택 사유에서 '주변 권유'는 부모님/선생님, 친구/선배의 권유에 해당함.
3) 월평균 임금은 세금, 상여금을 포함한 근로소득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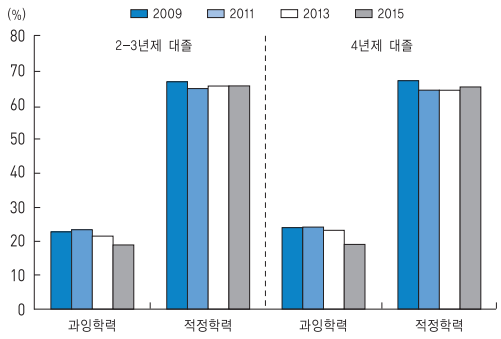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공 선택 사유와 월평균 임금 간 관계에서 전공계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인문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에서는 직업 및 취업 전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집단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지만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는 주변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다. 사회계열의 경우에는 성적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지만 다른 사유의 전공 선택 집단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공학계열과 의약계열에서는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직업 및 취업 전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집단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 대졸 취업자의 학력 미스매치

대졸자가 대학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쌓은 지식과 기술, 역량은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에 취업했을 경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를 학력 미스매치라고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학력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학력과 일치하면 적정 학력, 높은 경우에는 과잉 학력, 낮은 경우에는 과소 학력으로 분류한다. 과소 학력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과잉 학력의 경우 대학교육의 성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그림 Ⅳ-14]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의해 측정한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력 미스매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과잉 학력 비율이 전문대 졸업자보다 조금 더

[그림 Ⅳ-14] 대졸 취업자의 학력별 과잉학력 분포, 2009-2015




주: 1) 과잉학력 비율은 업무내용이 교육수준에 비해 '매우 낮음' 또는 '낮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고, 적정학력 비율은 업무내용이 교육수준에 비해 '알맞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교육대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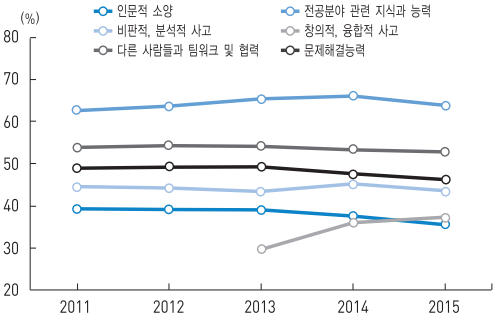
높지만, 그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5년 현재 과잉 학력 비율은 전문대 졸업자 18.8%, 4년제 대학 졸업자 19.0%로 두 집단의 차이가 0.2%p에 불과하다. 아울러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 모두에서 과잉 학력 비율 자체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정 학력의 비율은 별로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과잉 학력이 줄고 있는 만큼 과소 학력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인식

대학교육의 성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의한 측정도 자주 시도되고 있다. 이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측정 방법 가운데 하나가 대학 진학 후 주요 영역별로 스스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측정은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대학 진학 후의 성장 및 발달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응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림 Ⅳ-15]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소양이 대학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설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이 생각하기에 대학생활을 통해 가장 크게 향상되는 영역은 전공분야 관련 지식과 능력이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팀워크와 협력,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분석적 사고, 인문적 소양 등의 순이다. 2013년부터 설문에 포함

[그림 Ⅳ-15] 4년제 대학생의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인식, 2011-2015




주: 1) 통계치는 조사대상 4년제 대학생 중 대학생활을 통해 해당 능력이나 소양이 '매우 향상' 또는 '향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창의적·융합적 사고는 2013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Ⅱ, Ⅲ」, 2014, 2015

된 창의적·융합적 사고 역시 인문적 소양과 함께 대학생활을 통해 향상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보고된다.

각 영역의 향상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전공분야 관련 지식과 능력의 경우 대학생활을 통해 향상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2011년 62.5%에서 2014년 66.0%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63.6%로 감소하였다. 다른 사람들과의 팀워크와 협력도 대학생활을 통해 향상을 경험한 비율이 2012년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해결 능력과 인문적 소양 영역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반면, 창의적·융합적 사고의 경우에는 2013년에 29.7%만이 대학생활을 통해 향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2015년에는 그 비율이 37.1%까지 높아져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향후에도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대학교육 성과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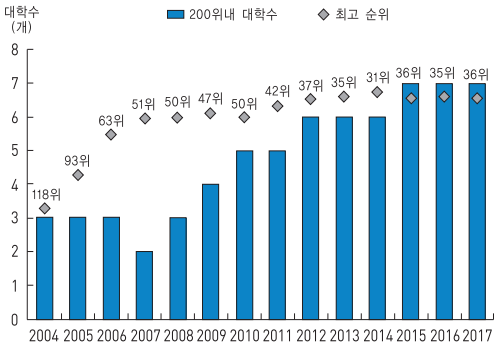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대학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눈부신 경제발전을 뒷받침했다. 여기에서는 한국 대학교육이 보인 성장과 발전의 궤적을 국제비교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검토하고, 다음으로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지식과 정보 창출 능력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창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대학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한국도 대학평가 사업이나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 교육이 주된 활동인 중등교육과는 달리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못지않게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신뢰할 만한 고등교육 경쟁력 지표의 대안으로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에서 발표한 대학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Ⅳ-16]은 QS 세계대학평가 순위를 바탕으로 도출한 한국 고등교육 경쟁력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QS 세계대학평가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에 의해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전 세계 4,800여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1,000위까지 순위를 매기고 있다. 연구, 교육, 졸업생, 국제화 등 4개 영역의 6개 지표로 평가하는데, 6개 지표는 학계 평가(40%),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20%), 교수 1인당 학생 수(20%), 졸업생 평판도(10%), 외국인 교수 비율(5%), 외국인 학생 비율(5%)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가는 세계 곳곳의 주요 대학을

[그림 Ⅳ-16] QS 세계대학평가 세계 200위 이내 국내 대학 수 및 최고 순위, 2004-2017




주: 1) QS 세계대학평가 순위는 연구자 동료 평가, 교수 1인당 학생 수,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졸업생 평판,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교직원 비율의 종합지표로 산출된 것임.
2) 2004-2009년까지는 THE-QS 세계대학평가 결과이며, 2010년부터는 QS 단독 세계대학평가 결과임.

출처: Quacquarelli Symonds,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각 연도.

평가대상으로 망라하고 있고 학계 평판 평가를 위해 세계 각국 학자 7만여 명을 설문에 참여시키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학평가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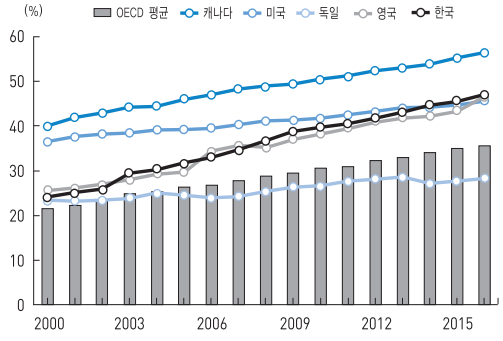
QS 세계대학평가에 따르면,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계단식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한국 대학 가운데 3개 대학(단, 2007년은 2개)이 세계 200위권 대학에 포함되었다. 2011년까지는 200위권에 드는 대학이 5개로 늘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6개 대학이 세계 200위권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7개 대학이 세계 200위권에 올라 있다.

최고 순위 대학의 순위 변화도 한국 대학 경쟁력의 상승 추세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QS 세계대학평가가 시작된 2004년에 국내 최고 순위 대학의 세계 순위는 118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5년에는 93위가 되었고 2006년에는 다시 무려 30계단이 오른 63위가 되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50위권에 머물렀지만 2011년에 42위로 도약했고 2012년부터는 3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교육기회의 보편화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 우골탑으로 표상되는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이 이 같은 고등교육의 팽창을 가능하게 했다.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사학의 비중이 80%를 넘고 정부가 국민의 열화와 같은 교육수요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Ⅳ-17]에는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제시되어 있다. 고

[그림 Ⅳ-17] OECD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이수율, 2000-2016




주: 1) 고등교육이수율=(25-64세 고등교육 수료 인구÷25-64세 총 인구)×100.
2) 고등교육기관에는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석사, 박사)이 포함됨.

출처: OECD,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indicator)*, 2017; *Education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2017.

등교육 이수율은 국민의 교육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대표적 지표 가운데 하나로 25-64세 인구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로 측정된다. 성인 인구 가운데 대학교육을 마친 인구가 많다는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그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23.9%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독일(23.5%)만 한국보다 낮았다. 하지만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매년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현재 46.9%로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캐나다(56.3%) 다음으로 높다.

한국은 고등교육 이수율의 상승 속도 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고등교육 이수율 상승 정도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한국(96.1%), 영국(79.1%), 캐나다(40.4%), 미국(25.2%), 독일(20.4%) 순으로 높다. 이처럼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추세처럼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하락하게 되면 고등교육 이수율의 상승세도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 대학교육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 질적 향상도 꾸준히 이루어져 공신력 있는 국제적 대학평가에서 상위 순위에 포함되는 대학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대학을 졸업해도 예전처럼 취업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취업에 성공한 대졸자는 만족할 만한 경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고졸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끊임없이 입안되고 있음에도 사회적 평판이 뛰어난 대학에 입학하려는 수요가 좀체 줄지 않는 배경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전공 선택 사유별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은 한국 대학교육의 암울한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공을 선택할 때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한 집단이 흥미나 적성을 고려한 집단보다 취업률과 임금수준에서 분명한 우위를 나타냈다. 극심한 취업난과 맞물려 한국의 대학이 취업훈련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실태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지난 10년간 국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학위 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1만 2,668명에서 5만 9,913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 여성 외국인 유학생 수가 남성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 이후에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졌다.
-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는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은 주로 사회계열이다. 그러나 대학원 과정에서는 사회계열의 비중이 줄고 공학계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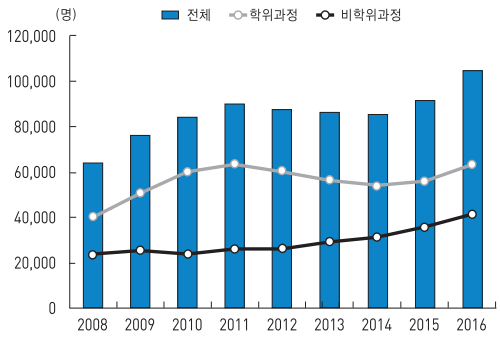
최근 10여 년 사이에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세계화의 흐름이 강조되면서 교육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특히 고등교육 국제화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그로 인해 국가 간 인적 교류도 활발해졌고 외국인 유학생 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류 열풍으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입학 자원이 급격히 감소할 것을 우려한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확보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유학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 글에서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 규모의 변화 추이를 개괄하겠다. 그런 다음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들의 학위과정별, 성별, 출신국가별, 유학형태별, 전공계열별 및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나뉘는데, [그림 Ⅳ-18]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보여준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8년 6만 3,952명에서 2011년 8만 9,537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줄어들어 2014년에는 8만

[그림 Ⅳ-18]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수, 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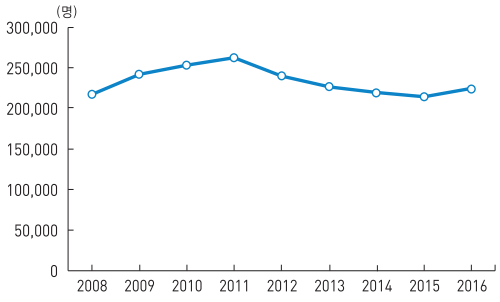

주: 1) 여기에서 외국인 유학생수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위과정생(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 비학위과정생(어학연수, 교육과정공동운영생, 교환연수생, 방문연수생, 기타연수생)을 모두 포함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 교육통계」, 각 연도.

4,891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반등세로 돌아서 전년 대비 6,400여 명이 늘어난 9만 1,332명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다.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체 10만 4,262명 중에서 학위과정 유학생은 6만 3,104명으로 60.5%를 차지하고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4만 1,158명으로 39.5%를 차지한다. 학위과정 유학생이 더 많기는 하지만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14년 3만 1,255명, 2015년 3만 5,593명, 2016년 4만 1,158명으로 최근 3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고등교육 단계의 국외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08년 21만 6,867명에서 2011년 26만 2,465명으로 증가한 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22만 3,908명으로 감소하였다(그림 Ⅳ-19).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 유학생이 여전히 더 많기는 하지만 2008년 3.4배에 달하던 것이 2016년에는 2.1배로 줄었다. 2010년 1만 8,741명에 달했던 초·중·고 조기유학생의 수도 2015년에는 9,929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Ⅳ-19]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수, 2008-2016




주: 1) 여기에서 한국인 유학생수는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위과정생, 어학연수생, 기타 연수생 등을 포함함.
출처: 교육부, 「2016년도 국외 한국인 유학생 통계(대학 이상)」, 2016.

##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별 및 성별 분포

지금까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유학생 규모를 개괄했다면, 이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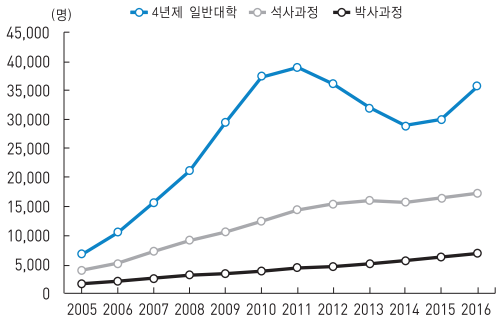
는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그림 Ⅳ-20]은 4년제 대학, 석사, 박사 등 학위과정별로 외국인 유학생 수와 전체 재학생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국내 4년제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5년 6,926명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2만 1,114명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1년 3만 9,029명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2만 8,919명까지 줄어들었으나 2015년 2만 9,969명, 2016년 3만 5,753명으로 다시 증가세에 있다. 2011년 이후 국내 4년제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데에는 정부가 2011년에 도입한 유학생 인증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유학생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수년간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책 방향을 바꾸어 2016년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 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을 기존의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였고, 그 결과 최근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4년제 일반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감을 반복한 것과는 달리 석·박사과정의 대학원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석사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5년 4,023명에서 2010년 1만 2,480명, 2016년 1만 7,282명으로 10여 년 사이에 4.3배 증가하였다. 박사과정 유학생 역시 2005년 1,719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 5,000명을 넘었고 2016년에는 6,878명에 달해 2005년 대비 약 4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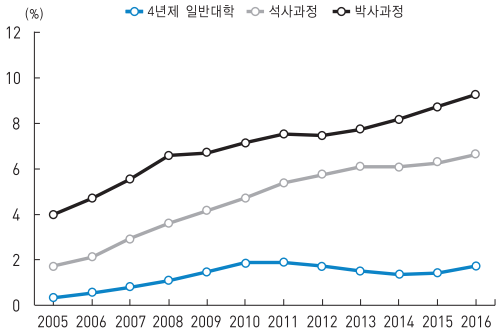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을 학위과정별로 비교해 보면, 우선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2005년 0.4%에서 2011년 1.9%까지 증가했

[그림 Ⅳ-20]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와 비율, 2005-2016

1) 외국인 유학생수




2) 외국인 유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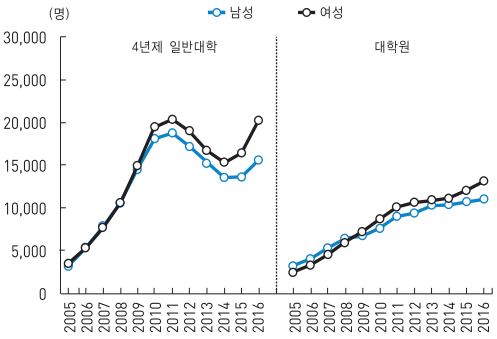

주: 1)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위과정생(학사, 석사, 박사)을 대상으로 함.
2) 박사과정에는 석·박사통합과정이 포함됨.
3)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해당 학위과정 전체 재적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6.

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해 2016년에는 1.7%에 머물러 있다. 즉, 4년제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 자체는 늘어났지만 전체 학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학원에서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석사과정의 경우 2005년에 1.7%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6.7%까지 늘어났다. 박사과정의 경우에도 2005년 4.0%에서 2016년 9.3%까지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박사과정생 10명 중 1명은 외국인 유학생인 셈이다.

외국인 유학생 규모의 추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2009년까지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9년부터는 여학생 수가 남학생보다 많아지고 최근 들어 그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 2016년 현재 여학생 수는 2만 192명이고 남학생 수는 1만 5,561명으로 여학생이 4,631명 많다.

석·박사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008년까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지만 2009년부터 여성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6년 현재 남학생 수는 1만 1,044명이고 여학생 수는 이보다 2,072명 많은 1만 3,116명이다. 4년제 대학 유학생과 대학원 학위과정 유학생을 합한 전체 유학생의 남녀 비율을 보면, 2016년 기준 총 5만 9,913명 중에서 남학생은 2만 6,605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여학생은 3만 3,308명으로 56%를 차지해 여학생이 12%p 더 높다.

[그림 Ⅳ-21] 성별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 2005-201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6.

##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별 분포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별 규모를 살펴보자. 〈표 Ⅳ-4〉은 4년제 일반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분포를 출신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는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중국 출신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에는 아시아권 출신이 95.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 중에서도 중국 출신 유학생이 84.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 미주 지역 출신이 2.3%, 기타 지역 출신이 1.8%를 차지하였다. 중국 출신 유학생의 비율은 2014년 75.7%, 2016년 72.9%로 점차 감소하였다. 반면,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비율은 2012년 1.1%에서 2016년 3.3%로 증가하였고, 일본 출신 유학생의 비율도 같은 기간 1.8%에서 3.0%로 늘어났다.

〈표 Ⅳ-4〉 출신국가별 4년제 일반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12-2016

| 연도 | 아시아 | | | | | 미주 | | | 기타 | 전체 |
|---|---|---|---|---|---|---|---|---|---|---|
| | 중국 | 몽골 | 베트남 | 일본 | 기타 | 미국 | 캐나다 | 기타 | | |
| 유학생수(명) | | | | | | | | | | |
| 2012 | 30,417 | 877 | 407 | 654 | 2,298 | 434 | 206 | 186 | 637 | 36,116 |
| 2013 | 25,604 | 898 | 450 | 748 | 2,513 | 504 | 251 | 211 | 771 | 31,950 |
| 2014 | 21,895 | 914 | 576 | 808 | 2,859 | 506 | 287 | 227 | 847 | 28,919 |
| 2015 | 22,073 | 932 | 761 | 926 | 3,465 | 432 | 272 | 233 | 875 | 29,969 |
| 2016 | 26,050 | 943 | 1,176 | 1,080 | 4,549 | 419 | 287 | 275 | 974 | 35,753 |
| 구성비율(%) | | | | | | | | | | |
| 2012 | 84.2 | 2.4 | 1.1 | 1.8 | 6.4 | 1.2 | 0.6 | 0.5 | 1.8 | 100.0 |
| 2013 | 80.1 | 2.8 | 1.4 | 2.3 | 7.9 | 1.6 | 0.8 | 0.7 | 2.4 | 100.0 |
| 2014 | 75.7 | 3.2 | 2.0 | 2.8 | 9.9 | 1.7 | 1.0 | 0.8 | 2.9 | 100.0 |
| 2015 | 73.7 | 3.1 | 2.5 | 3.1 | 11.6 | 1.4 | 0.9 | 0.8 | 2.9 | 100.0 |
| 2016 | 72.9 | 2.6 | 3.3 | 3.0 | 12.7 | 1.2 | 0.8 | 0.8 | 2.7 | 100.0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표 Ⅳ-5〉 출신국가별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12-2016

| 연도 | 아시아 | | | | | 미주 | | | 기타 | 전체 |
|---|---|---|---|---|---|---|---|---|---|---|
| | 중국 | 몽골 | 베트남 | 일본 | 기타 | 미국 | 캐나다 | 기타 | | |
| 유학생수(명) | | | | | | | | | | |
| 2012 | 10,502 | 1,564 | 1,381 | 413 | 3,777 | 750 | 222 | 178 | 1,251 | 20,038 |
| 2013 | 10,689 | 1,399 | 1,606 | 377 | 4,282 | 931 | 268 | 204 | 1,456 | 21,212 |
| 2014 | 10,790 | 1,156 | 1,464 | 377 | 4,604 | 965 | 287 | 222 | 1,670 | 21,535 |
| 2015 | 11,163 | 1,061 | 1,681 | 333 | 5,086 | 906 | 307 | 294 | 1,936 | 22,767 |
| 2016 | 11,250 | 1,202 | 1,997 | 289 | 5,573 | 843 | 319 | 360 | 2,327 | 24,160 |
| 구성비율(%) | | | | | | | | | | |
| 2012 | 52.4 | 7.8 | 6.9 | 2.1 | 18.8 | 3.7 | 1.1 | 0.9 | 6.2 | 100.0 |
| 2013 | 50.4 | 6.6 | 7.6 | 1.8 | 20.2 | 4.4 | 1.3 | 1.0 | 6.9 | 100.0 |
| 2014 | 50.1 | 5.4 | 6.8 | 1.8 | 21.4 | 4.5 | 1.3 | 1.0 | 7.8 | 100.0 |
| 2015 | 49.0 | 4.7 | 7.4 | 1.5 | 22.3 | 4.0 | 1.3 | 1.3 | 8.5 | 100.0 |
| 2016 | 46.6 | 5.0 | 8.3 | 1.2 | 23.1 | 3.5 | 1.3 | 1.5 | 9.6 | 100.0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표 Ⅳ-5〉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별 분포를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4년제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학위과정에서도 중국 출신 유학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대학원 석·박사 과정 유학생 중에서 중국 출신이 46.6%를 차지하고 이어 베트남 출신과 몽골 출신이 각각 8.3%와 5.0%를 차지한다. 대학원 과정에서도 최근 수년간 중국 출신 유학생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들의 비율은 2012년 52.4%에서 2014년 50.1%, 2016년 46.6%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비율은 2012년 6.9%에서 2016년 8.3%로 증가하였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 수는 2012년에는 몽골 출신에 이어 3위였으나 2013년부터 몽골 출신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은 중국 출신이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 국내의 유학시장 판도가 해당 국가의 유학생 상황과 선호도 변화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를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형태별 분포

외국인 유학생을 유학형태별로 살펴보는 것도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표 Ⅳ-6〉에는 4년제 일반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형태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국내 4년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자비 유학생이며, 한국 정부나 대학의 초청, 자국 정부의 파견 등에 의한 유학생은 일부에 그친다. 2016년의 경우 자비 유학생 93.5%, 대학 초청 유학생 2.4%, 자국 정부 파견 유학생 1.9%, 한국 정부 초청 유학생 1.3% 등으로 나타난다.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자비 유학생 비율은 증가하고 대학 초청 유학생 비율은 감소하였다.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자국 정부 파견 유학생의 수와 비율이 최근 들어 증가세를 나타내는 점도 특징적이다. 2005년에 이들은 55명으로 0.8%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681명으로 증가하고 그 비율도 1.9%로 늘어났다.

대학원 학위과정에서도 자비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다. 〈표 Ⅳ-7〉에서 보듯이 2016년 기준 전체 석·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자비 유학생은 73.3%에 이른다. 대학 초청 유학생은 14.3%, 한국 정부 초청 유학생은 6.1%, 자국 정부 파견 유학생은 0.9%이다. 자비 유학생과 함께 한국 정부 초청 유학생이 절대 규모와 상대 비율 면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확보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해외 우수 인재 확보와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위해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10. 29.)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우

〈표 Ⅳ-6〉 유학형태별 4년제 일반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05-2016

| 연도 | 자비 유학 | 한국정부 초청 | 대학 초청 | 자국 정부 파견 | 기타 | 전체 |
|---|---|---|---|---|---|---|
| 유학생수(명) | | | | | | |
| 2005 | 6,066 | 0 | 636 | 55 | 169 | 6,926 |
| 2010 | 35,348 | 424 | 1,408 | 207 | 104 | 37,491 |
| 2015 | 27,800 | 548 | 927 | 542 | 152 | 29,969 |
| 2016 | 33,436 | 463 | 855 | 681 | 318 | 35,753 |
| 구성비율(%) | | | | | | |
| 2005 | 87.6 | 0.0 | 9.2 | 0.8 | 2.4 | 100.0 |
| 2010 | 94.3 | 1.1 | 3.8 | 0.6 | 0.3 | 100.0 |
| 2015 | 92.8 | 1.8 | 3.1 | 1.8 | 0.5 | 100.0 |
| 2016 | 93.5 | 1.3 | 2.4 | 1.9 | 0.9 | 100.0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표 Ⅳ-7〉 유학형태별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05-2016

| 연도 | 자비 유학 | 한국정부 초청 | 대학 초청 | 자국정부 파견 | 기타 | 전체 |
|---|---|---|---|---|---|---|
| 유학생수(명) | | | | | | |
| 2005 | 3,528 | 279 | 1,318 | 5 | 612 | 5,742 |
| 2010 | 11,379 | 940 | 3,526 | 101 | 345 | 16,291 |
| 2015 | 16,880 | 1,262 | 3,417 | 206 | 1,002 | 22,767 |
| 2016 | 17,704 | 1,474 | 3,452 | 222 | 1,308 | 24,160 |
| 구성비율(%) | | | | | | |
| 2005 | 61.4 | 4.9 | 23.0 | 0.1 | 10.7 | 100.0 |
| 2010 | 69.8 | 5.8 | 21.6 | 0.6 | 2.1 | 100.0 |
| 2015 | 74.1 | 5.5 | 15.0 | 0.9 | 4.4 | 100.0 |
| 2016 | 73.3 | 6.1 | 14.3 | 0.9 | 5.4 | 100.0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수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확보를 목표로 정부 초청 장학생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 초청에 의한 유학생의 규모와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대학 초청 유학생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계열별 분포

여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계열에 대해 알아보겠다. 〈표 Ⅳ-8〉와 〈표 Ⅳ-9〉에는 4년제 일반대학과 대학원 학위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계열별 분포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먼저 4년제 일반대학 유학생의 전공계열별 분포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사회계열 전공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2016년 기준 4년제 일반대학 전체 외국인 유학생 3만 5,753명 가운데 52.6%인 1만 8,816명이 사회계열 전공자이며 이어 인문계열 5,418명(15.2%), 공학계열 4,858명(13.6%), 예체능계열 3,711명(10.4%), 자연계열 2,390명(6.7%) 등이다. 교육계열과 의학계열 전공자 비율은 각각 1% 미만으로 매우 낮다.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계열 전공자 비율이 가장 높다. 2016년 기준 대학원 학위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2만 4,160명 가운데 사회계열 전공자가 8,813명(36.5%)으로 가장 많다. 그렇지만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서는 사회계열 전공 편중이 덜한 편이다. 대신 공학계열 전공자 비율이 19.6%로 4년제 일반대학보다 높다. 대학원의 경우 사회계열 전공자 비율이 2012년

〈표 Ⅳ-8〉 전공계열별 4년제 일반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12-2016

| 연도 | 인문 | 사회 | 교육 | 공학 | 자연 | 의약 | 예체능 | 전체 |
|---|---|---|---|---|---|---|---|---|
| 유학생수(명) | | | | | | | | |
| 2012 | 5,918 | 19,268 | 527 | 4,518 | 2,369 | 342 | 3,174 | 36,116 |
| 2013 | 4,903 | 17,305 | 285 | 4,009 | 2,147 | 377 | 2,924 | 31,950 |
| 2014 | 4,390 | 15,358 | 240 | 3,836 | 1,995 | 393 | 2,707 | 28,919 |
| 2015 | 4,658 | 15,711 | 210 | 4,177 | 2,005 | 320 | 2,888 | 29,969 |
| 2016 | 5,418 | 18,816 | 232 | 4,858 | 2,390 | 328 | 3,711 | 35,753 |
| 구성비율(%) | | | | | | | | |
| 2012 | 16.4 | 53.4 | 1.5 | 12.5 | 6.6 | 0.9 | 8.8 | 100.0 |
| 2013 | 15.3 | 54.2 | 0.9 | 12.5 | 6.7 | 1.2 | 9.2 | 100.0 |
| 2014 | 15.2 | 53.1 | 0.8 | 13.3 | 6.9 | 1.4 | 9.4 | 100.0 |
| 2015 | 15.5 | 52.4 | 0.7 | 13.9 | 6.7 | 1.1 | 9.6 | 100.0 |
| 2016 | 15.2 | 52.6 | 0.6 | 13.6 | 6.7 | 0.9 | 10.4 | 100.0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표 Ⅳ-9〉 전공계열별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12-2016

| 연도 | 인문 | 사회 | 교육 | 공학 | 자연 | 의약 | 예체능 | 전체 |
|---|---|---|---|---|---|---|---|---|
| 유학생수(명) | | | | | | | | |
| 2012 | 3,580 | 8,193 | 840 | 3,550 | 2,132 | 694 | 1,049 | 20,038 |
| 2013 | 3,759 | 8,557 | 949 | 3,957 | 2,074 | 828 | 1,088 | 21,212 |
| 2014 | 3,785 | 8,179 | 1,126 | 4,203 | 2,142 | 941 | 1,159 | 21,535 |
| 2015 | 4,008 | 8,448 | 1,141 | 4,380 | 2,428 | 1,048 | 1,314 | 22,767 |
| 2016 | 4,320 | 8,813 | 1,153 | 4,733 | 2,471 | 1,125 | 1,545 | 24,160 |
| 구성비율(%) | | | | | | | | |
| 2012 | 17.9 | 40.9 | 4.2 | 17.7 | 10.6 | 3.5 | 5.2 | 100.0 |
| 2013 | 17.7 | 40.3 | 4.5 | 18.7 | 9.8 | 3.9 | 5.1 | 100.0 |
| 2014 | 17.6 | 38.0 | 5.2 | 19.5 | 9.9 | 4.4 | 5.4 | 100.0 |
| 2015 | 17.6 | 37.1 | 5.0 | 19.2 | 10.7 | 4.6 | 5.8 | 100.0 |
| 2016 | 17.9 | 36.5 | 4.8 | 19.6 | 10.2 | 4.7 | 6.4 | 100.0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40.9%에서 2016년 36.5%로 감소한 반면 공학계열 전공자 비율은 같은 기간 17.7%에서 19.6%로 증가하였다. 공학계열 다음으로는 인문계열 전공자 비율이 17.9%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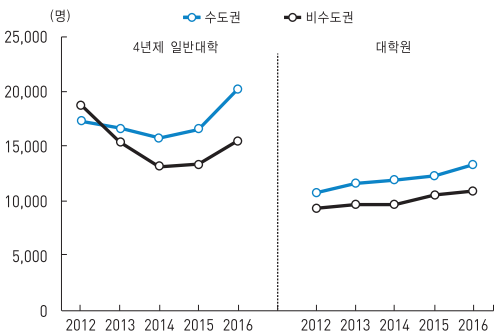
##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별 분포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별 분포 추이도 살펴보자. [그림 Ⅳ-22]에는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4년제 일반대학과 대학원 과정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더 많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2012년에는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역전되어 2016년 기준 수도권 대학의 유학생 수는 2만 명을 넘었으나 비수도권 대학의 유학생 수는 1만 5,545명에 그친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증가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다. 2016년 현재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중 수도권 유학생은 1만 3,293명으로 55%를 차지하고 비수도권 유학생은 1만 867명으로 45%를 차지한다. 2012년에는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1,496명 많았는데, 2016년에는 그 차이가 2,426명으로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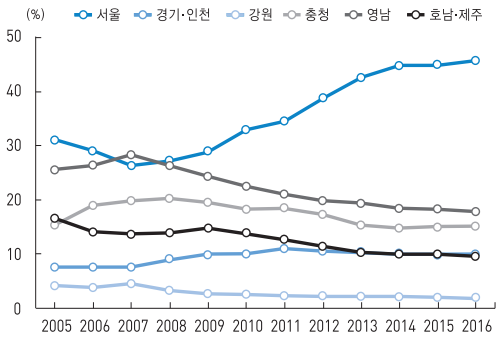
[그림 Ⅳ-23]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분포를 6개 권역별로 세분해서 집계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결과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전공대학, 각종 학교 등 모든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서울 지역 집중 현상이 심화

[그림 Ⅳ-2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 2012-201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그림 Ⅳ-23]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시도별 분포,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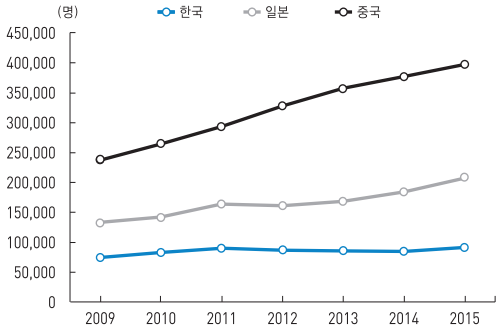

주: 1) 여기에서 외국인 유학생수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임.
2) 충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을 포함, 영남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을 포함, 호남·제주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을 포함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서울 지역 유학생의 비율은 2005년 31.0%에서 2016년 45.8%으로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 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근 충청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유학생 비율은 대부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충청 지역의 유학생 비율은 2014년 이후 다소 반등하였다.

## 한·중·일 외국인 유학생 규모 비교

마지막으로 [그림 Ⅳ-24]는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에 비해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훨씬 크다. 특히,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유학생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부 초청 장학생을 확대하는 등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 중인데(김한나·우한솔·이승호, 2016),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24] 한국, 일본, 중국의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수, 2009-2015




주: 1) 각 국 외국인 유학생수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위과정 유학생과 비학위과정 유학생을 모두 포함함.
출처: 김한나·우한솔·이승호, 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4), 311-337.

일본도 유학생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2015년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23만 9,287명에 이르고 있다. 한·중·일 3국이 모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외국인 유학생 확보를 위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6.「2016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고등교육 · 취업통계편」.
교육과학기술부. 2012.10.29. "2020년까지 우수한 외국인 20만명 유치". 보도자료.
김한나 · 우한솔 · 이승호. 2016. "한 · 중 · 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아시아교육연구」 17(4): 311-337.

Korean Social Trends 2017

한국의 사회동향 2017

2017 Labor

Korean Social Trends 2017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V 노 동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138

취약노동자는 누구인가: 최저임금과 실업보험을 기준으로 149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외환위기 후 20년,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권현지 | 서울대학교 157

#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 고용률 증가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률의 성별 격차도 유지되고 있다.
- 청년 실업률은 지난 4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청년 실업률 자체가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생이 제외된 수치이다.
- 산업별로는 남성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와 여성 서비스업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직종별로는 관리직과 판매직이 감소하고 준전문직과 사무직 및 서비스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일자리 구조는 중저숙련직의 비중이 높아 기술 변화의 충격에 취약하다.
- 지난 10년간 평균 임금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불평등 수준도 높아졌다. 성, 고용형태,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있다.
- 지표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체감과 다른 것은 비정규직의 다양성을 공식 통계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시간제 근로자, 3자적 고용관계 근로자의 질 낮은 근로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탄생한 새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공표하며 노동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일련의 일자리 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일자리 확대 사업에 필요한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일자리 질 제고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도 16.4% 인상되었다. 고용 정체, 질 낮은 일자리, 노동시장 불평등과 같은 한국 노동시장의 제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제반 지표와 체감 상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고용은 지표상으로 감소 혹은 정체 추세를 보이지만 국민들의 체감은 이와 사뭇 다르다. 새 정부의 정책이 향후 체감 노동시장 상황을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법과 연결될지는 중장기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 개입 배경이 된 2016년 노동시장 상황을 노동시장의 양적 및 질적 성과와 노동시장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필요한 경우 한국의 상황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다. 아울러 최근 주목할 만한 노동시장 이슈들도 간략히 다룰 것이다.

## 고용률

먼저, 노동시장의 양적 성과를 개관해 보자.

2015년 고용률이 보여준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성장세의 둔화였는데, 2016년에도 고용률 성장세의 둔화는 계속되었다. 고용률은 2016년 60.4%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5년의 0.1%p 증가와 같은 수준이다. 미미하나마 고용률 증가를 주도한 집단은 여성과 20대 청년이다. 30대 남성은 전년 대비 감소(−0.7%p)하였고, 30대 여성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1.4%p)하였다(표 Ⅴ−1).

〈표 Ⅴ−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16

| | 고용률(%) | | | 전년 대비 증감(%p)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전체 | 60.4 | 71.1 | 50.2 | 0.1 | 0.0 | 0.3 |
| 15-29세 | 42.3 | 40.7 | 43.8 | 0.8 | 0.9 | 0.6 |
| 15-19세 | 8.0 | 7.2 | 8.7 | 0.1 | 0.3 | -0.1 |
| 20-29세 | 58.3 | 56.8 | 59.9 | 0.4 | 0.5 | 0.4 |
| 30-39세 | 74.6 | 90.2 | 58.3 | 0.4 | -0.7 | 1.4 |
| 40-49세 | 79.2 | 92.4 | 65.8 | 0.1 | 0.2 | 0.1 |
| 50-59세 | 74.4 | 86.9 | 61.8 | 0.0 | 0.0 | 0.0 |
| 60세 이상 | 39.3 | 51.2 | 30.0 | 0.4 | 0.1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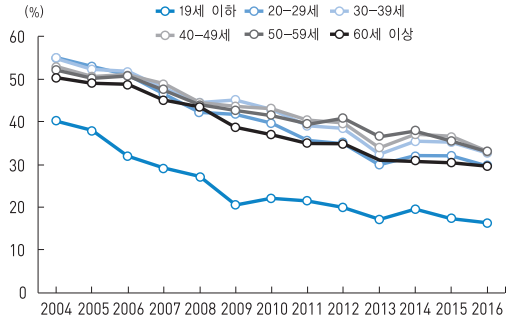
주: 1)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2016.

여성 고용률은 2016년에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으나 2015년의 0.4%p와 비교할 때 상승세가 다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약 20%p에 이르는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를 의미 있게 줄이지는 못하였다. 이 격차는 OECD 국가들 중 매우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15.5%p)에 근접하고 있는 일본(16.4%p)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크다. 경력단절의 주 연령대인 30대 여성 집단에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이 연령대에서도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32%p에 달한다.

## 노동시간

고용의 양과 질에 모두 관여하는 요소로 한국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의 추세는 어떠한가? 48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감소해 왔다(그림 Ⅴ−1). 2003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경과규정을 통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 데 힘입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단시간 근로의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15−19세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장시간 근로 비중이 30% 내외로 여전히 높다는 점에는 주목해야 한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그림 Ⅴ−1] 연령집단별 장시간 근로자 비율, 2004−2016




주: 1)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해당집단 임금근로자 중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비율임.
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17 KLI 노동통계」, 2017.

장시간 근로의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다. 6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20%를 상회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멕시코보다 높은 수치다. 초과노동을 포함한 총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려는 최근의 유권해석 변경이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대폭 줄이자는 최근의 정책 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대졸 이상 집단(26.3%)보다 고졸 집단(36.4%)에서 현저히 높다는 사실은 장시간 근로 문제의 해결에 저임금 집단의 임금 수준과 체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

## 청년층 실업과 구직

한편, 실업률은 2016년 3.7%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다. 성 및 연령 집단별로는 대부분 3% 내외의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다. 실업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함의를 갖는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지표상으로는 매우 낙관적이다. 15세 이상 실업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이 30.5%에 이르는데 한국의 경우 0.9%에 불과하다. 적어도 통계상으로 보면 한국 노동시장에는 장기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은 예외이다. 단순 실업률만 보아도 2016년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남성의 경우 40대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 미만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여성 실업률은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감소하였지만 20대는 예외적으로 큰 증가(1.2%p)를 기록하였다(표 Ⅴ-2).

〈표 Ⅴ-2〉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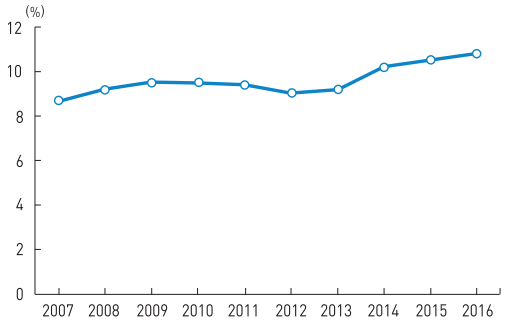
| | 실업률(%) | | | 전년 대비 증감(%p)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전체 | 3.7 | 3.8 | 3.6 | 0.1 | 0.1 | 0.0 |
| 15-29세 | 9.8 | 10.9 | 8.8 | 0.6 | 0.3 | 1.0 |
| 15-19세 | 10.0 | 11.0 | 9.2 | -0.6 | 0.6 | -1.5 |
| 20-29세 | 9.8 | 10.9 | 8.8 | 0.7 | 0.3 | 1.2 |
| 30-39세 | 3.2 | 3.3 | 3.0 | 0.1 | 0.2 | -0.1 |
| 40-49세 | 2.1 | 1.9 | 2.4 | -0.2 | -0.1 | -0.3 |
| 50-59세 | 2.3 | 2.5 | 2.0 | -0.1 | 0.0 | -0.1 |
| 60세 이상 | 2.6 | 3.2 | 1.9 | 0.1 | 0.2 | 0.1 |

주: 1)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및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2016.

청년집단의 실업률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인 데다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림 Ⅴ-2]가 보여주듯, 학교 졸업 연령에 가장 가까운 20-24세 청년의 실업률은 2012년 소폭 감소한 후 지난 4년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청년 실업률이 2010년 15.3%에서 2016년 11.9%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렇듯 청년층 실업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OECD 국가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아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그림 Ⅴ-3).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고용률과 실

[그림 Ⅴ-2] 20-24세 청년층 실업률,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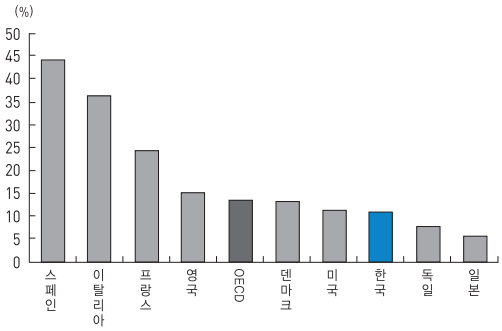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업률이 모두 낮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률은 높지 않은데 실업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를 포기한 인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괜찮은 일자리 제공이 제한되는 청년 노동시장에는 한시적 구직포기자, 이른바 취업준비생이 대거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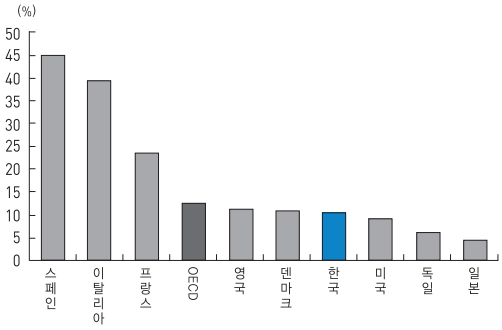
이와 같은 청년층 노동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눈여겨 볼 지표는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경우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27.9%에 이른다. 6개월 미만 소요되는 경우는 감소하는 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증가하고 있다(그림 Ⅴ-4). 아울러 2010년 이후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준비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상회한다. 취업준비생은 사실상 구직 중인 실업자이지만, 통계에는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Ⅴ-3] OECD 주요 국가의 청년층 성별 실업률, 2016

1)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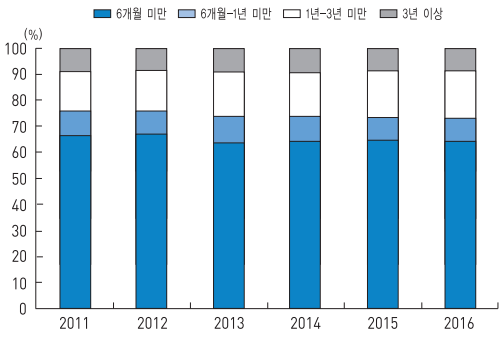



2) 여성




주: 1) 만 15-2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그림 Ⅴ-4] 청년층 첫 취업 소요기간, 2011-2016




주: 1) 최종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임금근로자로 첫 취업한 15-2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5월.

## 일자리의 산업별 구성

다음으로 일자리의 구조를 살펴보자. 2016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율은 상용근로자 49%,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5% 등으로 2015년과 비교해서 거의 변화가 없다. 선진국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일자리 구조의 특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15년과 비교할 때 산업별 취업자 증감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2015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도소매업 등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증가(2015년 28만 명 증가에서 2016년 35만 명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표 Ⅴ-3).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년 대비 5.9% 감소한 수출 악화는 2016년 제조업 고용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분류상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고용규모가 2015년 말 21만 명에서 2016년 말 18만 명으로 14%가량 감소하였고, 이런 감소를 현재 구조조정 중인 선박, 플랜트건설 등 조선산업이 주도하였다. 향후 기존에 수주된 생산 물량이 소진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2016년에 이어 더 큰 폭의 고용 감소가 진행될 수 있다.

〈표 Ⅴ-3〉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전년 대비 증감 취업자수, 2014-2016

(1,000명)

| | 2014 | 2015 | 2016 | '14년 대비 '16년 | |
|---|---|---|---|---|---|
| | | | | 남자 | 여자 |
| 제조업 | 146 | 156 | -5 | 144 | 7 |
| 서비스업 | 459 | 278 | 345 | 155 | 471 |
| 도매 및 소매업 | 132 | -9 | -54 | -60 | -2 |
| 운수업 | -6 | 2 | 3 | -9 | 15 |
| 숙박 및 음식점업 | 127 | 81 | 98 | 86 | 95 |
| 출판, 영상, 방송통신/정보 | 22 | 58 | 14 | 45 | 28 |
| 금융 및 보험업 | -27 | -48 | 8 | -39 | -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23 | 27 | 35 | 30 | 3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3 | 23 | 54 | 32 | 45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 7 | 69 | 44 | 47 | 66 |
| 공공,국방및사회보장행정 | -9 | -21 | 57 | 23 | 12 |
| 교육 서비스업 | 59 | 11 | 28 | 3 | 36 |
|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 139 | 77 | 81 | 10 | 148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 2 | 30 | -18 | -20 | 32 |
|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 -13 | -22 | -5 | 7 | -34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일자리의 직종별 구성과 디지털화

한편, 2016년에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채용의 가속화가 만들어 낼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가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는 점도 언급할 만하다. 취업자 직종 구성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우려에 근거가 없지는 않다. 한국은 제조업이 강한 일본과 상당히 유사한 직종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는 관리직의 비중이 비교적 낮다. 한국은 전문기술직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다(표 Ⅴ-4).

최근 직종 구성의 변화 추세는 관리직의 현저한 감소, 전문기술직의 증가, 사무직과 서비스직

〈표 Ⅴ-4〉 OECD 주요 국가의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구성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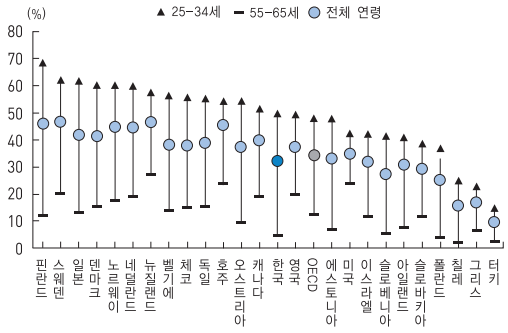
| 국가 | 관리자 | 전문가 |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 종사자 |
|---|---|---|---|---|---|---|---|---|
| 한국(2015) | 1.4 | 20.1 | | 17.0 | 22.5 | 9.0 | 12.1 | 13.2 |
| 일본(2015) | 2.3 | 22.5 | | 19.7 | 21.7 | 21.9 | | 7.0 |
| 미국(2013) | 15.8 | 22.2 | | 12.4 | 28.7 | | | 20.2 |
| 덴마크(2016) | 2.7 | 25.3 | 17.1 | 7.8 | 19.7 | 7.3 | 5.1 | 11.3 |
| 프랑스(2016) | 7.2 | 17.7 | 20.3 | 8.3 | 15.6 | 9.0 | 7.5 | 10.1 |
| 독일(2016) | 4.6 | 17.6 | 22.3 | 13.1 | 14.2 | 12.5 | 6.0 | 7.9 |
| 이탈리아(2016) | 3.8 | 14.6 | 17.5 | 12.0 | 17.5 | 13.2 | 6.8 | 11.3 |
| 영국(2016) | 11.0 | 25.2 | 12.4 | 9.4 | 18.5 | 8.3 | 5.1 | 8.6 |

주: 1) ILO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임. 한국과 일본은 2015년 자료, 미국은 2013년 자료임. 그 외 국가는 2016년 자료임.
2) 직업분류는 ISCO08 분류 기준임. 이 표에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분류불능 비율은 제외하였음.
3) 한국의 경우 전문가에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포함됨.
4) 일본의 경우 전문가에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포함되고,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하나로 묶어짐.
5) 미국의 경우 전문가에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포함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포함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17 KLI 해외노동통계」, 2017.

의 증가, 판매직의 감소, 기계 조작 및 조립직의 증가 둔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최근 관리직 감소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이직종 종사자의 판단·의사결정·전문관리기술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을 내비친다. 혹은 기업이 고비용 인력의 유지보다 비용절감을 더 중요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문기술직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증가는 최근 디지털화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의 최근 직종별 취업자 추세는 고숙련직의 증가와 중간숙련직의 현저한 감소라는 선진 산업국가의 일반적인 변화 추세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각 직종의 숙련요구도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고숙련직에 비해 중간숙련직이나 저숙련직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한국의 직종 구조를 고려할 때 기술 변화가 몰고 올 고용조정의 폭은 매우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숙련 고도화를 위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OECD가 2012년에 실시한 근로자 숙련에 관한 조사(The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결과도 향후 숙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청년층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준비 정도가 고령층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다른 나라 청년층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에 머물고 있다(그림 Ⅴ-5).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작업장에서 숙련을 요구하는 정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교육 및 작업장 혁신을 통해 미래를 위한 숙련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그림 Ⅴ-5] OECD 주요 국가의 근로자 디지털환경 준비도, 2012




주: 1) 근로자 디지털환경 준비도는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ICT 숙련도 평가에서 레벨 2와 레벨 3의 문제해결능력을 보인 근로자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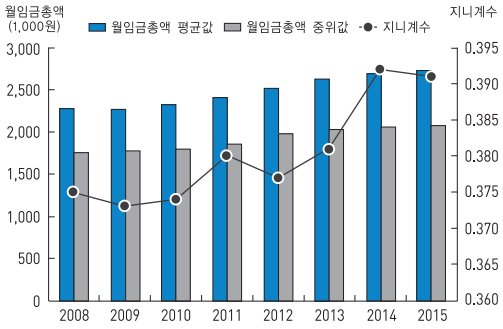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2017.

## 임금과 노동시장 불평등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5년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73만 원이고 중위 임금은 208만 원이다(그림 Ⅴ-6).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4년 1.1%로 주춤하였으나 2015년 2.6%, 2016년 2.8%로 증가해 왔다. 2014년 이래 7-8%대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실질 최저임금도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Ⅴ-7). 그러나 임금 불평등 수준도 함께 높아져 왔다. [그림 Ⅴ-6]를 보면 평균 임금이 중위 임금을 크게 상회하는데, 이는 임금 분포의 불균형을 드러낸다. 평균 임금과 중위 임금의 격차도 계속 커지고 있다. 지니계수 역시 2008년 0.375에서 2015년 0.391로 증가해 임금 불평등의 심화 경향을 보여준다.

고용형태, 성, 기업규모 등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임금 불평등에 관여하는 주요 요소이며,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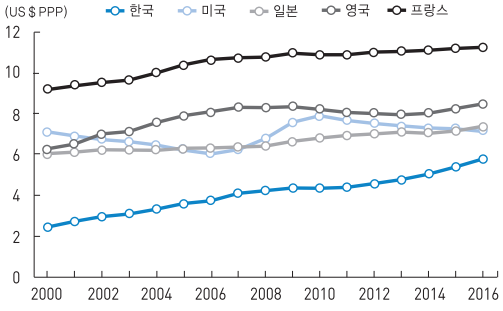
[그림 Ⅴ-6] 임금근로자의 월임금총액과 지니계수, 2008-2015




주: 1)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3) 중위값은 임금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늘어 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임금임.
4)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나타냄.
5)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17 KLI 노동통계」, 2017.

[그림 Ⅴ-7] OECD 주요 국가의 실질 최저임금, 200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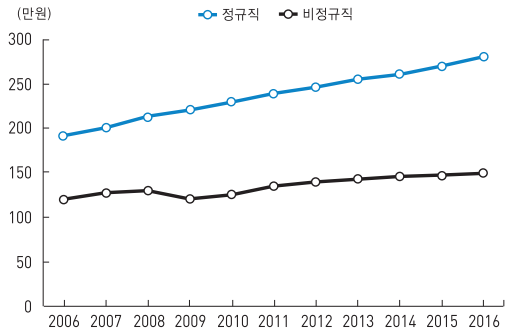



주: 1) 실질 최저임금은 각 국가의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시간당 최저임금액으로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한 미국 달러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간에는 상관성도 높다. [그림 Ⅴ-8]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그림 Ⅴ-8]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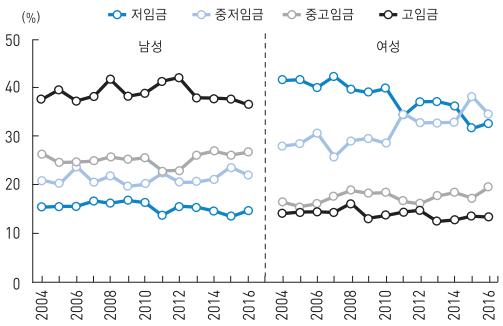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Ⅴ-9]는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임금 분포 추이를 보여준다. 여성 근로자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고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은데 반해, 남성근로자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고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이런 성별 임금 불평등은 지난 10여 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10여 년간 고학력 여성의 대거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도 특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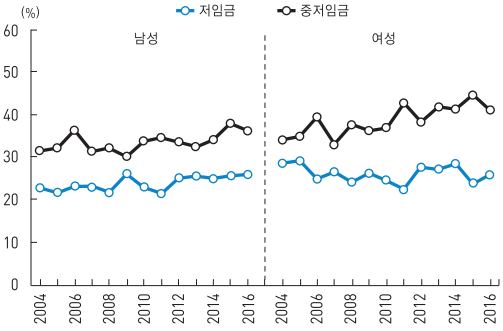
한편, 저임금군을 구성하는 주요 집단인 20대 청년층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연령대의 저임금군에는 남녀 구성비 격차가 뚜렷하지 않다. 이는 지난 3-4년간 남성의 저임금 비중이 증가

[그림 Ⅴ-9]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분포, 2004-2016




주: 1)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 이하, 중저임금은 저임금 초과 중위임금 미만, 중고임금은 중위임금 이상 중위임금의 3/2 미만, 고임금은 중고임금 이상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그림 Ⅴ-10]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성별 저임금 및 중저임금 근로자 비율, 200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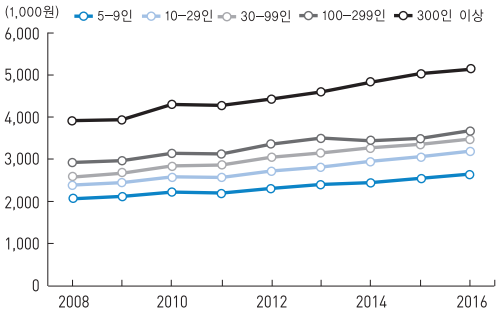

주: 1) 20-29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이하인 근로자의 비율임.
3) 중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초과 중위임금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세를 보인 것에도 기인한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그림 Ⅴ-11]에서 보듯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300인 이

상 사업체와 300인 미만 사업체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그림 Ⅴ-11]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임금, 2008-2016




주: 1) 임금은 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을 기준으로 함.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한 연구(장지연, 2017)에 따르면, 취약 노동자의 분포와 노동시장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고용형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40% 이하 수준인데, 최근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Ⅴ-5〉에서 드러난 이들 간 소득 상승률의 차이는 임금격차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표 Ⅴ-5〉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별 소득상승률과 고용보험 가입률, 2015

(%)

| | 대기업 | | 중소기업 | |
|---|---|---|---|---|
|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 소득상승률 | 76.6 | 73.4 | 46.2 | 36.3 |
| 고용보험가입률 | 99.1 | 67.5 | 90.2 | 39.0 |

주: 1) 소득상승률은 2001년 대비 2015년 실질근로소득 상승률임.
출처: 장지연, 2017.

## 비정규직의 다양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고용 안정성의 주요 지표다. 2016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여성 41%, 남성 26% 정도로 2015년과 큰 차이는 없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가 정체 혹은 소폭 감소한 대신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였다. 남녀 모두 청소년과 고령자의 시간제 근로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남성 청소년은 7%p 가까이 증가하였다.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였는데, 경력단절이 빈번한 20대와 30대 여성의 경우 전년에 비해 각각 1.5%p와 2.8%p 증가하였다.

그런데 통계 지표로만 본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 37.0%, 2011년 34.2%, 2016년 32.8%로 지난 10여 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 체감도와 다르기

〈표 Ⅴ-6〉 성 및 연령집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2016

(%)

| | 남성 | | | 여성 | | |
|---|---|---|---|---|---|---|
| | 한시적 근로 | 시간제 근로 | 비전형 근로 | 한시적 근로 | 시간제 근로 | 비전형 근로 |
| 전체 | 15.5 | 6.5 | 10.7 | 22.6 | 20.6 | 12.2 |
| 15-19세 | 26.8 | 62.6 | 8.2 | 24.7 | 63.7 | 4.9 |
| 20-29세 | 20.1 | 12.4 | 4.8 | 21.1 | 14.2 | 2.9 |
| 30-39세 | 10.6 | 1.8 | 5.4 | 16.5 | 13.9 | 7.0 |
| 40-49세 | 9.4 | 2.1 | 9.2 | 19.1 | 16.0 | 11.2 |
| 50-59세 | 12.5 | 3.8 | 14.0 | 22.3 | 19.8 | 19.5 |
| 60세 이상 | 41.5 | 20.3 | 29.9 | 43.7 | 48.2 | 2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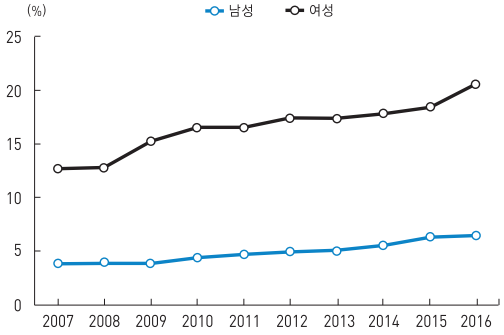
주: 1) 해당집단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해당 유형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 8.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전체를 보기보다는 특정 집단 혹은 특정 형태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용형태별로는 시간제 근로자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반적 감소 추세 속에서도 2016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2년 전에 비해 약 1.1%p 증가했는데,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Ⅴ-12]가 보여주듯이, 남성 역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5%를 넘어 섰지만 여성의 경우 그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7년 12.7%에서 2016년 20.6%로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를 통해 여성 고용률 제고와 경력단절 축소를 유도하려는 정부는 전환형 시간제 등 좋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낮은 임금과 사회복지 적용률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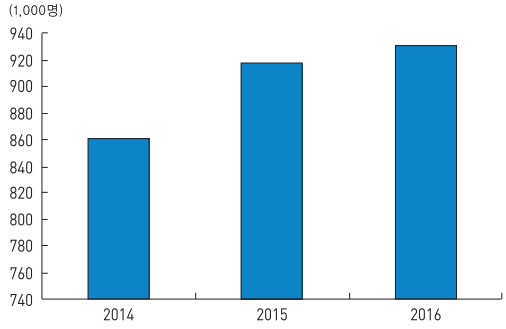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고용의 감소 혹은 정체 추세가 잘 체감되지 않는 것은 공식 통계가 빠르게 다변화하는 취약계층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데에 일부 원인이 있다. 통계로 잘 포착되지 않는 용역, 하도급 등 3자적 고용관계의 확대가 한 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공시제를 시행하였다. 이 공시 자료는 해당 기업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소속 외 근로자의 현황을 보여주는데, 조사 기업의 51%가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270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흥준, 2017). 전체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 수는 2014년 이래 빠르게 증가해 2016년 현재 93만여 명에 이른다(그림 Ⅴ-13).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고용 기업의 정규직이라기보다는 사용 기업의 비정규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임금, 고용안정, 직업안전 등 작업장 환경에서 열위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법적

[그림 Ⅴ-12] 성별 시간제 근로자 비율, 2007-2016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Ⅴ-13] 3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수, 2014-2016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 결과」, 각 연도.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시비도 종종 일어난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고용 관련 통계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착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규모가 50만 명 정도로 집계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탁한 한 조사에서는 15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고용관계의 현실을 반영할 노동통계 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OECD가 매년 발간하는 *Employment Outlook*의 최근호에서는 노동시장 성과를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공급하고(more and better jobs) 노동시장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높이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개인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adaptability and resilience)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한국 노동시장은 양적 성과 그 자체로는 특별히 악화되었다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노동시장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고용량 혹은 실업률 그 자체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포용성과 평등의 제고, 질 좋은 일자리의 확충이다.

한편, 이제까지 현안에 급급해 상시화되고 있는 구조조정이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적응력 제고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노동시장의 적응력과 복원력은 숙련과 복지,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된 정책, 제도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교육, 산업, 노동시장의 맥락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장지연. 2017.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KLI EMPLOYMENT & LABOR BRIEF」 69: 1–8.
정흥준. 2017. “사내하도급 100만 명 시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노동리뷰」 2017년 4월호.

# 취약노동자는 누구인가: 최저임금과 실업보험을 기준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6년 13.6%로 비교 가능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8년 7,530원으로 큰 폭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불평등 완화라는 최저임금 인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근로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 고용보험 가입률은 임금근로자 기준 64.3%, 전체 취업자 기준 47.6%로 낮은 수준이다.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결국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도 40%대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약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1.2%이다.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되는 노동자는 34%에 달한다. 취약노동자의 비율은 여성과 고령자 집단에서 더욱 높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국에서도 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적정한 임금에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이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고 4대 사회보험에는 가입되는 일자리라야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괜찮은 일자리'까지는 안 되지만 '수용할 만한 일자리(acceptable job)'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최소한의 조건에 미달하는 일자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국에는 아직도 법정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허용할 만하지 않은 일자리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실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자리와 연동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있으므로 일자리에만 직접 관련되는 고용보험(실업급여)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되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다른 자료들과 고용보험 행정자료도 이용한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주로 OECD가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고 보조적으로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에서 제공하는 사회정책지표 데이터베이스(Social Policy Indicator Database, SPID)를 사용한다.

##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미만율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고,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최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요구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금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책정하였다. 임금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과 비교해 볼 때, 최저임금액은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13.6%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표 Ⅴ-7).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6년 기준으로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에서 매우 높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다(표 Ⅴ-8).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38.2%, 서비스직 종사자의 28.6%, 판매직 종사자의 21.5%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표 Ⅴ-7〉 최저임금 금액, 상대수준 및 미만율, 2002-2016

| | 최저임금액 (원) | 상대수준(%) | | 최저임금 미만율 (%) |
|---|---|---|---|---|
| | | 평균임금 대비 | 중위임금 대비 | |
| 2002.9.-2003.8. | 2,275 | 31.1 | 39.5 | 4.9 |
| 2003.9.-2004.8. | 2,510 | 32.1 | 40.7 | 5.8 |
| 2004.9.-2005.8. | 2,840 | 34.7 | 44.9 | 8.1 |
| 2005.9.-2006.12. | 3,100 | 36.1 | 44.9 | 9.4 |
| 2007 | 3,480 | 38.0 | 48.6 | 11.9 |
| 2008 | 3,770 | 38.4 | 49.1 | 10.8 |
| 2009 | 4,000 | 39.8 | 51.5 | 12.8 |
| 2010 | 4,110 | 38.6 | 48.7 | 11.5 |
| 2011 | 4,320 | 38.4 | 50.1 | 10.8 |
| 2012 | 4,580 | 39.0 | 49.8 | 9.6 |
| 2013 | 4,860 | 39.7 | 49.7 | 11.4 |
| 2014 | 5,210 | 41.6 | 50.9 | 12.1 |
| 2015 | 5,580 | 43.2 | 53.9 | 11.5 |
| 2016 | 6,030 | 44.8 | 55.9 | 13.6 |

주: 1) 상대수준에서 평균 임금과 중위 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임.
2)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표 Ⅴ-8〉 성 및 연령집단별 최저임금 미만율, 2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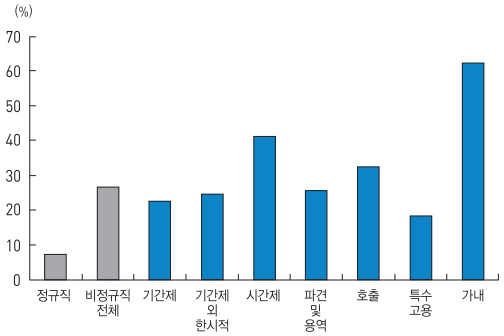
| | 15-19세 | 20-29세 | 3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전체 |
|---|---|---|---|---|---|---|
| 남성 | 51.2 | 13.6 | 3.2 | 6.0 | 33.6 | 9.0 |
| 여성 | 54.4 | 14.3 | 10.8 | 22.6 | 51.3 | 19.4 |
| 전체 | 53.0 | 14.0 | 6.3 | 13.0 | 42.0 | 13.6 |

주: 1)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6. 8.

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7.1%에 그치지만 기간제를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26.9%에 달한다. 특히, 시간제근로자의 41.2%와 가내근로자의 62.2%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 이들의 고용조건이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그림 Ⅴ-14).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나라도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이렇게 높은가?", "한국의 법정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가?"와 같은 질문들이 떠오를 것이다. 먼저, 한 사회의 법정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몇 %에 도달해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법정최저임금의 수준을 비교해 보자. 흔히 그렇

[그림 Ⅴ-14]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만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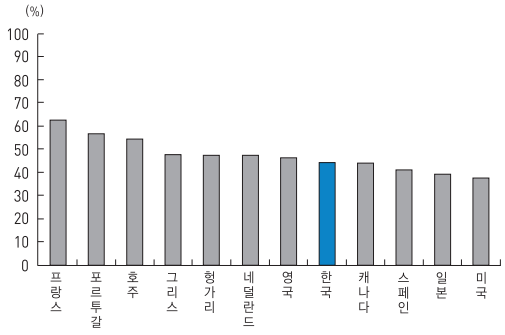

주: 1)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임.
2) 호출은 일일근로자, 특수고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내는 가정 내 고용된 형태를 말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6. 8.

듯이 통계수치의 국가 간 비교는 기준이 되는 조건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중위임금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임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을 포함시키는지도 국가마다 다르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쟁은 피하고 OECD가 발표하는 국가 간 비교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44.2%로 캐나다, 스페인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프랑스, 포르투갈, 호주 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한국보다 최저임금의 상대수준이 낮은 편이다(그림 Ⅴ-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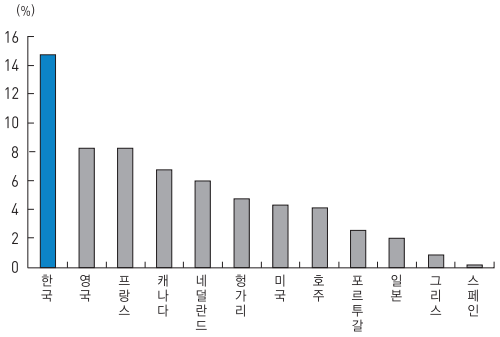
한편, 법정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한국이 14.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그림 Ⅴ-16).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나라는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0% 미만에 그친다. OECD 자료로 볼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간 혹은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최저임금액 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그림 Ⅴ-15] OECD 주요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2013




주: 1) 프랑스, 포르투갈, 호주, 그리스, 헝가리, 영국, 스페인 등은 2010년 자료임.
출처: OECD, *FOCUS on 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 Making them pay*, 2015.

[그림 Ⅴ-16]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미만율, 2013




주: 1) 영국, 프랑스, 헝가리, 호주,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등은 2010년 자료임.
출처: OECD, *FOCUS on 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 Making them pay*, 2015.

## 실업보험 사각지대

한국에서는 사회보험이 소득보장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생산가능연령대의 소득보장은 실업보험(한국의 명칭은 고용보험)으로, 노후의 소득보장은 국민연금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자리가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므로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이란 소득활동이 중단되더라도 기존의 생활수준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장의 수준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급자격의 범위이다. 즉,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인구집단이 없는가의 문제이다. 실업보험의 사각지대는 법적인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한 실업보험 적용대상에서 애초부터 제외된 집단이 법적 사각지대이며, 법적으로는 가입대상이지만 실제로 가입되지 않고 있는 집단이 실질적 사각지대이다.

〈표 Ⅴ-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6년 기준으로 법적 적용대상의 76.4%가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23.6%는 미가입 상태에 있다. 임금근로자 전체로 보면, 64.3%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5.8%는 법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19.9%는 고용보험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에 있다. 고용보험 제외대상에는 공무원이나 교원과 같이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적은 직업집단도 있지만 5인 미만의 농림어업이나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 등 실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취약근로자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전체가 법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그 결과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는 47.6%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표 Ⅴ-9〉 고용보험 적용과 가입 사각지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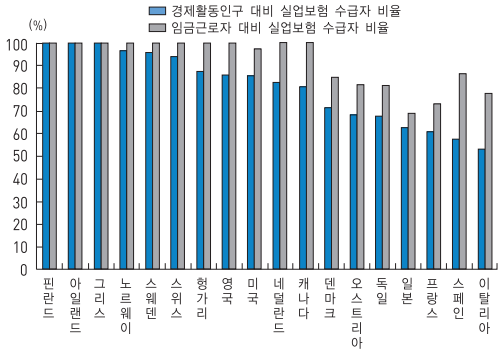
| | 취업자 | | | |
|---|---|---|---|---|
|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 | |
| | | 적용제외 | 미가입 | 가입 |
| | 법적 사각지대 | | 실질적 사각지대 | |
| 근로자수(1,000명) | 6,901 | 3,095 | 3,909 | 12,623 |
| 취업자 내 비중(%) | 26.0 | 11.7 | 14.7 | 47.6 |
| 임금근로자 내 비중(%) | | 15.8 | 19.9 | 64.3 |
| 적용대상 근로자 내 비중(%) | | | 23.6 | 76.4 |

주: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5인 미만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세 이상, 주당 평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 8.

실업보험 사각지대를 논의함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중요하게 고려할 문제이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가입자격이 임금근로자로 한정되므로 이들 중에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사각지대의 규

모를 측정해 볼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통계를 생산하기도 한다. [그림 Ⅴ-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보험 가입자의 비율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일본 등인데, 실업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50-60% 수준에 이른다. 앞서 보았듯이 한국은 취업자 대비 실업보험 가입자의 비율이 47.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직접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일 것이다.

[그림 Ⅴ-17] OECD 주요 국가의 주요 국가의 실업보험 수급자 비율, 2010




출처: The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ocial Policy Indicator (SPIN) Database*(http://www.sofi.su.se/spin/).

공무원과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03년 49.8%에서 2016년 69.6%까지 증가하였으므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인구집단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데, 특히 60세 이상 인구에서는 더욱 낮다(표 Ⅴ-10).

〈표 Ⅴ-10〉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보험 가입률,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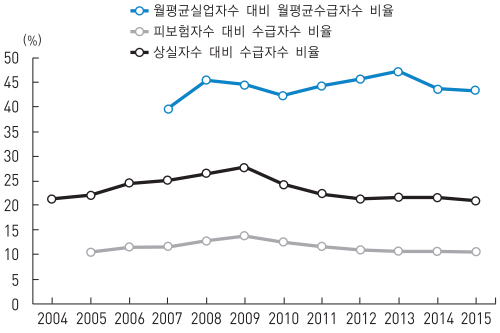
(%)

| | 15-19세 | 20-29세 | 3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전체 |
|---|---|---|---|---|---|---|
| 남성 | 27.5 | 71.1 | 84.2 | 75.2 | 40.6 | 74.9 |
| 여성 | 28.7 | 76.4 | 71.2 | 57.6 | 25.6 | 63.0 |
| 전체 | 28.2 | 73.8 | 79.0 | 67.4 | 33.4 | 69.6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6. 8.

실업보험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의 문제와는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률, 즉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수급률은 실업보험 가입률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기준의 엄격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수로 계산한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40%를 약간 상회한다(그림 Ⅴ-18). 이는 다른 나

[그림 Ⅴ-18] 실업급여 수급률, 200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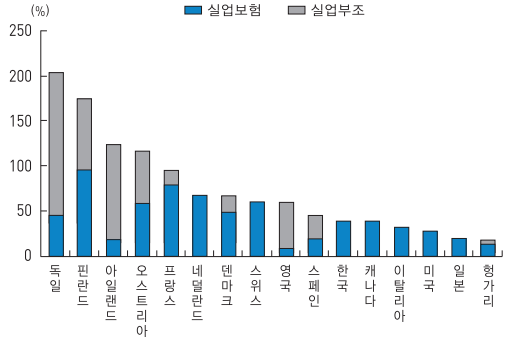



주: 1) 월평균실업자수 대비 월평균수급자수 비율= ((해당 연도 실제 수급자수×평균수급일수)÷365)÷월평균실업자수×100.
2) 피보험자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해당 연도 수급자수÷(전년도말 피보험자수와 현재 연도말 피보험자수의 평균)×100.
3) 상실자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해당연도 수급자수÷해당연도 상실자수)×100.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5 고용보험통계연보」, 201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그림 Ⅴ-19).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은 데는 실업급여 지급기준의 엄격성(구직활동 여부 확인 등)보다 고용보험 적용과 가입의 사각지대가 큰 것이 더 주된 요인이다. 일부 국가에서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보험 외에 저소득층 대상의 실업부조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실업부조를 통해 보호받는 실업자의 규모가 상당하다.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를 통해 소득지원을 받는 급여 수급자의 비율을 모두 고려하면 한국의 소득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Ⅴ-19] OECD 주요 국가의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2014




주: 1) 실업부조는 저소득 취업자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나라가 많음. 따라서 실업보험+실업부조 수급자의 수가 전체 실업자의 수보다 많을 수 있음.
출처: OECD, *OECD SOCR database*(http://www.oecd.org/social/recipients.htm).

## 취약노동자의 구성과 분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를 취약노동자라 정의할 수 있다. 〈표 Ⅴ-11〉은 취약노동자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0%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고 2016년 현재는 11.2%이다. 최저임금과 고용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 노동자의 비율이 66.2%이므로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되는 노동자는 33.8%가 된다.

〈표 Ⅴ-11〉 취약노동자 비율, 2003-2016

(%)

| 연도 | 취약노동자 | | | 그 외 노동자 | 계 |
|---|---|---|---|---|---|
| | 최저임금 미만 만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만 해당 | 둘 다 해당 | | |
| 2003 | 0.4 | 45.7 | 4.5 | 49.5 | 100.0 |
| 2004 | 0.6 | 42.7 | 5.2 | 51.5 | 100.0 |
| 2005 | 1.0 | 39.8 | 7.2 | 52.1 | 100.0 |
| 2006 | 1.3 | 37.3 | 8.1 | 53.3 | 100.0 |
| 2007 | 2.1 | 34.9 | 9.9 | 53.2 | 100.0 |
| 2008 | 1.8 | 34.2 | 9.1 | 55.0 | 100.0 |
| 2009 | 2.4 | 30.8 | 10.3 | 56.4 | 100.0 |
| 2010 | 2.3 | 26.5 | 10.2 | 61.0 | 100.0 |
| 2011 | 2.0 | 25.7 | 9.8 | 62.6 | 100.0 |
| 2012 | 1.8 | 25.3 | 8.5 | 64.4 | 100.0 |
| 2013 | 2.3 | 22.3 | 10.1 | 65.3 | 100.0 |
| 2014 | 2.7 | 20.9 | 10.3 | 66.1 | 100.0 |
| 2015 | 2.6 | 21.6 | 9.8 | 66.0 | 100.0 |
| 2016 | 3.5 | 19.2 | 11.2 | 66.2 | 100.0 |

주: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제외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취약노동자의 비율은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에 특히 높다. 이 연령대 노동자는 최저임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는 비율이 70%를 넘는다. 취약노동자의 비율은 남녀 간에도 차이가 나는데, 남성근로

자의 경우 25.4%에 그치지만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38.7%에 이른다(표 Ⅴ-12). 취약노동자의 성 및 연령별 구성을 보면, 여성이 54.4%를 차지하며 50세 이상이 47.9%를 차지한다. 취약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은 50세 이상 여성이다(표 Ⅴ-13).

〈표 Ⅴ-12〉 성 및 연령집단별 취약노동자 비율, 2016

(%)

| | 15-19세 | 20-29세 | 3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전체 |
|---|---|---|---|---|---|---|
| 남성 | 75.6 | 30.8 | 15.5 | 23.8 | 66.0 | 25.4 |
| 여성 | 79.2 | 25.7 | 28.8 | 46.1 | 81.8 | 38.7 |
| 전체 | 77.6 | 28.2 | 20.9 | 33.3 | 73.4 | 31.3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6. 8.

〈표 Ⅴ-13〉 취약노동자의 성 및 연령집단별 구성비율, 2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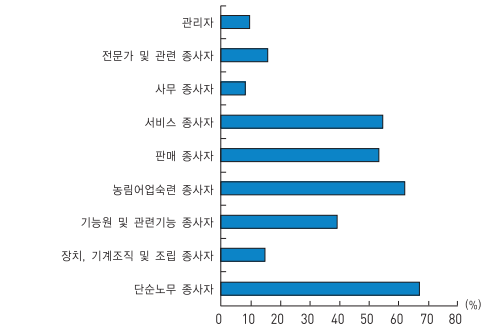
| | 15-19세 | 20-29세 | 3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전체 |
|---|---|---|---|---|---|---|
| 남성 | 1.4 | 8.5 | 14.4 | 9.1 | 12.2 | 45.6 |
| 여성 | 1.9 | 7.7 | 18.2 | 13.0 | 13.5 | 54.4 |
| 전체 | 3.3 | 16.2 | 32.7 | 22.1 | 25.8 | 100.0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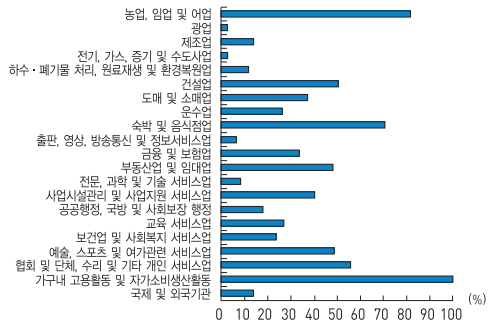
직종별로 취약노동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66.9%, 농림어업직 종사자의 61.8%, 서비스직 종사자의 54.6%, 판매직 종사자의 53.1%가 최저임금과 고용보험 둘 중 적어도 한 가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무직 종사자의 취약노동자 비율은 8.2%로 대분류 직종 중에서 가장 낮다.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14.7%만이 취약노동자인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39.1%가 취약노동자이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취약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이 외에도 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

[그림 Ⅴ-20] 직종, 업종 및 고용형태별 취약노동자 비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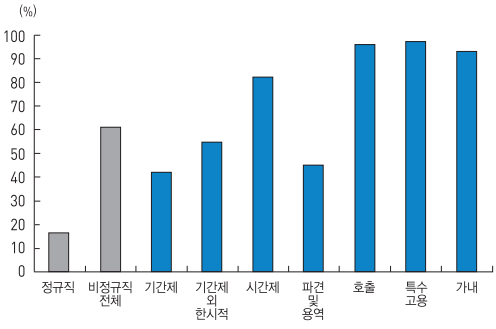
1) 직종




2) 업종




3) 고용형태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6. 8

등에서도 취약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정규직 노동자의 16.6%가 취약노동자인 데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61.2%가 취약노동자이다. 가내근로자와 호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취약근로자 비율이 90%를 넘는다(그림 Ⅴ-20).

## 맺음말

일자리다운 일자리의 최소한의 기준은 최저임금 준수와 사회보험 가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2016년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3.6%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2018년 최저임금액은 7,530원으로 결정되어 비교적 큰 폭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근로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의 법적 적용대상 대비 실제 가입 노동자의 비율은 2016년 기준 76.4%로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애초에 자영업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좁게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업부조 제도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도 역시 40%대에 머물고 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생계를 지원한다는 의미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약노동자는 2016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11.2%이다.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되는 노동자는 34%에 달한다. 취약노동자의 비율은 여성과 50세 이상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직종과 업종,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 외환위기 후 20년,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권현지 (서울대학교)


- 외환위기 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장기근속 체제의 와해, 고용과 임금의 유연화,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 노동자 조직률의 하락 등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규범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 근속 추세로 본 노동시장의 외환위기 전후 변화는 현격하지 않다. 다만, 45세 이하 집단의 근속년수가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최근에 나타난다. 경력직 시장의 개방과 상시적 고용조정, 젊은 근로자들의 이직성향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입직자들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 여성의 근속은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데, 여성의 고용은 남성에 비해 경기흐름에 훨씬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
- 연령집단별 임금 격차도 외환위기 후 오히려 증가하여 유지되는 추세이므로 연공서열적 임금 관행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외환위기 후 노동시장은 패러다임적 변화보다 기존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고 확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
- 대졸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노동이력에서 외환위기 이후 공식 고용의 증가, 노동시장 정착까지의 기간 증가,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의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노동시장 진입 규모 및 진입 시 고용형태, 일자리 유지 기간 등에서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최근 격차가 확연히 줄고 있다. 여성의 수적 참여 확대와 남성의 불안정성의 증가로 인한 수렴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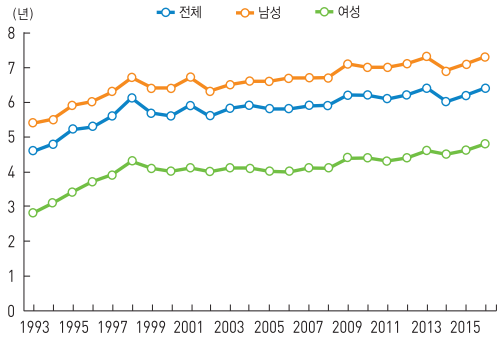

지난 1997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아시아 외환위기 후 20년이 흘렀다. 유례없는 호황, 개방과 해외직접투자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맞이한 위기는 구제금융을 제공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와 함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초래했다. 특히, 표적이 된 노동시장은 그 규범이 크게 변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근속 체제의 와해, 고용과 임금의 유연화,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 노동자 조직률의 하락 등이 자주 언급되는 규범 변화의 결과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넘어간 듯 보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후 변화된 노동시장의 성격을 확립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은 지난 20년간 두 번의 중대한 경제위기를 경험한 한국의 노동시장이 일자리 관행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 혹은 지속성을 보여주는지 추적한다. 아울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5년 주기 대졸 코호트들의 졸업 후 10년간 노동시장 이력을 남녀로 구분하여 총량적 수준에서 추적한다. 이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의 경험을 통해 경제위기를 전후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유추해 보려는 시도이다.

## 근속 추세로 본 평생직장 관행의 변화

외환위기 후 고용유연화가 가속화되면서 평생직장이 사라졌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런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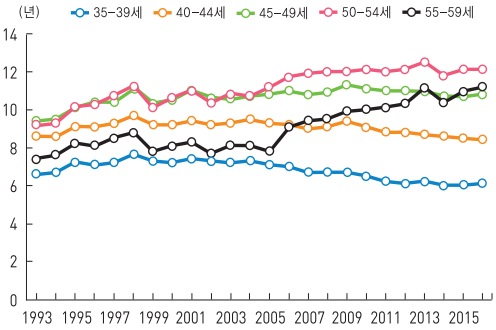
[그림 Ⅴ-21] 임금근로자의 성별 평균 근속년수, 1993-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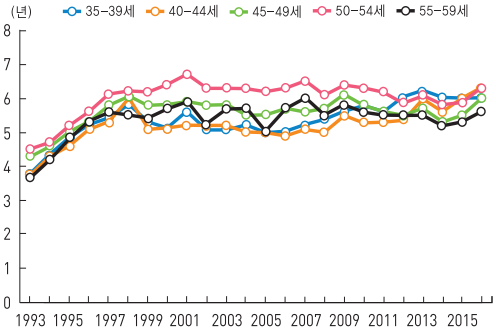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Ⅴ-22] 남녀 임금근로자의 연령집단별 평균 근속년수, 1993-2016

1) 남성




2) 여성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러한 인식은 통계적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추측에 근거할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 안정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인 근속년수를 통해 위기 전 실재했던 평생직장의 관행이 위기와 함께 사라진 것인지 그 진위를 살펴보자.

우선, [그림Ⅴ-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근속년수는 1990년대 초반 이래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장기근속 관행의 주된 대상이자 생애주기상 경력단절의 위험이 적은 남성에게서 위기 후 근속기간이 줄어들었다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남성보다 근속기간은 짧지만, 여성도 같은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Ⅴ-22]는 경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35-59세 근로자 집단의 근속 추세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남성의 경우 근속년수의 추세가 2005년까지는 일관되지 않다가 2005년 무렵부터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5년 이후 4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근속년수 증가 추세가 관찰되지만 35-44세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근속년수의 감소 추세가 발견된다. 특히, 35-39세 연령층에서는 감소세가 더 일관되고 뚜렷하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2005년경까지 45세 이상 연령층에서 근속년수의 하락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들 중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도 임금노동자로 살아남은 노동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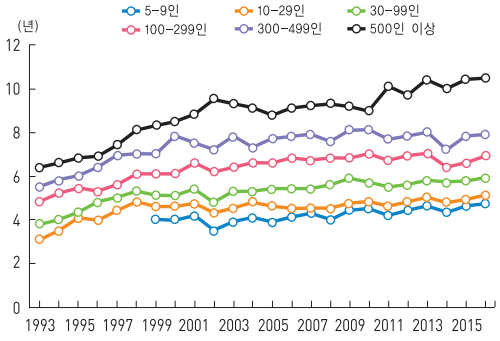
비중이 높아서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중도 탈락한 45세 이상의 노동자는 아예 임금노동자군을 이탈한 데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별도의 분석을 요구한다. 55세 이상 연령층의 최근 근속년수 증가는 그 부분적 이유로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35-44세 연령층의 근속년수 감소 경향은 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직장이동의 일상화, 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첫 진입한 노동자들에게 확산된 비정규 고용형태의 증가, 고용안정과 헌신을 교환하는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s)의 약화, 기업의 경력자 선호에 따른 노동자의 이직성향 증가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성의 연령대별 근속 추세는 남성에 비해 일관성이 없고 부침도 심하다.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이 더 빈번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 노동시장이 경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우 1990년대 초중반의 호황 및 고용평등법 등을 만들어낸 여성운동의 고양과 함께 외환위기 직전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근속년수의 빠른 증가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위기 이후에는 근속년수에 상당한 부침이 관찰된다. 다만, 가족재생산의 의무에서 벗어난 50-54세 연령층은 예외이다.

흥미로운 점은 35-44세 여성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근속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같은 연령대 남성의 근속이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고학력 여성의 증가,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산업의 성장, 배우자인 남성의 고용안정성 저하 등이 이러한 현상을 낳게 한 요인이다.

종합해 보면,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이 장기고용의 나라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강력했던 장기고용 관행이 위기로 인해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다만, 위기 이전 증가 추세이던 근속의 안정성이 위기를 맞아 그 추세가 꺾였고 비정규 고용의 확대, 상시적 고용조정, 경력직 노동시장의 확대로 인한 노동력 이동성의 증가 등으로 젊은층의 고용안정성 혹은 고용유지율이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23]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1993-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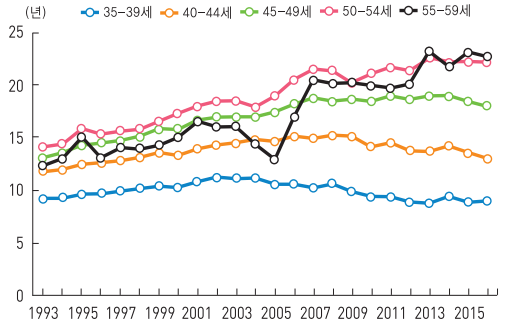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혹자는 위기 이전 전체적으로 강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대기업에서는 보편적이었던 장기고용 관행이 위기 이후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 [그림 V-23]을 보면 그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우선 위기 전인 1990년대 초중반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년수 차이가 크지 않다. 오히려

지난 20년간 그 격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대기업의 근속기간 증가가 중소기업에 비해 더 뚜렷하다.

[그림 Ⅴ-24] 500인 이상 사업체 종사 남성 임금근로자의 연령집단별 평균 근속년수, 1993-2016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Ⅴ-24]는 5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근로자 근속년수 추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5세를 전후로 근속년수의 증감 추세가 대비된다.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35-39세 연령층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속년수 차이가 크지 않지만 4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는 대기업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중소기업 근로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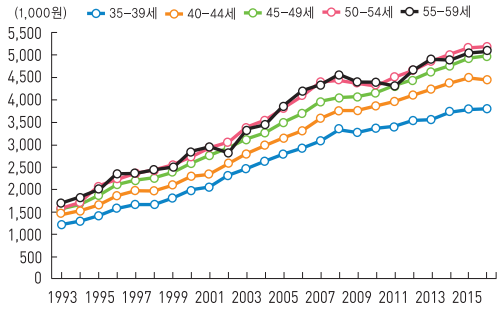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첫째, 「한국노동패널」 2014년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3.0%에 그치고 전체 취업자의 10.6%에 불과하다. 대기업 노동시장은 장기근속 관행을 소멸시켰다기보다 포함되는 노동자의 규모를 현저히 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대기업 부문에서도 경력 고조기인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노동력 사이에는 기업 간 이동이 더 활발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편으로 경제위기 이후 고용 및 구조 조정을 관찰하며 성장한 젊은 노동력이 기업에 대한 태도와 이직성향을 변화시킨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력사다리의 말단에서만 진입을 허용했던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이 최근 경력자에게 중간입직을 개방하는 등 일부 관행을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기근속을 전제하는 근속 및 연령 기반 보상체계가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할 만하다. [그림Ⅴ-25]는 대졸 이상 학력자의 월급여 총액을 성 및 연령대별로 나누어 그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흥미롭게도 한국에서 내부노동시장이 확산 추세에 있었다고 평가되는 1990년대 초중반과 비교할 때 2015년 현재 연령대별 명목임금의 차이는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대졸자 중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연령대별 임금 격차가 더 크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누적 임금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임금 연공성에 큰 변화가 관측되지는 않는다. 또 최근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연공성은 다소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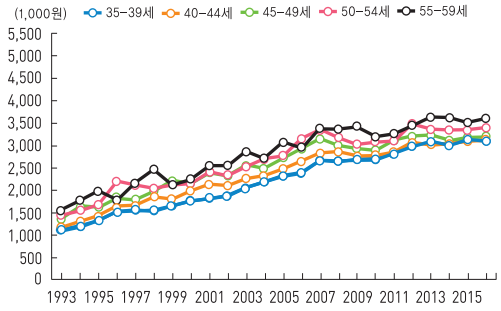
이렇게 보면, 위기 이후 계속 개인연봉제 등 성과기반 임금이 강조되고 도입되어 왔지만 일자리

[그림 Ⅴ-25] 4년제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의 성 및 연령집단별 월급여총액, 1993-2016

1) 남성




2) 여성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월급여총액=월정액급여액+월초과급여액.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가 안정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연공중심 보상체계의 근간이 위기 후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기 후 가장 뚜렷한 변화는 내부노동시장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뀐 데 있다기보다는 내부노동시장이 적용되는 노동자가 현격히 줄어든 데 있다. 즉, 일자리와 그에 따른 임금 안정성을 누리는 근로자의 규모가 추세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아래 대졸 코호트별 노동이력 패턴으로 살펴보자.

## 대졸 코호트별 노동이력 패턴

이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 자료를 1990년대 이후 5년 주기로 대졸자 코호트를 구분하고 코호트별 경험의 차이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Ⅴ-14〉은 각 코호트의 첫 일자리 유지기간 중위값을 성별로 제시한 것이다. 경제 팽창기였던 1990년대 초반 대졸 남성 코호트가 70.5개월간 첫 일자리를 유지한 데 비해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코호트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첫 일자리 유지기간이 짧다. 2000-2004년 코호트는 45개월, 2005-2009년 코호트는 33.5

〈표 Ⅴ-14〉 1990-2014년 4년제 대학 남녀 졸업자의 대학 졸업 코호트별 첫 일자리 유지기간

(개월)

| 대학 졸업 코호트 | 남성 | | | 여성 | | |
|---|---|---|---|---|---|---|
| | 전체 | 정규직 | 비정규직 | 전체 | 정규직 | 비정규직 |
| 1990-1994 | 70.5 | 71.0 | 14.0 | 29.0 | 33.0 | 19.0 |
| 1995-1999 | 53.0 | 64.0 | 22.5 | 22.5 | 25.0 | 17.0 |
| 2000-2004 | 45.0 | 75.0 | 19.0 | 32.5 | 49.0 | 23.5 |
| 2005-2009 | 33.5 | 48.0 | 19.5 | 25.0 | 35.5 | 24.5 |
| 2010-2014 | 17.0 | 22.0 | 17.5 | 10.5 | 22.0 | 10.0 |
| 1997-1998 | 68.5 | - | - | 23.0 | - | - |
| 2007-2008 | 30.0 | - | - | 27.0 | - | - |

주: 1) 유지기간은 중위값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데이터」, 원자료, 2017.

개월, 2010–2014년 코호트는 17개월 등 일자리 유지기간이 줄어드는 폭도 가파르다.

한편, 여성은 남성만큼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지 않는다.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여파로 1995–1999년 코호트의 첫 일자리 유지기간이 그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이후 10년간의 코호트에서 회복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2010–2014년 코호트의 첫 일자리 유지기간은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 여성의 일자리 안정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상황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최근 5년간 통계는 첫 일자리 유지기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여성도 이전에 비해 근속기간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남성 일자리의 안정성이 낮아진 것에서 찾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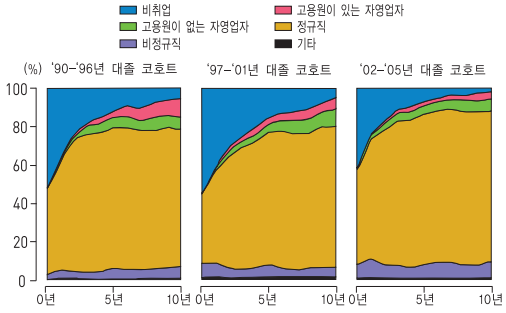
이렇게 보면 대졸 신규 진입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성은 지난 20년간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학진학률이 70%에 육박하면서 대졸자 내부의 변이가 커진 점, 정규직 진입자의 일자리 유지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보아 노동시장 미스매치 등으로 직장이동 성향이 강해진 점, 대기업의 대졸자 신규채용이 줄고 경력자 선호가 높아진 점 그리고 무엇보다 비정규직으로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대졸자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표 Ⅴ–14〉에서 2010–2014년 코호트의 경우 남녀 모두 첫 일자리 유지기간 전체 평균이 정규직 평균보다는 비정규직 평균에 가깝게 나타나 비정규직 확대 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아래 [그림Ⅴ–26]은 4년제 대학 졸업 이후 10년의 노동이력을 코호트별로 구분해 통합적 수준에서 그린 것이다. '크로노그램'으로 불리는 이 그래프는 시점별로 노동이력을 구성하는 각 상태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데에 효과적이다. 단, 각 개인의 노동이력을 추적할 수는 없다는 한계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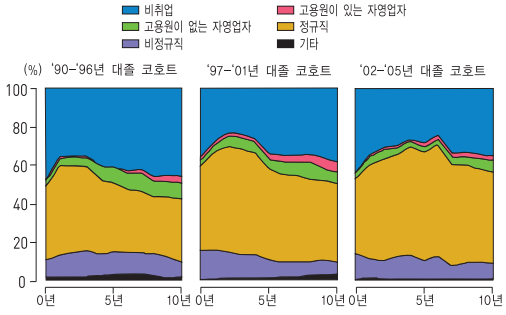
[그림Ⅴ–26]의 남성 그래프가 보여주는 사실은

[그림Ⅴ–26] 1990–2005년 4년제 대학 남녀 졸업자의 대학 졸업 코호트별 졸업 후 10년간 노동이력 분포

1) 남성




2) 여성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데이터」, 원자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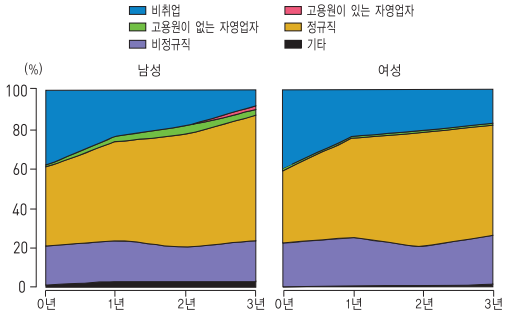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최근으로 올수록 임금노동자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대졸자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둘째, 졸업 시점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 간 간격을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최고점에 다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특히, 졸업 시점이 경제위기와 겹친 1997-2001년 코호트의 경우 임금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성공하지 못한 비율도 높았다. 셋째, 남성 중에도 비정규직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편, 여성 코호트의 노동이력을 비교한 결과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노동시장 참여율과 임금노동자로서의 참여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둘째, 여성 대졸 인력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여 수준은 남성에 비해 일관되게 그리고 현저하게 낮다. 셋째, 일정 시점을 지나며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낮아지는 경력단절의 패턴은 여전하다. 다만, 그 정도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크게 완화되고 시점도 지연되고 있다. 넷째, 위기 시 비정규직 진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 여파로 2002-2005년 코호트는 비정규직 진입 비중이 경제위기 시와 비슷할 정도로 높았다. 또한 남성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높다. 그런데 비정규직 진입이 비단 경제위기 이후의 새로운 현상이라 보기 힘들다는 점도 보여준다. 1990년대 초반 대졸자 코호트 중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가 이미 상당 규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남성도 그렇다. 이렇게 보면 위기는 전에 없던 비정규 고용을 만들어냈다기보다 이미 존재했던 비정규 고용을 전면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10년간의 노동이력을 추적해 관찰한 [그림Ⅴ-26]에서 가장 최근 졸업자의 졸업 연도는 2005년이다. 그런데 청년노동시장의 어려움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근 5-6년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한층 짧은 기간이지만 졸업 후 3년을 추적한 최근 졸업자의 이력을 [그림Ⅴ-27]과 같이 분석하였다.

지난 2010-2012년 졸업자 코호트의 3년간 노동이력을 살핀 이 그래프는 앞의 그래프와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짧은 기간, 즉 3년의 이력에 불과하므로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을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진입 시점 초기만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근소한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졸업부터 일자리 정착까지의 기간, 노동시장 참가율, 비정규직 비중 등에서 남녀 간 차이가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20% 정도의 대졸자가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며

[그림Ⅴ-27] 2010-2012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성별 졸업 후 3년간 노동이력 분포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데이터」, 원자료, 2017.

이 비율은 3년간 큰 변동이 없다. 노동시장 경력 초기 경험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줄어든 데에는 대졸 여성의 참여가 양적으로 개선된 것과 더불어 대졸 청년 남성의 일자리 불안정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의 전반적인 불안정화가 이러한 남녀 간 수렴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인의 노동이력을 추적해 보면 1990년대 초반에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한 남성 코호트의 경우 대체로 10년간 정규직을 유지했던 데 비해 1990년대 후반 코호트의 경우 정규직으로 시작했다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늘어난다. 또한, 남녀 모두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으로 이력을 시작한 경우는 증가했지만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희소하다. 비정규직 진입의 증가 추세는 비관적 생애 직업 전망을 갖게 되는 노동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 맺음말

이 글은 한국 사회, 특히 노동시장에 갑작스레 몰아닥친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20년이 지난 2017년 오늘의 시점에서 그간 노동시장의 일자리 관행이 어느 정도나 근원적으로 변화했는지를 몇 가지 통계로 살펴보았다. 강조할 점은 경제위기가 예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관행을 초래하고 확산했다기보다는 과거 노동시장에 존재했던 불안정성을 규범화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도 내부노동시장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강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환위기가 초래한 것은 이런 내부노동시장의 전면 해체는 아니었다. 그보다 내부노동시장의 적용대상을 크게 축소하면서 소수의 내부와 다수의 외부를 구분 짓고 내외부간 격차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7 Income & Consumption

Korean Social Trends 2017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Ⅵ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166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김기호 | 한국은행, 박정수 | 서강대학교 175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적 영향 유승동 | 상명대학교 183

#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 최근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더 둔화되고 있다.
- 최근 완화 추세에 있던 소득불평등도가 2016년에 심화 추세로 바뀌었다.
-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소득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 대부분의 연령집단과 소득계층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비중은 2016년에 증가하였다.
- 저소득층의 의식주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 조세, 연금,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약 10%가 부채와 관련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 등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진단해 본다. 2013년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둔화가 지속되고 2016년부터는 중국의 무역보복과 국내정치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가계소득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계층과 연령집단, 가구특성 등에 따라 가구의 소득과 소비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1인가구를 포함한 전국 전체 가구이며, 분석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6년까지이다. 소득과 소비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개념을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명목소득과 명목소비를 각각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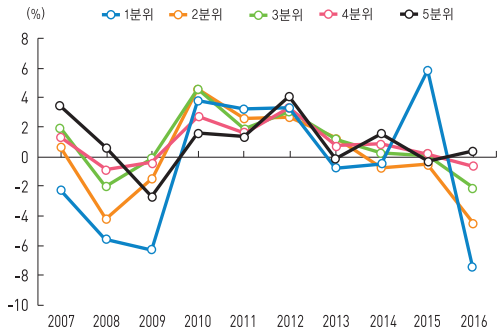
##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은 가구의 생활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는 5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소득집단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1)]

1) 이 글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동일 가구의 실질소득 변화를 살펴볼 수는 없다. 그 대신 각 소득집단의 평균 실질소득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소득집단 간 소득 변화의 차이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그림 Ⅵ-1]은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소득분위별로 보여준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2012년 기간에는 평균 3%대를 회복하였으나 그 후 2013-2016년 기간에는 평균 1% 이하로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Ⅵ-1]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2007-2016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추이는 경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기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실질소득이 증가하였다. 이 기간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평균 증가율은 3.4%로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평균 증가율 2.4%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였다. 특히, 2013-2016년 기간 동안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평균 증가율은 -1.0%로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평균 증가율 0.3%를 하회했을 뿐 아니라 더 급격한 둔화 추이를 보였다. 이는 금융위기 시기에 이어 경기 침체기에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1년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Ⅵ-1〉에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한 각 소득분위의 소득비를 제시하였다. 소득비 산출에는 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도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표준화한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2006-2016년 기간

〈표 Ⅵ-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06-2016

| 연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 2006 | 35.9 | 67.6 | 91.4 | 119.4 | 185.6 |
| 2007 | 35.1 | 66.9 | 90.7 | 119.1 | 188.1 |
| 2008 | 34.6 | 67.0 | 90.1 | 118.9 | 189.3 |
| 2009 | 34.2 | 66.9 | 91.2 | 119.6 | 188.2 |
| 2010 | 34.3 | 68.2 | 91.5 | 119.2 | 186.7 |
| 2011 | 34.6 | 68.4 | 91.8 | 118.5 | 186.6 |
| 2012 | 35.0 | 68.2 | 91.9 | 119.6 | 185.3 |
| 2013 | 35.4 | 68.9 | 92.4 | 119.6 | 183.6 |
| 2014 | 35.8 | 69.1 | 91.8 | 119.1 | 184.1 |
| 2015 | 37.3 | 70.0 | 92.5 | 118.0 | 182.1 |
| 2016 | 35.2 | 69.1 | 92.1 | 118.7 | 184.8 |
| 2006-2016 평균 | 35.2 | 68.2 | 91.6 | 119.1 | 18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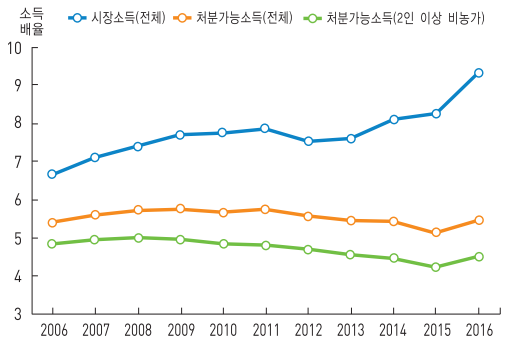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비농어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소득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동안 전체 평균 소득 대비 1분위 소득비는 35.2이고 5분위 소득비는 185.8이다. 2009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1분위와 2분위의 소득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5분위의 소득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그 추세가 역전되었다.

[그림 Ⅵ-2]는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1분위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을 보여준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기 위해 세전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까지 상승하다가 2012년에 하락한 후 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06년 5.4배에서 점차 상승하여 2009년 최고 5.8배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여 2015년에는 5.1배로 낮아지다가 2016년에 다시 5.5로 급등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었으나 2016년에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둔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러한 불평등 완화 효과를 상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를 2인 이상 비농가 가구와 전체 가구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2인 이상 비농가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이 전체 가구보다 낮은데, 이는 1인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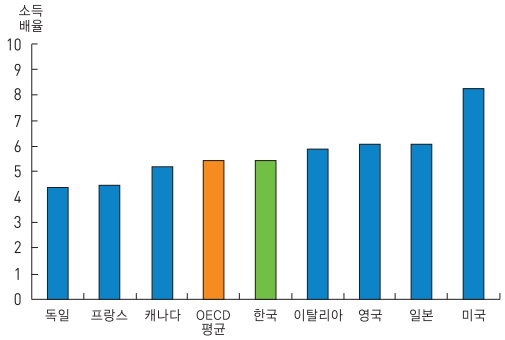
[그림 Ⅵ-3]은 OECD 주요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 일본, 영국보다는 낮고 프랑스, 독일보다는 높다.

[그림 Ⅵ-2] 소득 5분위 배율, 2006-2016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Ⅵ-3] OECD 주요 국가의 소득 5분위 배율, 2014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2) 한국은 2016년 자료, 미국과 영국은 2015년 자료, 일본은 2012년 자료이며, 그 외 국가는 2014년 자료임.
출처: 통계청, 「2016년 소득분배지표」, 보도자료, 2017. 5.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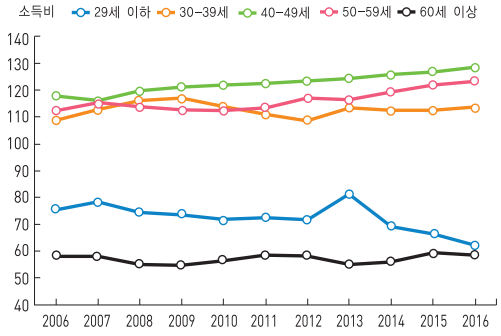
## 가구주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이번에는 가구소득의 변화가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가구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Ⅵ-4]는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소득비를 보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소득비가 평균 이하 수준이며 특히 은퇴자가 다수 포함된 60대 이상은 더 낮다. 2006년-2016년 기간 동안 30대와 60대 이상의 소득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그러나 20대 이하의 소득비는 2006년 75.6에서 2016년 62.0으로 크게 낮아졌고, 같은 기간 40대와 50대의 소득비는 각각 117.8과 112.4에서 128.6과 123.2로 높아졌다. 이처럼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소득비 격차는 점차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 대상 신규 일자리 창출 부족과 기존 고용이 보장된 중·장년층의 임금 경직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력집단 간에는 소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고졸 집단과 전문대졸 집단의 소득비는 2006년 100.7과 113.4에서 2016년 101.0과 110.8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졸 집단과 중졸 이하 집단의 소득비는 2006년 139.8과 62.1에서 2016년 134.0과 52.4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대졸 집단 소득비의 하락은 산업에 필요한 교육수준별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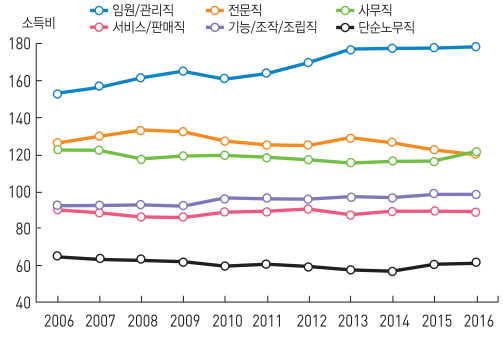
임금은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과 직업에 적합한 인력의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림 Ⅵ-5]는 전체 평균 소득 대비 직업집단별

[그림 Ⅵ-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2006-2016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Ⅵ-5]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06-2016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업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임원·관리직의 소득비는 상승한 반면 전문직의 소득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능·조작·조립직과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의 소득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숙련 단순노무직의 소득비는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직종 간 소득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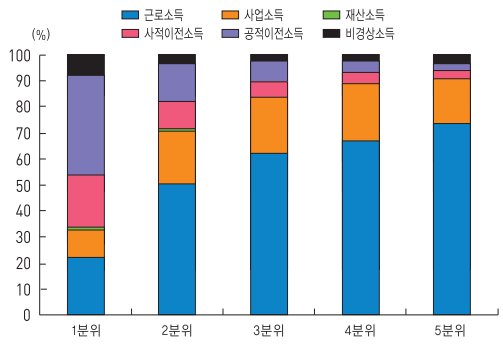
최근 고령화로 인해 1인가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기준 1인가구의 소득분위별 구성 비율을 보면,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81.0%에 달하여 1인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중 30대, 40대, 50대 가구주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은 2006년 42.7%에서 2016년 53.5%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20대 가구주의 비중은 13.0%에서 7.2%로 줄어들었다. 전체 평균 소득 대비 1인가구 소득비는 2007년 46.1에서 2014년 42.3으로 점차 하락하다가 2016년에 45.9로 다소 회복되었는데, 이는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득의 원천은 다양하고 원천별 구성도 변화해 왔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전소득은 가족 간 이전과 민간연금 등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2006년과 2016년 사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2.6%에서 65.1%으로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23.1%에서 19.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두 소득 비중의 합은 큰 변화 없이 2016년 84.3%에 이른다.

[그림 Ⅵ-6]에 제시된 2016년 기준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각각 22.1%와 50.5%에 불과하나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경우에는 각각 66.9%와 73.4%에 달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06년 이후 저소득층은 근로소득 비중이 낮아진 반면 고소득층은 그 비중이 높아졌다. 사업소득 비중은 소득계층 간에 유의

[그림 Ⅵ-6]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6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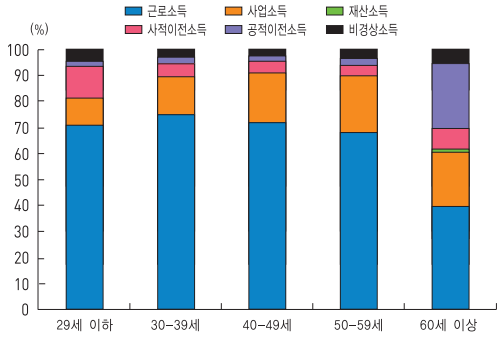
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공적이전소득은 1분위 소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2006년 11.7%에서 2016년 38.0%로 늘어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여기에는 1분위 소득계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급 대상 증가와 최근 기초노령연금 증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Ⅵ-7]의 2016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원천 구성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비중은 낮고 사업소득 비중은 높다. 20대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12.1%를 차지하고 60대 이상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25.1%를 차지해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구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소득이 기여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성 배우자 소득 비중은 2006년 13.4%에서 2016년 16.1%로 크게 높아졌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여성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가 높다. 지난 10년간 모든 소득계층에서 여성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1분위의 여성 배우자 소득 기여도는 2006년 5.8%에서 2016년 6.9%로 증가하였고, 5분위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6.2%에서 20.5%로 증가하였다.

여성 배우자의 취업률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20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50대는 2006년 27.1%에서 2016년 42.2%로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은 같은 기간 6.3%에서 19.3%로 증가하였다. 취업 여성 배우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직 비중은 2006년 40.6%에서 2016년 30.3%로 낮아진 반면 전문·관리직 비중과 사무직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14.1%와 15.4%에서 23.3%와 19.9%로 높아져 여성 근로자의 직종이 보다 고소득 직종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Ⅵ-7]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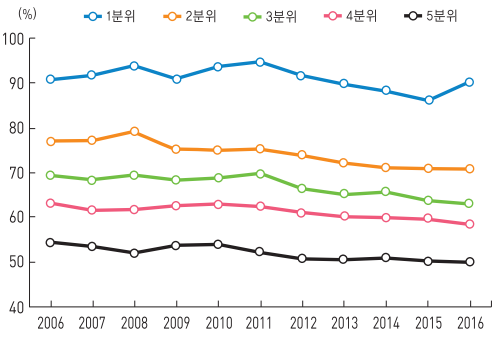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6.

## 가구지출과 가계수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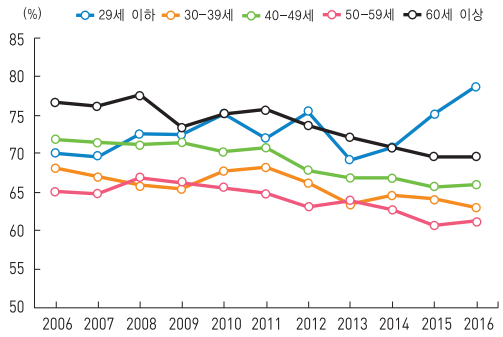
가구소득은 가구지출의 재원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가구지출도 증가한다. 그러나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2011년 70.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66.0%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

[그림 Ⅵ-8]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06-2016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1분위 가구 중 소비지출 비중이 200%가 넘는 가구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Ⅵ-9]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06-2016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난다.[2] [그림 Ⅵ-8]은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비중이 낮고 2011년 이후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특히, 1분위 소득계층의 감소폭이 크다. 한편, 2016년에 1분위 소득계층의 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한 것은 실제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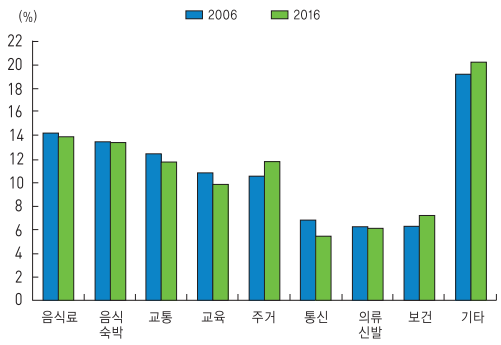
[그림 Ⅵ-9]는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을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20대와 60대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 30대, 50대 가구의 순으로 높다. 2011년 이후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의 가구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20대의 소비지출 비중이 최근 증가한 것도 소비성향이 높아졌을 가능성보다는 2011년 이후 실질소득 증가 둔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Ⅵ-10]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1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료, 음식 및 숙박, 교통, 주거 지출이 각각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과 2016년 사이 주거지출 비중이 10.5%에서 11.8%, 보건지출 비중이 6.3%에서 7.3%로 각각 증가하였고, 이 외 항목들의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였다.

[그림 Ⅵ-11]에는 2016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소비지출 중 의식주지출 비중은 40대가 28.1%로 가장 낮고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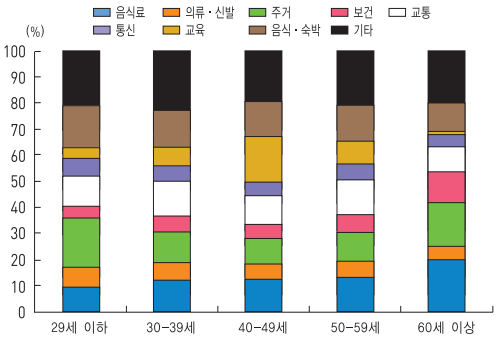
2)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므로 여기에 제시된 소득 대비 지출비중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분위별 소비성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평균소비성향 대신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을 제시한 이유는 1분위의 경우 분모가 되는 가처분소득이 적어 평균소비성향 추이가 매우 불안정적으로 계산되어 소비지출비중의 변화추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분위에 있어서 평균소비성향은 안정적이며 역시 2011년 이후 연도별 하향 추이가 관찰된다.

[그림 Ⅵ-10]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06, 2016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 2016.

[그림 Ⅵ-11]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비지출구성, 2016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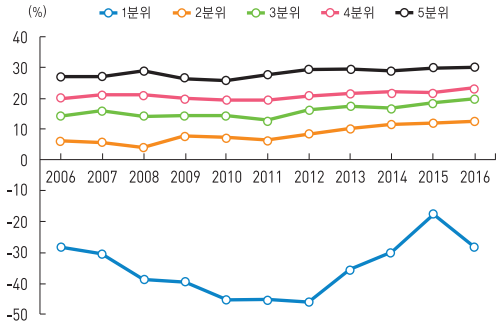
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35.9%와 41.9%로 매우 높다. 보건지출 비중은 60대가 11.8%로 다른 연령집단의 평균인 5.9%보다 두 배가량 높다. 교육지출 비중은 대체로 학령기 자녀를 둔 40대가 17.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의식주지출 비중은 2006-2016년 기간 동안 5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1분위와 2분위의 경우에는 각각 43.9%와 36.3%에서 48.2%와 39.4%로 증가하여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의식주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구소득의 일부는 조세 또는 사회보장과 같이 소비와 상관없는 항목에 지출된다. 가구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의 비율은 2006년 16.9%에서 2011년 18.3%로 증가한 후 2016년 17.8%로 약간 감소하였다. 비소비지출 중 경상 및 비경상 조세를 포함한 조세부담률은 2006년 2.3%에서 2016년 2.8%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연금과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2.3%에서 2.7% 그리고 2.0%에서 2.9%로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은 2016년 기준 2분위가 1.6%, 3분위가 2.1%, 4분위가 3.1%, 5분위가 4.7%로 나타나 조세의 누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의 입장에서 소득이 지출보다 크면 흑자를 볼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를 볼 것이다. 소득과 지출의 차이를 다시 소득으로 나눈 것을 가계흑자 비율로 정의한 후 이 비율이 소득분위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Ⅵ-12]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2010년과 2016년 사이 2-5분위 소득계층은 흑자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한 반면 1분위 소득계층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가 해소되다가 2016년에 다시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Ⅵ-12]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흑자비율, 2006-2016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가계흑자비율은 가구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임. 1분위의 경우 월소득 10만 원 이하 가구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마지막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6년 현재 전체 가구의 64.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이 높은데, 1분위의 경우 이 비율이 31.8%에 불과하지만 5분위의 경우에는 80.9%에 이른다. 이는 경제력에 따른 금융 접근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136%이며, 1분위 144%, 2분위 136%, 5분위 141% 등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2-2016년 기간 동안 9.9% 증가하였는데,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순자산은 각각 21.6%와 19.0%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순자산은 각각 11.2%, 3.8% 증가에 그쳤다. 전체 순자산에서 소득계층별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결과, 1분위는 7.3%이고 5분위는 44.1%로 두 집단 간 순자산 배율은 6.1배로 나타난다. 이는 2012년 7.1배에서 2015년 5.9배로 낮아졌다가 2016년에 다시 높아진 수치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156.8%에서 2016년 165.4%로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 증가가 부채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부채 관련 위험집단으로는 저소득층, 40대, 자영업자로 확인되며, 2015년 기준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약 10%가 부채와 관련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유경원, 2016).

## 참고문헌

유경원. 2016. "계층별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의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16」.

#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김기호(한국은행)
박정수(서강대학교)

- 한국의 연령별 임금소득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비해 정점 도달 연령이 낮고 은퇴 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 선진국에서는 60세 이후 소비가 증가하지만 한국에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 최근 들어 60세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폭이 과거에 비해 커졌으며, 저소득 가구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었다.

개인의 경제활동은 일생 동안 그 모습을 달리한다. 아동기에는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서 보내다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사회에 나와 취직을 하고 은퇴하기까지는 생산활동에 전념하며, 은퇴 이후에는 생산활동을 그만 두게 된다. 생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유년기와 청년기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활동에 치중하게 된다. 생의 중반부에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축적하고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하게 된다. 생의 후반부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이나 축적된 자산을 처분하여 삶에 필요한 소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생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일컬어 '생애소득가설'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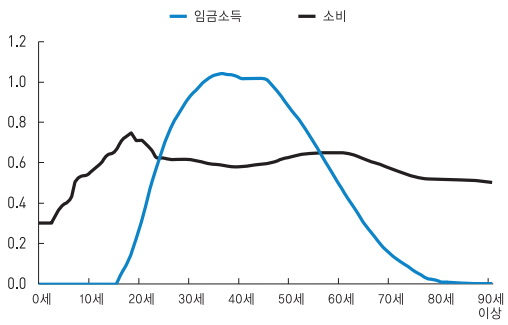
생애 소득과 소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과 소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소비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족 단위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수준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되 가구원 중에서 특히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생애주기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국민계정체계와 일관성을 지니도록 설계하여 작성하고 있는 NTA(National Transfer Accounts)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간 생애 소득과 소비 수준을 비교한다. 아울러 한국 가계에 대한 소득과 소비를 조사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저소득 가구의 경제활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의 양상을 살펴본다.

## 생애 소득과 소비의 국제비교

먼저, [그림 Ⅵ-13]은 2000년도 한국의 연령별 평균 임금소득과 소비 수준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

[그림 Ⅵ-13] 연령별 임금소득 및 소비 수준,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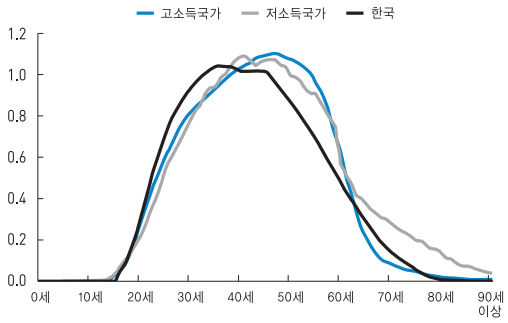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각 연령의 평균 임금소득과 평균 소비를 각각 30-49세 평균 임금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연령별 임금소득과 소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냄.
출처: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http://www.ntaccounts.org).

제시된 그래프는 30세에서 49세 사이의 평균 임금소득을 1로 했을 때 각 연령의 평균 임금소득과 소비의 상대적 수준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Ⅵ-13]을 보면, 연령별 소득과 소비의 양상이 앞서 설명한 생애소득가설의 주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20세까지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고 2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으며 그 이후부터는 다시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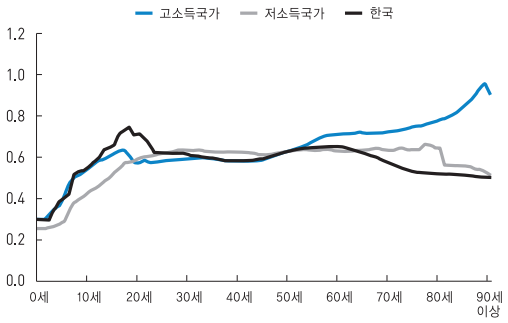
이 같은 모습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Ⅵ-14]는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연령별 평균 임금소득과 소비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국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생애소득가설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그림 Ⅵ-14-1]을 보면, 연령별 임금소득은 고소득 국가에 비해 저소득 국가에서 더 이른 나이에 최고점에 도달하고 더 늦게까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 한국은 임금소득의 정점 도달 연령이 선진국은 물론 저소득 국가에 비해서도 빠르다. 정점 이후부터 임금소득은 일정 속도로 감소하고 60세 이후에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림 Ⅵ-14]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의 연령별 임금소득 및 소비 수준, 2000년대 초반

1) 임금소득 수준




2) 소비 수준




주: 1) 통계치는 각 연령의 평균 임금소득과 평균 소비를 각각 30-49세 평균 임금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연령별 임금소득과 소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냄.
2) 고소득국가의 경우 독일(2003년), 미국(2003년), 스웨덴(2003년), 오스트리아(2000년), 일본(2004년) 등 5개국의 평균값임.
3) 저소득국가의 경우 나이지리아(2004년), 인도네시아(2005년), 인디아(2004년), 케냐(1994년), 필리핀(1999년) 등 5개국의 평균값임.
4) 한국은 2000년 자료임.
출처: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ject(http://www.ntaccounts.org).

[그림 Ⅵ-14-2]는 연령별 소비를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청소년기 소비는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에 비해 높고 노년기 소비는 고소득 국가에서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약간 감소한다. 고소득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으로 국민들의 교육과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만 저소득 국가는 대개 개발도상국이거나 후진국으로 국민의 교육과 후생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 즉, 고소득 국가의 경우 어릴 때 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비교적 일찍 은퇴하여 축적한 자산을 의료비 지출 등으로 소비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의 경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고 노후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만 소비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연령별 소비는 저소득 국가와 유사하게 노년기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수준

앞서 한국의 2000년 시점에서 연령별 임금소득과 소비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특정 시점에서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한 것으로 각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과 소비를 추적해서 만든 자료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다. 한국에는 개인의 연령별로 소득과 소비를 추적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별 평균적인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가구주의 연령대별 가구소득을 살펴보겠다. 〈표 Ⅵ-2〉는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을 100으로 하였을 때 다른 연령대 가구의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정도의 시차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40대에 증가하여 50대에 정점을 나타낸 후 60세부터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Ⅵ-2〉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 수준, 1996-2016

(%)

| | 1996 | 2006 | 2016 |
|---|---|---|---|
| 전체 가구 | | | |
| 39세 이하 | 100.0 | 100.0 | 100.0 |
| 29세 이하 | - | 82.2 | 70.3 |
| 30-39세 | - | 102.6 | 102.7 |
| 40-49세 | 114.4 | 111.1 | 112.8 |
| 50-59세 | 129.0 | 110.8 | 116.4 |
| 60세 이상 | 90.1 | 70.9 | 66.8 |
| 근로자가구 | | | |
| 39세 이하 | 100.0 | 100.0 | 100.0 |
| 40-49세 | 114.3 | 114.9 | 115.2 |
| 50-59세 | 130.0 | 117.4 | 119.9 |
| 60세 이상 | 106.7 | 85.2 | 73.8 |
| 근로자 외 가구 | | | |
| 39세 이하 | 100.0 | 100.0 | 100.0 |
| 40-49세 | 117.2 | 112.0 | 110.4 |
| 50-59세 | 130.2 | 110.7 | 119.0 |
| 60세 이상 | 80.8 | 72.2 | 69.8 |

주: 1)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39세 이하 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연령집단 평균 가구소득의 비율임.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총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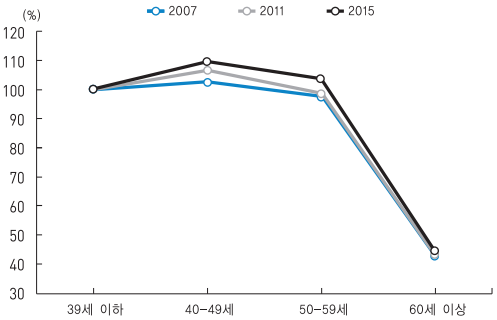
201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구의 경우 39세 이하 가구에 비해 40대는 15.2%, 50대는 19.9% 높지만 60세 이상은 26.2% 낮다. 정점에 해당하는 50대의 소득은 39세 이하와 비교해서 20년 전인 1996년에는 30.0% 높았고 2006년에는 17.4% 높았다.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정점에 달하는 연령대가 1996년에는 50대, 2006년에는 40대, 2016년에는 다시 50대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원이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39세 이하 가구주를 29세 이하와 30대로 구분해서 보면 2006년에는 29세 이하의 소득이 30대의 80%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70% 수준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Ⅵ-15]는 저소득 가구가 많이 표집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연령대별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령대별 가구소득을 구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전체 가구의 소득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을 100으로 하였을 때 가구소득은 40대에서 정점을 찍은 후 60세 이상에서 60% 이상 크게 감소한다. 「가계동향조사」에서 60세 이상의 소득이 30% 정도 감소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매우 크다. 이는 저소득 고령가구의 빈곤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그림 Ⅵ-15]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 수준(한국복지패널 결과), 2007-2015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39세 이하 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연령집단 평균 가구소득의 비율임. 가구소득은 연간 경상소득 기준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각 연도.

##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원천 구성

소득은 생애주기에 따라 그 원천이 다를 것이다. 〈표 Ⅵ-3〉에는 「가계동향조사」로 파악한 가구주 연령대별 경상소득 구성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전체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은 60세 이전까지 70%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이전소득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급증한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높지만, 경상소득 구성요소별로 보면 가구주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양상을 달리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자가구에서는 88.9%에 육박하지만 근로자 외 가구에서는 24.0%에 불과하다. 반면, 사업소득은 근로자가구에서 4.0%에 불과하지만 근로자 외 가구에서는 56.4%에 달한다.

〈표 Ⅵ-3〉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구성, 2016

(%)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
| 전체 가구 | | | | |
| 전체 | 69.4 | 19.7 | 0.4 | 10.5 |
| 39세 이하 | 77.3 | 14.3 | 0.1 | 8.3 |
| 29세 이하 | 79.1 | 7.5 | 0.0 | 13.4 |
| 30-39세 | 77.2 | 14.8 | 0.1 | 8.0 |
| 40-49세 | 74.0 | 19.1 | 0.1 | 6.8 |
| 50-59세 | 72.0 | 21.8 | 0.4 | 5.9 |
| 60세 이상 | 46.5 | 23.8 | 1.4 | 28.3 |
| 근로자가구 | | | | |
| 전체 | 88.9 | 4.0 | 0.2 | 6.8 |
| 39세 이하 | 90.2 | 3.0 | 0.1 | 6.7 |
| 40-49세 | 91.4 | 3.4 | 0.1 | 5.0 |
| 50-59세 | 90.8 | 4.3 | 0.4 | 4.5 |
| 60세 이상 | 72.6 | 7.3 | 0.6 | 19.5 |
| 근로자 외 가구 | | | | |
| 전체 | 24.0 | 56.4 | 0.7 | 18.9 |
| 39세 이하 | 17.1 | 67.1 | 0.1 | 15.7 |
| 40-49세 | 16.4 | 71.0 | 0.0 | 12.6 |
| 50-59세 | 32.4 | 58.6 | 0.3 | 8.8 |
| 60세 이상 | 25.1 | 37.4 | 2.0 | 35.4 |

주: 1)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경상소득 중 해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연령대를 구분해서 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크게 감소하고 사업소득 비중은 50대를 지나면서 증가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법적 정년인 60세를 채우지 못하고 50세 초중반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전소득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급증한다. 특이한 점은 29세 이하에서도 이전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29세 이하 가구가 혼자만의 힘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워 부모의 지원 등 외부로부터의 도움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 가구주 연령대별 소비 수준

지금부터는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표 Ⅵ-4〉는 지난 21년간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소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 표는 39세 이하 가구의 소비 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 다른 연령대 가구의 상대적인 소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2016년 기준으로 소비는 40대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다가 60세에 들면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1996년에는 소비의 정점이 50대였으나 2006년

〈표 Ⅵ-4〉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 소비지출 수준, 1996-2016

(%)

| | 1996 | 2006 | 2016 |
|---|---|---|---|
| 전체 가구 | | | |
| 39세 이하 | 100.0 | 100.0 | 100.0 |
| 29세 이하 | - | 82.9 | 78.2 |
| 30-39세 | - | 102.5 | 102.0 |
| 40-49세 | 122.4 | 118.6 | 120.4 |
| 50-59세 | 126.3 | 105.5 | 109.5 |
| 60세 이상 | 95.1 | 73.2 | 64.6 |
| 근로자가구 | | | |
| 39세 이하 | 100.0 | 100.0 | 100.0 |
| 40-49세 | 120.6 | 120.1 | 122.0 |
| 50-59세 | 125.0 | 108.4 | 111.3 |
| 60세 이상 | 102.8 | 79.9 | 68.0 |
| 근로자 외 가구 | | | |
| 39세 이하 | 100.0 | 100.0 | 100.0 |
| 40-49세 | 123.9 | 116.4 | 116.9 |
| 50-59세 | 127.5 | 102.1 | 107.5 |
| 60세 이상 | 88.9 | 70.3 | 63.5 |

주: 1)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39세 이하 평균 소비지출 대비 해당 연령집단 평균 소비지출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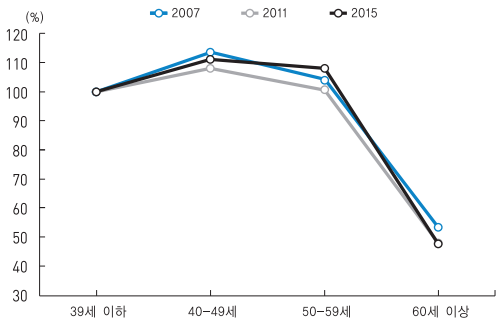
이후에는 40대로 바뀌어 소비의 양상이 다소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소비의 양상이 변화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지난 21년간 소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60세 이상의 상대적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1996년에는 60세 이상의 소비 수준이 39세 이하의 95.1%에 달해 나이가 들더라도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6년에는 60세 이상의 소비 수준이 급감하여 39세 이하의 6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생애소득가설에 의하면, 통상 소득은 은퇴하는 시점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은퇴 전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퇴 이후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보장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은퇴 가구들이 더 길어질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더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Ⅵ-16]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로 파악한 가구주 연령대별 소비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도 가구의 소비는 40대에서 정점을 이룬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소비 수준은 2015년 기준으로 39세 이하의 47.8%로 급감한다. 이러한 소비 감소의 폭은 「가계동향조사」의 64.6%에 비해서도 16.8%p나 낮은 수준이다. 「한국복지패널」이 저소득 가구 표본의 비중이 높은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소비 저하 현상은 한국의 저소득 고령가구들이 소비절벽 현상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그림 Ⅵ-16]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 소비지출 수준(한국복지패널 결과),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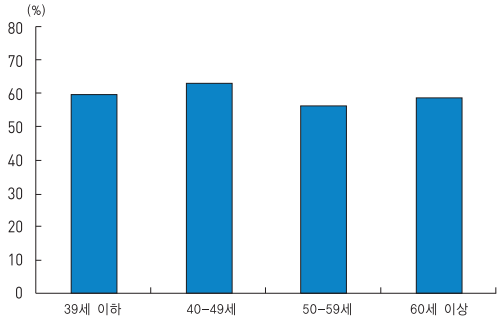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39세 이하 평균 가구 소비지출 대비 해당 연령집단 평균 소비지출의 비율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각 연도.

## 가구주 연령대별 소비지출 구성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소비지출의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다. 연령대별 소비지출 항목의 구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그림 Ⅵ-17]에서와 같이 소비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대비 소비 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이고 소득 대비 소비 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50대임을 알 수 있

다. 40대는 경상소득의 63.3%를 소비하는 데 비해 50대는 40대보다 7%p 낮은 56.3%를 소비하고 있다. 29세 이하의 경우에는 경상소득의 69.6%를 소비하는 데, 이는 이들의 소비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Ⅵ-17]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16




주: 1)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표 Ⅵ-5〉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실제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먼저, 식료품비 지출 비중은 39세 이하, 40대, 50대 모두 비슷하나 60세 이상에서 크게 상승한다. 교육비와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각각 40대와 60세 이상에서 매우 높다. 자녀 교육에 치중하는 시기인 40대에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에서 의료보건비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은 생애소득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주거비 지출 비중은 40대에서 가장 낮고 39세 이하에서 가장 높다. 이는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낮은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중장년 및 노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Ⅵ-5〉 가구주 연령집단별 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및 실제 주거비 지출 비율, 2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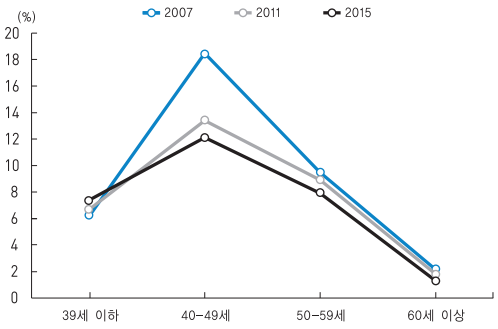
| 연령집단 | 식료품비 | 교육비 | 보건의료비 | 실제 주거비 |
|---|---|---|---|---|
| 39세 이하 | 12.3 | 7.8 | 6.3 | 4.4 |
| 29세 이하 | 11.6 | 5.1 | 4.6 | - |
| 30-39세 | 12.4 | 8.0 | 6.4 | - |
| 40-49세 | 12.2 | 18.7 | 5.5 | 2.5 |
| 50-59세 | 12.7 | 10.1 | 6.8 | 3.3 |
| 60세 이상 | 19.4 | 1.5 | 11.2 | 3.2 |

주: 1)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소비지출 중 해당 소비항목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임.
3) '실제주거비'는 월세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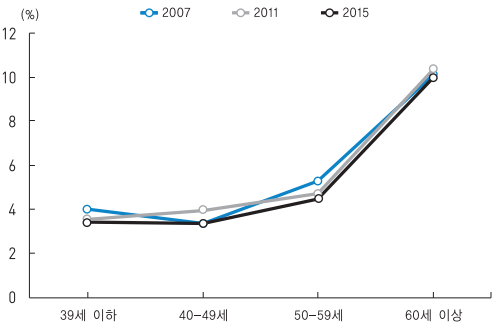
[그림 Ⅵ-18]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로 파악한 가구주 연령대별 교육비와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 Ⅵ-18-1]에서는 2015년 기준 교육비 지출 비중이 40대에서 12.1%, 50대에서 7.9% 수준으로 〈표 Ⅵ-5〉의 경우보다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림 Ⅵ-18-2]는 2015년 기준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40대와 50대에서 3-4%대 정도이고 60세 이상에서는 10.0% 수준으로 고령가구에서 두 배 이상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Ⅵ-18] 가구주 연령집단별 교육비 및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한국복지패널 결과), 2015

1) 교육비 지출 비율




2)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소비지출 중 교육비와 보건의료비 지출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2015.

##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국 가구주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소득과 소비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령대별로 소득과 소비 수준에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퇴직처럼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득원천이 사라지면 소득과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나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분석 결과, 60대의 소득과 소비가 급감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그 의미는 최근 들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대수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노년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노년 생활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저소득 고령가구의 경우는 소득과 소비 감소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0세 이상 연령대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와 소비 급감 현상을 눈여겨보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가구들이 은퇴를 대비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

#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적 영향

유승동 (상명대학교)

-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가계는 가계자산에서 거주 주택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노인가계에 비해 생활비 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 주택연금은 노인가구가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되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출 만기를 차입자의 사망 시점까지로 확장한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상품이다.
- 주택연금 가입은 2007년 도입 이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576건에 그쳤으나 2016년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면서 1만 309건으로 급증하였다.
-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노인가계의 비율은 2008년 12.7%에서 2016년 25.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주택연금 가입자의 73.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향후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이들의 지역적 분포는 지역경제의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 즉 정년은 대략 60세 전후이다. 많은 장년층은 은퇴한 후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중단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의 평균 나이는 70세 전후여서 80세에 이르는 기대수명에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고도 상당 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젊은 시절부터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한국 노인들은 대부분 충분한 준비 없이 노후생활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현재 연금을 받는 노인은 약 45.3%에 불과하다.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들 가운데에도 약 75%는 월 50만 원 미만의 충분하지 않은 연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로 소득지원이나 취업지원 서비스의 강화를 요구한다.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보다 주택소유 비율이 높다. 그러나 한국 노인들은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꺼린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판다는 것은 다른 집으로 이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노인가계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하지 않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7년 중반 주택연금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판매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주택연금 도입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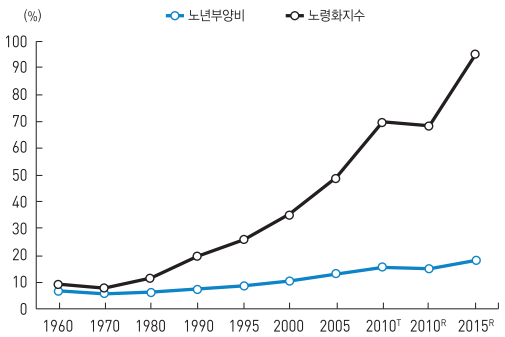
## 노인가계의 소득빈곤과 주택보유

노인가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가구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19.5%에 달한다. UN이 제시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2000년대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이나 주요 국제기구들의 전망에 의하면, 한국은 2026년에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인구의 부양은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2015년 현재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5.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리고 0-14세 유소년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15년 95.1명으로 2005년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유소년인구는 감소하였고 고령인구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그림 Ⅵ-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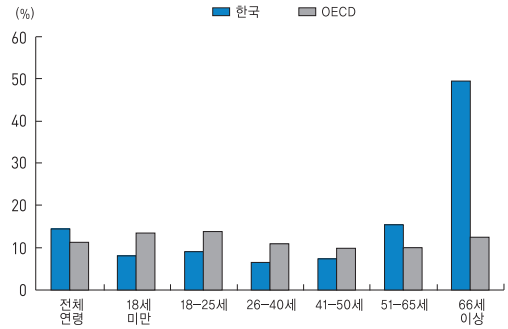
가장이 은퇴를 하면 대체로 가구소득이 감소한다. 생활비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는 생활비 부족으로 직결된다. 생활비를 대폭 줄이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의 55-79세 고령층 인구 2명 가운데 1명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취업을 원한다. 특히, 한국 노인들의 생활비 부족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더 심각하다. 201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다른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평균인 12.6%보다 현저하게 높다(그림 Ⅵ-20).

[그림 Ⅵ-19]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1960-2015




주: 1)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출처: 통계청, 「2016 고령자통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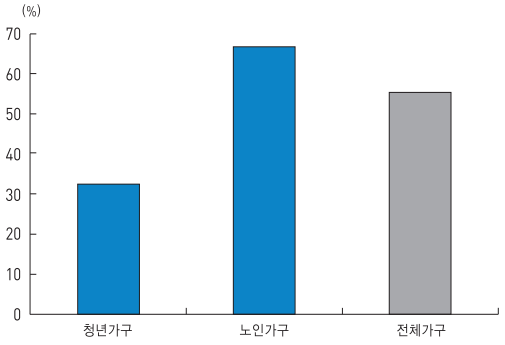
[그림 Ⅵ-20] 한국과 OECD의 연령집단별 상대적 빈곤율, 2013




주: 1) 상대적 빈곤율은 국가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중임.
2) 상대적 빈곤율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중위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추정됨.
출처: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2016.

노인들은 소득은 부족해도 대체로 젊은 시절 자신들이 축적해 온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젊은층에 비해 주택소유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Ⅵ-21]은 통계청의 2016년 「주택소유통계」로 파악한 노인가구와 청년가구의 주택소유 현황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66.7%에 이르지만 40세 미만 청년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32.5%에 그친다.

[그림 Ⅵ-21] 청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주택소유비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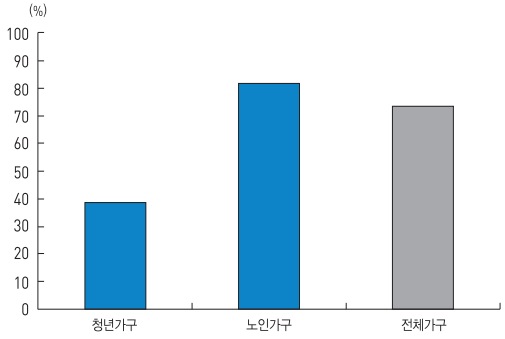



주: 1)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가구이고,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2016 주택소유통계」, 2017.

주택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4% 이다.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거주 주택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비중은 82.0%에 달한다. 그러나 30세 미만 가구의 경우에는 실물자산의 비중이 37.4%에 불과하다(그림 Ⅵ-22).

노인들이 부동산, 특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면 다른 집으로 이사할 뿐만 아니라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인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생활환경과 이웃으로부터 떨어져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게 되면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그림 Ⅵ-22] 청년가구와 노인가구의 실물자산 비율, 2016




주: 1)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30세 미만인 가구이고,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

## 주택연금의 판매 현황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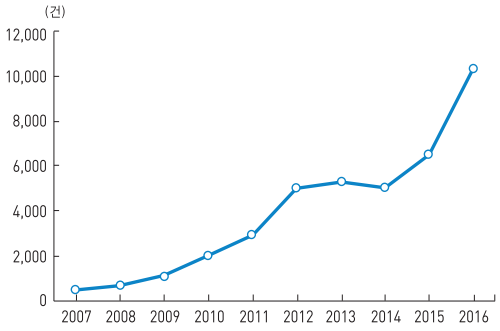
가계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mortgage)라 한다. 모기지의

경우 대출금을 일시에 받고 대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여러 번에 나누어 상환한다. 모기지와 달리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일시 또는 여러 번에 나누어 받고 만기에 누적된 대출 원리금을 살던 주택으로 상환한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생활비가 필요한 노인가구가 역모기지를 활용할 경우 대출 만기에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부는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대출하되 이들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출 만기를 차입자의 사망 시점까지로 확장한 주택연금을 도입하였다. 즉,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여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과 같이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노인가계가 주택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홍콩, 일본 등에서도 주택연금(역모기지)을 도입한 바 있는데, 한국의 주택연금은 1989년 미국에서 개발된 HECM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주택연금 판매를 개시하였다. [그림 Ⅵ-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연금은 2016년 한 해에만 1만 309건이 판매되었다. 2015년에 6,486건이 판매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약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2016년 현재 주택연금 지급액은 6,176억 원, 보증 공급액은 10조 7,728억 원에 달한다. 2016년 말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잔액은 41조 6,492억 원이다.

[그림 Ⅵ-23] 주택연금 가입건수, 2007-2016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각 연월.

주택연금이 공급되기 이전에 민간시장에서는 역모기지를 판매한 경험이 있는데,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 말 신한조흥은행과 농협에서 판매한 역모기지 건수와 계약금액은 411건과 523억 원에 불과하였다. 주택연금은 도입 이듬해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576건이 판매되었다. 정부는 고령가계의 부채 감소와 노후 대비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내집연금 3종 세트'를 2016년 4월 25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상품 출시 후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주택연금 건수는 총 3,321건에 이른다. 새 상품 출시 이후 세 달 동안의 판매실적이 과거 연간 평균 판매실적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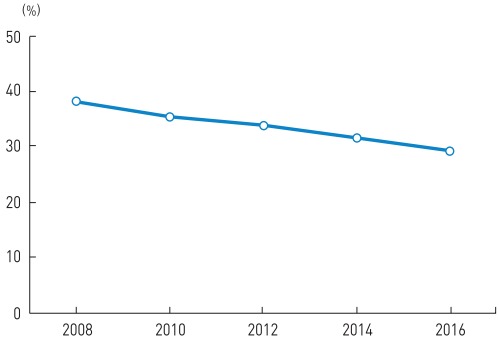
이 3종 세트에는 우선 기존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노인가계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연금지급을 확대하는 상품이 있다. 여기에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40세 이상인 경우 기존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고 60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기지 대출 시점에 사전 예약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가계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월 지급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주택연금의 성공은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금상품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민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을 도입하였다.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지연금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 등에서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노인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이외의 토지나 다른 자산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 개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 주택연금의 사회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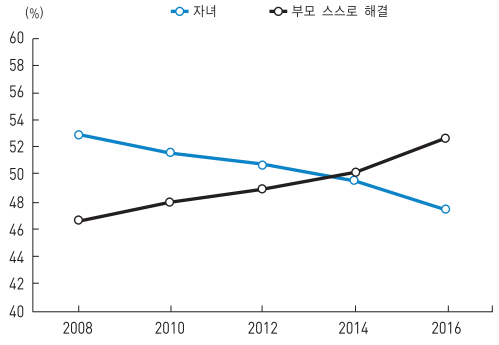
가계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진다. 노인가계가 주택연금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조달한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던 사회에서 노인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주택연금의 확산으로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감소할 수도 있다.

[그림 Ⅵ-24]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 2008-2016




주: 1)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Ⅵ-25] 부모의 생활비 주 제공자, 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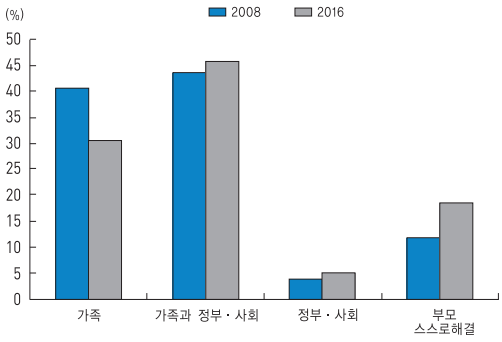

주: 1)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6년에 실시한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계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된 이유는 자녀에게 생활비 도움

을 받고 싶지 않거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주택이 최근에는 노인들이 스스로 부족한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편이 된 것이다. 이 조사에서 노후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노인가계는 45.3%에 달하지만 노후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노인가계는 19.6%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부모부양의 책임이 가족에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가족과 정부 및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2008년에는 부모부양의 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16년에는 이 응답이 30.6%로 감소하고 가족과 정부 및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이 45.7%로 크게 증가하였다. 부모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그림 Ⅵ-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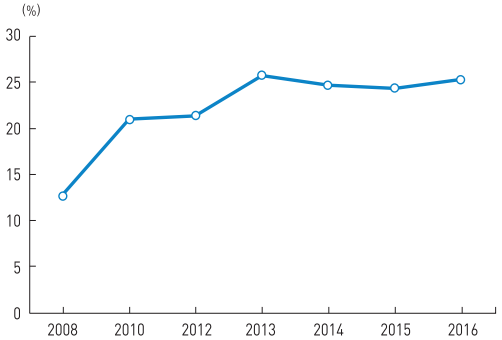
[그림 Ⅵ-26] 부모부양 책임에 대한 견해, 2008, 2016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8, 2016.

실제 대다수의 노인들이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보다 자신들의 생활비 확보에 활용하기를 원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림 Ⅵ-27]에 따르면, 보유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노인가계의 비율은 지난 2008년 12.7%에서 2016년 25.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비율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43.7%와 35.2%로 특히 높다. 한 연구(유승동·김주영, 2014)에 따르면, 소득이 적은 노인일수록 거주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노인들이 보유 주택을 상속하겠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높지만, 현실 생활이 녹록하지 않은 경우 불가피하게 보유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가계가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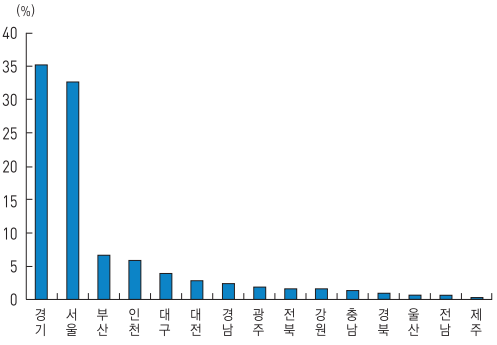
[그림 Ⅵ-27] 주택보유 노인의 보유주택 비상속의향률, 2008-2016




주: 1) 전국 만 60-84세 주택보유자(혹은 그의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2) 보유주택 비상속의향률은 조사대상자 중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Ⅵ-28]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는데, 주택연금 가입자의 73.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42.5%만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도권 집중이 얼마나 심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했을 때, 이 같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적 분포는 지역경제의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Ⅵ-28] 주택연금 가입자의 시도별 구성비율, 2015. 8.




주: 1) 2007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누적 가입자수 기준임.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HF 이슈리포트 15-25호」, 2015. 11.

## 맺음말

은퇴한 노인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일반적으로 가계자산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이 거주 주택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인 주택연금이 도입되었다. 과거 민간에서 개발된 역모기지와 달리 주택연금은 거주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 시장은 최근 '내집연금 3종 세트'의 도입 등 정책 효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대비는 시작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주택연금을 먼저 도입한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노인가계가 건강 등의 이유로 주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도 주택연금의 가입이 더 늘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살펴보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유승동 · 김주영. 2014. "주택상속 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4(1): 52-73.

# Korean Social Trends 2017
# 한국의 사회동향 2017

2017 Culture & Leisure

Korean Social Trends 2017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Ⅶ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192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과몰입 전인식 | 한국교육개발원 200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06

#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여가시간은 2016년 평일 3.1시간, 휴일 5.0시간으로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세대별, 성별, 혼인유무별로 차이를 보인다.
- 여가비용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행 관련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여 오락문화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 문화예술 관람률이 영화 관람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참여, 문화동호회 참여, 예술행사 직접참여도 모두 증가하였다.
- 스포츠 관람률이 2011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반면, 생활체육참가율은 2016년에 증가하였다.
-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2016년에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매체로서 스마트폰 이용률이 TV 이용률을 앞질렀다.

지난 2016년 국민들의 문화여가는 대통령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여가 활동인 영화 관람은 연간 2억 명 이상의 관객 수에 1인당 연평균 4.2회의 관람 횟수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였다. 공연예술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후원, 초대권, 홍보접대 등의 감소에 따른 위축을 겪었다. 국민의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해외관광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의 문화와 여가 부분에 포함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들이 수집한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등의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화여가의 기반을 살펴본 후 다양한 형태의 문화여가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여가 만족의 수준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 문화여가의 기반

문화여가 활동의 기반이 되는 문화 인프라가 부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표 Ⅷ-1〉을 보면 박물관과 공공도서관, 미술관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물관은 2017년 853개로 전년에 비해 27개가 증가하였고, 공공도서관은 2017년 1,010개로 전년에 비해 32개 증가하였으며, 미술관과 문예회관도 2017년 229개와 236개로 전년에 비해 각각 10개와 7개씩 증

〈표 Ⅶ-1〉 문화예술시설수, 2008–2017

| 연도 | 박물관 | 미술관 | 공공 도서관 | 등록 공연장 | 문예 회관 |
|---|---|---|---|---|---|
| 2008 | 511 | 115 | 600 | 619 | 161 |
| 2009 | 579 | 128 | 644 | 639 | 167 |
| 2010 | 630 | 141 | 703 | 637 | 182 |
| 2011 | 655 | 145 | 759 | 751 | 192 |
| 2012 | 694 | 154 | 786 | 826 | 209 |
| 2013 | 740 | 171 | 828 | 881 | 214 |
| 2014 | 754 | 190 | 865 | 992 | 220 |
| 2015 | 809 | 202 | 930 | 991 | 232 |
| 2016 | 826 | 219 | 978 | - | 229 |
| 2017 | 853 | 229 | 1,010 | - | 23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등록공연장 현황」, 각 연도.

〈표 Ⅶ-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11–2015

(1조 원)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총 매출액 | 82.97 | 87.27 | 91.21 | 94.95 | 100.49 |
| 출판 | 21.24 | 21.10 | 20.80 | 20.59 | 20.51 |
| 만화 | 0.75 | 0.76 | 0.80 | 0.85 | 0.92 |
| 음악 | 3.82 | 3.99 | 4.28 | 4.61 | 4.98 |
| 게임 | 8.80 | 9.75 | 9.72 | 9.97 | 10.72 |
| 영화 | 3.77 | 4.40 | 4.66 | 4.57 | 5.11 |
| 애니메이션 | 0.53 | 0.52 | 0.52 | 0.56 | 0.61 |
| 방송(영상) | 12.75 | 14.18 | 14.94 | 15.77 | 16.46 |
| 광고 | 12.17 | 12.48 | 13.36 | 13.74 | 14.44 |
| 캐릭터 | 7.21 | 7.52 | 8.31 | 9.05 | 10.08 |
| 지식정보 | 9.05 | 9.53 | 10.39 | 11.34 | 12.34 |
| 콘텐츠솔루션 | 2.87 | 3.03 | 3.44 | 3.89 | 4.31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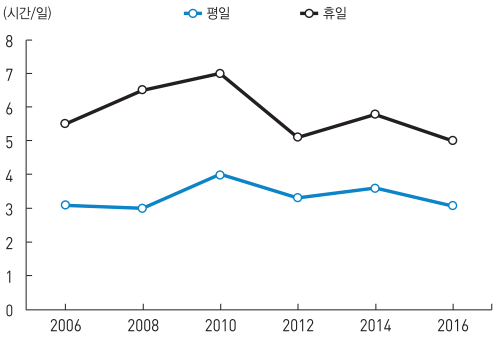
가하였다.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재화를 상품의 형태로 공급하는 문화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문화산업 매출규모는 2015년 100조 4,863억 원으로 2014년에 비해 5조 5,391억 원 증가하였다. 특히 영화,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분야의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하였다(표 Ⅶ-2).

문화여가 활동은 여가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가시간은 최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평일 여가시간은 3.1시간, 휴일 여가시간은 5.0시간으로 2014년에 비해 평일 0.5시간, 휴일 0.8시간 감소하였다(그림 Ⅶ-1).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난 20세 이상 성인의 여가시간은 요일 평균 4시간 52분으로 1999년에 비해 22분이 줄었다. 그러나 주말 평균 여가시간은 8시간 3분으로 1999년에 비해 13분이 늘었다. 이는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인구 중위 여가시간의 60% 이하 여가시간을 갖는 집단을 시간빈곤층으로

[그림 Ⅶ-1]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2006–2016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응답한 결과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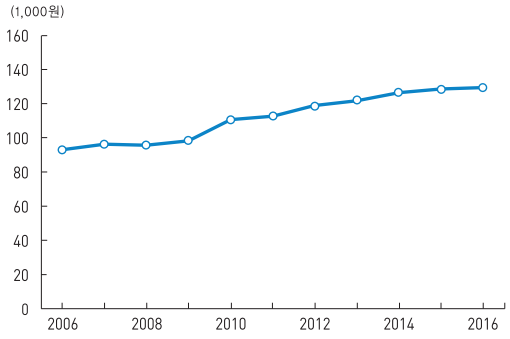
규정하여 그 규모를 파악해 보면, 주중 시간빈곤 인구는 36.1%로 1999년에 비해 3.7%p 증가한 반면 주말 시간빈곤 인구는 16.4%로 1999년에 비해 5.7%p 감소하였다(차승은, 2016).

여가시간의 남녀 간 격차는 일하는 연령대인 30대부터 60대 사이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기혼자 집단에서는 남녀의 여가시간 격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기혼여성의 일요일 여가시간은 6시간 2분으로 기혼남성에 비해 1시간 29분이나 적다(차승은, 2016). 여가 활동별 시간을 보면, 지난 15년간 70대 이상의 고령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TV시청 시간이 줄어든 대신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운동 및 스포츠, 문화 활동, 조직 및 봉사 활동 등의 시간이 늘어났다.

「국민여가활동조사」로 파악한 국민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016년 13만 6,000원으로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희망 여가비용은 18만 8,000원으로 2014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여 실제 비용과 희망 비용 간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집계한 가구의 오락문화비 지출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2만 9,494원이 되었다(그림 Ⅶ-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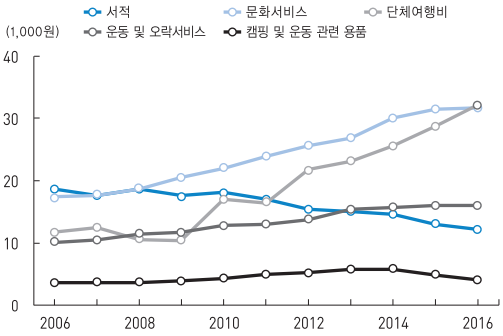
오락문화비를 지출항목별로 2006년부터 살펴보면, 문화서비스, 단체여행, 운동 및 오락 서비스 지출은 계속 증가하였고 서적 지출은 계속 감소하였다. 캠핑 및 운동 용품 지출은 증가해 오다가 2015년과 2016년에 감소하였다. 증가추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단체여행 지출로서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문화서비스 지출을 앞질렀다(그림 Ⅶ-3).

[그림 Ⅶ-2] 가구의 오락문화비 월평균 지출액, 2006-2016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Ⅶ-3] 가구의 오락문화비 주요 항목별 지출액, 2006-2016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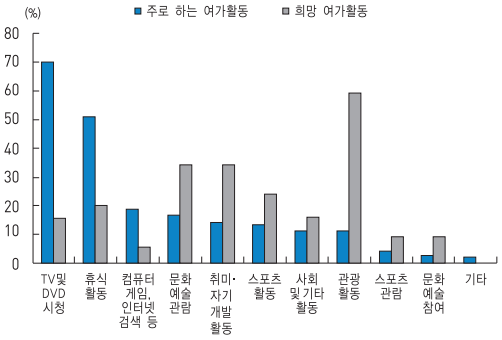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TV 및 비디오 시청이 42.5%로 가장 많고, 수면이나 사우나와 같은 휴식이 16.7%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스포츠 활동(7.3%), 봉사·종교·사교 등 사회 및 기타 활동(7.1%),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6.5%), 취미 및 자기개발(6.5%), 문화예술 관람(5.2%), 관광(4.8%) 등의 순이다.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 결과도 비슷한데, TV 시청(69.9%)과 휴식(50.8%)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외에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19.0%), 문화예술 관람(16.5%), 취미 및 자기개발(14.7%), 스포츠 활동(13.4%), 봉사·종교·사교 등 사회 및 기타 활동(11.3%), 관광(11.1%) 등의 순이다.

향후 하고 싶은 여가 활동(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관광이 3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람(12.2%), 스포츠 활동(12.2%), 취미 및 자기개발(10.9%) 등이 많다.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에서도 관광이 59.4%로 가장 많은 가운데 그 뒤를 문화예술 관람(34.2%), 취미 및 자기개발(34.2%), 스포츠 활동(24.1%) 등이 따른다(그림 Ⅶ-4).

지난 2015년 「사회조사」의 여가 활동 항목 변경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전과 비교해서 여가 활동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즉, 현재 하는 여가 활동으로는 TV 시청이나 휴식과 같은 소극적인 활동이 많고 향후 희망하는 여가 활동으로는 관광, 문화예술 관람, 자기개발, 스포츠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이 많다는 점에서 이전 결과와 비슷하다.

[그림 Ⅶ-4]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 2015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다중응답(1-3순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5.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휴식, 문화예술 관람, 사회 및 기타 활동이다. 희망하는 여가 활동도 대체로 비슷하지만 남녀 간 차이가 확연히 존재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문화예술 관람, 취미 및 자기개발, 사회 및 기타 활동이다.

여가 활동 동반자로는 가족이 5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 20.2%, 혼자 19.1%, 동호회 6.4%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친구인 경우가 21.9%이고 혼자인 경우가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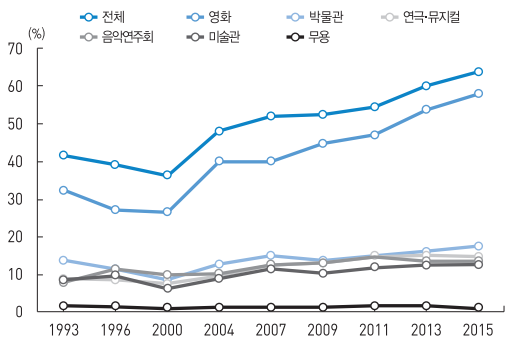
로 여성보다 각각 3.4%p와 2.4%p 높다. 여성은 가족인 경우가 57.5%로 남성의 51.0%보다 6.5%p 높다.

##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 관람에 참여하는 국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연, 전시, 영화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로 문화예술 관람률을 측정한 결과,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1년 54.5%에서 2013년 60.1%, 2015년 63.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문화예술 장르별로 보면, 영화가 5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박물관(17.5%), 연극·뮤지컬(14.7%), 음악연주회(13.5%), 미술관(12.6%) 등이 비슷한 수준이며 무용(1.1%)이 가장 낮다(그림 Ⅶ-5). 문화예술 관람률의 상승은 주로 영화 관람 인구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 영화 관람률은 2013년에 비해 4.4%p 상승하였으나 다른 장르의 관람률은 미미한 상승에 그치거나 하락하였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여성(66.3%)이 남성(61.5%)보다 높은데, 이 같은 남녀 간 격차는 모든 장르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도 문화예술 관람률이 2016년 78.3%로 2014년에 비해 7.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별로는 특히 영화 관람률이 7.5%p로 크게 증가하였다. 문화예술 관람의향은 83.8%로 2014년보다 1.6%p 감소해 실제 관람률과의 격차가 14.1%p에서 5.5%p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림 Ⅶ-5]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199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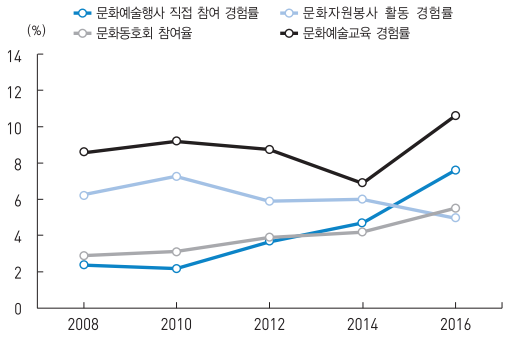

주: 1) 문화예술관람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장르의 문화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교육, 창작 및 동아리 활동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창작발표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직접 참여 경험률은 2016년 7.6%로 2014년에 비해 2.9%p 증가하였다(그림 Ⅶ-6). 앞으로 창작발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향도 2014년보다 1.9%p 증가한 10.0%에 이른다.

최근 1년 동안 학교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2016년 10.6%로 2014년보다 3.7%p 증가하였고, 문화동호회 참여율도 2016년 5.5%로 2014년보다 1.3%p 증가하였다. 반면, 문화자원봉사 활동 경험률은 2016년 5.0%로 2014년보다 1.0%p 감소하였다(그림 Ⅶ-6).

[그림 Ⅶ-6] 문화예술행사 직접 참여 경험률, 문화자원 봉사 활동 경험률, 문화동호회 참여율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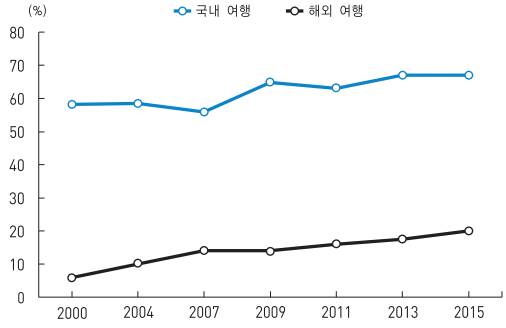

주: 1) 문화예술행사 직접 참여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창작, 발표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문화자원봉사 활동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문화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3)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문화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4)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강좌나 강습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 여 행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자 비율은 2013년 67.0%에서 2015년 66.6%로 0.4%p 감소한 반면 해외여행자 비율은 같은 기간 17.4%에서 19.9%로 2.5%p 증가하였다(그림 Ⅶ–7). 성별로 보면, 국내여행자 비율은 여성이 68.5%로 남성 64.6%보다 3.9%p 높고, 해외여행자 비율은 남녀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로 보면,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6년 89.5%로 2015년 대비 1.6%p 증가하였고 해외여행 경험률은 2016년 17.3%로 2015년 대비 0.7%p 증가하였다.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국내여행 경험률이 「사회조사」의 국내여행자 비율보다 높은데, 이는 「국민여행실태조사」가 일상 생활권을 벗어난 모든 이동을 여행에 포함시킨 결과로 보인다.

[그림 Ⅶ-7]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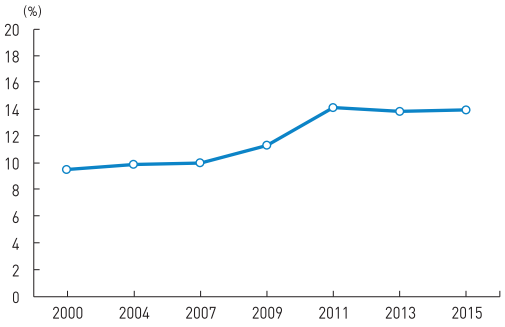

주: 1)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은 각각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 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

스포츠와 관련된 대표적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 참여가 있다. 스포츠 관람률은 2007년 10.0%에서 2011년 14.1%까지 증가한 후 2013년 13.8%, 2015년 13.9%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그림 Ⅶ–8). 2000년대 후반의 스포츠 관람 증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스포츠인 프로야구 관람 인구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프로야구 관람 인구는 2000년대

중반 300만 명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700만 명을 넘어섰다. 스포츠 관람률은 남성(19.6%)이 여성(8.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그림 Ⅶ-8] 스포츠관람률, 2000-2015




주: 1) 스포츠관람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스포츠 관람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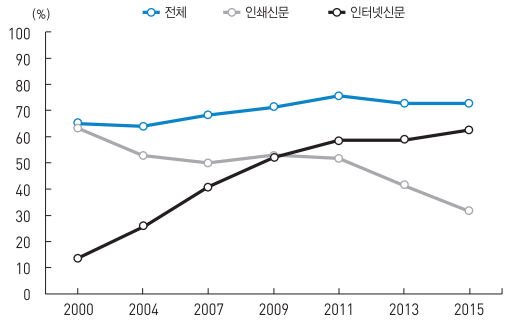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의 2016년 결과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9.5%로 2015년에 비해 3.5%p 증가하였고 주 2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은 49.3%로 2015년에 비해 4.0%p 증가하였다. 성별로 비교하면, 주 1회 이상 기준으로는 남성(62.3%)이 여성(56.7%)보다 높지만 주 2회 이상 기준으로는 남성(49.2%)과 여성(49.3%)이 비슷한 수준이다.

## 미디어 이용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미디어 이용 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매체들 중에서 스마트폰 이용률이 81.0%로 75.4%를 기록한 TV 이용률보다 높다. 2015년에 비해 TV 이용률은 0.8%p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이용률은 7.3%p 증가한 결과이다. 매체 이용 양상은 세대 간에 차이가 매우 뚜렷한데, 20대에서 스마트폰 이용률(96.4%)이 가장 높은 것과 달리 60대에서는 TV 이용률(92.6%)이 가장 높다.

신문을 읽는 방법에도 매체 이용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은 2015년 62.4%에 달하는데, 인쇄(종이)신문을 읽는 비율은 같은 해 31.6%에 그친다. 2013년과 비교하면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은 3.4%p 증가한 반면 인쇄신문을 읽는 비율은 10.0%p 감소하였다.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이 거의 비슷했던 2009년 이후 인쇄신문보다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차이는 계속 확대되었다.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 중 어느 하

[그림 Ⅶ-9] 신문 읽는 비율,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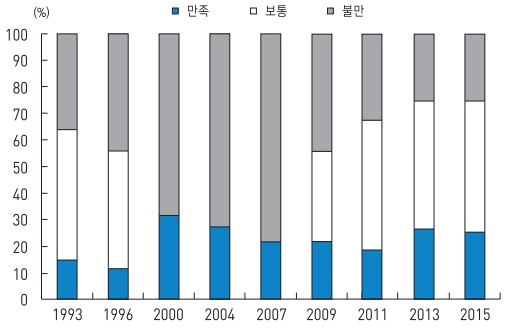

주: 1) 2000년과 2004년 통계치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이고, 2007년 이후부터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나라도 읽는 비율, 즉 신문을 읽는 전체 비율은 72.7%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그림 Ⅶ-9).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과 인쇄신문을 읽는 비율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데, 그 차이는 인터넷신문(9.4%p)보다 인쇄신문(14.3%p)에서 더 크다.

## 여가만족

여가 만족도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지난 1996년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으나 2000년부터 '보통'이라는 응답범주 없이 4점 척도로 조사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는 다시 5점 척도로 변경되었다.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고 '만족한다'는 응답과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25.3%와 25.5%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그림 Ⅶ-10). 여가 생활에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는 인구가 절반이고, 만족하는 인구와 불만족하는 인구가 각각 4명 중 1명꼴이다.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거의 변화가 없다. 여가 만족도는 남녀 간에 차이가 난다. 2015년 기준 여가 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남성 26.4%, 여성 24.2%로 남성이 약간 높다.

[그림 Ⅶ-10] 여가만족도, 1993-2015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2000-2007년 조사의 경우 응답범주가 '만족', '불만족' 등 이분형 척도로 조사되었음.
3) 1993년, 1996년, 2009-2015년 자료의 경우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비율이며, 불만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여가 불만족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8.5%)과 시간 부족(20.0%)이 대부분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건강 문제(9.8%)나 취미 부재(4.6%)도 여가 불만족 요인이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고, 여성은 건강 문제 때문인 경우가 남성보다 많다.



**참고문헌**

차승은. 2016. "여가시간의 변화와 격차." 「한국의 사회동향 2016」.

#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과몰입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 청소년은 주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게임을 하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 게임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은 전체의 3% 미만으로 많지 않으나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서 그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게임 이용을 일찍 시작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른 나이에 게임을 시작하거나 오랜 시간 또는 자주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에서 문제적 사용자가 더 많다.
- 문제적 게임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정신건강에서도 부정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스마트기기의 보급은 한국의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 인터넷 접속 방식이 무선으로 바뀌고 기기도 PC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진화하면서 더 간편하고 빠르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화에 대한 시각은 세대 간에 크게 다르다. 기성 세대는 디지털 문화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생소하게 느끼며 이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우려한다. 청소년 세대는 디지털 매체와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이를 매우 친근하게 인식한다. 예컨대, 여가시간에 성인은 TV 시청을 가장 많이 하지만 청소년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가장 많이 한다. 뉴스나 드라마와 같은 콘텐츠를 소비할 때에도 성인은 TV를 활용하지만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디지털 문화 의존은 약어 사용으로 인한 한글 파괴, 무분별한 댓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야기되는 폭력, 성인물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사이버 도박, 지나친 게임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청소년의 지나친 게임 이용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정책적 규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이용 연령별 등급 제도인 셧다운제(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선택제(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무작정 막기보다는 문제에 대응하면서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중독이란 표현은 과의존 또는 과몰입으로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청

소년의 문제적 인터넷 사용 가운데 게임 과몰입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지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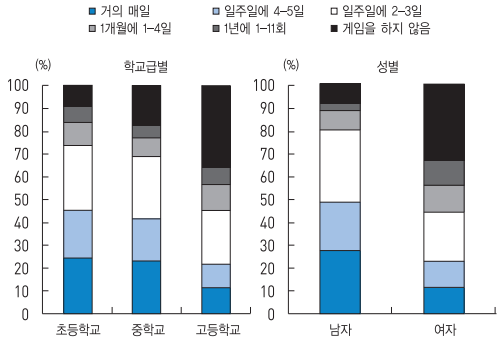
## 청소년의 게임 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게임 이용 실태를 매년 파악한다. 이 조사의 2016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가운데 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은 78.5%에 이른다. 그러나 이 비율은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91.1%, 중학생의 82.5%, 고등학생의 64.2%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91.4%와 여학생의 66.7%가 게임을 이용 하고 있다(그림 Ⅶ-11).

게임은 크게 PC나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게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모바일게임, PS2나 XBOX 등의 게임기를 사용한 비디오게임으로 구분된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 유형은 모바일게임과 온라인게임이다. 모바일게임 이용 비율은 52.2%이고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은 45.2%로 이 둘을 합하면 97.4%에 달한다. 비디오게임 이용 비율은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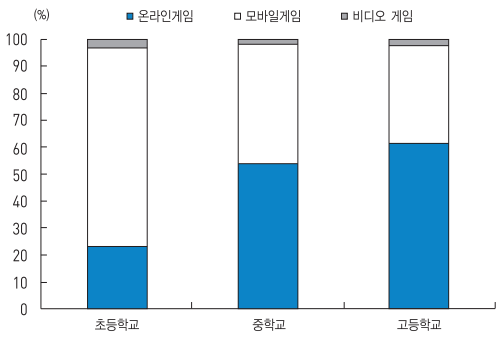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그림 Ⅶ-1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모바일게임을 많이 이용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온라인게임을 많이 이용한다. 즉, 모바일게임의 경우 초등학생 73.3%, 중학생 43.8%, 고등학생 36.3%로 초-중-고의 순으로 높지만 온라인게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23.3%, 중학생 54.2% 고등학생 61.4%로 그 반대의 순으로 높다. 그림으로 제시

[그림 Ⅶ-11] 청소년의 학교급 및 성별 게임 이용 빈도, 2016




주: 1) 전국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7.

[그림 Ⅶ-12] 청소년의 학교급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의 종류, 2016




주: 1) 전국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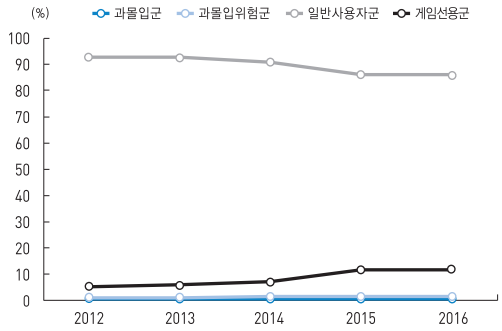
하지는 않았지만, 남학생은 온라인게임을 더 많이 이용하는 데 비해 여학생은 모바일게임을 더 많이 이용한다. 남학생의 60.5%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고 여학생의 75.3%가 모바일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게임 이용자 가운데는 게임을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임 이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 현상의 예로는 조절손상, 일상생활 무시, 내성, 강박적 사용, 과도한 시간소비, 부작용에도 계속 사용, 금단 등이 있다.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Comprehensive Scale for Assessing Game Behavior, CSG)는 게임 이용자를 행동유형에 따라 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일반사용자군, 게임선용군 등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한다. 이 척도를 활용하여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의 201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85.6%가 일반사용자군에 속하고 문제적 게임 이용자로 분류되는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은 각각 0.7%와 1.8%로 나타난다.

이 같은 게임행동 유형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몰입군은 큰 변화가 없고 2014년부터 과몰입위험군이 약간 증가하였다. 눈에 띄는 변화는 게임선용군의 증가이다(그림 Ⅶ-13). 이에 대해서는 게임이 청소년에게 하나의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청소년의 게임 행동을 성인과 비교하면,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문제적 이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증가율도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인의 경우 매년 문제적 사용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보다 일반인의 문제적 사용자 비율이 더 높다.

[그림 Ⅶ-13] 청소년의 게임행동 유형별 비율, 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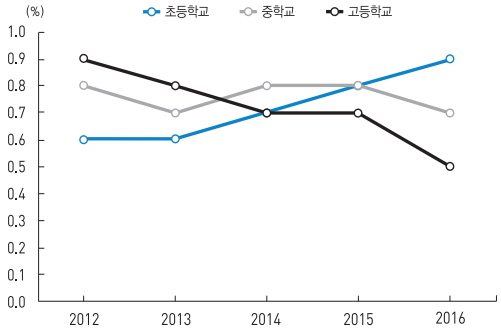



주: 1) 전국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2)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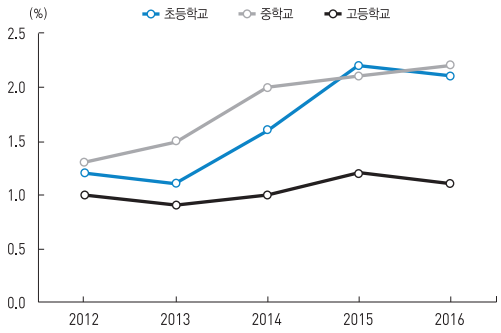
[그림 Ⅶ-14]는 각각 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게임선용군 비율의 변화를 학교급별로 보여준다. 우선, 과몰입군의 경우 초등학생은 증가 추세에 있고 중학생은 큰 변화가 없으며 고등학생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다. 과몰입위험군의 경우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뚜렷한 변화가 없다. 게임을 적당한 수준에서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게임선용군은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Ⅶ-14] 청소년의 학교급별 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및 게임선용군 비율, 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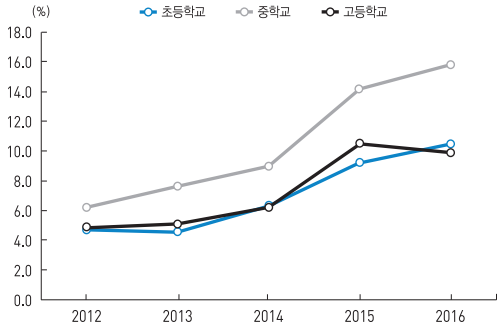
1) 과몰입군




2) 과몰입위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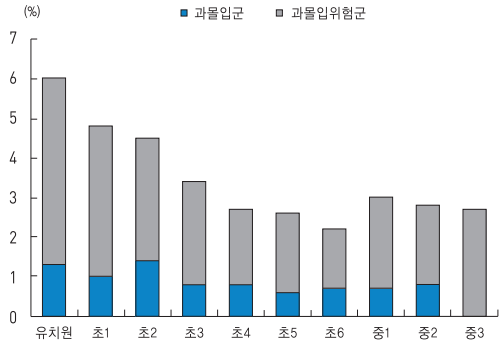

3) 게임선용군




주: 1) 전국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2)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각 연도.

문제적 게임행동은 언제 게임을 시작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 Ⅶ-15]는 중학생의 게임 시작 시기와 게임행동 유형 간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게임을 일찍 시작한 중학생일수록 과몰입군 또는 과몰입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제적 게임행동은 게임 이용 빈도 및 시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은 게임 이용 빈도가 잦고 게임 이용 시간이 긴 경향이 있다.

[그림 Ⅶ-15] 중학생의 게임 시작시기별 과몰입군 및 과몰입위험군 비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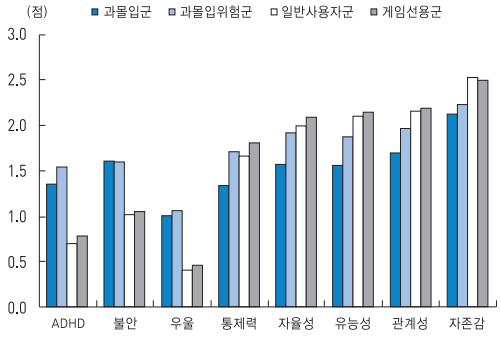

주: 1) 전국 중학교 1–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7.

## 게임행동과 정신건강

질병관리본부의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7.4%에 이르고 우울감 경험률도 25.5%에

달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게임행동의 문제를 야기하였는지 아니면 문제적 게임행동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일으켰는지 그 관계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적 게임행동과 이들의 심리 또는 정신건강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림 Ⅶ-16] 청소년의 게임행동 유형별 심리 및 정신건강 상태,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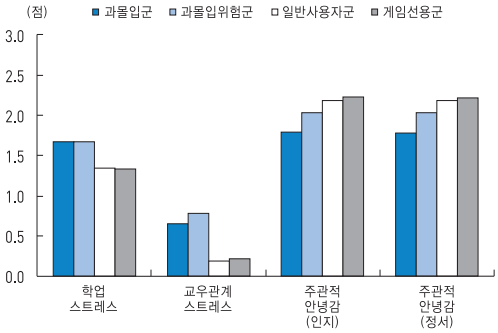



주: 1) 전국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2)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음.
3)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수준은 '나는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에도 주변의 일들 때문에 정신이 없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4) 불안 수준은 '나는 걱정이 너무 많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5) 우울 수준은 '나는 항상 슬프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6) 통제력 수준은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남들이 포기한 후에도 참고 오래 일을 계속한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7) 자율성 수준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8) 유능성 수준은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9) 관계성 수준은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10) 자존감 수준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7.

[그림 Ⅶ-16]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심리 및 정신건강 상태는 게임행동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문제적 게임행동으로 분류되는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 청소년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안, 우울감 수준에서 게임선용군과 일반사용자군 청소년보다 훨씬 높고 통제력,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자존감 수준에서는 이들보다 낮다. 문제적 게임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심리 및 정신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Ⅶ-17]은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게임행동 유형별로 비교해 준다. 과몰입

[그림 Ⅶ-17] 청소년의 게임행동 유형별 학업 및 교우관계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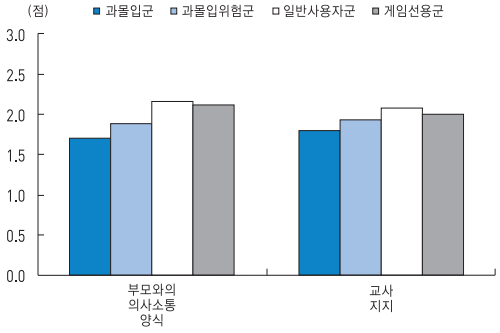

주: 1) 전국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2)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음.
3) 학업 스트레스 수준은 '나는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4) 교우관계 스트레스 수준은 '나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5) 주관적 안녕감(인지) 수준은 '나는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한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6) 주관적 안녕감(정서) 수준은 '현재 나의 삶은 전체적으로 즐겁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7.

군과 과몰입위험군 청소년은 학업과 교우관계에서 게임선용군과 일반사용자군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이들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즐겁다거나 만족하는 정도가 게임선용군과 일반사용자군 청소년에 비해 덜하다. 문제적 게임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삶에 대한 태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상태에 있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관계적 측면, 즉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게임행동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그림 Ⅷ-18]을 보면, 문제적 게임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와의 소통에서 더 어려움을 겪으며 담임교사로부터의 지지도 상대적으로 낮다.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도 문제적 게임행동 집단에서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게임 과몰입에 동반되는 ADHD, 불안,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원활하지 못한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낮은 자존감 등의 문제는 전문적 상담과 대안적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Ⅷ-18] 청소년의 게임행동 유형별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 2016




주: 1) 전국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2)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음.
3)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은 '부모님과 대화할 때, 나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4) 교사지지 수준은 '나의 담임선생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도와주신다'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0-3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7.

#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 청년층은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과 학습, 중년층은 가벼운 운동이나 등산과 같은 신체활동, 노년층은 산책, 종교활동, 낮잠, 바둑 등과 같은 정적인 활동을 한다.
-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으로 청년층은 데이트, 중년층은 음주, 노년층은 겜블 및 복권을 꼽는다.
- 젊은 세대일수록 시간 부족 때문에 여가활동이 만족스럽지 않은 반면 나이든 세대일수록 여가 정보 부족이나 여가 동반자 부재 등 다양한 이유로 여가활동에 불만족한다.
- 여가활동 취향은 주로 세대 간 차이에 따라 설명되는 반면 여가활용 방식에는 세대 간 차이와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여가 연구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여가활동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생애주기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는 가족생활주기나 노동시장 진출입에 따른 생활여건의 변화, 동년배와의 관계 속에서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여가경력이나 여가교육의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애주기 구분 기준이 되는 연령 범주가 연구자에 따라 달라 명확히 합의된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대 구분의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최근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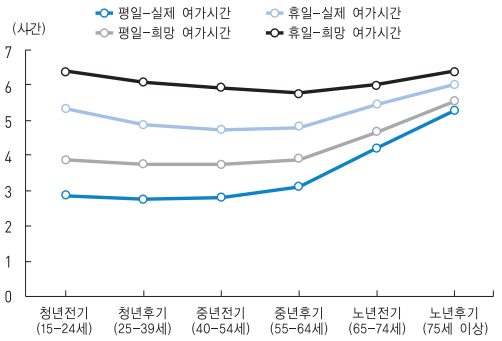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UN의 논의와 고령화 연구 등 선행 논의를 참고하여 청년, 중년, 노년으로 구분한 후 각 세대를 다시 전기와 후기로 세분하여 총 6세대로 분류하였다. 즉, 여기서는 15–24세를 청년전기, 25–39세를 청년후기, 40–54세를 중년전기, 55–64세를 중년후기, 65–74세를 노년전기, 75세 이상을 노년후기로 정의한다.

분석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집한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로 보면, 각 세대의 비율은 청년전기 15.0%, 청년후기 24.7%, 중년전기 28.7%, 중년후기 15.9%, 노년전기 11.6%, 노년후기 4.0%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세대 분류 기준을 가지고 여가활동의 여건, 여가활동의 종류와 사회적 성격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등이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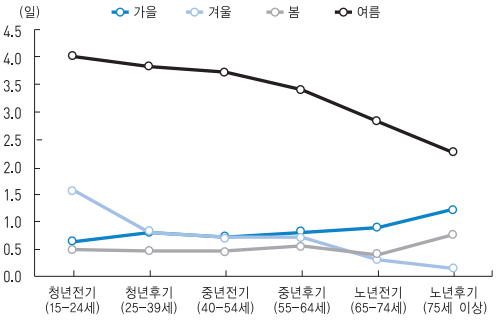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은 여가의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다. 여기서는 우선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여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 여가시간을 살펴보고 지난 1년간 분기별 휴가일수를 알아본다. [그림 Ⅶ–19]에 따르면, 청년층과 중년층 모두 평일에

[그림 Ⅶ-19] 생애주기별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 여가시간, 2016




주: 1)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얼마인지를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그림 Ⅶ-20] 생애주기별 휴가일수, 201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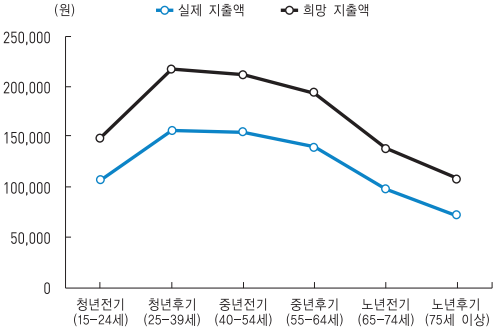

주: 1) 가을과 겨울은 각각 2015년 3/4분기와 4/4분기의 휴가일수이고, 봄과 여름은 각각 2016년 1/4분기와 2/4분기의 휴가일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는 3시간, 휴일에는 5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을 가진다.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실제 여가시간보다 1시간 정도 더 많다. 노년층의 여가시간은 다른 세대보다 더 많고 그 차이가 평일에 더 크다. 노년층은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 여가시간의 차이가 다른 세대에 비해 적다.

[그림 Ⅶ-20]은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여름까지 분기별 휴가일수가 누적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연간 휴가일수는 평균 5.9일로 조사되었는데, 청년전기의 휴가일수가 6.7일로 가장 길고 나이가 들수록 휴가일수가 짧아져 노인후기의 휴가일수는 4.5일에 그친다. 계절적으로는 모든 세대에서 여름의 휴가일수가 가장 길다. 상대적으로 청년전기의 겨울 휴가일수와 노인후기의 가을 휴가일수가 길다.

[그림 Ⅶ-21]은 생애주기별 여가비용과 희망 여가비용을 보여준다. 청년후기에 한 달 15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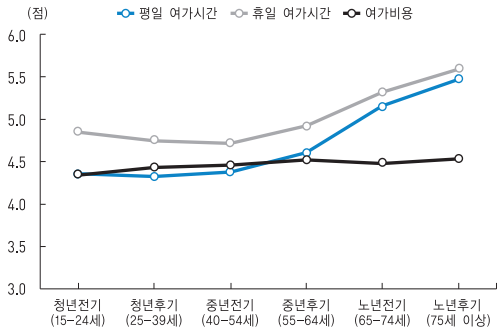
[그림 Ⅶ-21] 생애주기별 여가활동비 실제 지출액과 희망 지출액, 2016




주: 1) 지난 1년 동안 여가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지출한 비용임.
2) 희망비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한 달 평균 여가비용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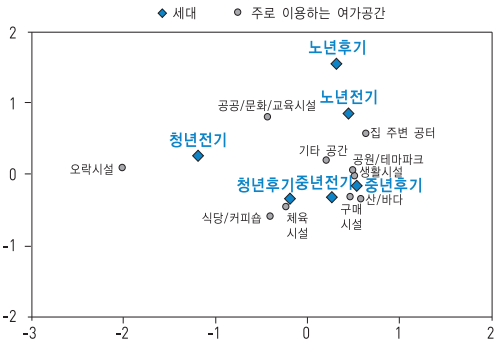
이상으로 가장 많은 여가비용을 지출하고 나이가 들수록 여가비용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희망 여가비용은 실제 여가비용보다 약 5만 원 정도 많은데, 그 차이는 청년후기와 중년후기 사이에서

[그림 Ⅶ-22] 생애주기별 여가 시간 및 비용의 충분도, 2016




주: 1) 충분도는 지난 1년 동안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부터 '매우 충분했다'까지 1점에서 7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그림 Ⅶ-23] 생애주기와 주로 이용하는 여가공간, 2016




주: 1) 지난 1년 동안 집 이외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임.
2) 68개 공간을 10개 범주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함.
3) 청년전기는 15-24세, 청년후기는 25-39세, 중년전기는 40-54세, 중년후기는 55-64세, 노년전기는 65-74세, 노년후기는 75세 이상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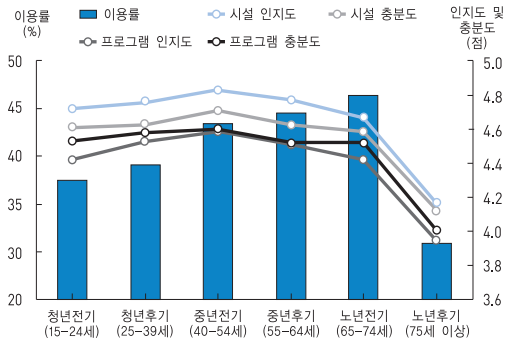
가장 크다. 청년전기의 여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 시기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Ⅶ-22]에서는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세대별로 보여준다. 여가비용의 충분 여부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여가시간의 충분 여부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큰 차이가 난다. 청년층과 중년층은 노년층에 비해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이는 특히 평일 여가시간에서 두드러진다.

## 여가공간과 여가시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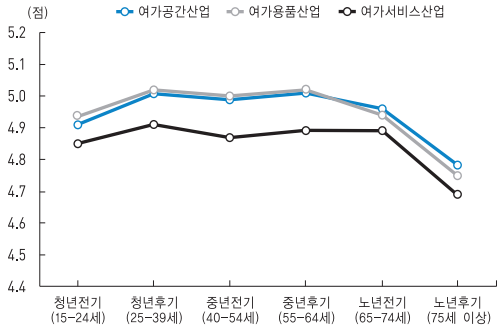
다음으로 여가활동을 가능케 하는 여건으로서 여가공간과 여가시설, 여가산업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대응분석을 이용하였다. 대응분석은 범주형 변수의 범주를 공간에 표시하여 범주형 변수 사이의 관계와 각 범주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그림 Ⅶ-23]은 생애주기별 여가공간 이용의 차이를 보여준다. 청년후기와 중년기가 여가공간 이용에 유사하며 청년전기나 노년기와 차이를 가진다. 청년후기와 중년기에는 체육시설, 산과 바다, 구매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청년전기에는 오락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년기에는 생활시설, 집주변 공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문화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청년전기와 노년기 모두에서 높다. 희망하는 여가공간은 실제 이용하는 여가공간과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청년기에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식당 및 커피숍이나 구매시설의 경우 노년기에 실제 이용

[그림 Ⅷ-24] 생애주기별 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과 인식, 2016




주: 1) 공공문화여가시설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 관리하는 문화 체육시설을 의미함.
2) 이용률은 생활권 내 공공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시설 인지도는 생활권 내 어떠한 공공문화여가시설이 있는지 알고 있는 정도를 1-7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4) 시설 충분도는 생활권 내 공공문화여가시설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충분한지를 1-7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5) 프로그램 인지도는 공공문화여가시설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있는 정도를 1-7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6) 프로그램 충분도는 공공문화여가시설의 프로그램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충분한지를 1-7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그림 Ⅷ-25] 생애주기별 여가산업에 대한 만족도, 2016




주: 1) 여가 관련 공간산업은 호텔,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공원, 골프장, 스키장, 스포츠시설 등이며, 여가 관련 용품산업은 여행 및 캠핑용품, 스포츠용품, 낚시 용품 등이며, 여가 관련 서비스산업은 전시 및 행사업체, 공연산업, 여행회사, 오락관련서비스 등임.
2) 만족도는 각 산업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를 1-7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보다 희망 비율이 높아서 노년층에게 생활편의시설을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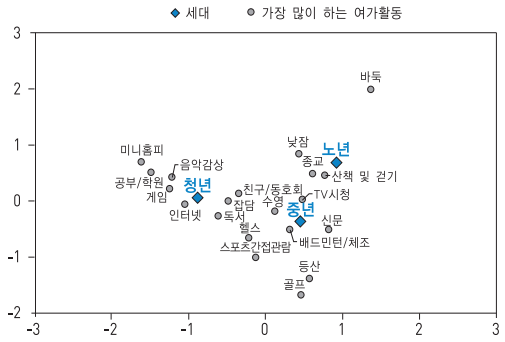
[그림 Ⅷ-24]와 [그림 Ⅷ-25]는 생활권 내 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 및 인식과 여가산업에 대한 만족도의 생애주기별 차이를 보여준다. 대체로 청년후기부터 중년후기 사이에 여가시설 이용률과 인지도 및 충분도 수준이 높고 여가산업 만족도도 높다. 다만, 여가시설 이용은 노년전기에 가장 활발하다가 노년후기에 급격하게 줄어든다.

## 여가활동

생애주기에 따라 여가활동을 어떻게 달리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대별로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과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림 Ⅷ-26]과 [그림 Ⅷ-27]은 세대와 여가활동의 관계에 대한 대응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대응분석에서는 각 세대 전기와 후기의 차이가 크지 않아 청년층과 중년층, 노년층으로만 구분하였다.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 청년층은 인터넷, 게임, 음악감상, 공부, 미니홈피 등을 하고, 중년층은 배드민턴, 체조와 같은 가벼운 운동, 신문읽기, 등산, 골프 등을 하며, 노년층은 산책, 종교활동, 낮잠, 바둑 등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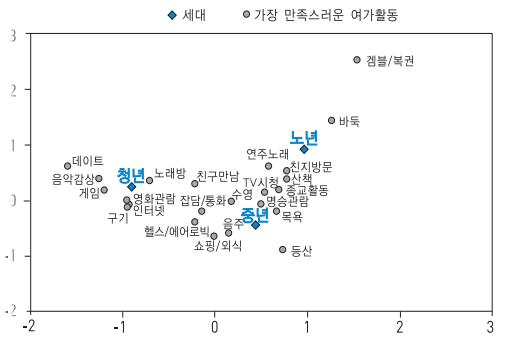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은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과 대체로 비슷하다.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림 Ⅶ-26] 생애주기와 주된 여가활동,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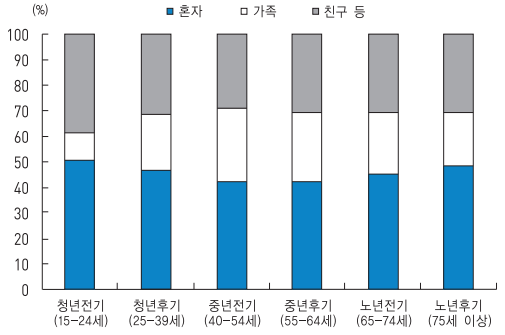

주: 1) 세대별로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 15가지를 선택하여 대응분석으로 제시한 결과임.
2) 청년은 15–39세, 중년은 40–64세, 노년은 65세 이상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그림 Ⅶ-27] 생애주기와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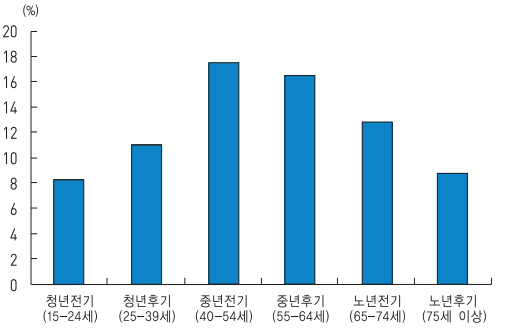

주: 1) 세대별로 가장 보람 있는 여가활동 15가지를 선택하여 대응분석으로 제시한 결과임.
2) 청년은 15–39세, 중년은 40–64세, 노년은 65세 이상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그림 Ⅶ-28]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동반자, 2016




주: 1)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5순위까지 동반자 조사의 다중응답을 교차분석한 결과임.
2) 직장동료, 동호회, 기타 등 응답비율이 낮은 범주는 친구에 포함하여 제시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그림 Ⅶ-29] 생애주기별 여가 동호회 참여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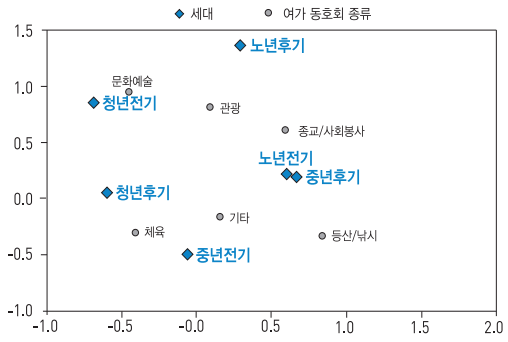

주: 1)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여가활동을 위해 동호회 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으로서 청년층은 데이트, 중년층은 음주, 노년층은 겜블 및 복권을 꼽는다.

여가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오늘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림 Ⅶ-28]과 [그림 Ⅶ-29]는 여가활동 동반자와 여가 동호회 참여의 생애주기별 차이를 보여준다. 두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가활동의 사회적 성격은 중년층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년층은 여가활동을 혼자 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여가 동호회 참여율이 가장 높다. 청년층은 여가활동 동반자로 가족 대신 친구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노년층은 중년층에 비해 가족 동반 여가활동의 비율이 낮고 혼자 하는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다. 여가 동호회 참여는 청년전기에서 중년전기로 가면서 높아지다가 이후 노년기가 되면 낮아진다.

[그림 Ⅶ-30] 생애주기와 여가 동호회 종류,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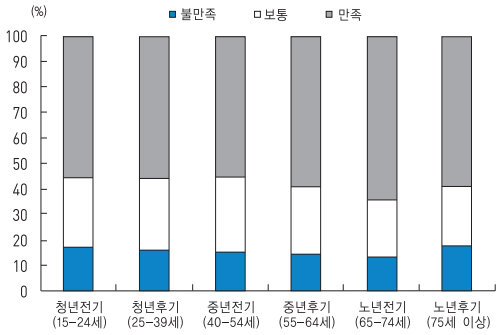

주: 1) 지난 1년 동안 여가 동호회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세대별로 참여한 여가 동호회의 주된 활동을 대응분석으로 제시한 결과임.
3) 청년전기는 15-24세, 청년후기는 25-39세, 중년전기는 40-54세, 중년후기는 55-64세, 노년전기는 65-74세, 노년후기는 75세 이상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그림 Ⅶ-30]은 생애주기에 따른 동호회 종류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청년전기에는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가 많고 청년후기와 중년기가 되면 체육 동호회 참여가 많아지며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가면 종교활동, 사회봉사 및 관광 동호회 참여가 늘어난다.

## 여가에 대한 만족과 인식

마지막으로 여가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생애주기별로 비교하였다. [그림 Ⅶ-31]은 여가 만족도의 세대별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가 만족도는 청년기와 중년전기보다 중년후기와 노년기에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Ⅶ-31] 생애주기별 여가만족도, 2016




주: 1)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을 묻는 7점 척도 질문의 응답을 '불만족', '보통', '만족'으로 재범주화한 결과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표 Ⅶ-3〉 생애주기별 여가 불만 이유,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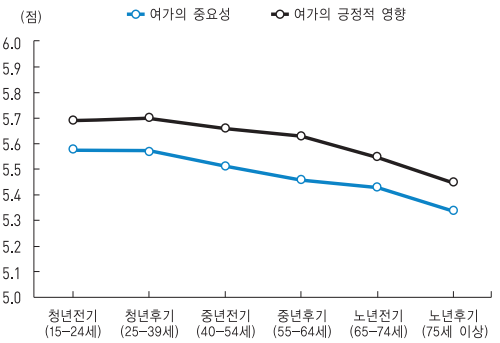
(%)

| 여가불만이유 | 청년 전기 | 청년 후기 | 중년 전기 | 중년 후기 | 노년 전기 | 노년 후기 |
|---|---|---|---|---|---|---|
| 시간 부족 | 62.9 | 60.1 | 55.9 | 45.4 | 23.2 | 10.4 |
| 경제적 부담 | 27.5 | 29.1 | 31.4 | 35.7 | 45.4 | 36.8 |
|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 3.7 | 4.6 | 5.2 | 6.3 | 8.7 | 14.2 |
| 여가시설 부족 | 3.8 | 3.9 | 3.8 | 4.6 | 3.6 | 9.2 |
| 여가동반자 부재 | 0.7 | 0.8 | 1.7 | 2.4 | 7.6 | 9.9 |
| 여가 경험 및 노하우 부족 | 1.5 | 1.5 | 2.0 | 5.6 | 11.6 | 19.6 |

주: 1) 청년전기는 15-24세, 청년후기는 25-39세, 중년전기는 40-54세, 중년후기는 55-64세, 노년전기는 65-74세, 노년후기는 75세 이상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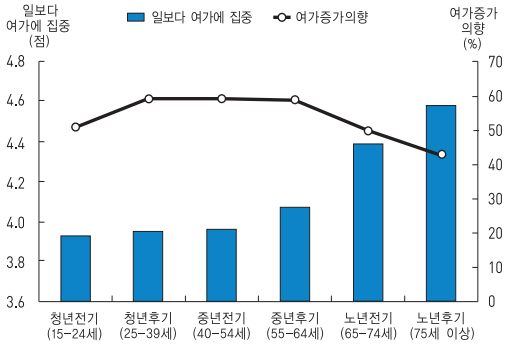
〈표 Ⅶ-3〉에는 여가 불만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표는 생애주기에 따라 여가 불만 이유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

[그림 Ⅶ-32] 생애주기별 여가의 중요성과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2016




주: 1) 여가의 중요성은 '여가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1–7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2) 여가의 긍정적 영향은 '여가활동이 귀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1–7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그림 Ⅶ-33] 생애주기별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인식, 2016




주: 1) '일보다 여가 집중'은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부터 '여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까지 1–7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2) '여가증가의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활용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가시간을 늘릴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6.

일수록 시간 부족을 불만 이유로 꼽는 비율이 높고,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경제적 부담,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여가시설 부족, 여가 동반자 부족, 여가 경험 부족 등을 불만 이유로 지적하는 비율이 높다.

여가에 대한 인식은 일이나 삶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중요성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림 Ⅶ-32]는 여가활동이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 따르면, 여가의 중요성과 긍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청년층에서 높게 인식되고 노년층에서 낮게 인식된다.

[그림 Ⅶ-33]은 일과 여가의 균형이 생애주기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청년기와 중년전기에는 일과 여가 중 일에 더 집중하는 반면 중년후기와 노년기에는 여가생활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노년후기를 제외하고 여가시간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 비율은 특히 청년후기와 중년기 사이에 더 높다. 노년후기에는 여가시간보다 필수유지시간을 늘리겠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2017 Housing & Transport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7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Ⅷ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 서울대학교 214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태와 거주자 특성 222
이영성 | 서울대학교, 유현지 | 서울대학교

빅데이터로 읽는 교통과 사회 228
장수은 | 서울대학교, 한상진 | 한국교통연구원

#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서울대학교)

- 주택보급률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100.5%에서 102.3%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도 356.8호에서 383.0호로 약 7% 증가하였다.
-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 2000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2016년 기준 각각 23.1%와 9.8배에 달한다.
- 지역 간 주택수급의 편차와 소득계층 간 주택 점유 안정성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 현재 약 194만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
-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현재 가구당 1.14대, 인구 1,000명당 431.3대에 달한다. 도로망과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2016년 기준 도로는 10만 428㎞, 2015년 기준 철도는 3,873㎞에 이르며, 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도로도 크게 확충되었다.
-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2015년 기준 35.4분이며,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큰 변화가 없다.
- 보편적 이동권과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2016년 현재 저상버스는 6,447대, 특별교통수단은 2,820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를 살펴본다. 주거 영역에서는 주택보급률이나 주택가격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함과 아울러 주거안정성과 주거복지 문제도 다룬다. 교통영역에서는 교통시설의 확충과 이동성 향상, 교통서비스 수준과 삶의 질 그리고 보편적 이동권과 교통복지 문제를 살펴본다.

## 주거시설 확충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표 Ⅷ-1〉은 2010년 이후 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등 주거시설 현황을 보여준다. 2010-2015년 사이 주택보급률은 100.5%에서 102.3%로 1.8%p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도 356.8호에서 383.0호로 약 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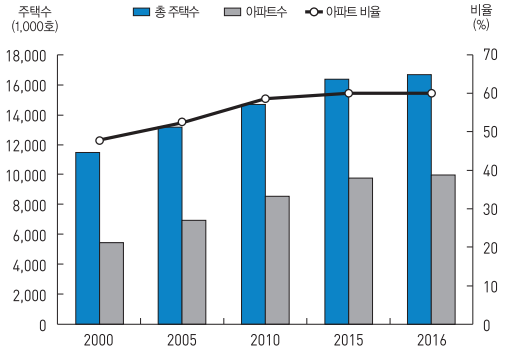
〈표 Ⅷ-1〉 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수, 2010-2015

| 연도 | 가구수 (1,000가구) | 주택수 (1,000호) | 주택 보급률 (%) | 인구 1,000명당 주택수(호) |
|---|---|---|---|---|
| 2010 | 17,656 | 17,739 | 100.5 | 356.8 |
| 2011 | 17,928 | 18,082 | 100.9 | - |
| 2012 | 18,209 | 18,414 | 101.1 | - |
| 2013 | 18,500 | 18,742 | 101.3 | - |
| 2014 | 18,800 | 19,161 | 101.9 | - |
| 2015 | 19,111 | 19,559 | 102.3 | 383.0 |

주: 1) 가구수는 보통가구(혈연가구), 1인가구, 5인 이하 비혈연가구등을 포함한 일반가구 기준임.
2) 주택보급률 = 주택수 ÷ 가구수 × 100.
출처: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2005-2015)」, 2016.

주거시설의 확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Ⅷ-1]은 전체 주택 및 아파트의 수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7.8%에서 2016년 60.1%로 12.3%p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한국인이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데, 급격히 이루어진 도시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Ⅷ-1] 총 주택수와 아파트수, 2000-2016




주: 1) 아파트 비율=(아파트수÷총 주택수)×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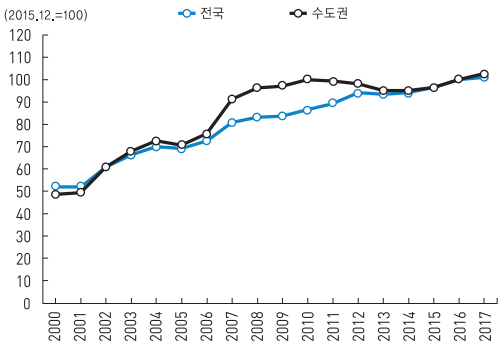
## 주택가격과 주거만족도

전국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림 Ⅷ-2]는 2000-2017년의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을 조사하여 2015년 12월 가격을 100으로 지수화한 것이다. 매매가격 지수는 2000년 52에서 2017년 10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세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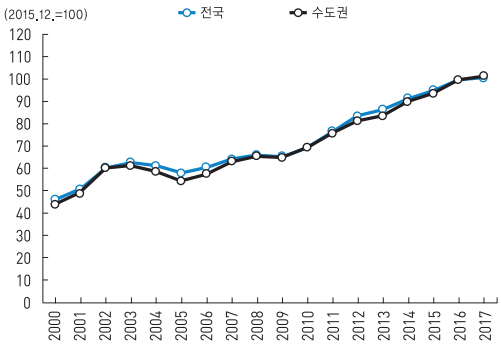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상승은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표 Ⅷ-2〉는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을 나타낸 것이다. RIR은 2006년 18.7%에서 2014년 20.3%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 18.1%로 다시 낮아졌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RIR은 2016년 기준

[그림 Ⅷ-2] 전국 및 수도권의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종합지수, 2000-2017

1)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2)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주: 1) 해당연도 3월 기준임.
출처: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 2017. 9.

23.1%에 달하며, 이는 전체 평균보다 높다. 같은 기간 PIR은 4.2배에서 5.6배로 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의 PIR은 9배가 넘지만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5.6배와 5배에 그친다. RIR과 PIR의 소득계층 간 차이를 볼 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Ⅷ-2〉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및 주택가격 비율, 2006-2016

| | 2006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
|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 | | | | | |
| 전체 | 18.7 | 17.5 | 19.2 | 19.8 | 20.3 | 18.1 |
| 저소득층 | 27.6 | 25.0 | 28.2 | 21.8 | 29.0 | 23.1 |
| 중소득층 | 18.9 | 17.6 | 16.6 | 17.3 | 17.0 | 14.9 |
| 고소득층 | 16.1 | 17.4 | 21.1 | 22.6 | 21.6 | 19.0 |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배) | | | | | | |
| 전체 | 4.2 | 4.3 | 4.3 | 5.1 | 4.7 | 5.6 |
| 저소득층 | 6.3 | 6.4 | 6.1 | 7.5 | 8.3 | 9.8 |
| 중소득층 | 3.4 | 4.3 | 4.2 | 4.3 | 5.0 | 5.6 |
| 고소득층 | 3.6 | 4.2 | 4.0 | 4.4 | 4.7 | 5.0 |

주: 1)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중위 월임대료÷중위 월소득×100.
2)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중위 주택가격÷중위 연소득.
3)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1-4분위, 중소득층은 5-8분위, 고소득층은 9-10분위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Ⅷ-3〉 거주특성별 주택만족도, 2014, 2016

(점)

| | 2014 | 2016 |
|---|---|---|
| 전체 | 2.92 | 2.99 |
| 지역 | | |
| 수도권 | 2.88 | 3.01 |
| 광역시 | 2.96 | 2.98 |
| 도지역 | 2.96 | 2.98 |
| 소득계층 | | |
| 저소득층 | 2.80 | 2.86 |
| 중소득층 | 2.95 | 3.04 |
| 고소득층 | 3.08 | 3.18 |
| 주택점유형태 | | |
| 자가 | 2.99 | 3.07 |
| 전세 | 2.87 | 2.93 |
| 보증금 있는 월세 | 2.82 | 2.92 |
| 보증금 없는 월세 | 2.63 | 2.64 |
| 무상 | 2.85 | 2.90 |
| 주택유형 | | |
| 단독주택 | 2.79 | 2.83 |
| 아파트 | 3.04 | 3.15 |
| 연립주택 | 2.78 | 2.81 |
| 다세대주택 | 2.78 | 2.82 |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2.87 | 2.76 |
| 주택 이외의 거처 | 2.97 | 3.07 |

주: 1) 주택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을 4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도지역은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임.
3)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됨.
4)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1-4분위, 중소득층은 5-8분위, 고소득층은 9-10분위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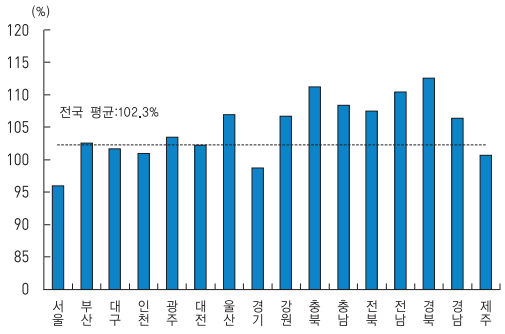
만성적 주거비 부담으로 국민의 주거만족도도 보통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표 Ⅷ-3〉의 주택만족도를 보면 지역, 소득계층, 점유형태,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4점 만점에 3점 내외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항목에서 2014년 대비 2016년의 주택만족도가 미미하게나마 높게 나타났다.

## 주거안정성과 주거복지

주거비 부담이 높고 지역 간 주택수급의 편차가 크며 소득계층 간 주택점유 안정의 균형이 깨진 것이 주거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

이다. [그림 Ⅷ-3]의 시도별 주택보급률(2015년 기준)을 보면, 서울 96.0%, 인천 101.0%, 경기도 98.7% 등으로 수도권의 평균 주택보급률은 98.6%에 불과하나 수도권 외 지역의 평균 주택보급률은 106.2%에 이른다. 이러한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은 1인가구의 증가, 가구규모의 감소, 인구집중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림 Ⅷ-3] 시도별 주택보급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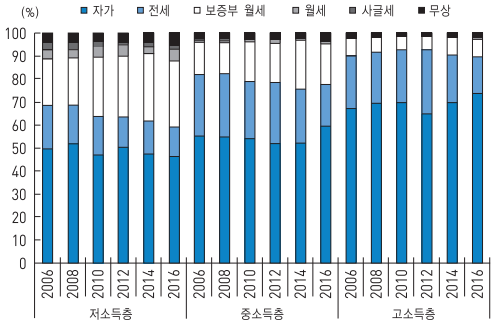



주: 1)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2005-2015)」, 2016.

[그림 Ⅷ-4]는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를 보여준다. 2006-2016년 사이 저소득층의 자가 비중은 연도별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전세 비중도 18.8%에서 12.9%로 5.9%p 감소하였다. 반면, 보증부월세와 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2006년 27.5%에서 2016년 35.3%로 7.8%p 증가하였다. 이 비중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각각 19.2%와 8.3%로 나타나 소득계층간 주거안정성의 차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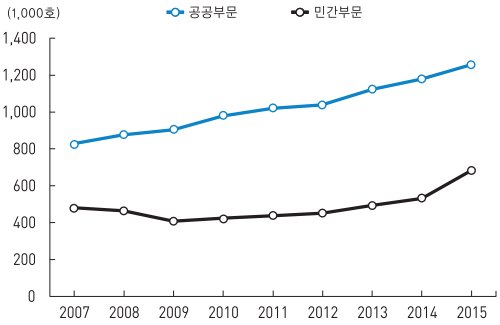
[그림 Ⅷ-4]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 2006-2016




주: 1) 저소득층은 가구소득 1-4분위, 중소득층은 5-8분위, 고소득층은 9-10분위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대주택이 보급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해 저소득층의 부담 능력에 맞춰 영구, 국민, 10년, 장기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다. [그림 Ⅷ-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재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5년 현재 약 194만 호가 공급되었다. 특히, 공공부문 임대주택은 2007년 약 81만 호에서 2015년 약 126만 호로 약 55%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Ⅷ-5] 공공 및 민간 부문 임대주택 재고, 2007-2015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연도.

## 교통시설 확충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Ⅷ-4〉의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보면, 2000년 약 1,200만 대에서 2017년 약 2,200만 대로 증가하였다.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도 계속 증가하여 각각 1.14대와 431.3대에 이른다. 이는 2000년 대비 각각 37%와 68% 증가한 수준이다.

〈표 Ⅷ-4〉 자동차 등록대수, 2000-2017

| 연도 | 자동차 등록대수 (1,000대) |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대) |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대) |
|---|---|---|---|
| 2000 | 12,059 | 0.83 | 256.5 |
| 2005 | 15,397 | 0.96 | 319.5 |
| 2010 | 17,941 | 1.03 | 362.1 |
| 2011 | 18,437 | 1.03 | 369.2 |
| 2012 | 18,871 | 1.04 | 375.9 |
| 2013 | 19,401 | 1.06 | 384.7 |
| 2014 | 20,118 | 1.08 | 396.4 |
| 2015 | 20,990 | 1.10 | 411.4 |
| 2016 | 21,803 | 1.13 | 425.5 |
| 2017 | 22,189 | 1.14 | 431.3 |

주: 1) 2017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7년 6월 기준임.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장래가구추계」, 2017.

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표 Ⅷ-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도로 연장은 2000년 8만 2,440㎞에서 2016년 10만 428㎞로 약 22% 증가하였다. 인구 1,000명당 도로 연장과 국토 1㎢당 도로 연장도 2016년 현재 각각 1.96㎞와 1㎞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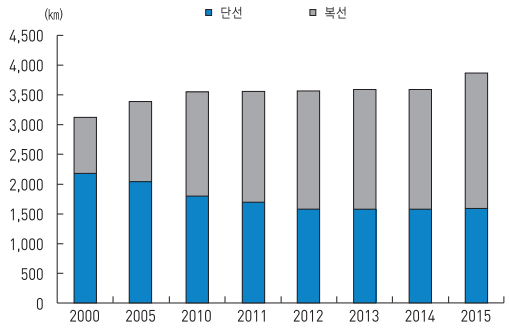
〈표 Ⅷ-5〉 도로연장, 2000-2016

| 연도 | 도로 연장 (km) |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km) |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km/㎢) |
|---|---|---|---|
| 2000 | 82,440 | 1.75 | 0.83 |
| 2005 | 90,817 | 1.88 | 0.91 |
| 2010 | 94,230 | 1.90 | 0.94 |
| 2011 | 94,656 | 1.90 | 0.95 |
| 2012 | 96,948 | 1.93 | 0.97 |
| 2013 | 96,418 | 1.91 | 0.96 |
| 2014 | 97,920 | 1.93 | 0.98 |
| 2015 | 99,024 | 1.94 | 0.99 |
| 2016 | 100,428 | 1.96 | 1.00 |

주: 1) 도로연장은 개통도로 기준임.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 각 연도.; 「지적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자동차의 보급과 도로망의 확충으로 교통혼잡,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림 Ⅷ-6]과 같이 철도 연장은 2000년 3,123㎞에서 2015년 3,873㎞로 약 24% 증가하였다. 특히, 복선철도 연장이 같은 기간 939㎞

[그림 Ⅷ-6] 철도연장, 2000-2015




출처: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각 연도.

에서 2,279㎞로 약 143% 늘어나 전체 철도 연장의 59%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버스 등록대수는 〈표 Ⅷ-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1년 4만 451대에서 2016년 4만 5,277대로 4,826대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버스업체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버스업체 종사자의 수는 9만 1,105명에서 9만 7,649명으로 6,544명이 증가하였다. 버스의 양적 공급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버스전용차로 연장은 2009년 714.5㎞에서 2013년 751.7㎞로 37.2㎞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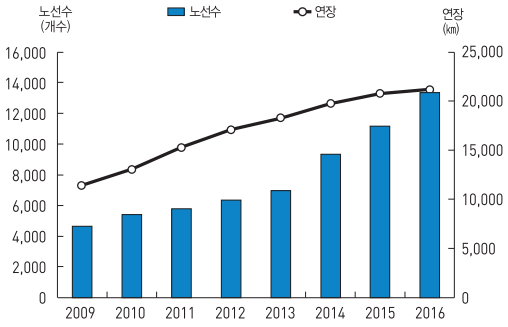
〈표 Ⅷ-6〉 버스 업체수, 종사자수 및 등록대수와 버스 전용차로연장, 2001-2016

| 연도 | 버스 업체수 (개) | 버스업체 종사자수 (명) | 버스 등록대수 (대) | 버스전용 차로연장 (km) |
|---|---|---|---|---|
| 2001 | 529 | 91,105 | 40,451 | - |
| 2003 | 539 | 92,879 | 41,635 | - |
| 2005 | 538 | 91,042 | 41,119 | - |
| 2007 | 531 | 92,861 | 42,177 | - |
| 2009 | 530 | 94,975 | 43,494 | 714.5 |
| 2011 | 522 | 95,488 | 43,738 | 714.5 |
| 2013 | 529 | 96,253 | 44,625 | 751.7 |
| 2015 | 524 | 96,964 | 44,740 | - |
| 2016 | 525 | 97,649 | 45,277 | - |

주: 1) 버스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고속버스 등을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 각 연도.

자전거도로도 크게 확충되었다. [그림 Ⅷ-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전거 노선은 2009년 4,647개소에서 2016년 1만 3,356개소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자전거도로 연장은 1만 1,387㎞에서 2만 1,179㎞로 약 86% 증가하였다.

[그림 Ⅷ-7] 자전거도로 노선수와 연장, 2009-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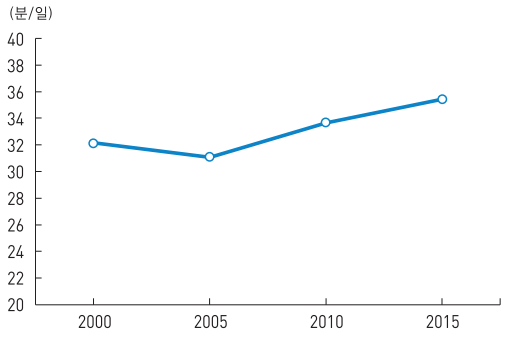



주: 1)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등을 포함함.
출처: 행정자치부, 「자전거도로현황」, 각 연도.

## 교통서비스 수준과 만족도

교통시설의 꾸준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은 정체 국면이다. [표 Ⅷ-8]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로 파악한 통근시간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35.4분으로 15년 전인 2000년의 32.1분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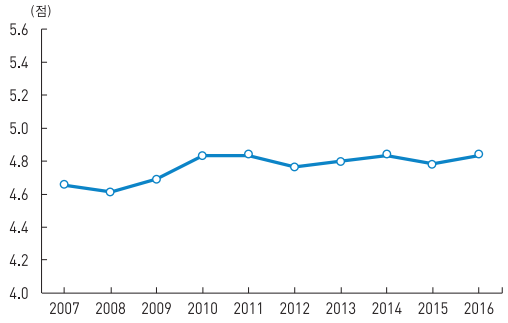
[그림 Ⅷ-8]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도 큰 변화가 없다. [그림 Ⅷ-9]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자의 종합만족도(7점 만점) 추이를 보여준다. 대중교통만족도는 2007년 4.66점에서 2016년 4.84점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림 Ⅷ-9] 대중교통만족도, 2007-2016




주: 1) 대중교통만족도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평균 점수로서 7점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7점)로 측정되었음.
출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 각 연도.

## 보편적 이동권과 교통복지

지난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표 Ⅷ-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상버스는 2010-2016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하여 2016년 현재 6,447대가 운행 중이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의 19.0%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도 꾸준히 늘어나 2016년 현재

〈표 Ⅷ-7〉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2016

| 연도 | 저상버스 | | 특별교통수단 | |
|---|---|---|---|---|
| | 운행대수 (대) | 보급률 (%) | 운행대수 (대) | 보급률 (%) |
| 2010 | 3,204 | 7.3 | 1,302 | 23.5 |
| 2011 | 3,206 | 10.0 | 1,476 | 25.5 |
| 2012 | 4,720 | 15.2 | 1,597 | 57.2 |
| 2013 | 5,447 | 16.4 | 1,752 | 63.0 |
| 2014 | 6,076 | 18.7 | 2,298 | 85.4 |
| 2015 | 6,737 | 19.9 | 2,601 | 95.4 |
| 2016 | 6,447 | 19.0 | 2,820 | 103.3 |

주: 1) 저상버스 보급률은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법정대수(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대비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표 Ⅷ-8〉 시도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6

| 시도 | 저상버스 | | 특별교통수단 | |
|---|---|---|---|---|
| | 운행대수 (대) | 보급률 (%) | 운행대수 (대) | 보급률 (%) |
| 전국 | 6,447 | 19.0 | 2,820 | 103.3 |
| 서울 | 2,757 | 37.1 | 437 | 101.4 |
| 부산 | 461 | 18.4 | 201 | 110.4 |
| 대구 | 345 | 22.7 | 128 | 100.0 |
| 인천 | 296 | 12.7 | 140 | 100.7 |
| 광주 | 171 | 17.1 | 97 | 127.6 |
| 대전 | 224 | 23.2 | 82 | 105.1 |
| 울산 | 82 | 11.2 | 51 | 102.0 |
| 세종 | 40 | 29.0 | 10 | 100.0 |
| 경기 | 1,051 | 9.9 | 651 | 112.6 |
| 강원 | 167 | 29.3 | 98 | 95.1 |
| 충북 | 114 | 19.7 | 112 | 97.4 |
| 충남 | 85 | 9.0 | 100 | 76.3 |
| 전북 | 151 | 18.2 | 139 | 103.7 |
| 전남 | 60 | 8.4 | 100 | 68.5 |
| 경북 | 91 | 7.6 | 115 | 63.9 |
| 경남 | 347 | 21.0 | 319 | 151.2 |
| 제주 | 5 | 2.6 | 40 | 102.6 |

주: 1) 저상버스 보급률은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법정대수(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대비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016.

2,820대가 운행되고 있다. 보급률로 보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 103.3% 수준이다.

그러나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2016년 기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저상버스 대수는 총 4,336대로 시내버스 1만 6,482대의 26.3%에 이르지만, 9개 광역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저상버스 대수는 총 2,111대로 시내버스 1만 7,405대의 12.1%에 불과하다.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경상남도가 151.2%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63.9%로 가장 낮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5개 광역도는 100%에 미치지 못한다(표 Ⅷ-8).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태와 거주자 특성

**이영성** (서울대학교)
**유현지** (서울대학교)

- 공공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다.
- 공공임대주택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소형과 중소형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유형의 비율이 높고, 중형 규모 이상은 공공임대 유형의 비율이 높다.
-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감소 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며 주로 영구임대 유형에 거주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사용하여 공공부문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및 공급형태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50년 이상이거나 영구적인 경우 영구임대 유형, 30년 이상인 경우 국민임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 유형은 공공택지 또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공급형태에 따라 건설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로 세분화된다. 건설임대는 공공택지 내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형태이다. 매입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5년 임대, 10년 임대로 나뉜다. 장기전세 유형은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는데,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20년까지 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도심 유휴부지나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건설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 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추이와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분석에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재고현황」 및 「주거실태조사」 자료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많아지면서 공공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공임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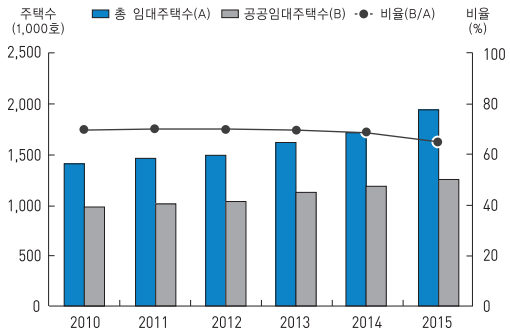
택은 2010년 97만 6,861호에서 2015년 125만 7,461호로 28.7%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총 임대주택 수도 139만 9,227호에서 193만 7,685호로 38.5% 증가하였다(그림 Ⅷ-10). 하지만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69.8%에서 2015년 64.9%로 소폭 하락하였다.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0-2015년 평균 7.3%로 낮은 편이며 변화도 크지 않다. [그림 Ⅷ-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주택 수는 2015년 1,530만여 호로 2010년 1,388만여 호 대비 10.2% 증가하였다.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0%에서 2015년 8.2%로 1.2%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해외의 공공임대주택은 나라마다 그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해외의 사회주택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득 및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계층에게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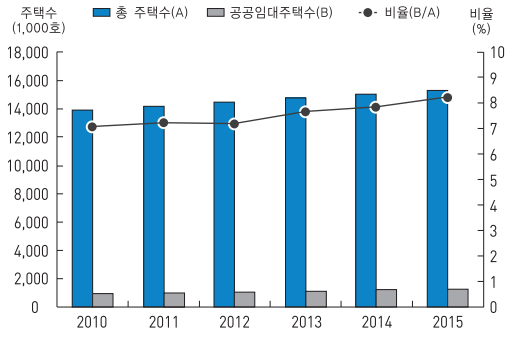
통계청의 「임대주택통계 통계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주요 국가들의 총 주택 대비 사회주택 비율은 평균 20% 내외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림 Ⅷ-12]에서와 같이 2015년 주요 국가들의 사회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네덜란

[그림 Ⅷ-10] 총 임대주택 수와 공공임대주택 수,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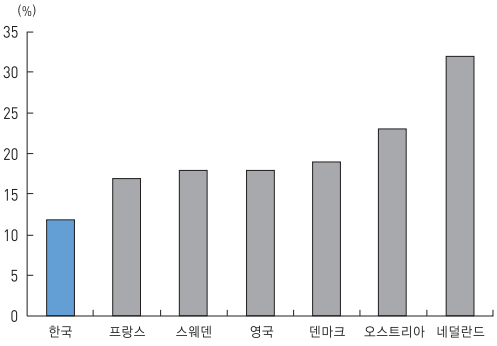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재고현황」, 각 연도.

[그림 Ⅷ-11] 총 주택 수와 공공임대주택 수, 2010-2015




주: 1) 총 주택수(빈집 제외)의 경우 2010년과 2015년 수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고, 2011-2014년 자료는 2010년 및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내삽법으로 추정한 추계치임.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재고현황」, 각 연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2015.

[그림 Ⅷ-12] 한국과 유럽 주요 국가의 사회주택 비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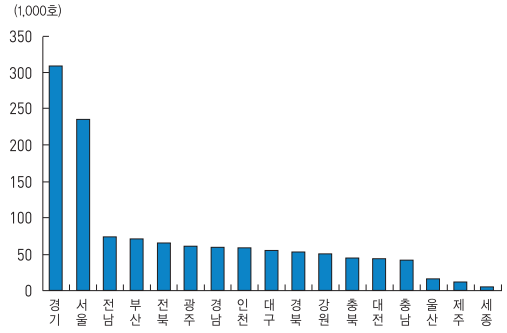



주: 1) 사회주택(Social Housing) 비율은 각 국의 총 주택 중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재고현황」, 각 연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임대주택통계 통계정보 보고서」, 2016.

드가 32.0%로 가장 높으며 오스트리아 23.0%, 덴마크 19.0%, 스웨덴과 영국 18.0% 등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시도별로 일관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수는 30만 9,037호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24.6%에 달한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8.7%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그림 Ⅷ-13).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수는 2010년 20만 8,856호에서 2015년 30만 9,037호로 48.0%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는 16만 8,108호에서 23만 5,451호로 40.1%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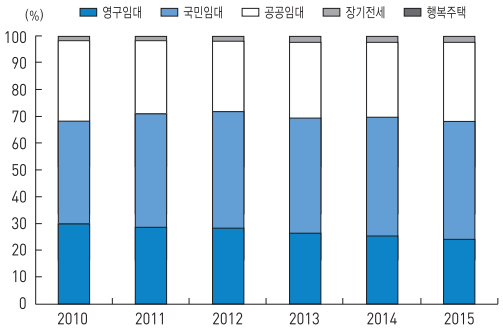
[그림 Ⅷ-13]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수, 2015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재고현황」, 201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는 임차인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림 Ⅷ-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5년 기준 국민임대 유형은 55만 3,408호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44.0%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 공공임대 유형이 37만 1,304호, 영구임대 유형이 30만 3,839호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각각 29.5%와 24.2%를 차지한다. 장기전세 유형은 2만 8,063호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2.2% 수준이며, 최근에 건설하기 시작한 행복주택은 847호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0.1%에 불과하다.

[그림 Ⅷ-14]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유형별 구성비율, 2010-2015




주: 1) 영구임대유형은 영구임대, 50년 임대 등을 포함함.
2) 공공임대유형은 10년 임대주택, 5년 임대주택, 사원임대, 전세임대 등을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재고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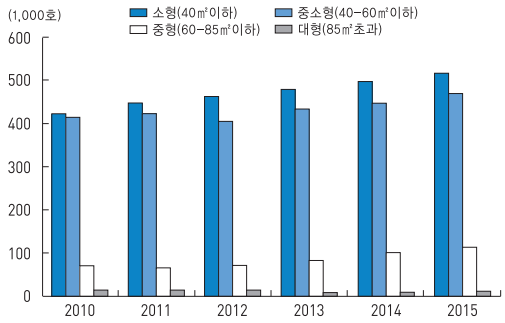
면적별로 보면, 대형보다는 중형 이하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과 2015년 사이 소형(40㎡ 이하) 공공임대주택 수는 42만 3,050호에서 51만 6,727호로 22.1%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소형(40-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41만 6,063호에서 47만 919호로, 중형(60-85㎡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7만 1,015호에서 11만 4,762호로 각각 13.2%와 61.6% 증가하였다. 반면, 대형(85㎡ 초과) 공공임대주택은 1만 4,327호에서 1만 2,983호로 9.4% 감소하였다. 2015년 현재 소형과 중소형 공공임대주

택의 비율은 88.5%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Ⅷ-15).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면적별로 보면, [그림 Ⅷ-16]에서와 같이 소형과 중소형에서는 국민임대 유형의 비중이 높고 중형과 대형에서는 공공임대 유형의 비중이 높다. 2015년 기준 소형과 중소형에서 국민임대 유형의 비율은 각각 41.5%와 69.5%에 이르고, 중형과 대형에서 공공임대 유형의 비율은 각각 83.6%와 61.8%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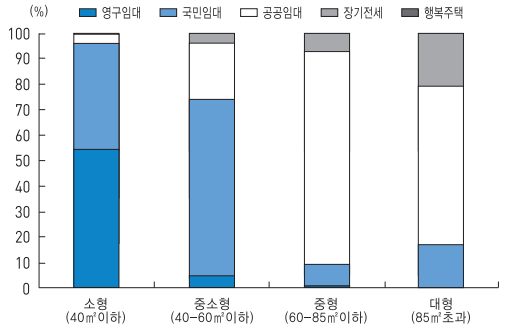
지난 2010-2015년 기간 동안 국민임대 유형은 소형과 중소형에서 각각 67.2%와 38.0% 증가했으며, 특히 중형에서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형에서는 64.1%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영구임대 유형은 소형에서 5.4% 증가하였고 중소형

[그림 Ⅷ-15] 면적별 공공임대주택 수, 2010-2015




주: 1) 전세임대의 경우 면적 분류 불가로 제외됨.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재고현황」, 각 연도.

[그림 Ⅷ-16]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및 임대유형별 구성 비율, 2015




주: 1) 영구임대유형은 영구임대, 50년 임대 등을 포함함.
2) 공공임대유형은 10년 임대주택, 5년 임대주택, 사원임대 등을 포함함 (전세임대의 경우 면적 분류 불가로 제외).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재고현황」, 2015.

〈표 Ⅷ-9〉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및 임대유형별 주택수, 2010, 2015

| 면적 및 임대유형 | 주택수(호) | | 2010년 대비 2015년 증감률(%) |
|---|---|---|---|
| | 2010 | 2015 | |
| 소형(40㎡ 이하) | | | |
| 영구임대 | 266,115 | 280,612 | 5.4 |
| 국민임대 | 128,230 | 214,431 | 67.2 |
| 공공임대 | 28,255 | 20,699 | -26.7 |
| 장기전세 | 450 | 146 | -67.6 |
| 행복주택 | - | 839 | - |
| 중소형(40-60㎡ 이하) | | | |
| 영구임대 | 24,659 | 22,227 | -9.9 |
| 국민임대 | 237,101 | 327,156 | 38.0 |
| 공공임대 | 145,748 | 104,596 | -28.2 |
| 장기전세 | 8,555 | 16,932 | 97.9 |
| 행복주택 | - | 8 | - |
| 중형(60-85㎡ 이하) | | | |
| 영구임대 | 422 | 1,000 | 137.0 |
| 국민임대 | 4,375 | 9,583 | 119.0 |
| 공공임대 | 61,140 | 95,918 | 56.9 |
| 장기전세 | 5,078 | 8,261 | 62.7 |
| 행복주택 | - | 0 | - |
| 대형(85㎡ 초과) | | | |
| 영구임대 | 45 | 0 | -100.0 |
| 국민임대 | 6,235 | 2,238 | -64.1 |
| 공공임대 | 6,556 | 8,021 | 22.3 |
| 장기전세 | 1,491 | 2,724 | 82.7 |
| 행복주택 | - | 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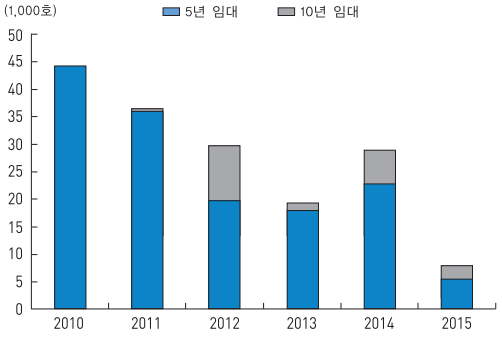
주: 1) 영구임대유형은 영구임대, 50년 임대 등을 포함함.
2) 공공임대유형은 10년 임대주택, 5년 임대주택, 사원임대 등을 포함함 (전세임대의 경우 면적 분류 불가로 제외).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재고현황」, 각 연도.

에서는 9.9% 감소하였으며 중형에서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0년 45호에 불과했던 대형 영구임대 유형은 2015년에 모두 없어졌다. 공공임대 유형은 소형과 중소형에서 평균 27.5% 감소했지만 중형과 대형에서 평균 39.6% 증가하였다. 장기전세 유형은 소형에서 67.6% 감소했지만 중소형, 중형, 대형 등에서는 평균 81.1% 증가하였다. 행복주택은 최근에 건설되어 2015년 현재 소형과 중소형을 합쳐 800여 호에 불과하다(표 Ⅷ-9).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Ⅷ-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2010년 4만 4,101호에서 2015년 7,964호로 81.9%나 감소하였다. 5년 임대 분양전환 실적 또한 2015년 5,524호로 2010년 대비 87.5% 감소하였다. 다만, 10년 임대 분양전환 실적은 2010년 이후 소폭 증가하여 2015년 2,440호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전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에서 5년 임대 전환 실적은 69.4%이고 10년 임대 전환 실적은 30.6%이다.

[그림 Ⅷ-1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수,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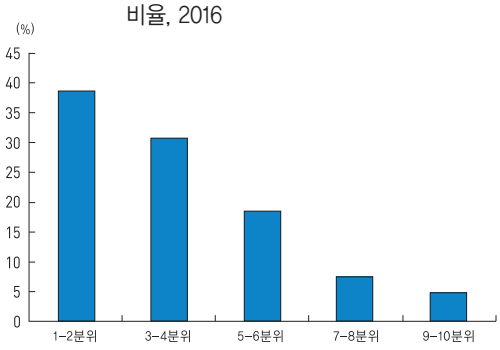

주: 1) 분양전환은 5년 및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관이 경과한 후에 임대주택을 임차인 등에게 공급하는 것임.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 각 연도.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특성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주로 저소득층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총 73만 9,856가구 중 1-2분위 소득계층이 28만 5,159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4분위와 5-6분위 소득계층이 각각 22만 7,147가구와 13만 6,274가구이다. 저소득층(1-4분위) 가구가 총 51만 2,306가구로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69.4%에 이른다. 중소득층(5-8분위) 가구는 25.8%이며, 고소득층(9-10분위) 가구는 4.8%로 매우 낮다(그림 Ⅷ-18).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소득계층별 임대유형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구는 영구임대 유

[그림 Ⅷ-18]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성비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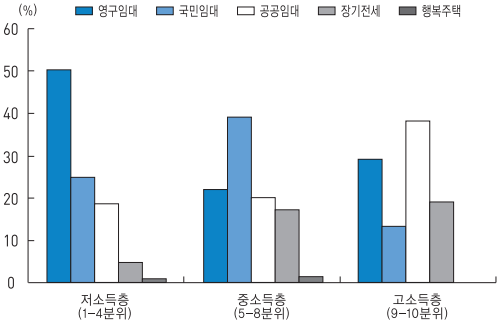

주: 1) 소득 '모름/무응답' 제외.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6.

형에 가장 많이 거주한다. 2016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영구임대 유형 거주 가구가 30만 9,971가구(42.0%)로 가장 많고 이어 국민임대 유형 20만 8,367가구(28.2%), 공공임대 유형 14만 8,298가구(20.1%), 장기전세 유형 6만 4,165가구(8.7%), 행복주택 7,432가구(1.0%) 순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영구임대 유형 거주 가구가 50.3%로 가장 많고 이어 국민임대 유형과 공공임대 유형 거주 가구가 각각 25.1%와 18.8%를 차지한다. 중소득층 가구는 국민임대 유형 거주 비율이 39.3%로 가장 높고, 고소득층 가구는 공공임대 유형 거주 비율이 38.3%로 가장 높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행복주택 거주 비율은 1.0% 내외로 매우 낮다(그림 Ⅷ-19).

고소득층 가구의 공공임대 유형 거주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까지 1-2인 가구를 거주 대상에서 분리하지 않고 3인 이하 가구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1-2인 가구의 소득이 3인가구의 입주기준이 되는 소득과 동일하여도 자격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고소득 1-2인 가구가 공공임대 유형에 많이 거주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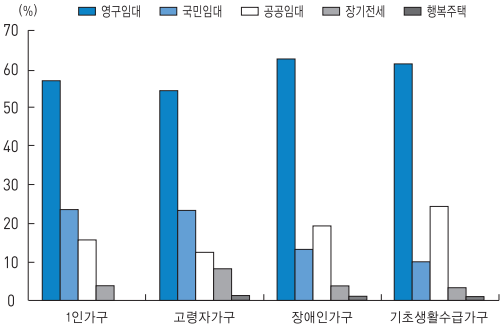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유형을 특성가구, 즉 1인가구, 고령자가구, 장애인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들 가구 모두 영구임대 유형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가구의 영구임대 유형 거주 비율은 62.4%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다. 이 비율은 1인가구와 고령자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각각 56.3%와 54.3%, 61.1%에 달한다. 국민임대 유형 거주 비율은 1인가구와 고령가구에서 각각 23.7%와 23.2%, 장애인가구와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각각 13.3%와 10.1%로 나타난다. 공공임대 유형 거주 비율은 기초생활수급가구(24.3%)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장기전세 유형 거주 비율은 고령자가구(8.4%)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모든 특성가구의 행복주택 거주 비율은 1.0% 내외로 매우 낮다(그림 Ⅷ-20).

[그림 Ⅷ-19]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소득계층별 임대유형구성, 2016




주: 1) 영구임대유형은 영구임대, 50년 임대 등을 포함함.
2) 공공임대유형은 10년 임대, 5년 임대,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등을 포함함.
3) 소득 '모름/무응답' 제외.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6.

[그림 Ⅷ-20] 공공임대주택 거주 특성가구별 임대유형 구성, 2016




주: 1) 영구임대유형은 영구임대, 50년 임대 등을 포함함.
2) 공공임대유형은 10년 임대, 5년 임대,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등을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6.

# 빅데이터로 읽는 교통과 사회

장수은 (서울대학교)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 고속도로 하이패스, 교통카드, 스마트폰, 통행료 수납시스템, 차량검지시스템, 디지털운행기록 장치 등으로부터 다양한 교통 빅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혼잡, 교통안전, 교통 취약지역 등 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향후 교통 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형태로 관리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


어느 덧 우리의 일상생활에 교통 빅데이터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제는 차량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내비게이션이 제공하는 실시간 소통정보는 교통 빅데이터를 가공한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는 대용량 검지기 자료를 이용한 실시간 도착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대중교통의 도착정보는 물론 환승방법이나 최적경로를 확인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원하는 시간에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고, 나들이를 가기 전에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도 확인한다.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교통예보를 참고해 출발날짜와 이동경로를 정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교통 빅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통 빅데이터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파악할 수 있는 교통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발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 교통 빅데이터 현황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대용량 자료를 말한다. 그런데 자료의 크기가 수십 테라바이트(TB, 1TB=1,024GB)에서 수 페타바이트(PB, 1PB=1,024TB)에 이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 하지만 이 대규모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급변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래서인지 혹자는 미래는 자료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Gantz & Reinse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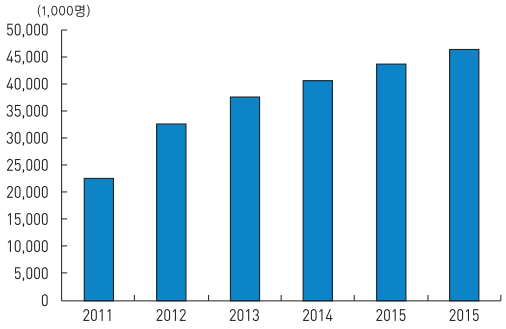
빅데이터는 통상 3V라는 세 가지 차원으

로 정의된다. 자료의 양(Volume), 입출력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이 이에 해당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정확성(Veracity)이나 가변성(Variability)을 더해 4V로 정의하기도 하나(Beyer & Laney, 2012), 교통 빅데이터를 3V의 틀로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통 빅데이터를 생성, 수집하고 있다. 예컨대, 고속도로 요금소에는 통행료수납시스템(Toll Collection System, TCS)이 설치되어 있다. 이 시스템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차종별 요금소 진출입 시간을 기록한다. 차량검지시스템(Vehicle Detection System, VDS)도 있다. 센서를 도로 아래에 묻어 그 위를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와 교통량을 기록하는 것이다.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교통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인데,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검지하는 AVI(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자료가 대표적이다. 개별 차량의 궤적을 추적한 자료도 있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들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DTG)에는 GPS를 통해 파악된 위치, 순간속도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다.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서비스도 근거리전용통신(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DSRC)을 통해 개별 차량의 경로를 기록한다.

교통 빅데이터 중 단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스마트폰과 교통카드 이용을 통해 생성되는 자료이다.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현재 약 4,640만 명에 달한다. 이는 2011년 가입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약 16%에 달한다(그림 Ⅷ-21).

[그림 Ⅷ-21] 스마트폰 가입자 수, 2011-2016




주: 1) 각 연도 12월 기준 가입자수 현황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업자 제출자료).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경로를 파악하는 내비게이션 이용자도 크게 늘어났다. 스마트폰 앱 이용자 수를 모니터링하는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16년 7월 한 달 동안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이용자 수는 1,496만 7,391명으로 집계되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대중화는 교통 자료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개별 운전자의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궤적과 통행시간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도로망 지도와 연계하면 혼잡구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선불식 혹은 후불식 교통카드 이용자

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2013년 기준으로 선불식 교통카드만 1억 1,278만 5,000장이 발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약 5,000만 장이 수도권에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용카드와 결합된 후불식 교통카드 이용자까지 고려하면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부분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2015).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교통카드 이용률이 지하철은 100%, 시내버스 등은 98.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2016). 교통카드 사용자가 많아지면 이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버스 혹은 지하철의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과 탑승시간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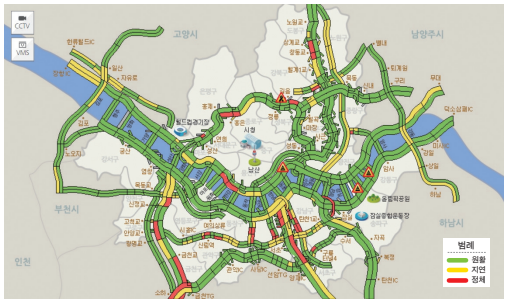
## 빅데이터와 교통정보

앞서 언급한 차량검지시스템 등으로 수집되는 자료의 양은 고속도로에서만 하루 평균 7,000만 건 이상에 이른다. 이는 연간 8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이다. 이 대용량 자료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와 도로교통연구원의 컴퓨터에 저장된다. 몇 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도로별 통행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실시간으로 일반에 제공한다. 바로 고속도로 교통정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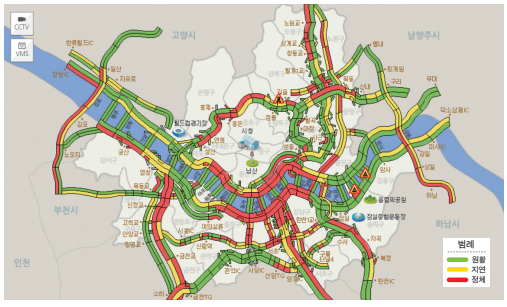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Ⅷ-22]는 2017년 9월 1일 오후 1시와 오후 5시의 소통정보를 캡쳐한 것이다. 그림에서 녹색, 황색, 적색은 각각 원활, 서행, 정체를 의미한다. 두 그림에서 오후 1시와 오후 5시의 소통상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Ⅷ-22]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1) 오후 1시




2) 오후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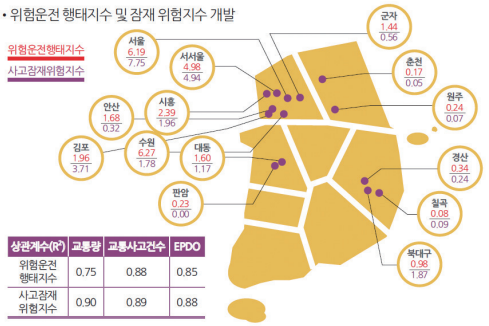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고속도로교통정보(http://smartway.seoul.go.kr), 2017. 9. 1.

## 빅데이터와 교통안전

도로별 교통안전도 빅데이터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그림 Ⅷ-23]은 전국의 위험운전행태 지수와 잠재위험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위험운전행태지수는 운전자의 위험도를 정규화하여 영업소 간 위험도를 비교한 지표이며, 잠재위험지수는 운전자의 위험행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도를 정규화한 것이다. 이 지도 작성에 앞서 언급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가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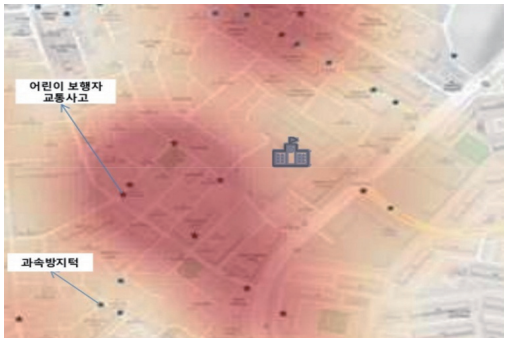
[그림 Ⅷ-23] 전국 위험운전 행태지수 및 잠재 위험지수




주: 1) EPDO(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 대물피해환산법으로 번역되며, 교통사고의 피해정도를 사망 12, 중상 5, 경상 3, 부상신고 1의 가중치로 산정한 교통사고 심각도 지수임.
출처: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교통분야 산업화 추진전략 및 계획」, 2016.

서울시도 교통안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데, 서울도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4배나 많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우선 5개 유형(어린이, 고령자, 중앙버스전용차로, 음주운전, 위험운전)의 집중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내역, 교통안전공단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 서울시의 교통시설물, 차량속도, 기상정보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각 자료의 상관관계를 종합하여 [그림 Ⅷ-24]와 같은 교통사고 온도지수를 개발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과속방지턱 설치 유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등 각 유형별 사고원인을 규명한 바 있다.

[그림 Ⅷ-24] 어린이 보행사고 온도지수




주: 1) 그림에서 검은색 점은 과속방지턱 분포를 나타내고, 붉은색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분포를 나타냄.
출처: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서울시 교통사고 패턴과 대응방안」, 2015.

## 교통 빅데이터와 삶의 질

빅데이터는 교통 취약지역 파악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림 Ⅷ-25]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비게이션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시설까지의 차량 접근성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2015년 서울시 자치구의 시간대별 도로 통행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응급시설까지의 도달시간을 분석한 결과, 혼잡이 없는 새벽시간에는 시민의 96.5%가 자동차로 10분 이내에 응급시설에 도달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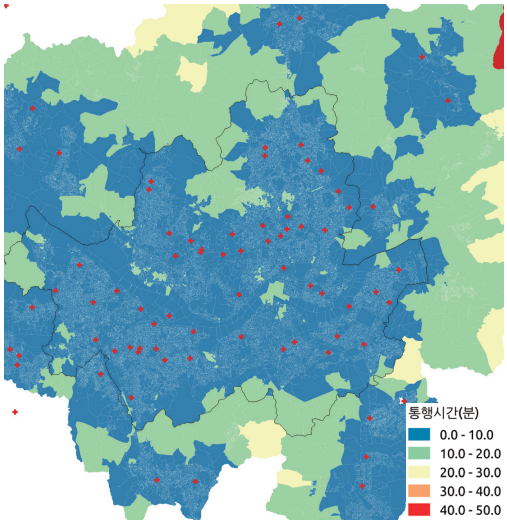
지만 혼잡이 심한 출근시간에는 70.6%만이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시설까지의 접근성은 서울시 자치구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새벽시간에는 대부분의 구에서 10분 이내에 응급시설까지 도달할 수 있으나 성북구와 마포구는 10분 이내 접근 가능성이 74.2%와 86.7%로 다른 구에 비해 떨어졌다. 구별 접근성의 차이는 출근시간대에 더 심화되었다. 전체적으로는 70.6%가 10분 이내에 응급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 비해 마포구와 성북구의 경우에는 각각 10.3%와 26.8%만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 의료시설의 위치 선정에 활용될 수 있다. 즉, 의료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주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아내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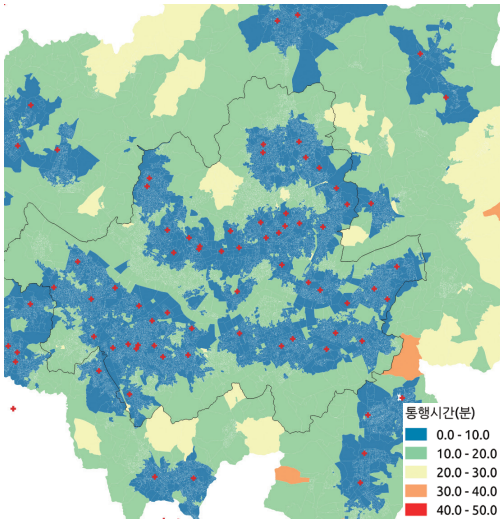
통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취약지역을 파악하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데이터 사이언스 랩이 서울시 교통카드 대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통근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통근 효율성 지표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종로구, 중구) 지역과 동남권의 강남(강남구, 서초구) 지역은 통근 효율성이 양호한 반면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은 통근 효율성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동북권에 있는 노원구의 경우 통근 효율성 지표가 서북권의 서대문구보다 1.5배, 서남권의 양천구보다 1.8배

[그림 Ⅷ-25] 서울시 자치구별 응급실까지의 차량 접근성

1) 새벽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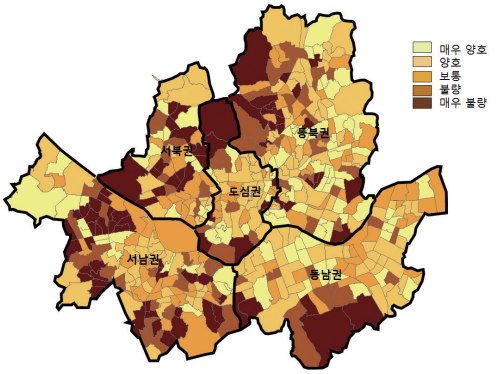

2) 출근시간




주: 1) 빨간색 지점은 응급의료시설의 위치임.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보고서」, 2017.

더 양호하다. 지역별로 통근 효율성의 편차가 큰 것은 지하철 접근성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등 때문으로 파악되었다(그림 Ⅷ-26).

[그림 Ⅷ-26] 서울시 동별 통근 효율성




주: 1) 서울시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에 따라 권역을 구분함.
출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서울시 통근 효율성의 지역적 불균형 심해」, 보도자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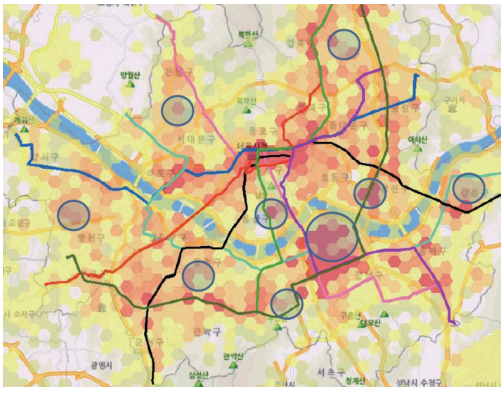
## 빅데이터와 교통정책

교통 빅데이터 분석은 시민의 일상생활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이다. 올빼미 버스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되는 심야버스를 일컫는다(그림 Ⅷ-27). 서울시는 KT와 업무협약을 맺고 약 30억 건의 통화량을 분석하여 심야시간대에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곳을 파악하였다. 노선 최적화 과정의 핵심은 휴대전화 이력 데이터 분석이다. 서울시를 1㎞ 반경의 1,250개 헥사셀로 구분한 후 심야시간대(0-5시)의 통화량을 분석하여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파악한 것이다. 이들 밀집지역을 연결한 후 역시 유동인구 기반으로 배차간격을 조정하였다(그림 Ⅷ-28).

[그림 Ⅷ-27]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도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http://topis.seoul.go.kr).

[그림 Ⅷ-28] 헥사셀 기반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출처: ZERONOVA 블로그(https://zeronova.kr).

##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에 수집하기 어려웠던 내비게이션, 교통카드 등에 의한 실시간 교통정보는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통 서비스의 공급이 적절한지, 통행자가 얼마나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거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비용을 낮추면서도 정확도는 한층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우선 빅데이터의 활용도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빅데이터의 특성상 자료의 양이 많아 저장하기도 어렵고 분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형태로 관리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 플랫폼에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공공 데이터와 통신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 데이터가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의 융합은 새로운 정책 개발은 물론 비즈니스의 기회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Beyer, Mark A. and Douglas Laney. 2012. “The Importance of ‘Big Data’: A Definition.” Stamford, CT: Gartner.
Gantz, John and David Reinsel. 2011. “Extracting Value from Chaos.” *IDC IVIEW* 1142: 1–12.
국토교통부. 2015.「아시아권 교통카드 호환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6. “2015년 39억명, 하루 1,072만명 이용...전년 대비 2.3% 감소.” 보도자료.

2017

# Environment

Korean Social Trends 2017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Ⅸ 환 경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36

생활화학제품 피해 및 관리 실태 신용승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5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 및 특징 조영탁 | 한밭대학교 250

#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대기오염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미세먼지의 환경기준 달성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 평균 기온 상승, 강수량 증대, 해수면 상승 등 한반도의 기후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호소의 수질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
- GDP 대비 환경예산이나 환경보호지출의 비율은 정체 상태에 있다.
- 환경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2012년부터 떨어지고 있으며 환경영역별,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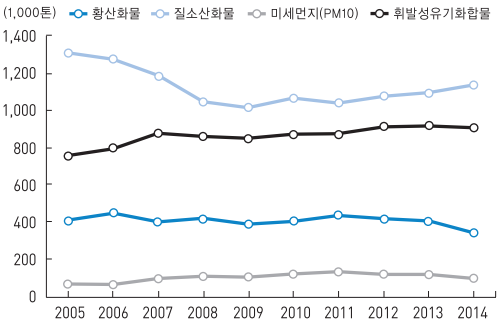
환경과 인간사회의 상호 작용은 자원채취, 오염물질 배출, 자연재해 등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삶의 질 관점에서 볼 때 환경문제가 갖는 의미도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대기, 물환경, 폐기물 등 전통적 환경이슈에 관한 통계를 이용해서 국내 환경문제의 변화 양상과 최근 현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환경영역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환경상태에 관한 주관적 만족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 대기환경

대기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데,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있다.

산성비를 야기하는 황산화물은 정부의 저황유 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에 비해 배출량이 대폭 감소했다. 산성화 물질이면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은 2000년대 후반까지 배출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은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증가세가 꺾였으며, 오

[그림 Ⅸ-1]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5-2014




주: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생물성연소로 인한 배출량을 제외하였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각 연도.

존을 발생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Ⅸ-1).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아황산가스는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정책 등을 통해 이미 2000년 이후부터 전국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대기환경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반면,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PM10)는 아직도 대기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환경기준이 강화된 2007년 이산화질소 환경기준 달성률은 69.0% 수준이었는데, 2015년에는 70%대 수준으로 조금 개선되었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이 2007년 24.4%에서 2015년 65.6%로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여전히 10% 수준에 불과하다(표 Ⅸ-1). 2015년에 전국 단위의 공식적 측정을 시작한 초미세먼지(PM2.5)의 2015년 연평균 및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각각 65.0%와 4.0%로 미세먼지(PM10)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Ⅸ-1〉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달성률,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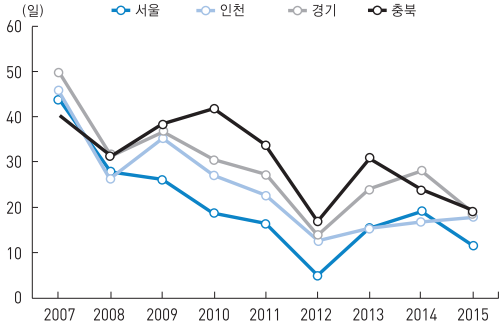
(%)

| 연도 | 이산화질소($NO_2$) | | 미세먼지($PM_{10}$) | |
|---|---|---|---|---|
| | 연평균 | 일평균 | 연평균 | 일평균 |
| 2007 | 69.0 | 64.6 | 24.4 | 3.1 |
| 2008 | 63.5 | 63.9 | 28.7 | 1.3 |
| 2009 | 70.9 | 63.5 | 40.2 | 2.6 |
| 2010 | 71.5 | 62.6 | 48.1 | 3.4 |
| 2011 | 72.8 | 68.2 | 55.6 | 1.7 |
| 2012 | 78.9 | 72.9 | 76.8 | 38.6 |
| 2013 | 73.9 | 66.0 | 62.5 | 7.9 |
| 2014 | 71.9 | 65.6 | 61.2 | 8.2 |
| 2015 | 76.9 | 71.8 | 65.6 | 10.7 |

주: 1) 환경기준 달성률은 전국 유효측정소 중 환경기준을 100% 달성한 측정소의 비율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초과일수를 살펴보면, 2007년 연간 50일 가까이 되던 초과일수가 최근에는 20일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는 충북 지역의 초과일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그림 Ⅸ-2).

[그림 Ⅸ-2] 수도권 및 주요 지역 미세먼지(PM10) 일평균 환경기준 초과일수, 2007–2015




주: 1) 유효측정처리비율 미만인 수치는 제외하였음.
2) 각 지역 내 측정소의 일평균 환경기준 초과일수를 평균한 수치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대표적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평균 농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 기상여건에 따라 많이 좌우되어 해마다 변동 폭이 크다(표 Ⅸ-2).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 지역(여수, 순천, 광양) 역시 오존주의보 발령이 잦은 지역이다.

〈표 Ⅸ-2〉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와 횟수, 2005-2015

| 연도 | 시행지역 (곳) | 발령일수 (일) | 발령횟수 (회) | 시간최고농도 (ppm) |
|---|---|---|---|---|
| 2005 | 57 | 19 | 84 | 0.199 |
| 2006 | 58 | 22 | 52 | 0.192 |
| 2007 | 62 | 30 | 82 | 0.217 |
| 2008 | 63 | 32 | 101 | 0.203 |
| 2009 | 64 | 20 | 60 | 0.169 |
| 2010 | 62 | 25 | 83 | 0.181 |
| 2011 | 63 | 19 | 55 | 0.174 |
| 2012 | 68 | 29 | 66 | 0.163 |
| 2013 | 69 | 39 | 160 | 0.179 |
| 2014 | 69 | 29 | 129 | 0.188 |
| 2015 | 72 | 33 | 133 | 0.177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5」,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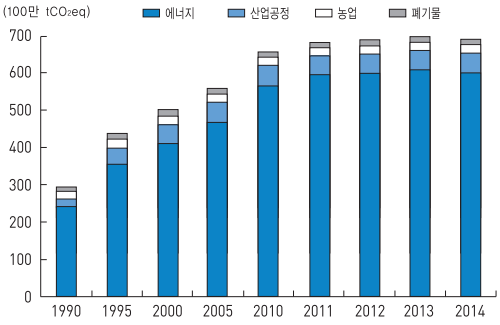
## 기후변화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크고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온실가스라고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7개 기체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체 온실효과의 80%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4년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1990년 약 3억 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약 6억 9,060만 톤으로 135.6% 증가하였다. 2014년 현재 GDP 기준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인데, 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이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된다. 1990-2014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 역시 에너지 부문이며, 동 기간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8.3% 증가하였다(그림 Ⅸ-3).

[그림 Ⅸ-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14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6.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기후변화의 구체적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수와 가뭄, 육상생태계 영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0년간(1981-2010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2℃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133년간(1880-2012년)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0.8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폭염일수 및 열대야일수 역시 증가해 왔으며, 과거 10년(1971-1980년) 대비 최근 10년

(2001–2010년)의 호우일수(일강수량 80㎜ 이상인 날)가 평균 1.68일에서 2.62일로 증가하였다.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2.64㎜ 상승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지구 평균치 2.0㎜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물환경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생활하수, 분뇨, 산업폐수 및 축산분뇨는 대체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모두 증가하다가 그 후로는 각기 다른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하수는 2011년을 제외하면 발생량이 조금씩 감소했고, 분뇨 발생량 역시 2009년을 기점으로 뚜렷이 감소했다. 산업폐수는 2000년대 후반에 급속히 감소한 후 1일 발생량이 400–500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Ⅸ-3).

지난 1991년과 1994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유기용제 유출사고 발생으로 기존의 오염물질 사후처리 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유역단위 차원의 사전예방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6년에 범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도 마련했다. 2006년에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85% 이상을 '좋은 물'(BOD 3㎎/ℓ 이하)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낙동강(물금)의 BOD는 1995년 5.1㎎/ℓ에서 2015년 2.2㎎/ℓ로 대폭 낮아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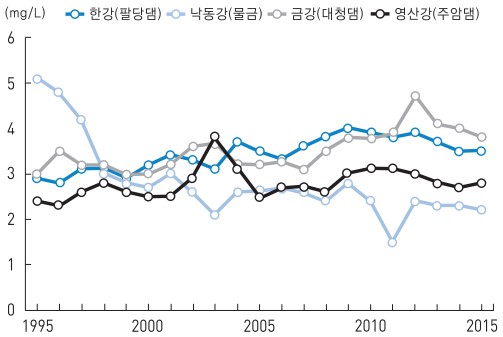
〈표 Ⅸ-3〉 하수, 분뇨, 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2000–2014

(1,000m³/일)

| 연도 | 하수 | 분뇨 | 산업폐수 | 가축분뇨 |
|---|---|---|---|---|
| 2000 | 15,441 | 47 | 7,097 | 125 |
| 2005 | 16,833 | 48 | 9,181 | 138 |
| 2006 | 16,920 | 47 | 6,215 | 137 |
| 2007 | 16,745 | 45 | 5,352 | 154 |
| 2008 | 17,113 | 46 | 4,557 | 128 |
| 2009 | 16,681 | 49 | 4,622 | 136 |
| 2010 | 16,111 | 46 | 5,229 | 136 |
| 2011 | 18,661 | 42 | 5,269 | 129 |
| 2012 | 15,722 | 42 | 5,662 | 177 |
| 2013 | 15,148 | 38 | 5,299 | 173 |
| 2014 | 16,256 | 36 | 5,089 | 176 |

주: 1) 2000년 산업폐수 발생량은 2001년 자료임(2000년 자료 없음).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그림 Ⅸ-4]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5




주: 1) 수질오염도는 호소(팔당댐, 대청댐, 주암댐)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이고, 하천(낙동강 물금)의 경우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만, 한강(팔당댐)이나 금강(대청댐)의 COD는 1990년대 후반 3.0㎎/ℓ 내외 수준에서 2010년대에 4.0㎎/ℓ 내외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그림 Ⅸ-4). 총인 농도의 경우에는 가장 오염도가 심한 낙동강(물금)이 2010년부터 뚜렷한 개선 추세에 있으며, 금강(대청댐) 역시 오염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반면, 총인 농도가 가장 낮게 유지되던 영산강(주암댐)의 경우 2013년 이후 오히려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 폐기물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며, 일반폐기물은 다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생활폐기물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대에 0.99-1.05㎏ 수준에서 증감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0.95㎏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종의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Ⅸ-4).

〈표 Ⅸ-4〉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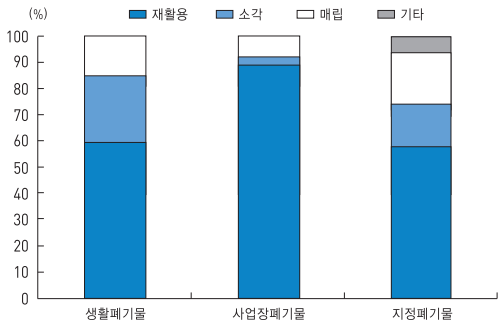
(톤/일)

| 연도 | 일반폐기물 | | | 지정 폐기물 |
|---|---|---|---|---|
| | 생활 | 사업장 배출시설계 | 건설 | |
| 2000 | 46,438 | 101,453 | 78,777 | 7,615 |
| 2005 | 48,398 | 112,419 | 134,906 | 8,634 |
| 2006 | 48,844 | 101,099 | 168,985 | 10,026 |
| 2007 | 50,346 | 114,807 | 172,005 | 9,511 |
| 2008 | 52,072 | 130,777 | 176,447 | 9,594 |
| 2009 | 50,906 | 123,604 | 183,351 | 9,060 |
| 2010 | 49,159 | 137,875 | 178,120 | 9,488 |
| 2011 | 48,934 | 137,961 | 186,417 | 10,021 |
| 2012 | 48,990 | 146,390 | 186,629 | 12,501 |
| 2013 | 48,728 | 148,443 | 183,538 | 12,417 |
| 2014 | 49,915 | 153,189 | 185,382 | 13,177 |
| 2015 | 51,247 | 155,305 | 198,260 | 13,410 |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5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59.2%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25.7%)되거나 매립(15.1%)되었다. 사업장폐기물

[그림 Ⅸ-5]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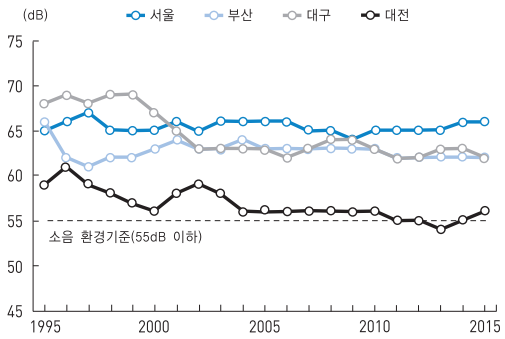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5년도)」, 2016;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5년도)」, 2016.

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활용(89.0%)되며 소각(3.0%) 또는 매립(7.8%)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정폐기물도 재활용(57.5%) 비중이 가장 높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비하면 소각(16.3%) 또는 매립(19.9%)되는 비중도 높은 편이다(그림 Ⅸ-5).

## 환경소음

대기오염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다. 정부는 지역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간대(낮, 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들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수준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은 밤 시간대에 더욱 심하며 2000년대 이후로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그림 Ⅸ-6).

[그림 Ⅸ-6]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1995-2015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일상생활에서 소음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환경분쟁조정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처리된 환경분쟁사건 중 84.9%가 소음·진동과 관련된 것이며, 층간소음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소음·진동 관련 분쟁사건의 비율은 85.7%에 이른다(표 Ⅸ-5).

〈표 Ⅸ-5〉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건수, 1991-2016

(건)

| 연도 | 소음·진동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일조 | 기타 |
|---|---|---|---|---|---|
| 1991-2001 | 366 | 52 | 35 | 0 | 8 |
| 2002 | 229 | 26 | 4 | 0 | 4 |
| 2003 | 264 | 19 | 8 | 0 | 1 |
| 2004 | 206 | 8 | 3 | 5 | 1 |
| 2005 | 151 | 11 | 5 | 6 | 1 |
| 2006 | 150 | 8 | 3 | 1 | 3 |
| 2007 | 142 | 7 | 3 | 15 | 5 |
| 2008 | 173 | 8 | 3 | 0 | 25 |
| 2009 | 241 | 13 | 2 | 21 | 6 |
| 2010 | 149 | 3 | 6 | 12 | 5 |
| 2011 | 164 | 7 | 3 | 6 | 5 |
| 2012 | 214 | 14 | 6 | 17 | 4 |
| 2013 | 154 | 12 | 3 | 19 | 3 |
| 2014 | 203 | 5 | 4 | 18 | 7 |
| 2015 | 177 | 10 | 2 | 13 | 8 |
| 2016 | 122 | 10 | 2 | 25 | 3 |

주: 1) 기타에는 토양오염, 추락위험, 기름유출, 생태계, 해양오염, 입지선정, 통풍방해·조망 등이 포함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통계현황」, 2017.

## 환경관리

정부 정책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환경예산의 규모와 비율이다.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1995년에 환경부 예산은 6,729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9%에 지나지 않았다.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환경분야 예산은 1조 7,801억 원으로 환경부 예산의 3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환경부 예산의 비율은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증가(2005년 행정자치부의 수질보전지방양여금이 환경부 예산으로 편입되면서 외형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왔으며, 2011년에는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 수준을 넘었다. 하지만 환경분야 예산의 비중은 2000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2.1% 내외 수준에서 정체 상태에 있다(표 Ⅸ-6). 이에 따라 환경부 예산과 환경분야 예산의 차이가 현재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환경보호지출이라고 한다. 환경보호지출 역시 조금씩 증가했는데,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2009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0년부터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9개로 구분되는 환경보호지출 영역 중에서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폐수, 폐기물, 대기 영역이며, 이 세 영역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표 Ⅸ-7). 하수관거 설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에 지출이 많은 폐수 영역이나 폐기

〈표 Ⅸ-6〉 환경예산, 1995-2015

| 연도 | 환경분야 예산 | | 환경부 예산 | |
|---|---|---|---|---|
| | 금액 (1억 원) | 정부예산 대비 비율 (%) | 금액 (1억 원) | 정부예산 대비 비율 (%) |
| 1995 | 17,801 | 2.39 | 6,729 | 0.90 |
| 2000 | 30,581 | 2.44 | 13,023 | 1.04 |
| 2005 | 35,578 | 2.12 | 28,557 | 1.70 |
| 2006 | 33,978 | 1.94 | 29,992 | 1.71 |
| 2007 | 32,837 | 1.86 | 32,203 | 1.82 |
| 2008 | 36,568 | 1.87 | 35,514 | 1.84 |
| 2009 | 42,101 | 1.94 | 40,282 | 1.85 |
| 2010 | 46,740 | 2.07 | 44,832 | 1.98 |
| 2011 | 49,741 | 2.11 | 47,778 | 2.03 |
| 2012 | 51,496 | 2.07 | 49,897 | 2.01 |
| 2013 | 54,458 | 2.07 | 52,477 | 1.99 |
| 2014 | 56,119 | 2.04 | 54,324 | 1.98 |
| 2015 | 59,389 | 2.07 | 57,401 | 2.01 |

주: 1) 환경분야 예산에는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표 Ⅸ-7〉 환경보호지출, 2004-2014

| 연도 | 환경보호 지출액 (10억 원) | GDP 대비 비율 (%) | 영역별 구성비율(%) | | | |
|---|---|---|---|---|---|---|
| | | | 대기 | 폐수 | 폐기물 | 기타 |
| 2004 | 22,372 | 2.55 | 15.5 | 38.6 | 26.4 | 19.5 |
| 2005 | 24,017 | 2.61 | 16.1 | 38.5 | 25.2 | 20.2 |
| 2006 | 26,463 | 2.74 | 17.4 | 38.4 | 24.7 | 19.6 |
| 2007 | 28,675 | 2.75 | 18.9 | 37.7 | 23.9 | 19.5 |
| 2008 | 30,188 | 2.73 | 19.0 | 37.4 | 24.3 | 19.3 |
| 2009 | 32,629 | 2.83 | 17.2 | 37.9 | 24.6 | 20.3 |
| 2010 | 32,880 | 2.60 | 17.4 | 36.8 | 25.8 | 20.0 |
| 2011 | 33,784 | 2.54 | 17.3 | 36.5 | 26.4 | 19.8 |
| 2012 | 34,547 | 2.51 | 18.0 | 38.8 | 23.0 | 20.2 |
| 2013 | 35,246 | 2.47 | 16.6 | 39.2 | 23.3 | 20.8 |
| 2014 | 35,586 | 2.39 | 17.2 | 39.9 | 22.6 | 20.3 |

주: 1) 기타에는 토양·수질, 소음·진동, 생태계·종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6개 영역이 포함됨.
출처: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결과보고서」,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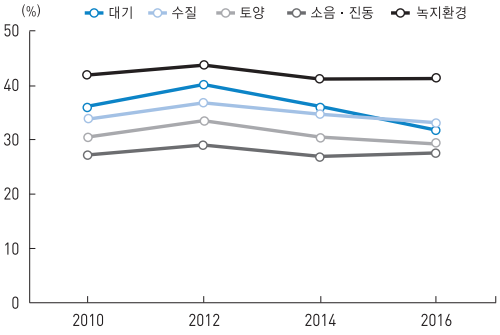
물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수집과 운반 등에 대부분 지출되는 폐기물 영역은 공공부문의 지출 비중이 높지만,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주로 지출되는 대기 영역은 기업부문이 지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 환경만족도

환경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만큼 환경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객관적인 측정 수치 못지않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녹지의 5개 체감 환경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이들 5개 영역 모두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만족도(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가 높아졌다가 이후에는 낮아지고 있다. 만족도는 녹지에 대해서가 가장 높고 소음에 대해 가장 낮다. 2014년까지 녹지,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영역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는데, 2012년부터 대기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2016년에는 수질 영역과 대기 영역에 대한 만족도 순위가 뒤바뀌었다(그림 Ⅸ-7).

한편, 5개 영역을 종합한 전반적 만족도(5개 영역 만족도의 단순 평균)는 2010년 33.9%에서 2012년 36.7%로 올라갔다가 2014년 33.9%, 2016년 32.6%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농어촌(읍면부) 지역의 만족도가 도시(동부) 지역의 만족도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하지만 도시 지역의 만족도는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는 2012년 58.5%에서 2016년 49.0%로 10%p 가까이 떨어졌다. 성별로는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의 만족도보다 조금 높지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표 Ⅸ-8).

[그림 Ⅸ-7] 영역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6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2010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표 Ⅸ-8〉 지역 및 성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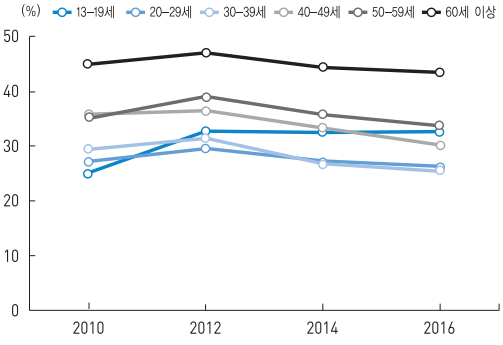
| 연도 | 지역 | | 성 | |
|---|---|---|---|---|
| | 동부 | 읍면부 | 남자 | 여자 |
| 2010 | 29.5 | 54.1 | 34.3 | 33.5 |
| 2012 | 32.0 | 58.5 | 36.9 | 36.4 |
| 2014 | 29.4 | 55.6 | 34.4 | 33.5 |
| 2016 | 29.2 | 49.0 | 33.1 | 32.1 |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2010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지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 진동, 녹지환경 등 5개 영역별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단순 평균한 것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연령별 전반적 만족도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만족도가 타 연령층에 비해 확연히 높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와 30대인데, 2016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의 만족도는 각각 26.2%와 25.6%로 60대 이상의 만족도 43.3%에 크게 못 미친다. 10대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32.7%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그림 Ⅸ-8).

한편,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2016년 기준 600만 원 이상 35.1%, 500-600만 원 미만 32.7%, 400-500만 원 미만 31.9%, 300-400만 원 미만 29.4%, 200-300만 원 미만 28.5%).

[그림 Ⅸ-8] 연령집단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6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2010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치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 진동, 녹지환경 등 5개 영역별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단순 평균한 것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 생활화학제품 피해 및 관리 실태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는 원료로서의 물질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물질 관리에서 생활제품 관리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85% 이상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 국내 1,000여 종으로 추정되는 살생물질과 1,300여 종으로 추정되는 고위험물질 가운데 금지물질과 제한물질로 지정된 것은 72종에 불과하며, 부처별 분산관리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범위의 확대와 위해성 평가를 통한 과학적 안전기준의 설정, 부처 간 효율적 업무분장 및 협력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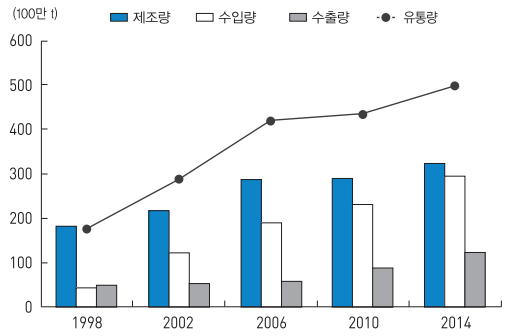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학산업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이며, 한국은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화학제품 생산량이 많은 나라이다.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필수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금까지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는 원료로서의 화학물질 생산과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구미 불산사고 이후 정부는 화학물질안전원을 신설하고 장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비극적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당수의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은 그 위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보건 안전망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국내의 생활화학제품 피해 실태와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화학물질 사용과 관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4만 여 종이 넘으며, 매년 2,0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새롭게 시장에 등장한다. 한국의 화학물질 유통량은 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연간 약 5억 톤에 달한다(그림 Ⅸ-9).

[그림 Ⅸ-9] 화학물질 유통량, 1998-2014




주: 1) 화학물질 유통량=(제조량+수입량)-수출량.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최종보고서」, 각 연도.

화학물질은 용도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기능성 첨가물로서 제품에 사용된다.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통해 특정 용도로의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물질(금지물질)은 석면을 포함하여 총 60종이다.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는 물질(제한물질)로는 총 12종이 있는데, 이 중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노닐페놀(Nonylphenols), 납(Lead), 카드뮴(Cadmium),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의 6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아용 제품, 장신구, 세정제 등 소비자 제품 목적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원료 단계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규제와는 별도로 제품 위해성을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세정제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14종과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4종을 포함한 총 18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서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 29종과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41종 등 총 70종의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부가 전안법으로 관리하고 있던 세정제 등 8종의 생활화학제품을 환경부의 화평법 관리대상으로 이관하였다. 이로써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주무부처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Ⅸ-9).

〈표 Ⅸ-9〉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종류

| 구분 | 종류 |
|---|---|
| 생활화학제품 (14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 · 토너, 다림질 보조제 |
| 살생물제품 (4종)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

주: 1) 2016년 12월 30일 기준임.
출처: 환경부, 「2017 환경백서」, 2017.

## 생활화학제품 피해와 소비자 인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화학물

질들은 독성의 종류와 크기만 다를 뿐 환경과 인체에 급성적 또는 만성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화학물질은 독성의 종류에 따라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유전독성물질, 생식독성물질, 잔류성오염물질 등으로 분류한다.

한국 사회에서 화학제품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MCIT) 등의 유해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해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1/5에서 1/10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살균제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사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현행 전생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총 5,807건(2017년 8월 기준)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2,196명에 대한 조사와 판정이 완료되었다. 이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 규모는 사망자 477명, 질환자 1,719명에 달한다(표 Ⅸ-10).

〈표 Ⅸ-10〉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 2017. 8.

(명)

| 구분 | 판정 대상자 | 정부 구제급여 대상 | | |
|---|---|---|---|---|
| | | 소계 | 1단계 | 2단계 |
| 전체 | 2,196 | 377 | 220 | 157 |
| 생존 | 1,719 | 216 | 108 | 108 |
| 사망 | 477 | 161 | 112 | 49 |

주: 1) 2017년 8월 10일 기준임.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 종합포털 (https://www.healthrelief.or.kr:444/home/content/stats01/view.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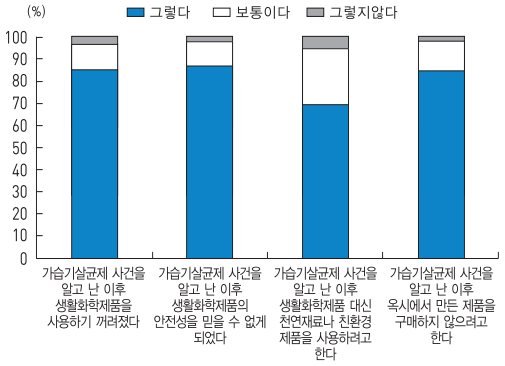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노케미족(No-Chemicals)'혹은 '케모포비아(Chemophobia)'라는 신조어를 등장시킬 정도로 극단적인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국민 인식 조사의 결과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이 2016년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사고 이후 85% 이상의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 사용을 꺼리거나 안전성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Ⅸ-10).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5종의 위해성 인지도에 관한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민들은 대다수의 제품에 대해 건강에 나쁜 영향이 있을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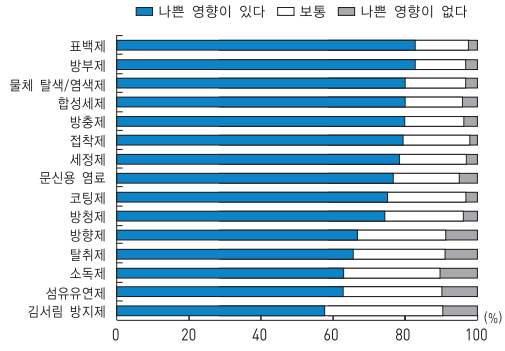
인식하고 있다(그림 Ⅸ-11). 또한 과반(62.9%)의 국민이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Ⅸ-10]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대한 태도, 2016




출처: (사)소비자시민모임,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6. 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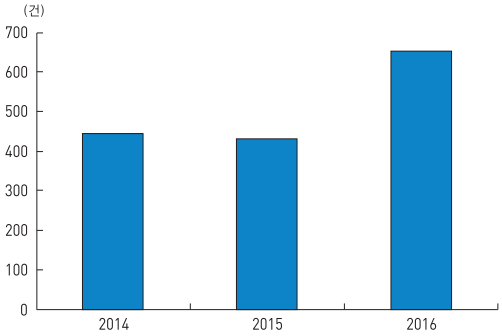
[그림 Ⅸ-11]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건강 위해 가능성 인식, 2016




출처: 서울연구원,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2016.

최근 3년간(2014–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529건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크게 증가(50.9%)했는데,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Ⅸ-12).

[그림 Ⅸ-12] 생활화학제품 피해 상담 접수건수, 2014–2016




출처: 한국소비자원, 「생활화학제품 위해정보 동향분석」, 2017.

위해정보의 품목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접착제가 390건(2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표백제 275건(18.0%), 세정제 198건(12.9%) 등의 순이다. 위해증상별로 살펴보면,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 309건(20.2%), 체내 위험 이물질 225건(14.7%), 중독(약물, 가스, 화학물질 등) 180건(11.8%) 등이다. 피해자 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이 410건(30.9%)으로 가장 많아 어른보다 어린이의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생활화학제품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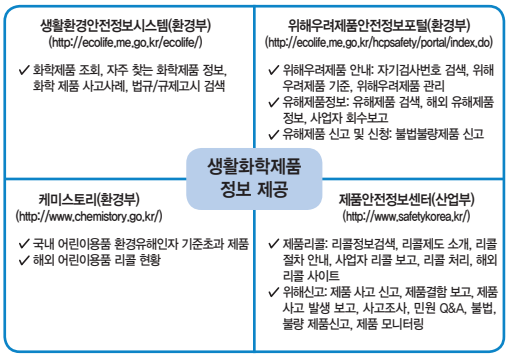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는 원료로서의 물질 관리는 환경부 소관인 화평법에 의거하고 제품 관

리는 종류에 따라 부처별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분산관리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위해우려제품)과 살생물제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공산품과 전기용품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위생용품,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각각 나누어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산관리 체계는 국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사각지대'존재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위해성 평가 없이 관리되거나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 1,000여 종으로 추정되는 살생물질과 1,300여 종으로 추정되는 고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화평법상 금지물질과 제한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72종에 불과하다.

유해물질 함유제품에 의한 노출과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을 통한 사전인증시스템, 제품에 함유된 유해성분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표지제도, 시장 감시를 통한 관련 규제들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는 별도로 파악된 제품 위해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생활환경안전정보 시스템(http://ecolife.me.go.kr/)을 비롯한 다양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그림 Ⅸ-13).

[그림 Ⅸ-13] 생활화학제품 정보 제공 현황




출처: 저자 작성.

## 맺음말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이후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유제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든 화학물질은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학물질 관리의 사전예방 원칙이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이와 같은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하여 더욱 촘촘한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범위의 확대와 위해성 평가를 통한 과학적 안전기준의 설정, 부처 간 효율적 업무분장 및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 및 특징

조영탁 (한밭대학교)


- 한국의 전력소비는 지난 10여 년간 매우 빠르게 증가했으며, 1인당 전력소비 역시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전력다소비 중심의 산업구조와 저렴한 전력요금 구조에 기인한다.
- 전력소비의 증가는 주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에 의해 충당되었다.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전원구성은 낮은 전력요금 유지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불안, 환경문제 등을 유발하였다.
-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이며, 저탄소에너지에 속하는 가스발전 역시 그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다.
- 이러한 추세와 특징은 전력소비가 안정되어 있고 전원구성상 재생가능에너지와 가스발전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OECD국가들과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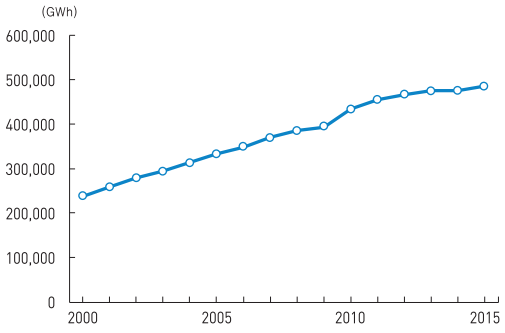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전력 수요와 공급은 큰 변화를 보여 왔다. 전력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대 초반에는 전력 부족과 정전 위기를 겪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력소비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지만 한국의 전력수요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다.

전력수요의 증가를 주로 저렴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확대로 충당하였고, 이에 힘입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전력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석탄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글은 전력수급 상황의 변화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한국의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의 전력수급이 당면한 과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전력소비의 추이

한국의 전력소비는 [그림 Ⅸ-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전력수요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지만 한국은 2012년까지 전력수요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고유가 시기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전력소비가 감소하거나 횡보한 반면 한국은 이 시기에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2010년대 초반에는 심각한 정전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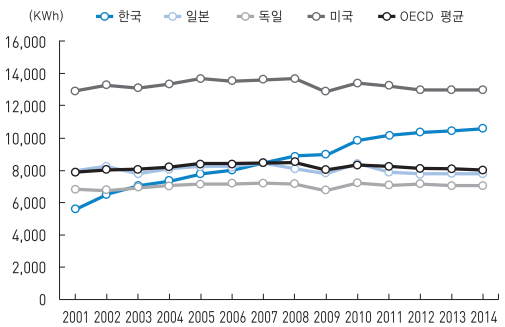
[그림 Ⅸ-14] 전력소비량, 2000-2015




출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kpx.or.kr/epsisnew/).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 등으로 전력소비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다. 물론 한 국가의 전력소비 수준은 그 국가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부존여건, 기후와 생활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국의 전력소비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Ⅸ-15]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과 유사하게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4계절 기후가 있는 미국, 독일, 일본 3개국의 1인당 전력소비와 OECD 국가 평균 1인당 전력소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 증가세가 매우 빠르고 그 수준도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능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Ⅸ-15] OECD 주요 국가의 1인당 전력소비량, 2001-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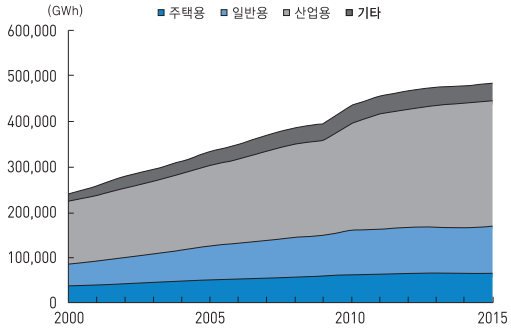



출처: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각 연도.

## 전력소비의 특징

한국의 전력소비가 이처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양도 많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력소비에서 산업용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산업구조도 전력다소비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Ⅸ-16]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용도별 전력소비 추이를 나타낸다.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산업용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전체 전력소비에서 산업용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림 Ⅸ-16] 용도별 전력소비량,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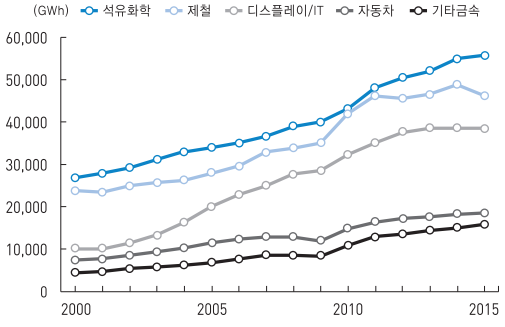



주: 1) 기타는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및 심야전기임.
출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kpx.or.kr/epsisnew/).

30% 내외(2014년 기준)이나 한국은 그 비중이 56.6%(2015년 기준)에 이른다.

한국의 산업용 전력소비 비중이 다른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한국의 산업이 석유화학, 제철(1차금속), 디스플레이/IT(영상음향), 자동차 등과 같이 전력다소비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2000년 이후 중국 특수의 영향으로 해당 산업의 전력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그림 Ⅸ-17).

[그림 Ⅸ-17] 제조업종의 전력소비량, 2000-2015




출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kpx.or.kr/epsis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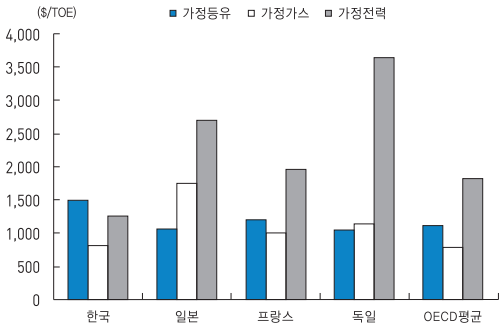
둘째, 과거 10여 년간의 고유가 시기에 한국의 특이한 '전력의 상대가격 구조'로 인해 에너지소비가 과도하게 전력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전력은 비싼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를 연소하여 거의 60%의 열 손실을 감수하면서 생산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열을 얻기 위해서는 전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석유나 가스 등을 연소하여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를 60% 절감하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저렴한 전력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에 세금 우대와 같은 각종 지원과 보조를 하였고 요금인상도 통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전력요금은 다른 나라보다 수준 자체가 낮을 수준일 뿐만 아니라 여타 에너지와 비교한 전력의 상대가격도 낮게 유지되었다.

[그림 Ⅸ-18]은 지난 고유가 시기(2005-2014년)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및 OECD 회원국의 석유, 가스, 전력 열량가격(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의 10년간 평균치를 비교한 것이다. 우선 한국의 전력요금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매우 낮다. 또한 다른 나라들은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전력의 상대가격이 석유나 가스보다 훨씬 높지만 한국은 전력의 상대가격이 오히려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저렴하다는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의 75% 내외를 충당하고 있는 프랑스조차 전력요금이 다른 에너지의 약 2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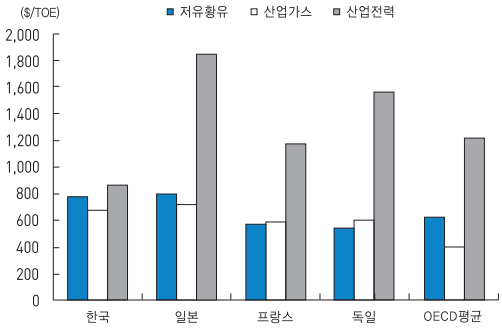
이러한 전력의 상대가격 구조로 인해 고유가 시기에 산업체의 열 공정 에너지와 가정이나 사무실의 난방 에너지가 대거 전력으로 전환되었다. 일례로 고온다습한 여름 기후를 지닌 한국은 여름철의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것이 정상이다. [그림 Ⅸ-19]를 보면, 실제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여름철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유가로 인해 전력의 상대가격이 낮아지면서 석유나

[그림 Ⅸ-18] OECD 주요 국가의 가정 및 산업용 에너지 열량가격(2005-2014년 평균)

1) 가정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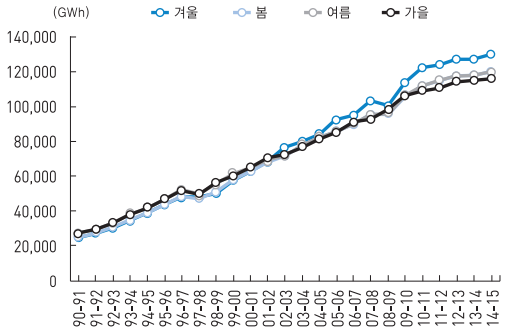



2) 산업용




주: 1) NCV 기준.
출처: IEA, *Energy Prices and Taxes*, 2012 Q1-2017 Q1.

[그림 Ⅸ-19] 계절별 전력소비량, 1990-2015




주: 1) 겨울은 12-2월, 봄은 3-5월, 여름은 6-8월, 가을은 9-11월임.
출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kpx.or.kr/epsis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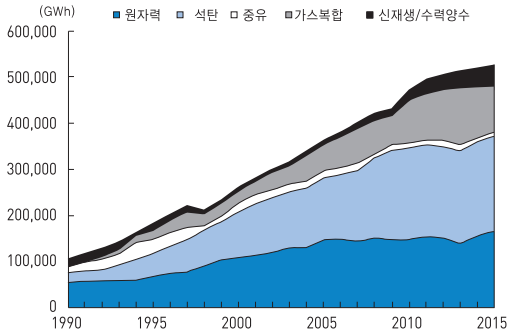
가스가 아닌 전력이 동절기 난방에 사용되고 겨울철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이 시기에 열을 필요로 하는 산업공정 등에 석유나 가스가 아닌 전력을 열에너지로 사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석유나 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곳에 1차 에너지를 가공한 고급의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전력 부족 위기와 함께 에너지 낭비까지 유발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전력소비 증가의 2가지 요인 중, 전력다소비적 산업구조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요인, 즉 저렴한 전력요금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산업경쟁력 제고와 물가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에너지의 비효율적 소비를 유발하고 어떤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 될 정전 위기를 촉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전원구성의 추이

전력소비의 급증과 전력공급의 위기 속에서도 저렴한 전력요금이 가능했던 것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확대 기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Ⅸ-20]은 2000년 이후의 전원별 발전량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2010년대 초반 전력수급 위기 때를 제외하고 한국의 전력소비는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등 화력발전에 의해 대부분 충당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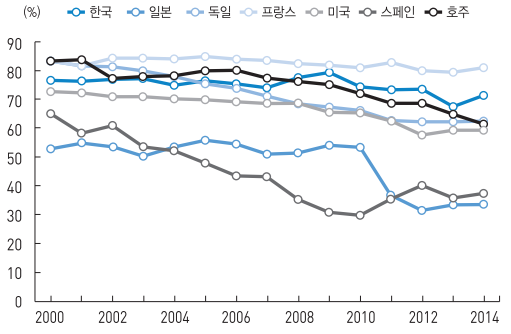
[그림 Ⅸ-20] 설비별 발전량 추이, 1990-2015




출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kpx.or.kr/epsisnew/).

이러한 한국의 전원구성은 OECD 주요 국가들과 대조를 보인다. [그림 Ⅸ-21]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일부 원자력발전의 가동이 중지된 2013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75% 수준을 유지해 왔다. 반면, 원자력발전이 대부분인 프랑스를 제외한 일본, 독일, 미국 등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와 저탄소의 가스발전이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하고 있다.

[그림 Ⅸ-21] OECD 주요 국가별 기저발전량 비율, 2000- 2014




주: 1) 기저발전량 비율은 각 국의 총 발전량 중 기저설비(원전과 석탄)의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2) 기저발전량이 아닌 발전량은 일부 석유발전을 제외하고 대부분 천연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임.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lectricity production, sources, and access*(http://wdi.worldbank.org/table/3.7).

## 전원구성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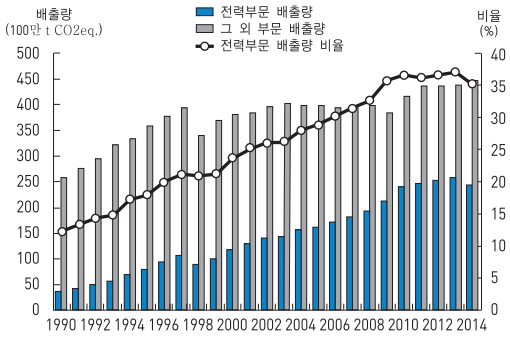
한국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전원구성에 힘입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저렴한 전력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원구성은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불안을 발생시키고 환경적으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도 유발한다.

[그림 Ⅸ-22]는 1990년 이후 한국의 전력부문과 이를 제외한 여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와 그 비율을 보여준다. 2000년대에 들어 전력부문을 제외한 배출량은 미미한 증가 내지 횡보 추세이지만 전력부문의 배출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전력부문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며 석탄발전이 이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된 미세먼지 배출에 있어서도 전력부문의 배출량(1차 배출)과 유발량(2차 생성)이 적지 않다. [그림 Ⅸ-23]은 미세먼지의 1차 배출량과 2차 생성과 관련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PM_{10}$ 및 $PM_{2.5}$의 배출량 중에서 에너지산업연소(사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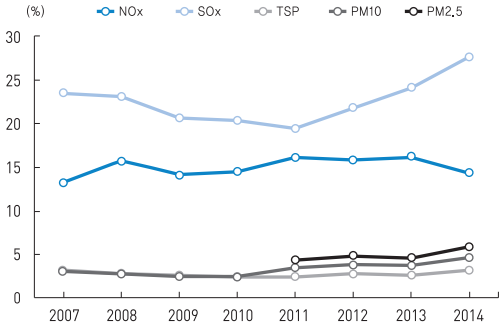
전력부문)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전체 배출량에서 전력부문의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인 황

[그림 Ⅸ-22]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율, 1990–2014




주: 1) 전력부문에 극히 미미한 열전환의 배출이 포함되어 있음.
2) 전력부문 배출량 비율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부문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6.

[그림 Ⅸ-23] 대기오염물질별 전력부문 배출량 비율, 2007–2014




주: 1) 전력부문 배출량 비율은 대기오염물질별 총 배출량 중 에너지산업 연소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대기오염배출분류상 에너지산업 연소는 사실상 전력부문임.
2) 통계자료는 1999년부터 존재하나 산출방식 변경으로 2007년을 경계로 큰 폭의 차이가 있어 2007년 이후만 산정하였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배출량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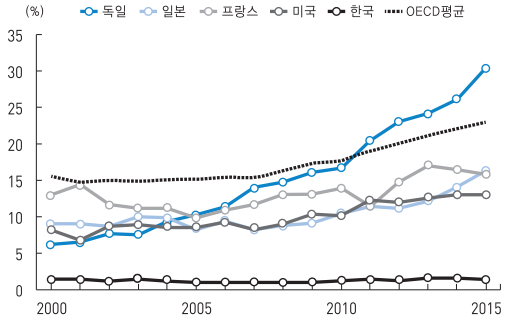
산화물의 경우 전력부문의 배출 비중이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역시 석탄발전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전원구성이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통계로는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6.6%로 집계된다(2015년 기준). 하지만 국내의 신재생에너지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재생폐기물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후 국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그 비율은 1.4% 내외로 줄어든다.

[그림 Ⅸ-24]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1.4%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23.0%에 비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다.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 역시 느리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이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고유가가 시작된 2000년대 중반부터 급속한 증가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1%대에 머물러 있다. 물론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부존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고 저렴한 전력요금으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다. 한국과 재생가능에너지 부존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나 원자력발전이 대부

분인 프랑스 모두 16% 내외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림 Ⅸ-24] OECD 주요 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비율, 2000–2015




주: 1)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각 국의 총 발전량 중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2)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IEA 분류기준에 의한 수치임.
출처: OECD, *Green Growth Indicators 2017*, 2017.

##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으로 저렴한 전력요금을 유지하였고, 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제고와 물가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전력다소비 산업구조와 에너지의 전력쏠림 현상과 맞물려 전력소비를 과도하게 촉발하여 정전 위기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급속하게 증가하는 전력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증설하는 전력공급 기조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은 저렴한 전력요금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도 유발하고 있다. 물론 한 나라의 전력수급 양상은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과 에너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나 평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이 전력수요 절약과 함께 친환경 저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전력수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7

# Safety

Korean Social Trends 2017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X 안 전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박두용 | 한성대학교 258
한반도의 지진 발생 현황과 특성 이희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68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특성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9

#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박두용 (한성대학교)

-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외인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 자연재해는 대부분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태풍의 영향이 크다.
- 화재 발생은 최근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사망률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 자동차와 철도 사고 사망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해양과 항공 사고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다.
- 최근 형법범죄는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법 범죄는 약간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강력범죄가 감소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며,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믿음은 낮고 불안감은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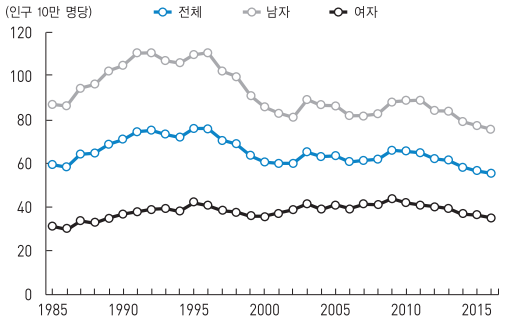
안전은 크게 자연재난, 인적 사고, 그리고 사회적 안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지진, 산사태, 황사, 태풍, 호우 및 폭설 등의 자연현상이나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감염병이 여기에 속한다. 인적 사고는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시설물, 설비, 기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간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사고, 화학물질이나 에너지에 의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있다. 사회적 안전은 집단 내 규범이나 인간관계, 사회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범죄, 테러, 자살 등이 있다.

## 사고로 인한 사망(외인사망)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이후부터는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인사망률은 모든 사고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는 남자가 경제활동과 사고위험이 높은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X-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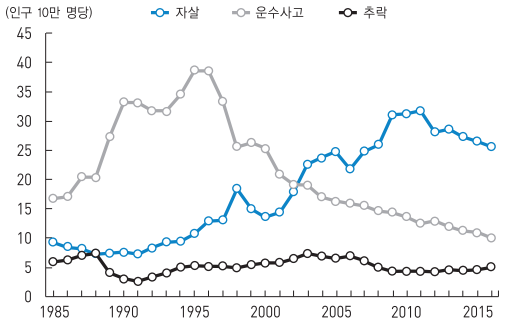
지난 20년간 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그리고 추락이었다. 자살률은 1983년부터 매년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인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운수사고

[그림 X-1] 성별 외인 사망률, 1985–2016




주: 1) 외인 사망률=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그림 X-2] 주요 외인별 사망률, 198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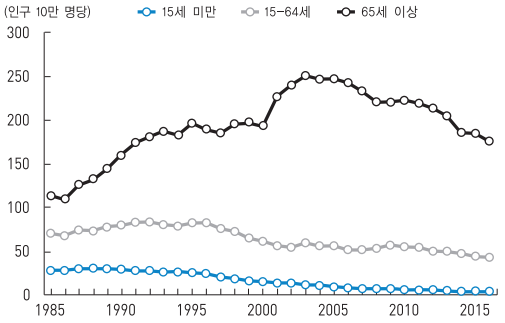



주: 1) 사망률=해당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사망률은 199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99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6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다(그림 X-2).

연령대별로는 15세 미만의 외인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의 외인사망률도 1996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은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했지만 2016년 현재도 인구 10만 명당 175.6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그림 X-3).

[그림 X-3]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198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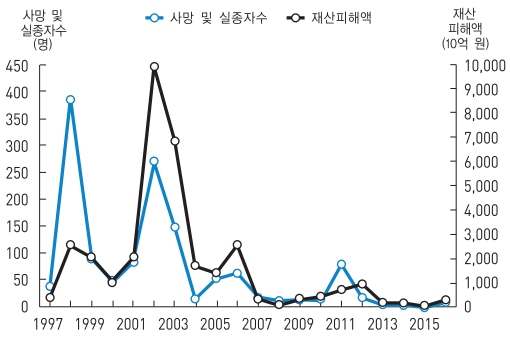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해당 연령집단의 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수÷해당 연령집단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자연재난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했다.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모두 한반도 내륙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그리고 2006년 에위니아 등의 초대형 태풍은 수조 원의

[그림 X-4]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1997-2016




주: 1) 재산피해액은 2016년 가격 기준임.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각 연도.

재산피해와 대규모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X-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저류지 확대, 배수로 확보 및 산사태 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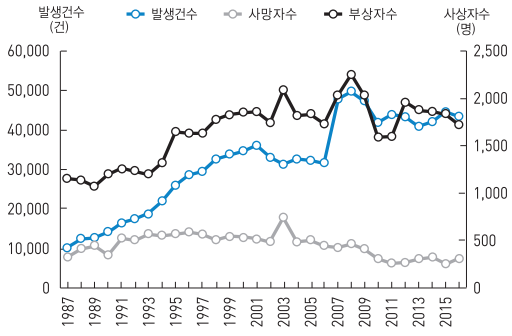
## 인적 사고

### 화재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 재난이며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재 발생 건수는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2007년에 화재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새로운 국가화재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화재 발생 건수는 매년 약 4만여 건으로 여전히 많은 편이다(그림 X-5).

화재 발생 건수는 2010년까지 크게 증가했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화재 초기 진압률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와 이송 및 치료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꾸준히 감소하던 화재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약 300명 내외로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어 현재의 체계로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더 줄이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0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발생 건수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최근 들어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X-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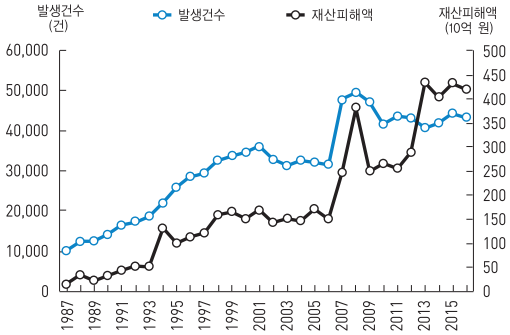
[그림 X-5] 화재 발생건수와 사상자수, 1987-2016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index.jsf).

건축물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최근 그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증가가 더 큰 것은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되고 건축물의 재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X-6).

[그림 X-6] 화재 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 198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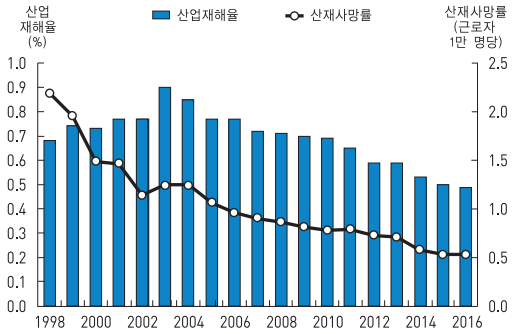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index.jsf).

## 산업재해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그림 X-7). 산업재해율이나 산재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산재예방을 통해 작업장이 안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적으로 여전히 산재사망률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산재사망률이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반면, 산업재해율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

[그림 X-7]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199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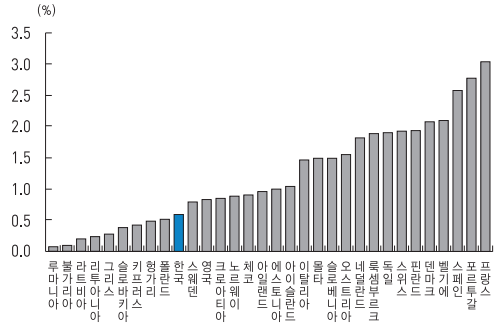



주: 1) 산업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2) 산재사망률=(업무상사고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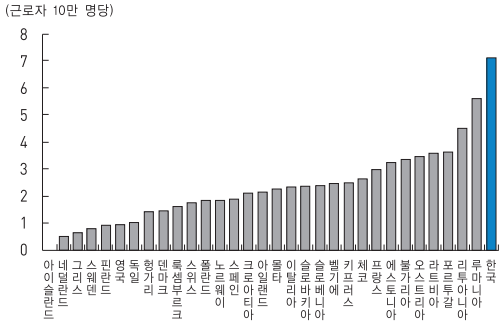
준이다(그림 X-8). 이는 산업재해 통계가 실제 산재사고 통계라기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은 근로자 중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비율을 의미한다. 산업재해율은 산업안전이 발달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개 2%가 넘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산업안전이나 산재보상 수준이 높은 나라는 산재사망률은 낮고 산업재해율은 높다. 산업안전이나 산재보상 수준이 낮은 나라는 그 반대이다. 따라서 한국도 산업재해율은 높이고 산재사망률은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림 X-8]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13

1) 산업재해율




2) 산재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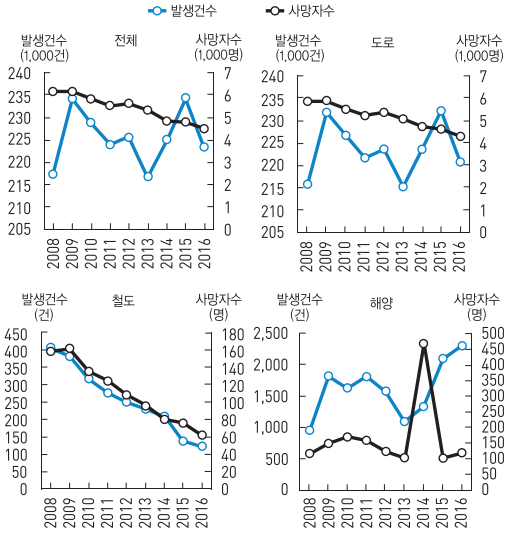

주: 1) 한국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유럽과 비교하기 위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재해자만으로 산출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13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4.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Statistical Explained*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

## 교통사고

지난 9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미미하지만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 부상자 수도 소폭의 증감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그림 X-9).

도로사고 발생 건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부상자 수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로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철도사고는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양사고는 2008년 이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08년부터 약간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양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X-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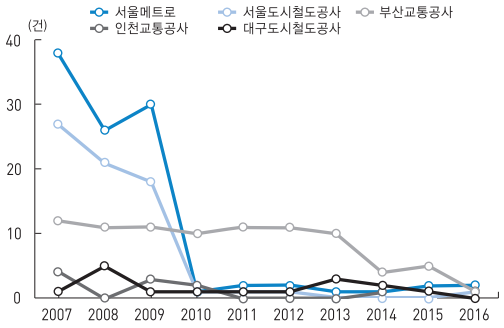
[그림 X-9]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2008-2016




주: 1) 전체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항공사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 연도.

한편,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사고는 부산을 제외하고는 사상사고가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된 2010년부터 사상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스크린도어가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자살이나 안전사고를 막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X-10).

[그림 X-10] 도시철도 사상사고 건수,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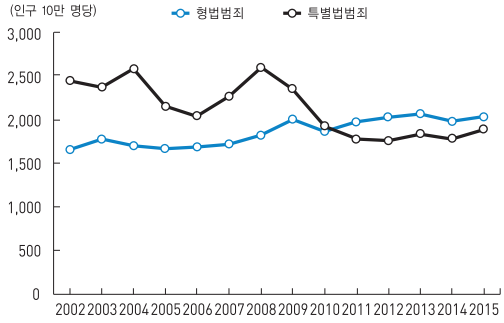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 연도.

## 사회적 안전

### 범죄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로 나타내는데,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함하는 전체 범죄율은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통상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의 형법범죄 발생률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2008년까지 큰 폭의 등락을 보이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크게 감소한 후 최근까지 정체되어 있다(그림 X-11).

[그림 X-1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2-2015




주: 1) 범죄율=해당 범죄 발생건수÷인구×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주요 강력범죄인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및 방화 범죄의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살인범죄는

〈표 X-1〉 주요 강력범죄별 발생건수, 200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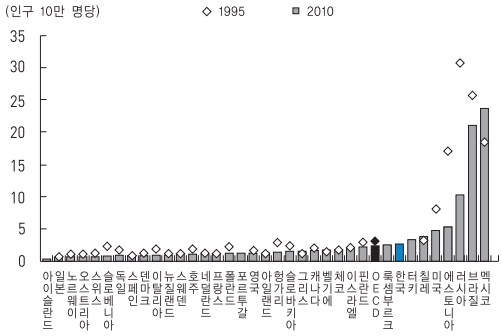
(건)

| 연도 | 살인 | 상해/폭행 | 성폭력 | 방화 |
|---|---|---|---|---|
| 2006 | 1,064 | 237,066 | 14,277 | 1,685 |
| 2007 | 1,124 | 243,218 | 14,344 | 1,694 |
| 2008 | 1,120 | 247,641 | 16,129 | 1,946 |
| 2009 | 1,390 | 250,537 | 17,377 | 1,866 |
| 2010 | 1,262 | 224,300 | 20,584 | 1,886 |
| 2011 | 1,221 | 232,229 | 22,168 | 1,972 |
| 2012 | 1,022 | 230,635 | 23,365 | 1,882 |
| 2013 | 959 | 219,805 | 29,090 | 1,730 |
| 2014 | 938 | 214,605 | 29,863 | 1,707 |
| 2015 | 958 | 226,543 | 31,063 | 1,646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상해 및 폭행 범죄는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성폭력범죄도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다. 방화범죄는 지난 10년간 완만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표 X-1).

[그림 X-12] 주요 국가의 살인범죄율, 1995,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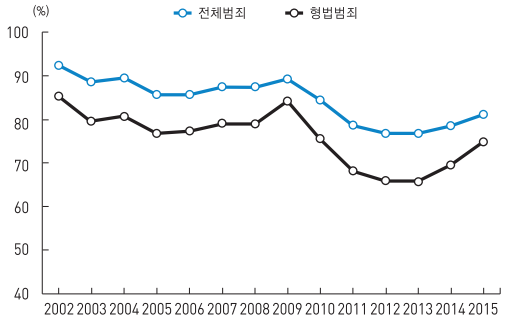



주: 1) 살인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 건수임.
2) 룩셈부르크, 터키 등은 2008년 자료, 체코,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등은 2009년 자료,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등은 2011년 자료, 그 외 국가는 2010년 자료임.
출처: OECD,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2013.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률은 2010년 기준 2.6건으로 OECD 국가 평균인 2.2건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일본(0.4명), 독일(0.8명), 스웨덴 (1.0명), 영국(1.2명) 등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4.8명), 브라질(21.0명), 멕시코(23.7명)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림 X-12).

범죄 검거율은 2002년 92.4%에서 2009년 89.2%로 완만하게 감소한 후 급락하여 2013년에는 76.9%까지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 81.1%로 증가하였다. 형법범죄 검거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2009년까지 80% 내외의 검거율을 유지하다가 2011년 68.1%, 2013년 65.8%까지 감소한 후 2015년에 74.9%로 회복되었다(그림 X-13).

[그림 X-13] 범죄검거율, 2002-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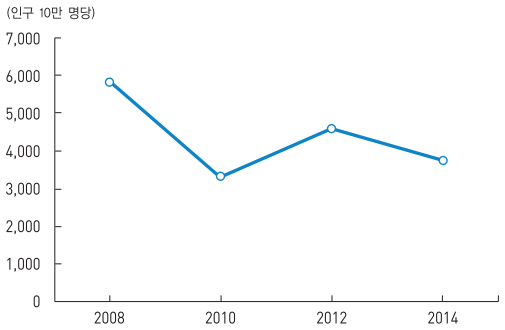



주: 1) 범죄검거율=(범죄검거건수÷범죄발생건수)×1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 범죄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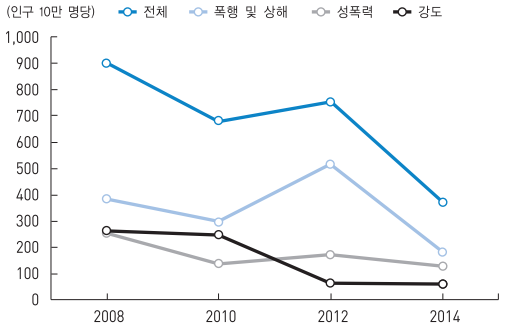
범죄 통계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통계이므로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되어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범죄는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다.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하는 범죄피해 통계는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2년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건수는 2008년 5,820건, 2010년 3,316건, 2012년 4,600건이었다가 2014년에는 3,743건으로 감소하였다(그림 X-14).

[그림 X-14] 범죄피해 경험률, 2008–2014




주: 1) 범죄피해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그림 X-15]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08–2014




주: 1) 폭력범죄 피해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폭행(협박포함) 및 상해, 성폭력, 강도 등 개인 대상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이 중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를 보면, 가장 빈번한 폭행 및 상해(협박, 괴롭힘 포함) 피해는 2008년과 2010년 각각 인구 10만 명당 384건과 296건으로 감소 추세였다가 2012년 51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14년 182건으로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 성폭력 피해도 2008년 253건에서 2010년 139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174건으로 증가한 후 2014년 129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한편, 강도 피해는 2008년과 2010년 각각 262건과 248건이었으나 2012년 66건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14년에도 61건에 그치고 있다(그림 X-15).

〈표 X-2〉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과 이유, 2010–20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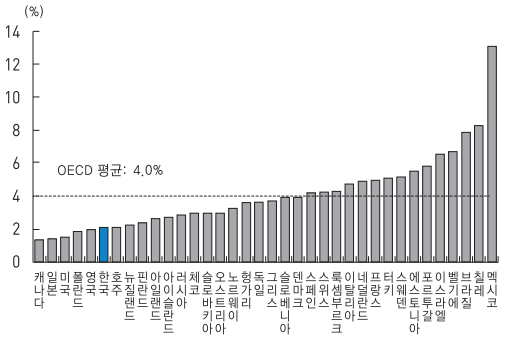
| | 2010 | 2011 | 2012 | 2014 |
|---|---|---|---|---|
| 폭력피해 경험률 | 7.1 | 6.7 | 5.6 | 2.3 |
| 폭력피해 이유 | | | | |
| 특별한 이유 없다 | 43.5 | 42.5 | 51.8 | 53.3 |
| 성격 때문에 | 10.8 | 10.5 | 12.4 | 12.4 |
| 내가 잘못해서 | 11.4 | 9.6 | 9.6 | 6.7 |
| 몸이 작거나 힘이 약해서 | 13.6 | 14.2 | 9.5 | 9.9 |
| 외모나 장애 때문에 | 4.4 | 3.7 | 3.7 | 6.3 |
|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아 | 7.0 | 6.2 | 2.4 | 3.5 |
| 기타 | 9.3 | 13.2 | 10.5 | 6.7 |

주: 1) 폭력피해 경험률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19세 미만) 중 지난 1년 동안 폭행, 갈취, 협박, 왕따 등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폭력피해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해당 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3) 2010년 폭력피해 이유에서 '기타' 응답률은 무응답(1.3%)이 포함된 수치임.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각 연도.

중·고등학생의 폭력피해 경험은 2010년 7.1%에서 2012년 5.6%, 2014년 2.3%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폭력피해를 당한 이유를 보면, 2014년 기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고 이 외에 '성격' 12.4%, '신체 왜소와 허약' 9.9%, '자기 잘못' 6.7%, '외모나 장애' 6.3%, '금품요구 불응' 3.5% 등으로 나타난다(표 X-2).

범죄피해 경험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2.1%로 OECD 국가 평균 4.0%보다 훨씬 낮다. 한국은 캐나다(1.3%), 일본(1.4%), 미국(1.5%)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고 멕시코(13.1%), 칠레(8.3%), 브라질(7.9%)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림 X-16).

[그림 X-16]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 경험률, 2010




주: 1) 범죄피해율은 각 국 조사대상자(만 15세 이상) 중 지난 1년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은 2008년 자료,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은 2009년 자료, 칠레는 2011년 자료, 멕시코는 2012년 자료, 그 외 국가는 모두 2010년 자료임.
출처: OECD,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2013.

## 경찰 및 소방력

경찰관 수는 2001년 9만 819명에서 2016년 11만 4,658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522명에서 447명으로 감소하였다(표 X-3). 전국의 경찰서는 1998년 225개소에서 2016년 252개소로 늘어났고, 치안예산은 1998년부터 2016년 사이에 3조 4,800억 원에서 9조 8,09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소방관수는 2001년 2만 4,223명에서 2016년 4만 4,1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는 1,956명에서 1,161명으로 감소하였다(표 X-3).

〈표 X-3〉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1-2016

(명)

| 연도 | 경찰관 | | 소방관 | |
|---|---|---|---|---|
| | 정원수 | 1인당 담당인구 | 정원수 | 1인당 담당인구 |
| 2001 | 90,819 | 522 | 24,223 | 1,956 |
| 2002 | 91,592 | 520 | 25,104 | 1,898 |
| 2003 | 92,165 | 520 | 26,518 | 1,806 |
| 2004 | 93,271 | 516 | 27,604 | 1,742 |
| 2005 | 95,336 | 505 | 29,362 | 1,641 |
| 2006 | 95,613 | 507 | 30,199 | 1,604 |
| 2007 | 96,324 | 505 | 30,630 | 1,589 |
| 2008 | 97,732 | 502 | 31,918 | 1,537 |
| 2009 | 99,554 | 495 | 33,992 | 1,451 |
| 2010 | 101,108 | 490 | 36,711 | 1,350 |
| 2011 | 101,239 | 493 | 37,826 | 1,320 |
| 2012 | 102,386 | 490 | 38,557 | 1,302 |
| 2013 | 105,357 | 479 | 39,519 | 1,276 |
| 2014 | 109,364 | 464 | 40,406 | 1,256 |
| 2015 | 113,077 | 451 | 42,634 | 1,197 |
| 2016 | 114,658 | 447 | 44,121 | 1,1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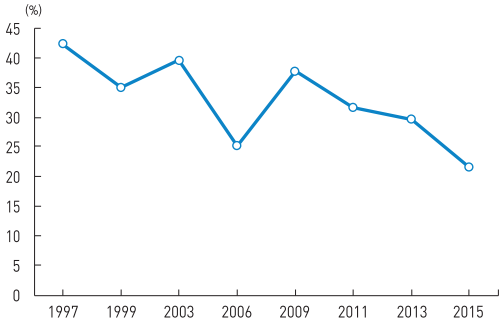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경찰관 정원수.
2)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소방관 정원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소방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 안전에 대한 인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를 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199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2009년 37.8%에서 2011년 31.6%, 2013년 29.7%, 2015년 21.5%로 특히 최근에 크게 낮아지고 있다(그림 X-17).

[그림 X-17] 범죄에 대한 두려움, 1997-2015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4세 이상)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집단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보다는 여성, 중·장년층보다는 청소년층에서 더 크다. 특히, 10-30대 여성의 약 70%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안심시키는 사회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8년 8.2%에서 2012년 13.5%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 9.2%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 12.9%로 다시 증가하였다. 2014년에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진 것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짐작되며, 이후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까지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다소 늘어났다(표 X-4).

〈표 X-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6

(%)

|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
| 전반적인 사회안전 | 8.2 | 11.3 | 13.5 | 9.2 | 12.9 |
| 자연재해 | 17.2 | 18.7 | 22.9 | 14.7 | 20.4 |
| 교통사고 | 5.7 | 8.0 | 9.2 | 7.1 | 10.0 |
| 화재 | 9.9 | 16.6 | 17.5 | 13.9 | 18.8 |
| 범죄위험(치안) | - | 8.2 | 9.0 | 8.8 | 9.1 |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5세 이상)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8년에는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이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 한반도의 지진 발생 현황과 특성

이희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지난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2016년까지 총 1,464회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규모 3.0 이상 지진은 연평균 9.7회, 유감 지진은 연평균 8.4회 발생하였다.
- 실질적으로 지진 피해를 유발하는 규모 5.0 이상 지진은 총 9회 발생하였으며, 그 가운데 남한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은 4회로 약 9.8년에 한 번꼴로 일어났다.
- 역사 지진은 총 1,606회 발생하였으며, 15–18세기에 지진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 한국에서는 행정안전부가 통합 관리하는 663개 가속도 계측기와 지진 통보를 위해 기상청이 운영하는 156개 지진 관측소가 가동되고 있다.
-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 건축법에 포함되었으나 지진 방재를 위한 지진재해대책법은 2009년에서야 제정되어 아직 많은 건축물과 시설물이 지진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만 5,000명의 사망자를 내는 치명적인 자연재해이다. 한국은 지진학적으로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진 빈도가 낮고 지진 규모도 작은 편이다. 큰 지진 피해를 경험해 보지 못해 정부와 국민 모두 지진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에 소극적인 것도 사실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건물들 중에는 내진 설계 기준이 마련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것도 많아 지진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건물들의 노후화는 사회적 위험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2017년 연이어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으로 인해 지진 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진 방재 대책의 점검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지진 관측 역사를 소개하고 역사 지진 목록과 계기 지진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의 지진 발생 현황과 특성 및 지진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의 지진 대비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지진 방재 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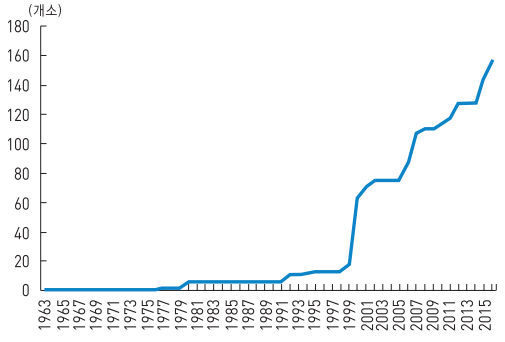
## 지진 관측 역사와 현황

한국에서 계기 지진 관측은 1905년 3월 24일 조선총독부가 인천에 지진 관측소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1945년 해방 때까지 부산, 서울, 대구, 평양 그리고 추풍령 등 6개 지역에 관측소가 설치되어 지진 관측망이 구축되었다. 지진 관측은 한국전쟁 등 정치사회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중단되었다가 1963년 3월 세계 표준 지진 관측

망(World-Wide Standardized Seismograph Network, WWSSN) 구축의 일환으로 미국지질조사소(USGS)가 서울의 국립중앙관상대에 지진계 1대를 설치하면서 재개되었다.

한국의 독자적인 지진 관측소는 1977년 서울과 광주 두 곳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1978년 홍성에서 일어난 지진(규모 5.0)의 충격으로 지진 관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상청은 1991년과 1999년 두 차례의 지진 관측 장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양질의 지진 자료 생산과 체계적인 지진 발생 통보를 위한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기존 아날로그 관측 장비를 디지털 관측 장비로 완전히 교체하고 전국적으로 조밀한 지진 관측망 설치를 추친하였다. 그 결과 2016년말 현재 전국 156개 지진 관측소로 구성된 관측망이 만들어졌다(그림 X-18).

[그림 X-18] 지진 관측소 수, 1963-2016




주: 1) 1963년 서울에 설치된 관측소는 미국지질조사소가 전 세계 표준 지진 관측망 계획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설치한 127개 관측소 가운데 하나임.
2) 2016년 기준 156개 디지털 지진 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음.
출처: 기상청, 「지진연보」,각 연도.; 기상청 홈페이지(http://web.kma.go.kr/).

지난 2009년에 발효된 지진재해대책법(2013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칭)은 교량, 댐, 공항, 가스시설물, 원자력 이용 시설물 등 주요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시설물의 지진 재해 방재를 목적으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 시설물의 지진 가속도 계측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진 가속도 계측 통합 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대상 시설물은 총 814개소이고, 2017년 3월 기준으로 663개소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표 X-5).

〈표 X-5〉 주요 시설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비율, 2017

| 시설 | 대상 (개소) | 설치 (개소) | 비율 (%) |
|---|---|---|---|
| 건축물 | 337 | 294 | 87.2 |
| 공항시설 | 12 | 12 | 100.0 |
| 댐 및 저수지 | 145 | 66 | 45.5 |
| 현수교 및 사장교 | 53 | 33 | 62.3 |
| 가스 및 석유 저장시설 | 137 | 135 | 98.5 |
| 역사 및 고가도로 | 64 | 60 | 93.8 |
| 원자력 이용 시설 | 7 | 7 | 100.0 |
| 변전소 | 15 | 15 | 100.0 |
| 발전용 설비 | 44 | 41 | 93.2 |
| 합계 | 814 | 663 | 81.4 |

주: 1) 2017년 3월 31일 기준임.
출처: 행정안전부, 「9.12지진 백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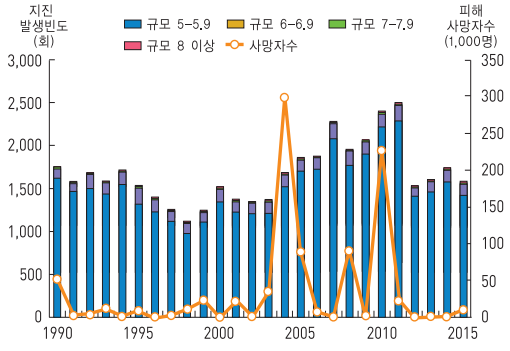
정부의 지진 가속도 계측기에서 측정된 가속도 자료는 시설물의 내진 성능 평가, 지진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신속하게 알아내기 위한 계기 진도도(instrumental intensity map) 작성과 같

은 지진공학적인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진 연구를 목적으로 36개 지진 관측소를, 한국전력연구소가 발전소와 변전소의 지진 방재를 목적으로 10개 관측소를,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안전성 연구를 목적으로 4개 관측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 지진 발생 현황과 특성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6년간의 지진 발생 현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규모 5.0 이상 지진이 매년 평균 1,664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매년 약 3만 5,000명에 달해 지진은 태풍과 함께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라 할 수 있다(그림 X-19).

[그림 X-19] 세계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빈도와 피해 사망자수, 1990-2015




주: 1) 전 세계적으로 규모 8.0 이상 지진은 연평균 1회, 규모 7.0 이상 8.0 미만 지진은 15회, 규모 6.0이상 7.0미만 지진은 139회. 그리고 규모 5.0이상 6.0미만 지진은 1,509회 발생함.
2) 2004년과 2010년에 사망자수가 큰 것은 각각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규모 9.1)과 아이티 지진(규모 7.0)의 피해가 컸기 때문임.
출처: 미국지질조사소 홈페이지(https://earthquake.usgs.gov/).

지진 발생 정보와 관련하여 계기 지진 자료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지진원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진 관측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진 활동 특성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계기 지진을 살펴보기에 앞서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역사 지진 목록을 분석한다. 그런 후에 기상청이 1978년부터 2016년까지 작성한 공식 지진 목록에 기록된 1,464개의 계기 지진 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지진 발생 분포와 특성을 살펴본다.

### 역사 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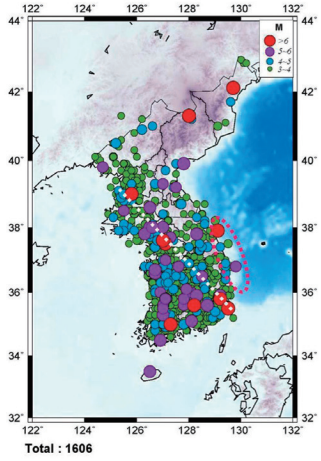
역사 지진 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총 2,161건의 역사 지진을 정리한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2-1904년)」을 2013년에 발간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원본에는 총 1,899회의 지진 발생 기록이 있는데, 중종 때 464회, 명종 때 343회, 숙종 때 221회 그리고 세종 때 141회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보고서 부록에 수록된 역사 지진 목록을 분석하였다. 이 목록에는 서기 2년부터 1810년 사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 지진 1,606건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최소 지진 규모는 3.2이고 최대 지진 규모는 6.2로 기존 연구에서 6.7로 평가되었던 것보다 약간 낮다. 이

목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규모 6.0 이상 지진은 13회, 규모 5.0–6.0 지진은 총 46회 발생하였다.

[그림 X–20]은 1,606건의 역사 지진 진앙 분포도이다. 우선 드러나는 특징은 서해상에서 지진 발생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보다는 역사 지진 해석상의 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다른 특징은 평양–서울–경주를 잇는 선상에서 큰 지진이 많이 발생했고 평안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북부에서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남한 지역이 북한 지역에 비해 지진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남한 지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역사적으로도 서산–포항을 잇는 선을 따라 지진이 더 자주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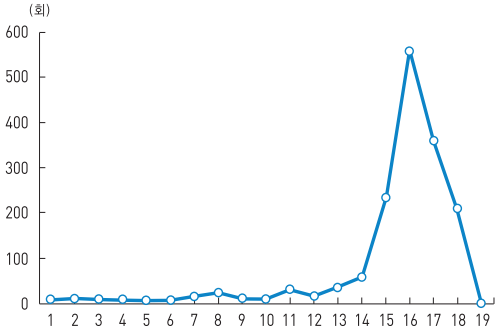
[그림 X-20] 한반도 역사 지진 진앙 분포도, 1–19세기




주: 1) 대상기간은 2–1810년임.
출처: 소방방재청,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2012.

[그림 X–21]은 시기에 따른 지진 발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세기별 지진 발생 빈도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역사적으로 15–18세기에 지진 활동이 가장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지진 기록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 이 시기에 동북아시아의 지진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X-21] 한반도 역사 지진 발생 빈도, 1–19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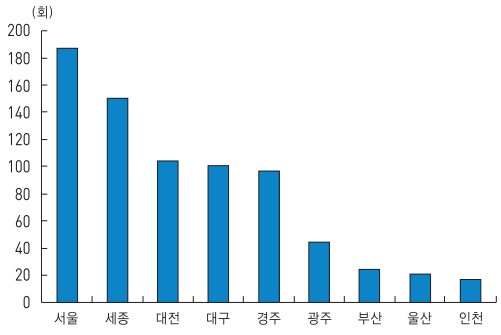



주: 1) 대상기간은 2–1810년임.
출처: 소방방재청,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2012.

[그림 X–22]는 전국 8대 특·광역시와 경주의 시청 반경 40㎞ 이내에서 일어난 역사 지진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역사적으로 서울 부근의 지진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이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주, 대전, 세종, 대구 인근에서 지진이 상대적으로 빈발했음이 확인된다.

시청으로부터 진앙까지의 평균 거리는 경주가 17㎞로 가장 가까웠고 그 다음으로 광주가 20㎞, 서울이 24㎞ 그리고 대구가 25㎞로 가까운

[그림 X-22] 8대 특·광역시와 경주의 역사 지진 발생 빈도, 1-19세기




주: 1) 대상기간은 2-1810년임.
2) 지진 발생 빈도는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을 대상으로 함.
출처: 소방방재청,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2012.

편이었다. 울산의 경우 진앙까지 평균 거리가 30㎞로 가장 멀었다. 최대 지진은 경주, 서울, 대구, 울산에서 규모 6.2로 발생하였다. 특히, 경주에서는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5회나 발생하였다. 대전과 세종은 지진 발생 빈도는 높았으나 최대 지진 규모가 4.6로 비교적 작았고 진앙까지의 평균 거리도 27㎞로 먼 편이었다.

요약하면, 한반도에서 지진은 15-18세기에 가장 빈발했으며 규모가 큰 지진은 평양-서울-경주를 잇는 선상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공간적으로는 북한보다 남한 지역의 지진 활동이 활발했으며, 평안북도, 함경남북도, 경기도 동부와 강원도 북부 지역의 지진 발생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계기 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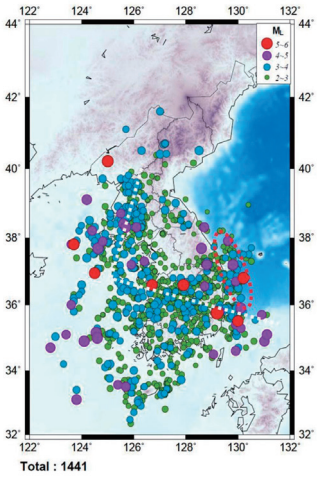
기상청 공식 기록에 따르면, 1978년부터 2016년까지 39년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는 지진이 총 1,464회 발생하였다. 규모별로는 5.0 이상 지진이 9회, 4.0-5.0 지진이 38회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규모 4.0에 못 미치는 지진이다. 규모 4.0 이상 지진은 육상에서 15회, 해상에서 32회 발생했으며 한반도 내에서 약 2.6년에 한 번씩 발생하였다. 규모 3.0 이상 지진은 육상과 해상을 포함하여 연평균 9.7회, 유감 지진은 연평균 8.4회 발생하였다.

[그림 X-23]은 공식 지진 목록에 진앙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진 23건(총 관측소 수가 6개였던 1991년 이전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임)을 제외한 모든 지진의 발생 위치를 지진 규모와 함께 표시한 진앙 분포도이다. 북한 지역으로는 함경남북도와 평안북도, 남한 지역으로는 경기도 동부와 강원도 중부, 전라남도에서 상대적으로 지진이 덜 발생하였다. 화산섬인 제주도에서는 관측 기간 동안 규모 3.0 미만의 작은 지진이 총 4회 발생하여 그 빈도는 낮지만 작은 지진들이 섬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평양 북부-황해도-경기만으로 이어진 축과 서산-포항으로 연결된 축 등 두 축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ㄴ'자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 두 축을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지진이 발생하였다. 그림에서 붉은 타원으로 표시된 동해안 지역과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지진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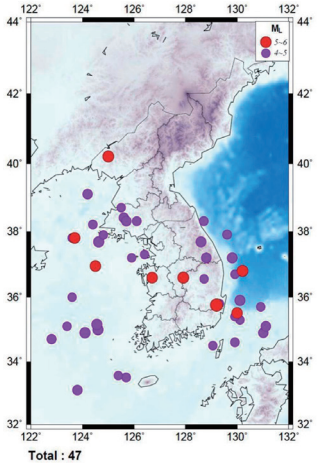
규모 4.0 이상 지진의 진앙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육상보다는 해상에서, 북한보다는 남한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였다. 규모 5.0 이상 지진도 백령도에서부터 포항에 이르기까지 남한을 가로지르는 북서-남동 축을 따라 발생

[그림 X-23] 한반도 계기 지진 진앙 분포도, 1978–2016

1) 전체




2) 규모 4.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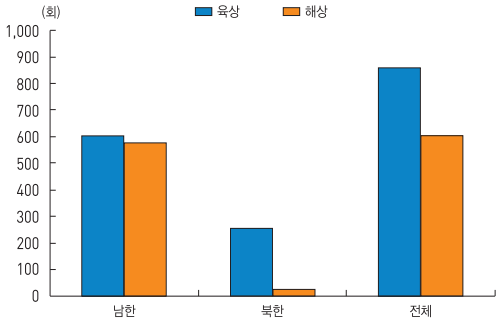



출처: 기상청, 「지진발생목록(1978–2016)」, 2017.

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림 X-24]는 남북한 지역별로 지진 발생 현황을 보여준다. 관측 기간 동안 북한 지역에서 284회, 남한 지역에서 1,180회 발생하여 남한 지역의 지진 발생이 약 4배 정도 많다. 이러한 남북한 간 차이는 북한 지역이 기상청의 지진 관측 범위 밖에 있어 관측이 덜 된 탓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한 지역이 판 경계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안정 대륙지각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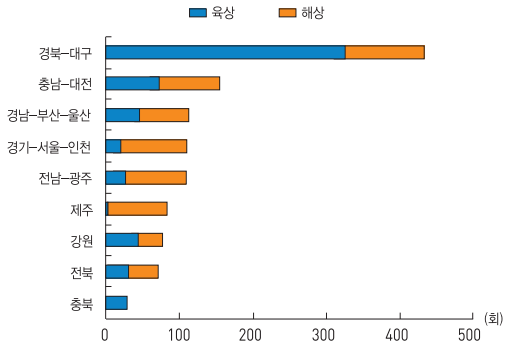
[그림 X-24] 남한과 북한 지역의 계기 지진 발생 빈도, 1978–2016




출처: 기상청, 「지진발생목록(1978–2016)」,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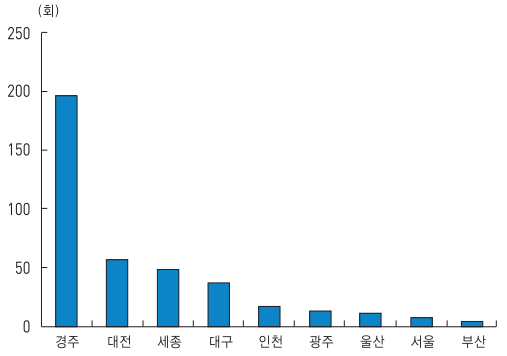
남한 지역만 국한해서 살펴보면, 육상에서는 603회, 해상에서는 577회 지진이 발생하여 육상과 해상의 구분 없이 고른 발생 분포를 보인다. 해상 지진의 경우, 규모 6.0 지진의 통상적인 지진 피해 반경 40㎞를 기준으로 해안선으로부터 이 거리 안에서 282회(평균 거리 27㎞), 그 밖에서 296회(평균 거리 70㎞) 발생하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과 충남–대전 지역에서 지진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으며(그림 X-25), 육상 지진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1,000㎢당 지진 발생 빈도도 경북–대구 지역과 충남–대전 지역이 각각 16.4회와 8회로 나머지 지역의 평균 2.9회에 비해 높다. 경기–서울–인천 지역은 1.7회로 가장 낮다.

[그림 X-25] 권역별 계기 지진 발생 빈도, 1978-2016




출처: 기상청, 「지진발생목록(1978-2016)」, 2017.

[그림 X-26] 8대 특·광역시와 경주의 계기 지진 발생 빈도, 1978-2016




주: 1) 지진 발생 빈도는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을 대상으로 함.
2) 경주는 광역시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포함시켰음.
출처: 기상청, 「지진발생목록(1978-2016)」,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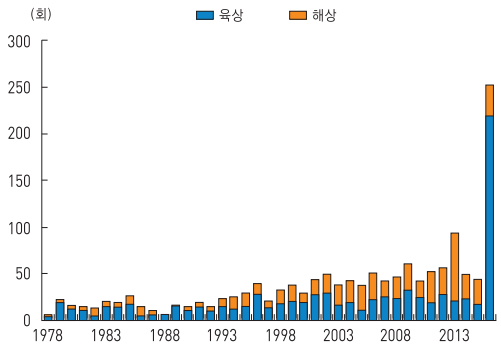
[그림 X-26]은 8대 특·광역시와 경주의 시청 반경 40㎞ 이내에서 일어난 지진 발생 빈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경주, 대전, 세종, 대구 순서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주의 경우 2016년 9월 12일 지진의 여진 166회가 포함되어 예외적으로 높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31회로 여전히 발생 빈도가 높다. 시청으로부터 진앙까지의 평균 거리도 경주가 12.6㎞로 가장 가깝고 그 다음으로 세종이 20㎞, 대전이 24㎞로 가까운 편이다. 최대 지진 규모도 경주(5.8), 대전(3.9), 대구(3.9)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 이러한 지역별 지진 발생 특성은 지진 재해 관련 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림 X-27]은 시기별 지진 발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상청의 독자적인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2016년까지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 빈도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지난 39년 동안 규모 2.0 이상 지진은 매년 평균 37.5회 발생하였다. 육상에서는 연평균 22회, 해상에서는 연평균 15.5회 발생하였다. 2016년과 2013년에 예외적으로 지진 빈도가 높은 것은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 166회와 2013년 5월 18일 백령도 부근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4.9 지진의 여진과 전진 14회 그리고 아직까지 발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2013년 6월 5일부터 11월까지 보령 앞바다에서 일어난 군집성 지진 32회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규모 3.0 이상 지진과 사람이 지진동을 느낀 유감 지진의 연평균 발생 횟수는 각각 9.7회와 8.4회이다. 2016년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으나 1987년, 1990년, 1991년, 1998년, 1999년, 2003년, 2004년, 2007년, 2014년, 2015년 등에는 예외적으로 규모 3.0 이상 지진보다 유감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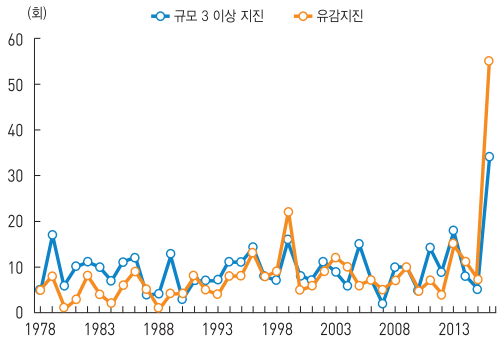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1999년을 기준으로 지진 발생이

[그림 X-27] 한반도 계기 지진 발생 빈도, 1978-2016

1) 전체 지진




2) 규모 3.0 이상 지진과 유감 지진




출처: 기상청, 「지진발생목록(1978-2016)」, 2017.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시점 이전에는 지진 발생이 연평균 19.2회에 그쳤으나 이후 연평균 58.9회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고, 지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규모 3.0 이상 지진 발생도 연평균 8.8회에서 10.8회로 2회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관측소가 늘어남에 따라 지진 관측 능력이 향상되고 과거 내륙에만 한정되었던 관측소가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도 설치됨에 따라 지진 관측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육상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 발생이 매년 5.3회에서 5.0회로 줄어든 반면 해상에서는 매년 3.5회에서 5.8회로 증가한 사실이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요약하면, 지진 발생횟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관측소 증설에 따른 지진 관측 능력과 범위가 확대된 결과로 실제 지진 발생 추이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 공간적으로는 동해안 지역과 서산-포항을 잇는 선상을 따라 상대적으로 지진이 빈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지진 방재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진 발생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진 피해 사례

역사 지진 기록에 의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는 지진이 약 40회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에는 779년 통일신라시대 혜공왕 15년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계기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05년 이후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규모 5.4의 포항지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총 6번의 지진 피해를 경험하였다(포항지진의 공식적인 피해현황이 아직 집계되지 않아 본 보고서에는 수록하지 않았음). 사망 피해는 1983년 5월 26일 일본의 동해중부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로 인해 동해시와 임원항에서 3명이 사망한 경우가 유일하다. 부상자 또

〈표 X-6〉 한반도 주요 지진 피해 사례, 1905–2016

| 지진명 | 발생일 | 지진 규모 | 주요 피해내용 |
|---|---|---|---|
| 쌍계사 지진 | 1936. 7. 4. | 5.1 | · 건물 피해: 13동(전파 3, 반파 10등)<br>· 인명 피해: 부상 4명<br>· 문화재 피해: 쌍계사 건물 등 문화재 파손 |
| 홍성 지진 | 1978. 10. 7. | 5.0 | · 재산 피해: 3억 100만 원<br>· 인명 피해: 부상 2명<br>· 건물 피해: 홍성군청을 중심으로 건물파손 100여 동, 건물균열 1,000여 동<br>· 성곽 붕괴: 사적 231호 홍주 성곽 붕괴<br>· 도로 파손: 포장도로 약 20m가 너비 1cm가량 균열<br>· 유리창 파손: 홍성군청 등 12개 공공기관 유리창 500여 장<br>· 기타: 일시 정전 및 전화 불통 |
| 영월 지진 | 1996. 12.13. | 4.5 | · 건물 피해: 영월군과 정선군 일대 10여 개 구조물에서 균열발생, 도로변 낙석 발생<br>· 한반도 전역에서 진동 감지 |
| 오대산 지진 | 2007. 1.20. | 4.8 | · 건물 피해: 일부 노후 조적조 건물의 벽체에 균열 발생 |
| 경주 지진 | 2016. 9.12. | 5.8 | · 인명 피해: 부상 23명<br>· 재산 피해: 4,996건 등 약 35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공공시설은 182건으로 약 58억 원의 피해를 입음. 사유재산의 경우 주택전파 5건, 반파 24건, 기와파손 및 벽체균열이 일어난 주택소파는 4,96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문화재의 경우는 59건으로 약 50억 원의 피해를 입음. |

출처: 행정안전부, 「9.12지진 백서」, 2017.

한 쌍계사 지진 4명, 홍성 지진 2명, 경주 지진 23명으로 모두 30명 미만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진에 의한 인명 피해는 많지 않다(표 X-6). 그러나 큰 피해를 준 지진이 소수이고, 특히 사망자를 낸 지진이 없었던 점이 지진 재해 대비를 소홀히 한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 지진 재해 대비 현황

지진이 대표적인 자연재해인 태풍과 다른 점은 아직까지도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내진 설계 기준과 관련된 건축법의 제·개정 역사와 함께 지진 재해를 대비한 기술개발 동향과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예고하였다(표 X-7). 이는 전체 건축물 670만여 동 가운데 약 86%가 1–2층 건물이고 2층 이하 건물이 국내 지반 증폭 특성상 지진 재해에 더욱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9.12 지진백서」에도 저층 건물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일반 건축물외에 교량, 터널, 댐,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국가 생명선(life line)인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내진 설계 기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도 확대하고 있다. 〈표 X-8〉은 법률이 정한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의 종류와 내진 성능 확보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10만 5,448개 대상 공공시설물 가운데 43.7%만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경우 2만 9,558개 대상 중 23.1%인 6,829개 학교만 내진 성능을 확보해 13.9%인 유기시설 다음으로 그 비율이 낮다. 아동과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

내진 설계 기준과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또

〈표 X-7〉 내진 설계 기준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 역사, 1988–2017

| 관련 규정 (개정시점) | 층수 | 연면적 | 건출물 높이 | 처마 높이 | 기둥과 기둥사이 | 기타 항목 |
|---|---|---|---|---|---|---|
| 건축법시행령 제16조('88. 3. 1.) | 6층 이상 | 100,000㎡ 이상, 1,000㎡ 이상인 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 등, 5,000㎡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0,000㎡ 이상인 판매시설(지진구역 2 내) | | |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
| | | | | ·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출물<br>·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 5,000㎡이상 | | |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92. 6. 1.) | 6층 이상 | 100,000㎡ 이상 | | |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05. 7.18.) | 3층 이상 | 1,000㎡ 이상 (단,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 | | 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09. 7.16.) | 3층 이상 | | 13m 이상 | 9m 이상 | 10m 이상 | |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15. 9.22.) | 3층 이상 | 500㎡ 이상 (단,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17. 2. 3.) | 2층 이상 (목구조는 3층) | | | | | |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17.10.24.) | 2층 이상 | 200㎡ 이상 (목구조는 500㎡ 이상, 단,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13m 이상 | 9m 이상 | 10m 이상 | - |

〈표 X-8〉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별 내진 성능 확보율, 2016

(%)

| 시설구분 | 내진성능 확보율 | 시설구분 | 내진성능 확보율 | 시설구분 | 내진성능 확보율 | 시설구분 | 내진성능 확보율 | 시설구분 | 내진성능 확보율 | 시설구분 | 내진성능 확보율 |
|---|---|---|---|---|---|---|---|---|---|---|---|
| 전체 | 43.7 | 원자로 및 관계시설 | 98.4 | 수문 | 78.6 | 삭도 및 궤도 | 62.5 | 도로시설물 | 58.4 | 학교시설 | 23.1 |
| 다목적댐 | 100.0 | 공동구 | 92.7 |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 78.3 |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60.6 | 공항시설 | 57.5 | 유기시설 | 13.9 |
| 리프트 | 100.0 |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92.2 | 공공하수처리시설 | 78.3 | 고속철도 | 59.9 | 철도시설 | 41.8 | | |
| 송유관 | 100.0 | 발전용수력·화력 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88.8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70.7 | 배수갑문 | 59.3 | 공공건축물 | 36.2 | | |
| 크레인 | 99.6 | 일반댐 | 83.3 | 병원시설 | 65.2 | 폐기물 매립시설 | 59.3 | 전기통신설비 | 35.5 | | |
| 압력용기 | 98.4 | 도시철도 | 81.4 | 항만시설 | 62.8 | 수도시설 | 58.6 | 어항시설 | 33.1 | | |

주: 1) 내진 성능 확보율=내진 성능 확보 시설물÷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100.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2017.

다른 문제점은 9개 정부부처로 흩어져 있는 시설물 관할 기관에서 내진 성능 목표와 설계 기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진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관성 있는 내진 성능 목표와 설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가 2009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면서 지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피해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탓에 지진 피해 평가, 내진 성능 평가, 지진 재해 복원력 강화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지진 재해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언제든지 규모 6.0 안팎의 피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맺음말

지진은 아직까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자연재해이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37.4회 발생하고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 지진은 남한 내륙에서 약 9.8년에 한 번 발생하여 한국은 지진학적으로 중·약 지진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한 약 40회의 지진 피해를 역사적으로 경험하였고, 2016년 경주 지진은 지진 재해가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규모 6.0 안팎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종합적인 지진 방재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특성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지난 4년간 아동실종·가출과 아동유괴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동학대는 크게 증가하였다. 아동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 아동학대 발생은 2011년 6,058건에서 2015년 1만 1,715건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신체적 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방임·유기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 한국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2014년 기준 아동인구 1,000명당 1.1건으로 미국의 9.4건에 비해 훨씬 낮다.
- 아동학대는 신고의무자보다 부모, 이웃 등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이 신고하는 비율이 높다.
- 아동학대 가해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다.

UN은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발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아동인권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가부장적 인식이 팽배하고 자녀양육에 있어 엄격한 훈육이 강조되었던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은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제도적 장치도 최근에서야 마련되었다.

최근 경제위기, 가족해체, 부모의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가족 내 아동보호 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학대나 폭력, 유괴, 실종 등의 피해자가 되거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된 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 혹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충격적인 학대 및 방임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2013년 10월 울산 초등학생 구타 사망 사건과 서울 골프채 체벌 사망 사건, 같은 해 11월 인천 소금밥 학대 사망 사건, 2014년 4월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같은 아동사망 사건이나 2015년 이후 발생한 일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이 그 예이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심리적으로는 피해아

동의 애착, 대인관계, 적응 등에 문제를 야기하고 신체적으로는 작은 상해에서부터 살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글에서는 아동 대상 범죄 발생 현황을 개괄한 후 아동학대 발생 추이와 특성을 자세히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추이,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발생률 비교, 아동학대 신고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 특성, 아동학대 행위 특성 등을 논의한다.

## 아동 대상 범죄 발생 추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혹은 위험요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동실종·가출, 아동유괴,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아동살인 등이 있다. 〈표 X-9〉는 이 다섯 가지 범죄의 최근 4년간(2012-2015년) 발생 추이를 보여준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아동실종·가출,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아동유괴, 아동살인의 순으로 발생률이 높다. 이 중 아동실종·가출 발생은 2012년 2만 7,295건에서 2015년 1만 9,42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아동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390.8건에서 216.8건으로 줄어들었다. 아동유괴 발생건수는 아동실종·가출보다 훨씬 적어 매년 130-170건에 그치고 발생률도 1.2-1.4건으로 낮다. 최근 4년간 아동유괴 발생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아동학대 발생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지난 4년간 6,403건에서 1만 1,715건으로 약 83% 증가하였고 발생률도 66.1건에서 130.7건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한편, 아동성폭력 발생은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9,891건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4년 9,530건, 2016년 9,025건에 그치고 있다.

〈표 X-9〉 아동 대상 범죄 및 위험요인별 발생건수와 발생률, 2012-2015

| 연도 | 아동 실종·가출 | 아동 학대 | 아동 성폭력 | 아동 유괴 | 아동 살인 |
|---|---|---|---|---|---|
| 발생건수(건) | | | | | |
| 2012 | 27,295 | 6,403 | 8,961 | 169 | 88 |
| 2013 | 23,089 | 6,796 | 9,891 | 146 | 46 |
| 2014 | 21,591 | 10,027 | 9,530 | 134 | 79 |
| 2015 | 19,428 | 11,715 | 9,025 | 132 | 74 |
|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 | | | | |
| 2012 | 390.8 | 66.1 | 75.7 | 1.4 | 0.7 |
| 2013 | 244.8 | 72.1 | 85.5 | 1.3 | 0.4 |
| 2014 | 235.0 | 109.1 | 84.4 | 1.2 | 0.7 |
| 2015 | 216.8 | 130.7 | 81.8 | 1.2 | 0.7 |

주: 1) 아동유괴, 아동성폭력, 아동살인 등은 20세 이하 피해자, 아동학대는 18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2) 실종아동법 개정(12.2.5)으로 실종아동 범위가 확대되어 가출인으로 접수되었던 자를 실종아동으로 재접수하여 통계가 변경됨. 실종아동법 개정(13.6.3)으로 실종아동의 범위가 확대되어 통계 변경됨(14세 미만 → 18세미만).
3) 아동유괴 발생건수는 약취, 유인, 수수, 은닉, 부녀매매, 국외이송, 인신매매 중 20세 이하 피해자수임.
4) 아동성폭력 발생건수는 강간, 간음,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등살인, 치사, 상해,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 중 20세 이하 피해자수임.
5) 아동살인 발생건수는 살인(기수), 살인(미수, 예비, 음모, 방조) 중 20세 이하 피해자수임, 치사 제외.
6) 발생률=(해당 범죄 발생건수÷해당 연령 주민등록인구)×100,000.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아동성폭력 발생률은 2015년 기준으로 아동인구 10만 명당 81.8건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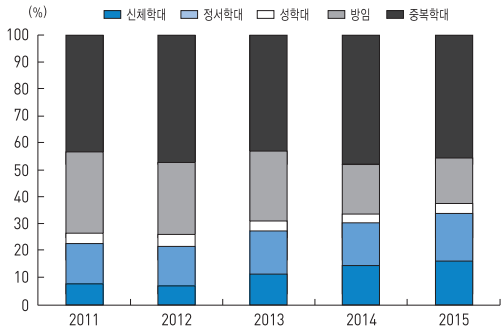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아동살인은 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범죄로 2013년의 46건을 제외하면 매년 70–8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아동인구 10만 명당 0.7건의 아동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 아동학대 발생 추이

한국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신고 혹은 인지된 아동학대 사건은 1만 1,715건에 달한다. 이는 2011년의 6,058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특히 2014년에 1만 건을 넘어서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아동학대 발생 자체가 증가한 데에도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율이 증가하고, 정부의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가 구축되어 피해사례가 이전보다 쉽게 드러나는 데에도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유기 그리고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중복학대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성적 학대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 2015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중복학대가 45.6%(5,347건), 정서적 학대가 17.5%(2,046건), 방임·유기가 17.2%(2,010건), 신체적 학대가 16.1%(1,884건), 성적 학대가 3.7%(428건)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방임·유기 비율은 30.3%에서 17.2%로 감소하는 반면 신체적 학대 비율은 7.7%에서 16.1%로 증가하는 양상이 특징적이다(그림 X-28).

[그림 X-28] 아동학대 유형별 구성비율, 2011–2015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아동학대 발생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발생률, 즉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2014년 총 70만 2,208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아동인구 1,000명당 9.4건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같은 해 총 1만 27건, 아동인구 1,000명당 1.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아동학대 발생률이 훨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 제도가 서로 다르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도 두 나라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4년간(2011–2014년) 아동학대 발생률의 추이를 비교하면, 미국은 2011년 9.2건, 2012년 9.1건, 2013년 9.2건, 2014년 9.4건으로 큰 변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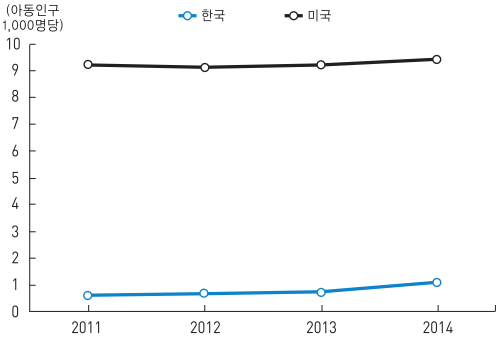
없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0.6건에서 1.1건으로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그림 X-29).

누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지는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보이다. 이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25조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고의무자에게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최근 5년간 신고자 유형을 분석해 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비율은 30%대에 불과한 반면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비율은 70%대에 이른다. 이 같은 양상은 최근 더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은 2011년 32.5%에서 2015년 29.4%로 다소 감소하고 같은 기간 비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은 67.5%에서 70.6%로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X-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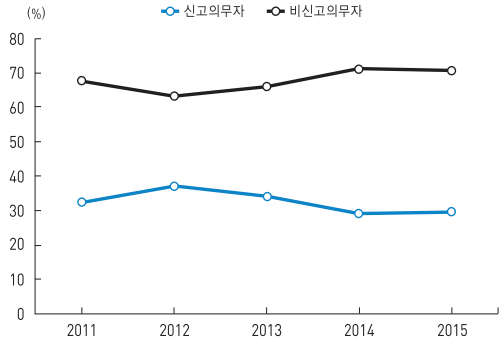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친인척(조부모, 형제자매, 친인척)보다는 이웃과 모르는 사람이 신고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유치원과 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강화되면서 피해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X-29]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발생률, 2011–2014




주: 1) 한국 발생률=(아동학대 사례건수÷만 17세 이하 추계인구)×1,000.
2) 미국 발생률=(아동학대 피해자수÷총 아동인구)×1,000.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 Maltreatment 2014*, 2015.

[그림 X-30]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별 구성비율,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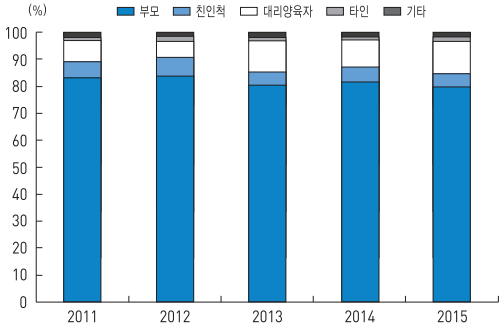

주: 1)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5조 의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1) 신고의무자에는 교원,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 특성

아동학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리양육자, 친인척, 타인의 순이다. 2015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와 대리양육자인 경우가 각각 79.8%(9,348건)와 12.2%(1,431건)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외 친인척에 의한 학대와 타인에 의한 학대도 각각 4.8%(562건)와 1.6%(187건) 발생하였다(그림 X-31).

[그림 X-31] 아동학대 가해자별 구성비율,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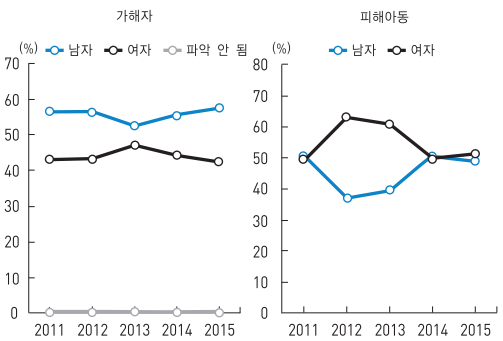



주: 1) 부모는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등임.
2) 친인척은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친인척, 형제자매 등임.
3) 대리양육자은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교직원, 초·중·고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청소년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위탁부, 위탁모, 베이비시터 등임.
4) 타인은 이웃, 낯선 사람 등임.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최근 5년 동안 가해자가 부모인 비율은 감소한 반면 대리양육자인 비율은 증가하였다. 부모의 비율은 2011년 83.2%에서 2015년 79.8%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대리양육자의 비율은 8.0%에서 12.2%로 증가하였다. 친인척과 타인의 비율은 5% 이하이며, 특히 타인에 의한 학대는 1%대로 매우 드물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은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역시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남성은 전체 가해자의 50-60%, 여성은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같은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학대 피해아동의 남녀 비율은 2000년대 이후 대체로 5:5 수준이었으나 2012년과 2013년에 남자 피해아동이 3,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4:6 수준이 되었다. 2014년에 남자 피해아동이 2,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크게 증가하여 남녀 비율이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 X-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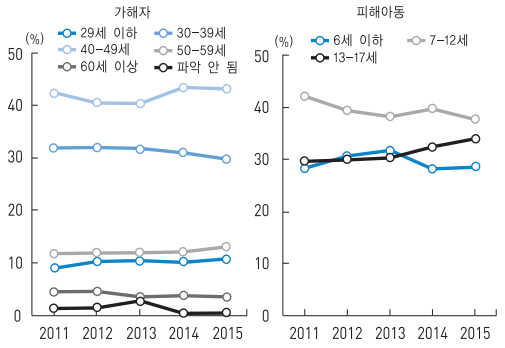
[그림 X-32]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아동의 성별 구성비율, 2011-2015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가해자가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을 양육하는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피해아동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만 7–12세 초등학생 아동이 37.7%, 만 13–17세 청소년기 아동이 33.8%, 만 6세 이하 영유아기 아동이 28.5%로 미취학 아동보다 학령기 아동의 피해율이 높다. 최근 5년간 피해아동의 연령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 7–12세 아동의 비율이 감소하고 만 13–17세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X-33).

[그림 X-33]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아동의 연령집단별 구성비율, 2011–2015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피해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방임·유기가 감소하고 신체적 학대가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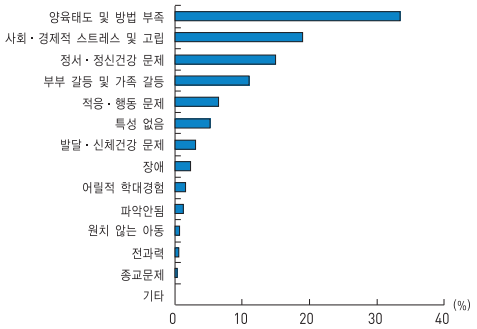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장애, 정서, 행동 및 발달적 특성 등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5년 접수된 사건의 피해아동과 가해자 특성을 보면, 먼저 피해아동의 경우 적응 및 행동 문제(35.0%), 정서 및 정신건강 문제(30.4%), 발달 및 신체건강 문제(11.1%), 장애(3.5%) 등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와 행동발달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정서 및 정신건강 문제(14.9%), 적응 및 행동 문제(6.5%), 발달 및 신체건강 문제(3.1%), 장애(2.3%) 등의 어려움보다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3.7%),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19.0%), 부부 및 가족 갈등(10.9%) 등의 어려움이 더 많다(그림 X-34).

아동학대가 빈곤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자.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빈곤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보다 피해아동의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수급자 비율이 상이한 것은 가정 외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도 학대가 일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수급자 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아동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수급자 비율은 2011년 24.5%에서 2015년 15.9%로, 같은 기간 피해아동의 수급자 비율은 31.0%에서 19.9%로 감소하였다(그림 X-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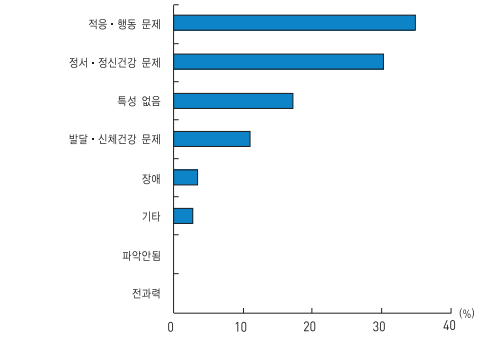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은 아동학대가 그동안 고위험가족으로 분류되던 빈곤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가정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대의 개념이 확

[그림 X-34]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아동의 특성별 구성비율, 2015

1) 가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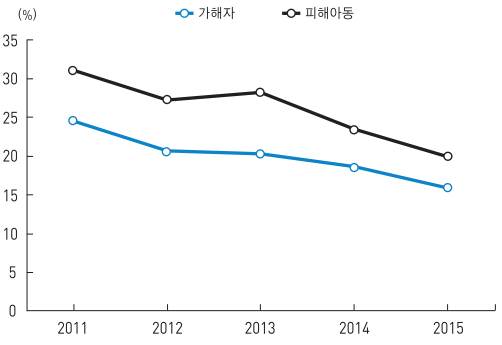



2) 피해아동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그림 X-35]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아동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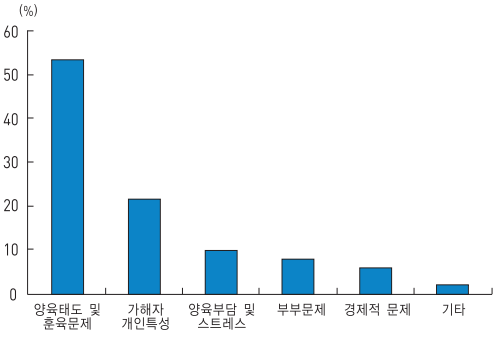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장되어 그동안 훈육행위로 용인된 행동이 학대로 인식된 결과일 수 있다.

## 아동학대 행위 특성

이번에는 가해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학대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오래 발생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학대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572개 사건을 대상으로 수집한 수사재판 기록조사 데이터이다.

[그림 X-36] 아동학대 동기별 구성비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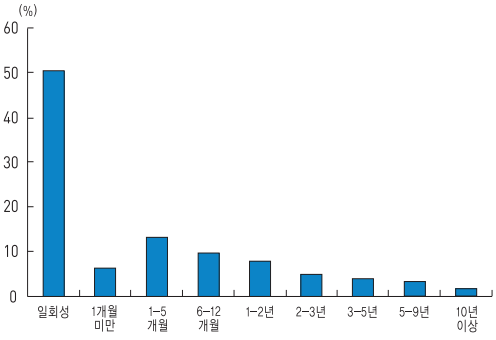

주: 1)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는 적대적·통제적 양육태도 및 과도한 훈육, 부모 역할과 양육에 관한 기술 부족 및 지나친 기대 등임.
2) 가해자 개인특성은 평소 폭력적 성향이 아동에게 적용, 알코올 중독, 어릴 적 학대경험, 가해자의 불안, 우울, 기타 정신질환, 산후우울증, 충동이나 감정 조절 불능 등임.
3)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및 사회적지지 부족, 장애아동 부모로서의 스트레스, 원치 않는 아동이거나 아동에 대한 온정 결핍 등임.
4) 기타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혐오, 미신, 종교 등임.
5) 미상 제외.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5.

아동학대의 동기는 학대가 개인 및 가족 특성, 사회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가해자와 피해아동 간의 상호작용 결과일 수 있어 명확하게 가려내기는 어렵다. 다만 가해자가 응답한 주된 학대 이유를 보면,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가 가장 많고(53.3%) 그 다음으로 알코올 문제나 어린 시절 학대 경험, 불안, 우울, 정신질환 등 가해자 개인의 특성(21.6%),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9.8%), 부부 간 문제(7.7%), 경제적 문제(5.8%) 등의 순이다(그림 X-36).

[그림 X-37]과 [그림 X-38]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빈도와 기간을 보여준다. 아동학대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58.1%로 가장 흔하지만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17.9%나 된다. 일회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학대의 빈도가 높을수록 발생 비중도 높다(그림 X-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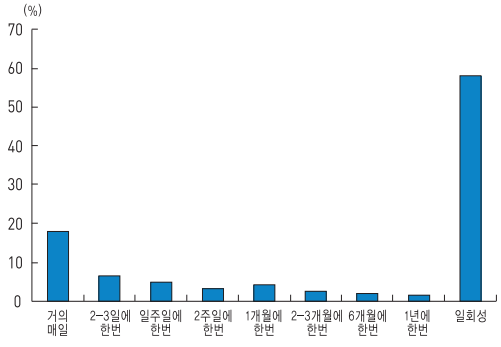
학대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20.9%에 달해 아동학대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알 수 있다(그림 X-38). 가정 외 학대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

[그림 X-38] 아동학대 피해기간별 구성비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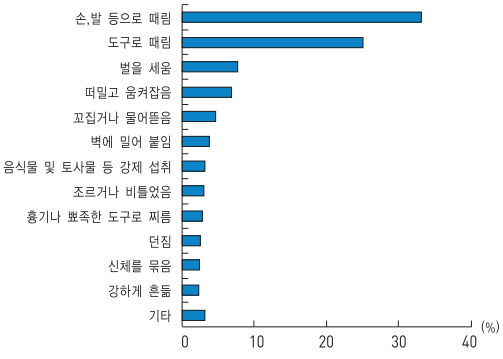

주: 1) 미상 제외.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5.

[그림 X-37] 아동학대 빈도별 구성비율, 2015




주: 1) 미상 제외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5.

[그림 X-39] 신체적 학대 행위유형별 구성비율, 2015




주: 1) 기타는 할퀌, 화학물질이나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화상을 입힘, 거꾸로 매닮, 물에 빠트림 등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5.

자에 의해 조기에 발견될 수 있지만 가정 내 학대는 부모나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고 부모가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보호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학대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아동의 후유증 역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 내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이웃,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살펴보면, 손발 등으로 때리거나(33.1%) 도구로 때리는 경우(25.0%)가 가장 흔하다. 사용되는 도구는 빗자루, 자, 리모컨, 사무용품 등에서부터 골프채, 허리띠, 돌, 죽도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외에 벌세우기(7.7%), 떠밀고 움켜잡기(6.9%), 꼬집거나 물어뜯기(4.6%), 벽에 밀어붙이기(3.7%) 등이 있고, 음식물이나 토사물, 용변, 고춧물, 뜨거운 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한다(그림 X-39).

# Korean Social Trends 2017
# 한국의 사회동향 2017

2017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7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XI 사회통합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 연세대학교 290

한국인의 정치참여와 사회갈등 인식 박원호 | 서울대학교 298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박 준 | 한국행정연구원 305

#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연세대학교)

- 2000년대 들어 선거 투표율은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 높아지면서 최근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치인 신뢰가 높은 나라에서 투표율이 높다.
- 사회단체 참여는 최근 들어 소폭 하락하였으며, 가장 많이 참여하는 단체는 향우회나 동창회 등의 조직이다.
- 대인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 모두 최근 들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 주관적 웰빙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사회통합은 사회 속의 개인들이 서로 신뢰와 배려를 갖고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동체에 참여하며 질서와 안정을 유지해 가는 과정이자 상태이다. 통합된 사회에서 개인 및 조직 간에는 서로를 이롭게 하는 관계와 구조를 일컫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 또한 통합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용과 존중을 하고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상호 인정과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통합이 사회나 개인에게 바람직한 이상이지만 현실에서 사회통합은 쉽지 않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장애물로는 관용을 해치는 이방인에 대한 배척, 참여 의욕을 낮추는 무관심과 소외,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해치는 차별과 배제, 갈등을 조장하는 과도한 불평등 등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50여 년에 걸쳐 압축적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경험했으며 지난 20여 년간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화를 겪었다. 그 결과 이념과 가치관의 변화와 세대 간 경험과 인식의 차이 그리고 불평등에 따른 이해의 충돌이 사회갈등을 가져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가 매우 분화되어 불평등과 다양성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단일한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고 따르며 사회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사회통합은 쉽지 않다. 변화된 조건과 환경에 적합한 사회통합의 이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현재의 사회통합 조건과 상태를 경험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치·사회적 참여, 신뢰와 공정성, 사회적 관계와 지지, 주관적 웰빙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정치·사회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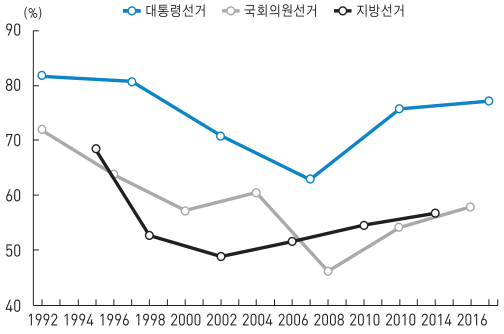
정치·사회적 참여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영역에만 관심을 갖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 혹은 공동체의 영역에도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서로 소통과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다. 자유가 제약된 전체주의 혹은 권위주의 사회에서 참여는 타율적으로 억제되지만,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무관심, 무력감, 극단적 개인주의가 참여를 스스로 제한하도록 만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참여의 대표적 방식은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높인다. 아래 [그림 XI-1]을 보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에 걸쳐 각종 선거의 투표참여율이 하락했지만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유권자의 77.2%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선거유형별로 비교하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 비슷하고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이들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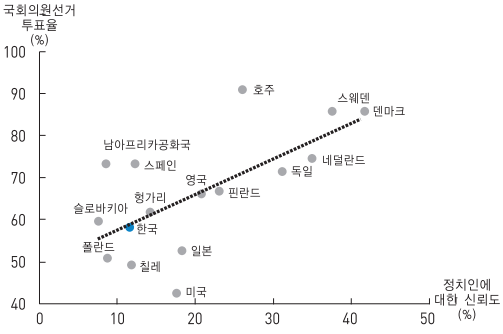
[그림 XI-2]는 나라마다 서로 다른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정치인에 대한 신뢰 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준다. 투표율은 2014-2015년에 가장 가까운 해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와 '매우 반대'응답 비율을 합한 것이다. 한국은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투표율이 낮지만 미국, 일본, 폴란드, 칠레보다는 높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투표율이 높고 반대로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회일수록 투표율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그림 XI-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 1992-2017




주: 1) 투표율=(투표자수÷등록선거인수)×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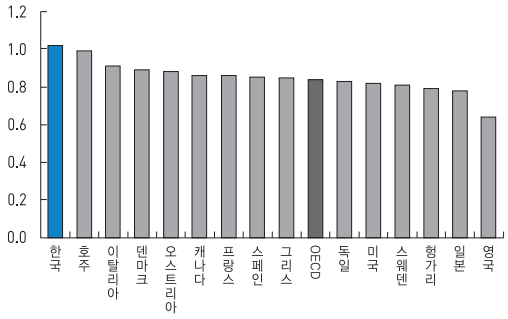
[그림 XI-2] 주요 국가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간 관계, 2014




주: 1)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만 18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약간 반대' 또는 '매우 반대'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국회의원선거 투표율=(투표자수÷등록선거인수)×100.
3)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호주 등은 2015년 자료이고, 그 외 국가는 모두 2014년 자료임.
4) 투표율의 경우 한국, 호주, 슬로바키아 등은 2016년 선거, 덴마크, 스페인, 영국, 폴란드, 핀란드 등은 2015년 선거, 미국, 스웨덴, 일본,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2014년 선거, 독일, 칠레는 2013년 선거, 네덜란드는 2012년 선거임.
출처: International IDEA, *Voter turnout Database*(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4: Citizenship II*, Data Version 2, 2017.

투표율과 관련하여 청년층의 정치적 참여가 더 부진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림 XI-3]은 다른 연령층 대비 25세 미만 청년층의 투표율을 나라별로 보여준다. 나라마다 총선 연도는 다르지만 2014년에 근접한 해의 선거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투표율이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청년층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조금 높다. 한국 청년층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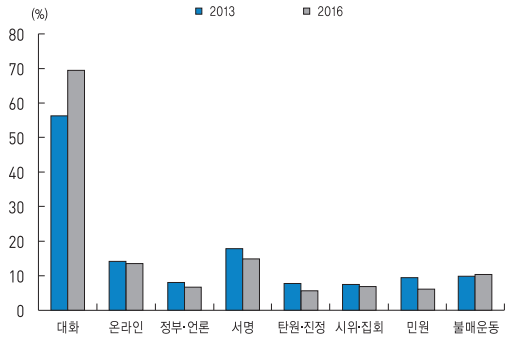
[그림 XI-3] OECD 주요 국가의 타 연령층 투표율 대비 청년층 투표율의 비, 2014




주: 1) 청년층은 만 18-24세 인구이고, 타 연령층은 만 25-50세 인구임.
출처: OECD,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2016.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 정치적 참여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그림 XI-4]는 2013년과 2016년 사이 다양한 유형의 정치적 참여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정치 관련 대화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명, 정치 관련 온라인 글쓰기, 불매운동 등의 순이다. 2013년과 2016년 사이에 여러 유형의 정치적 참여는 전반적으로 저조해졌지만 정치 관련 대화는 56.4%에서 69.3%로 늘어났다. 사적인 정치 대화는 늘었지만 온라인이나 거리 등 공공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이 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XI-4]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 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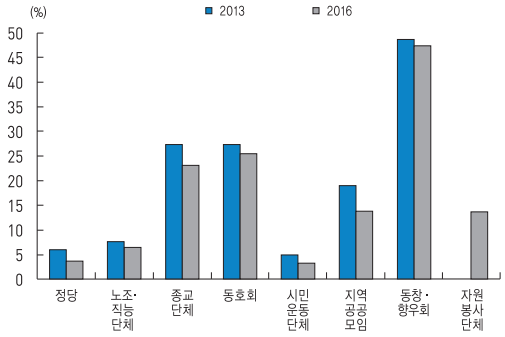
정치적 참여 외에 사회적 참여의 대표적 방식은 다양한 사회단체들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관심이나 취향,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다양한 사회단체에 참여한다. 이러한 사회단체는 근대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들의 관심과 성향에 따라 사회적 참여를 매개할 뿐 아니라 이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떤 유형이건 하나 이상의 단체에 소속된 비율은 2013년 66.8%에서 2016년 65.2%로 매우 작은 폭으로 하락했다. [그림 XI-5]는 2013년과 2016년 사회단체에 소속된 비율과 활동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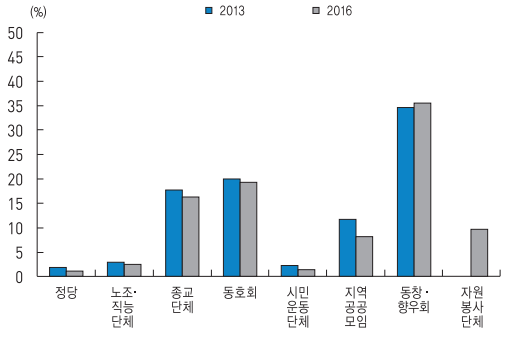
비율을 보여준다. 참여가 가장 활발한 단체는 동창회·향우회이며 그 다음이 동호회와 종교단체, 지역공공모임 등이다. 2013년과 2016년 사이 대부분의 단체에서 소속률과 활동률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종교단체와 지역공공모임에 대한 참여가 다른 단체들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XI-5]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율, 2013, 2016

1) 단체 소속자 비율




2) 단체 활동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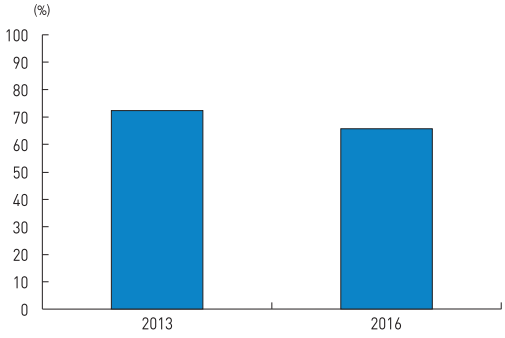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단체 소속자 비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단체 활동자 비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가끔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자원봉사단체 참여율의 경우 2013년에는 조사되지 않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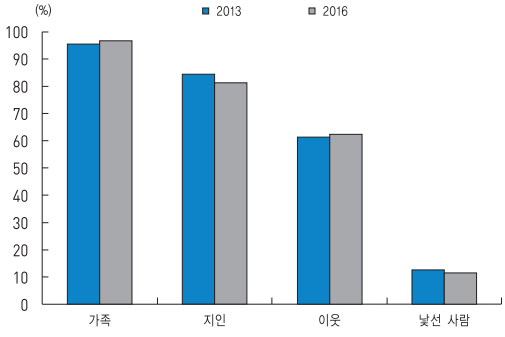
사회에서 신뢰는 일종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사회에서 개인들이 서로 신뢰하면 협력의 선순환이 일어나지만 불신하면 대립과 반목의 악순환이 일어난다.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를 신뢰하면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지만

[그림 XI-6] 대인 신뢰 수준과 신뢰의 반경범위, 2013, 2016

1) 일반화된 신뢰 수준




2) 신뢰의 반경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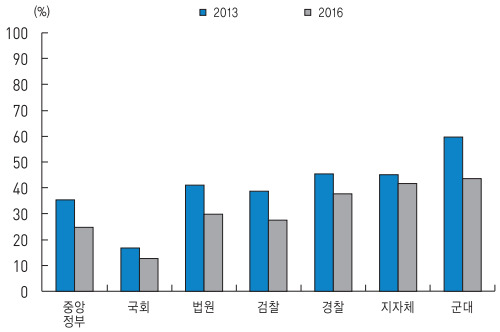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일반화된 신뢰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신뢰의 반경 범위에서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해당 집단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 '약간 신뢰한다' 또는 '매우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냉소주의가 지배한다.

[그림 XI-6]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나타내는 일반화된 신뢰의 수준과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 지인, 이웃, 낯선 타인으로 멀어지면서 신뢰의 정도가 변화하는 신뢰의 반경범위를 보여준다.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의 정도는 2013년 72.2%에서 2016년 65.9%로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신뢰한다는 비율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보다 여전히 높다. 신뢰의 반경범위를 보면, 가족에 대한 신뢰는 95%를 넘지만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10%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2013년과 2016년 사이 신뢰의 반경범위에서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회제도들, 특히 공공제도들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높지 못하다. [그림 XI-7]을 보면, 2013년과 2016년 사이 모든 공공제도들에 대한 신뢰가 일제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군대에 대한 신뢰는 59.6%에서 43.8%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밖에 법원, 검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크게 낮아졌다. 제도별로 신뢰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군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 법원, 검찰, 중앙정부, 국회 등의 순이다. 국회에 대한 신뢰는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권력을 발휘하는 제도나 기관일수록 신뢰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공공제도의 신뢰 수준은 앞서 살펴본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보다 겨우 높은 정도이다. 어떤 공공제도도 신뢰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신뢰가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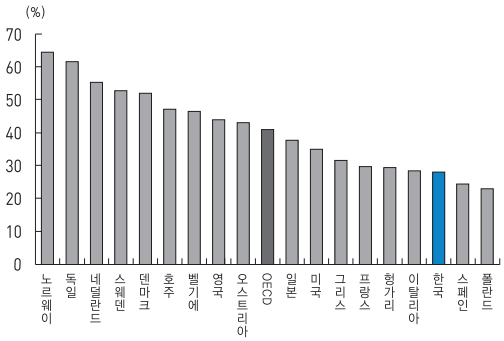
[그림 XI-7] 공공 제도들에 대한 신뢰, 2013, 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신뢰도는 조사대상자 중 해당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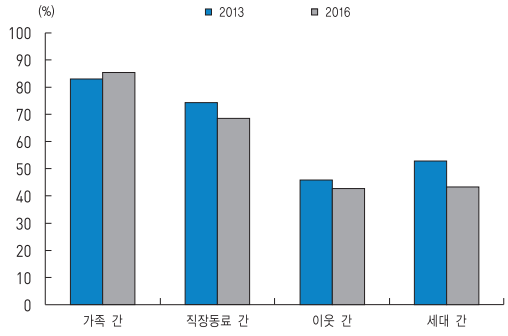
한국의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는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일까? 2014-2015년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결과를 분석한 [그림 XI-8]에 따르면, 한국은 28%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해 OECD 국가 평균인 4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정부 신뢰가 높은 편이고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 신뢰가 낮은 편이다. 한국은 같은 동아시아에 속한 일본보다 약 10%p 낮으며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나 이태리,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XI-8] OECD 주요 국가의 정부에 대한 신뢰, 2014-2015년 평균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신뢰도는 조사대상자 중 중앙정부를 신뢰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2016.

[그림 XI-9] 사회적 관계별 소통 수준, 2013,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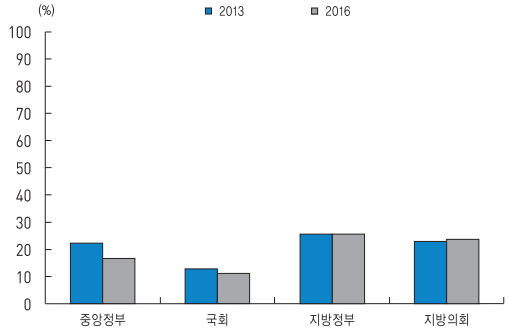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소통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해당 사회적 관계 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 사회적 관계와 지지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통합실태조사」의 2013년과 2016년 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XI-9]를 보면, 가족 간에 소통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2013년에 비해 약간 늘어난 85.8%이고 직장동료 간에 소통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2013년보다 약간 줄어든 69.1%이다. 이웃 간 소통과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2013년에 비해 줄어들어 각각 42.9%와 43.5%에 그친다. 가족이나 동료 간 소통보다 이웃이나 세대 간 소통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사회관계에서의 소통에 비해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소통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림 XI-10]을 보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2013년에 비해 감소한 16.8%이고 국회와 국민 간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이보다 더 낮은 11.2%에 불과하다.

[그림 XI-10] 주요 공공기관별 국민과의 소통 수준, 2013,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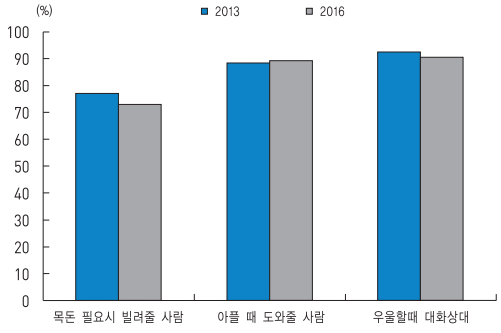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소통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해당 공공기관과 국민 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역시 국민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각각 25.4%와 23.4%에 그친다. 이처럼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공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지, 즉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한다. [그림 XI-11]은 목돈이 필요할 때와 아플 때 그리고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비율을 보여준다.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2013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73.6%이고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89.2%이며 우울할 때 대화할 사람이 있는 비율은 90.7%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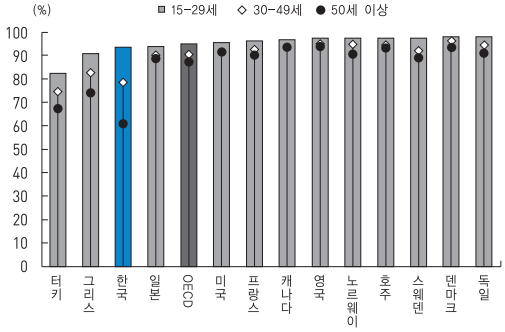
한국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편이 아니지만 연령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림 XI-12]는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령집단 간 차이를 나라별로 보여준다. 한국은 터키, 그리스와 함께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가 가장 크다.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15-29세가 93%, 30-49세가 78%, 50대 이상이 61%로 나이가 많을수록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림 XI-11]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 2013, 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해당 상황 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12] OECD 주요 국가의 연령집단별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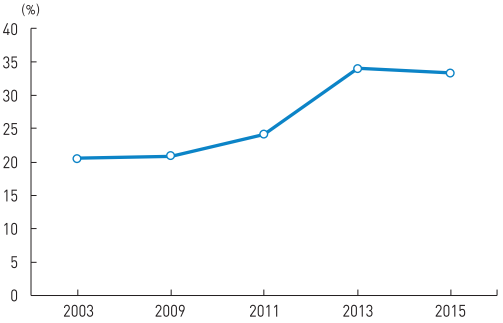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친척들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2016.

##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 정서경험, 삶의 의미와 보람을 모두 포괄한다. 주관적 웰빙은 사회통합의 결과로 좋아지지만 주관적 웰빙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림 XI-13]은 자신의 삶에 만족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2003년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2003년 20.4%에서 2015년 33.3%까지 높아졌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던 2009년에는 이례적으로 낮았고,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정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XI-13] 삶에 대한 만족도, 200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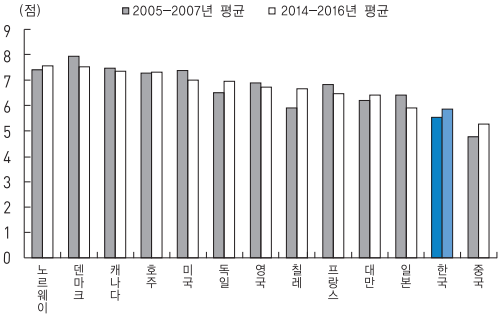



주: 1) 전국 13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2009년 이전은 15세 이상 가구주임).
2) 만족도는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한국인의 삶의 만족 정도는 국제적으로 어떤 수준일까? [그림 XI-14]는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자료를 통해 각국 국민의 삶의 만족이 2005-2007년과 2014-2016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은 이 기간 동안 삶의 만족이 다소 증가했지만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주관적 웰빙에서 삶의 만족이 과거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정서경험은 현재의 상태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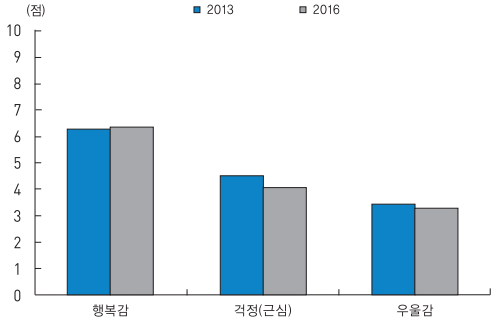
[그림 XI-14] 주요 국가의 행복지수, 2005-2007년 평균, 2014-2016년 평균




주: 1) 행복지수는 각 국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현재 삶의 질에 대해 0-10점으로 평가한 만족도 평균 점수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17, 2017.

타낸다. [그림 XI-15]는 최근 정서경험의 변화를 보여준다. 0-10점의 11점 척도로 측정된 정서경험 중 행복감과 우울감은 2013년과 2016년 사이 큰 변화가 없지만 걱정이나 근심은 같은 기간에 다소 줄어들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행복감은 6.36점으로 높은 편이고 걱정이나 근심, 우울감은 각각 4.06점과 3.30점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XI-15] 정서 경험, 2013, 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해당 정서를 어제 얼마나 경험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 점수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 한국인의 정치참여와 사회갈등 인식

박원호 (서울대학교)

- 한국의 투표율은 민주화 이후 급격한 하락세에 있다가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약간의 반등을 보이는데, 이것은 주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 증가에 기인한다.
- 선거참여 이외의 다른 다양한 참여의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서 서명이나 상품불매운동 등의 '표현적 참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준은 높지 않다.
- 선거 외 정치참여 수준이 낮은 것은 한국 유권자들의 체제에 대한 불신 혹은 낮은 외적 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체제로부터 소외된 한국 유권자들의 상황을 반영한다.
-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자아에 대한 믿음, 즉 내적 효능감은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 한국인은 이념갈등과 빈부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남녀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 젊은층일수록 사회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대는 노사갈등을, 30대는 빈부갈등과 세대갈등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고 있다. 그 원인과 경과가 무엇이었건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에 변화를 가져온 동력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였음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온 시민들의 참여는 '촛불집회'로 대변되는 비관습적 참여(unconventional participation)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경로는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정치참여에 대한 고전적 연구들은 정치참여의 다양한 패턴을 가장 손쉬운 형태의 참여인 투표(voting)에서부터 보다 더 '어려운' 형태인 선거운동(campaigning), 지역활동(communal activity), 대표자나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direct contact) 등으로 나눈다.

제도화된 참여를 넘어서는 시위나 집회 혹은 정치적 영향력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표현적인 성격이 짙은 진정서 서명이나 온라인상의 불만표출 등의 행위까지를 넓은 범주의 참여에 포괄하는 학자도 있다. 이처럼 정치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나타나는 참여를 통상 제도 외적 참여 또는 비관습적 참여라고 부른다.

한국의 제도 내적 정치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가장 쉬운 참여형태인 투표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여타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편이다. 투표율은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하락하다가 근래에 특히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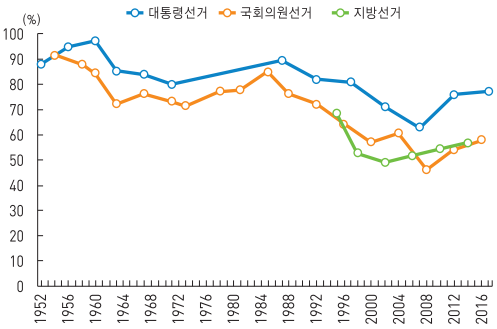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적 정치참여의 특수성은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 이외의 제도 내적 참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학 문헌에서 거론하는 선거운동이나 지역활동 혹은 정치인이나 언론기관에 대한 접촉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지난 연말과 2008년 그리고 2002년에 한국이 목도하였던 폭발적인 '비제도적 참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도 내적 참여가 저조해 갈등이 응축되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폭발하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인의 참여 패턴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변수인 정치효능감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한국 유권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균열의 하나인 세대 간 차이에 주목하여 청년층을 비관습적 참여로 이끄는 유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제도 바깥의 참여를 제도적 참여의 장으로 이끌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 정치참여의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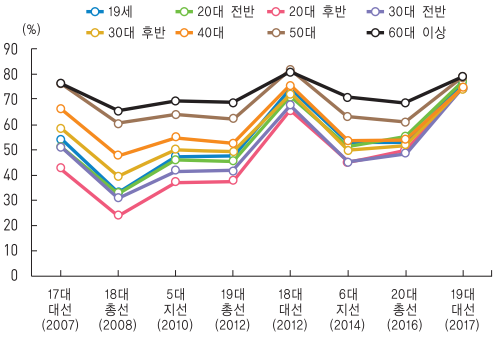
한국 선거의 투표 참여 패턴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1987년 민주화 이전 치러진 선거들에서 매우 높은 공식 투표율을 보이다가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그림 X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표율은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저 수준을 나타낸 후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있다. 한편, 투표율은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보다 대통령선거에서 더 높다.

[그림 XI-16] 역대 선거 투표율, 1952-2017




주: 1) 투표율=(투표자수÷등록선거인수)×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그림 XI-17] 연령집단별 선거 투표율,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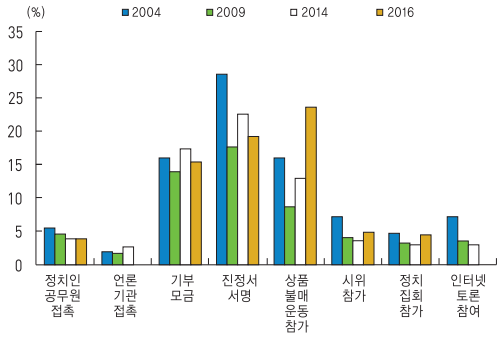



주: 1)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로 실제 투표율과 다소 차이가 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그림 XI-17]은 2007년 대통령선거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의 연령집단별 투표율을 보여준다. 연령집단별 투표 참여율의 격차는 총 투표율이

낮았던 선거에서 더 두드러진다. 반면, 대통령선거일수록 그리고 최근 선거일수록 연령집단별 투표 참여율의 격차는 줄어든다. 어떤 의미에서는 최근 전체 투표율의 증가는 청장년층의 투표율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XI-18]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0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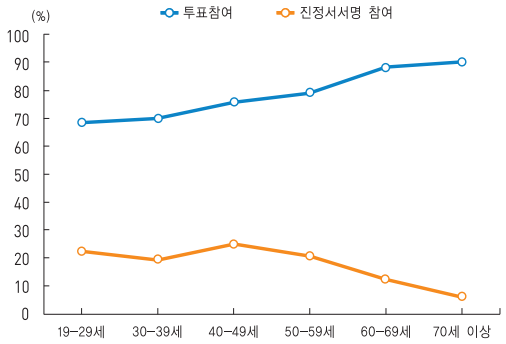



주: 1) 참여율은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그렇다면 선거 외 다른 유형의 참여는 어떠한가? [그림 XI-18]은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접촉 등의 제도적 참여에서부터 시위 참여 등의 비제도적 참여와 진정서 서명이나 소비자 불매운동 등의 표현적 참여까지 포함한 선거 외 정치적 활동에 한국인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보여준다. 정치인이나 공무원 그리고 언론 접촉과 같은 직접적인 참여는 5%도 못 미치며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면, 진정서 서명이나 소비자 불매운동 등의 표현적 참여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다. 시위나 집회 참여 등은 아직 2016년 말의 촛불집회 참여가 반영되지 않아서 그리 높지 않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다양한 참여의 패턴이 서로 정(+)의 관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대체의 관계를 지닌다는 점이다. 즉, 선거에 투표하는 '쉬운 참여'가 반드시 진정서 서명 등의 보다 '어려운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기존의 제도적 참여에 대한 소외가 다른 출구로서의 비제도적 참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XI-19] 연령집단별 투표 참여율과 진정서 서명 참여율, 2016




주: 1) 투표 참여율은 해당 연령집단 조사대상자 중 '귀하는 지난 2016년 4월 13일에 있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투표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진정서 서명 참여율은 해당 연령집단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진정서 서명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그림 XI-19]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율과 진정서 서명 참여율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투표 참여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진정서 서명 참여는 50대 이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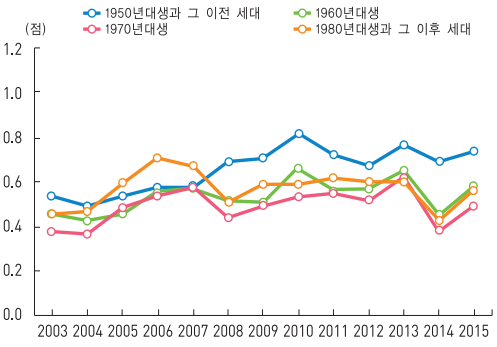
급격하게 감소한다. 다시 말해, 젊은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굳이 투표하지 않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참여 경로가 존재하는 셈이다.

## 정치효능감의 세대별 차이와 변화

정치참여와 관련된 핵심적 변인은 유권자들의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다. 이는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느끼는 역능감(empowerment)으로 스스로가 정치과정에 얼마나 개입하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 효능감은 그것을 직접 묻는 방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지니는 신뢰 수준을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도 있다.

[그림 XI-20]은 「한국종합사회조사」로 파악한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도의 세대별 추이를 보여준다. 해당 변수의 척도를 감안하면 중앙정부에 대한 평균적인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세대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고르게 분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조사가 시작된 2003년과 2007년 사이 전 세대에 걸쳐 전반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의 상승이 발견된다.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를 한 축으로 하고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다른 축으로 할 때, 이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지점은 2008년경으로 보인다. 전자 세대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반면 후자 세대의 경우에는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하고 있다. 전 세대에 걸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시점은 2014년인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점에 달했던 2016년 하반기 이후의 조사 결과가 반영되면 또 다른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XI-20] 세대별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도, 2003-2016




주: 1) 신뢰도는 중앙정부부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 '거의 신뢰 않음'에 0점, '약간 신뢰'에 1점, '매우 신뢰'에 2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정치효능감은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과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 즉 내적 효능감은 유권자 자신이 얼마나 정치적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는 정치적 지식 또는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자, 즉 외적 효능감은 정치체제가 시민적 투입(input) 과정에 대해 얼마나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지칭한다.

이러한 역능성은 정치참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이 불일치하면 정치적 소외를 낳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청년세대는 높은 교육수준이나 정보화 역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성세대에 비해 내적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반면, 기존 정치질서가 어떤 경로로든 청년세대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면 이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고 불만은 매우 높을 것이다. 이처럼 내적 효능감은 높은데 외적 효능감이 낮으면 〈표 XI-1〉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적 소외 혹은 참여의 위기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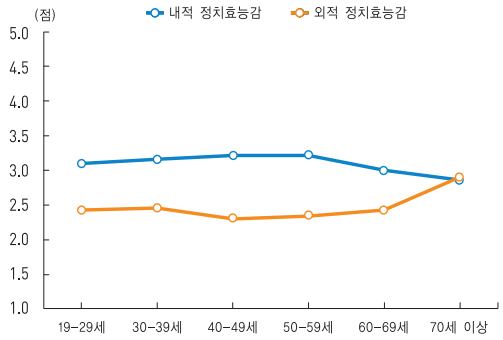
〈표 XI-1〉 정치효능감과 참여의 위기

| 내적 정치효능감 \ 외적 정치효능감 | 저 | 고 |
|---|---|---|
| 고 | 참여의 위기 | 참여의 선순환 |
| 저 | 참여의 부재 | 신민(臣民)적 참여 |

만약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이 모두 높으면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로 이어질 것이고, 개인의 정치적 역량도 다시 개발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비교정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높은 내적 효능감과 낮은 외적 효능감이 결합된 유형으로 '참여의 위기'에 가깝다. 이러한 경향성을 대표하는 것이 한국 시민들의, 더 극명하게는 청장년층이다.

정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역량과 에너지는 매우 높은 반면 체제의 수용 역량이 부족하면 투표나 정당, 시민단체 등을 경유하는 통상적인 참여대신 개인들의 단발성 항의나 시위와 같은 비관습적 참여(unconventional participation)가 새로운 대안적 채널이 되기 쉽다.

[그림 XI-21] 연령집단별 내적 및 외적 정치효능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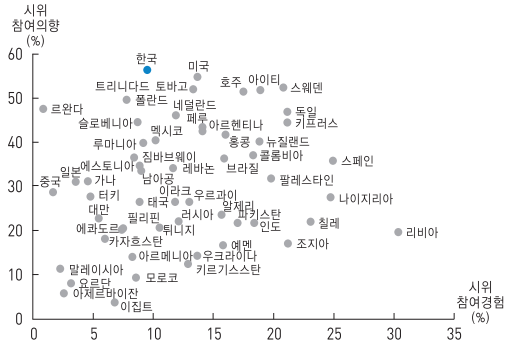

주: 1) 내적 정치효능감은 '나는 중요한 정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2) 외적 정치효능감은 '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는다'는 진술에 반대하는 정도를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그림 XI-21]은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로 측정한 내적 및 외적 효능감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것이다. 내적 효능감은 중장년층에서 가장 높고 청년층에서 약간 낮다. 내적 효능감은 노년층에서 급격하게 낮아진다. 이와 반대로 외적 효능감은 노년층, 특히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고 중장년층에서 가장 낮다. 요컨대, 청년층과 중장년

층은 체제보다는 스스로의 역량을 믿는 반면 노년층은 그 반대의 성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정치적 소외의 결과는 비교적 명확하다. 표면적으로는 주어진 투표 참여 등의 활동에 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체제에 대한 불만족과 언제든지 '거리의 정치'를 위해 뛰쳐나갈 유인이 축적된다. [그림 XI-22]는 최근의 *World Value Survey*에서 나타난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경험과 참여할 의향의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한국은 시위 경험에서는 중간 혹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시위 참여 의향은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다. 한국 자료는 2010년에 수집된 것이기는 하지만, 2016년 말 한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촛불시위를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XI-22] 주요 국가의 시위참여 경험과 의향, 201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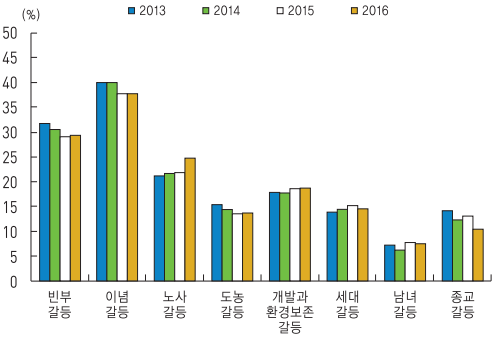

주: 1) 각 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시위참여경험은 각 국 조사대상자 중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시위참여의향은 각 국 조사대상자 중 지금까지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평화적 시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 *World Value Survey Wave 6 2010-2014*, 2016.

##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정치가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면, 갈등은 정치참여의 기본적인 동기라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사회의 갈등은 다양하고 도처에 있으며 사람마다 이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한국인이 한국 사회의 균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XI-23]은 「사회통합실태조사」로 파악한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보여

[그림 XI-23]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2013-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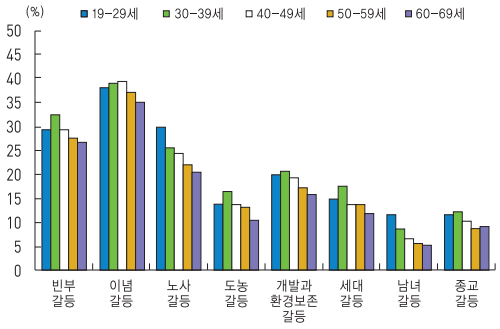
준다. 이 조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해 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이념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약 40%에 달했다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이념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다른 갈등에 비해 높다. 한국인은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또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약 30%에 이른다. 노사갈등, 도농갈등, 개발과 보존의 환경갈등, 세대갈등, 종교갈등 등도 상당한 수준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반면, 남녀갈등은 비교적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XI-24]는 세대별로 갈등을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는지 보여준다. 전반적인 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20대는 노사갈등을, 30대는 빈부갈등과 세대갈등을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노년층일수록 갈등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사갈등과 남녀갈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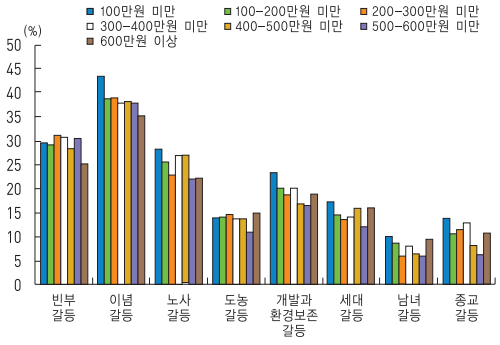
[그림 XI-25]는 소득수준별 갈등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념갈등이나 환경갈등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림 XI-24] 연령집단별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그림 XI-25] 소득수준별 사회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박 준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의 공직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증가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는 37위에서 52위로 크게 하락하였다.
- 국민들은 국회가 가장 부패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 검찰, 법원 등의 순으로 부패했다고 인식한다.
- 여성보다 남성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이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관리직과 전문직의 부패인식이 농림어업직이나 단순노무직에 비해 더 강하고, 고학력자와 중·하위소득계층의 부패인식이 저학력자와 고소득계층보다 더 강하다.
- 한국은 부패경험률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험과 인식 간 괴리가 큰 편이다. 지난 1년간 부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최근 2-3% 수준으로 낮은데 비해 공직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여전히 60%대로 높다.

지난 2016년에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 대통령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법치주의와 국가기관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거대한 부패(grand corruption)'를 목도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시위에 참여해 정치권력의 퇴진을 요구했고, 결국 2017년 3월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2016년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각종 청탁과 금품·접대·선물 수수 등의 관행들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법 적용 대상도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교원 등 민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공직부패는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공직부패의 결과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대의정부기관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신뢰 약화(Rothstein, 2011), 동료 시민들 간 불신 조장(Mishler&Rose, 2001), 기업들의 투자의욕 감소(Mauro, 1995) 등 해악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직부패를 해소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공직부패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이다. 19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윌리엄 톰슨은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부패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반부패정책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고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부패 수준 측정 방법은 공직 사회에 부패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perception)을 묻는 것이다. 가령, 국제투명성기구(TI)는 1995년부터 매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기업경영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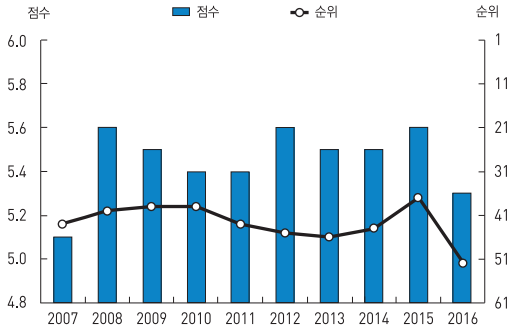
과 자본시장 애널리스트들의 주관적 평가를 집계하여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을 측정한다.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부패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대신 실제 부패를 경험(experience)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UN의 국제범죄피해자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한국 공직 사회의 부패 수준과 그 추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 부패인식의 변화 추이

먼저, 기업경영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인식하는 공직 사회의 부패 수준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자. [그림 XI-26]은 2007-2016년 기간 동안 국제투명성기구가 측정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보여준다. 비교 시점을 2007년 이후로 정한 것은 조사대상국 수가 2000년 90개국에서 2007년 180개국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패인식지수는 0-10점의 분포를 갖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5년 5.6점에서 2016년 5.3점으로 낮아졌고 이 기간 국가별 순위도 3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일반기업체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시각에서 본 한국 공무원의 부패 수준도 최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XI-27]은 한국행정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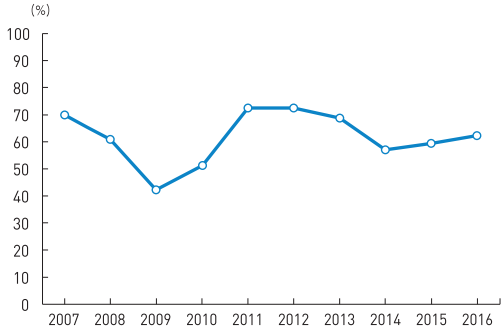
[그림 XI-26] 부패인식지수, 2007-2016




주: 1)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기업경영자와 애널리스트들이 인식한 전 세계 170여 개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수준을 0-10점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투명한 것을 의미함. 이 지수는 2012년부터 100점 척도로 변경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시계열 비교를 위해 편의상 10점 척도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음.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http://www.transparency.org).

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 조사에서 "귀하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

[그림 XI-27]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공직사회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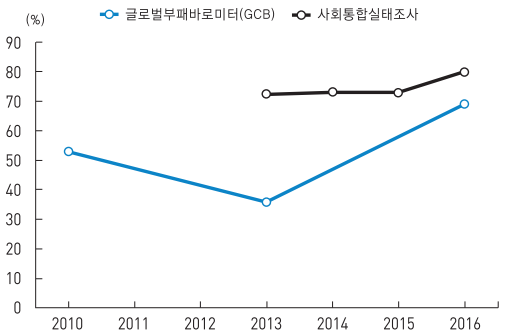

주: 1) 전국 일반기업체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심각' 또는 '심각' 또는 '약간 심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각 연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약간 심각'이나 '심각' 또는 '매우 심각'을 선택한 비율을 보여준다.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07년 69.8%에서 2009년 42.1%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 후 2011년에 72.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4년 56.9%로 감소했다가 2015년 59.2%, 2016년 62.3%로 다시 증가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글로벌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조사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공무원 부패 정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측정한다. [그림 XI-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자료 모두 최근 한국 국민이 인식하는 공무원 부패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부패바로미터 조사에서는 공무원이 부패했다고 보는 비율이 2010년 53%에서 2013년에 36%로 줄어들었으나 2016년에는 69%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2013년과 2016년 사이에 관련 설문문항이 "공무원이 어느 정도 부패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공무원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바뀌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중앙정부부처가 전혀 또는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3-2015년 기간 동안 73% 내외를 유지했으나 2016년에는 79.9%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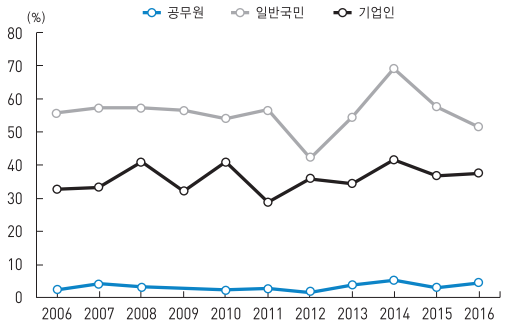
[그림 XI-29]는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공직 사회 부패 정도를 보여준다. 공무원들 가운데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보는 비율은 2006년 2.6%에

[그림 XI-28]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0-2016




주: 1) 두 조사 모두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글로벌부패바로미터의 통계치는 2010년과 2013년 자료의 경우 조사대상자 중 공무원이 얼마나 부패한지에 대해 '부패했다' 또는 '매우 부패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고, 2016년 자료는 조사대상자 중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 또는 '모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통계치는 중앙정부부처가 얼마나 청렴한지에 대해 '별로 청렴하지 않다' 또는 '전혀 청렴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Barometer* (http://www.transparency.org).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29] 공무원과 일반국민 및 기업인의 공직사회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06-2016




주: 1) 조사대상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일반국민은 전국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기업인은 외부감사기업체 임원진 이상임.
2)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 '매우 부패하다' 또는 '부패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09년의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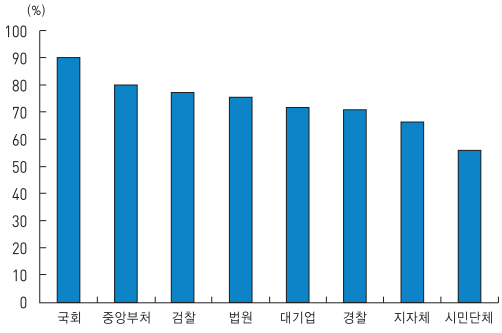
서 2012년 1.7%로 감소한 후 2016년에 4.6%로 다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는 공무원 외에 일반국민과 기업인의 부패인식도 조사하는데, 공무원의 자기집단에 대한 부패인식이 일반국민이나 기업인의 부패인식에 비해 현저히 낮다.

## 주요 기관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중앙부처와 국회,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 등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의 부패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그림 XI-3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들이 전혀 또는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국회가 89.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부패인식 비율이 79.9%로 두 번째로 높다. 지방자치단체는 66.1%로 중앙정부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도 75% 이상으로 부패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속한다.

민간부문에 대한 부패인식은 어떤 수준일까? 대기업에 대해 전혀 또는 별로 청렴하지 않다는 인식은 71.6%로 공공부문과 비슷하지만 시민단체에 대해 청렴하지 않다는 인식은 55.8%로 공공부문에 비해 훨씬 낮다.

[그림 XI-30] 주요 기관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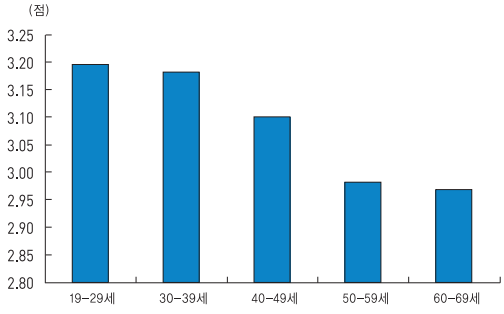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해당 기관이 얼마나 청렴한지에 대해 '전혀 청렴하지 않다' 또는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 사회경제적 특성별 부패인식 차이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부패인식이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그림 XI-31]은 연령

[그림 XI-31] 연령집단별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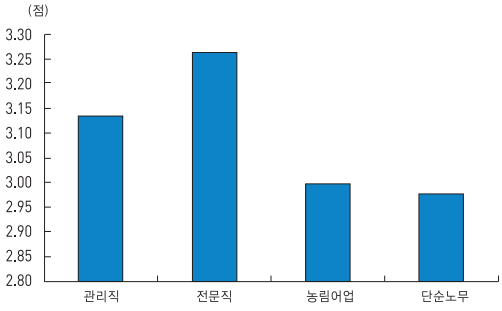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청렴하지 않다', '별로 청렴하지 않다',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청렴하다'부터 '전혀 청렴하지 않다'까지 1-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을 나타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6.

집단별 부패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 따르면, 30대의 부패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이후 나이가 들수록 낮아진다.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의 부패인식 평균값은 3.13점으로 여성의 3.05점보다 높다. 남성이 여성보다 정부의 부패를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관리직과 전문직의 부패인식 평균값이 각각 3.13점과 3.26점으로 농림어업직의 3.00점과 단순노무직의 2.98점에 비해 높다. 즉, 관리직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농림어업직이나 단순노무직 종사자에 비해 정부의 부패를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그림 XI-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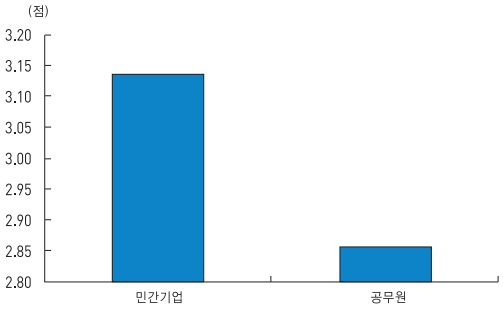
[그림 XI-32] 직업집단별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청렴하지 않다', '별로 청렴하지 않다',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청렴하다'부터 '전혀 청렴하지 않다'까지 1-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을 나타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6.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간에도 정부의 부패에 대해 인식 차이를 보인다. [그림 XI-33]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부패인식은 2.86점으로 민간기업 종사자의 3.14점보다 크게 낮다. 이는 공무원들이 정부를 상대적으로 더 청렴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XI-33] 민간기업 종사자와 공무원의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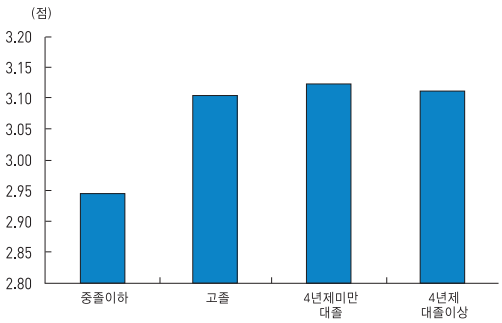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청렴하지 않다', '별로 청렴하지 않다',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청렴하다'부터 '전혀 청렴하지 않다'까지 1-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을 나타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6.

[그림 XI-34]는 교육수준별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부패인식 평균값은 3.11점으로 고졸 학력자의 3.10점이나 중졸 이하 학력자의 2.94점에 비해 높다. 즉,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정부의 부패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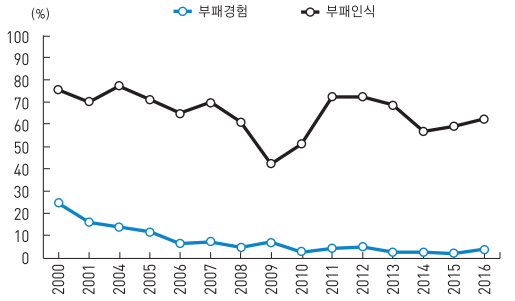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구소득별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을 살펴보면, 월 100만원 미만 소득집단의 부패인식 평균값이 3.1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월 400-500만원 미만 소득집단이 3.13점으로 높다. 월 400-500만 원 미만 소득집단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이보다 작거나 크면 평균값이 낮아지는데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서

[그림 XI-34] 교육수준별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청렴하지 않다', '별로 청렴하지 않다',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청렴하다'부터 '전혀 청렴하지 않다'까지 1-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을 나타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6.

[그림 XI-35] 공직부패에 대한 경험과 인식, 2000-2016




주: 1) 전국 일반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2)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간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부패인식은 조사대상자 중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 '약간 심각하다' 또는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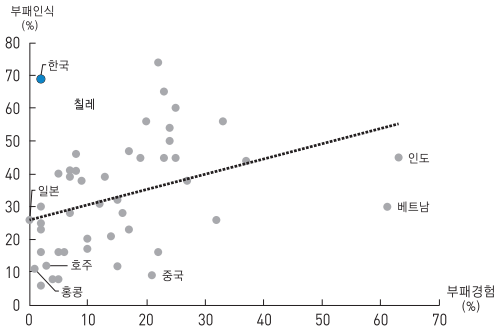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소득계층 가운데 중산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은 정부의 부패 수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인식한다고 말할 수 있다.

##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괴리

그렇다면 시민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공직부패의 정도는 그들의 실제 부패 관련 경험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을까?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부패경험 여부를 파악해 왔는데, [그림 XI-35]에서 보듯이, 부패경험자 비율은 2000년 24.8%에서 2005년 11.6%, 2010년 2.6%, 2016년 3.5%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2000년 75.6%에서 2016년 62.3%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실제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일은 크게 줄어든 반면 공직부패가 심각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현상일까? [그림 XI-36]은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 글로벌부패바로미터 조사로 측정된 유럽과 아시아 지

[그림 XI-36] 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공직부패 경험과 인식 간 관계, 2016




주: 1) 아시아와 유럽 49개국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부패인식은 조사대상자 중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 또는 '모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Barometer* (http://www.transparency.org).

역 49개국의 부패경험 수준과 부패인식 수준을 동시에 보여주는 산포도이다. 산포도의 점들은 각국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좌표이고, 중간을 관통하는 직선은 49개국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간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이다. 이 추세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일수록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간 괴리가 심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산포도에 나타난 한국의 위치이다. 한국은 추세선으로부터 거리가 먼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로 부패경험률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패인식 수준이 월등히 높다. 한국은 지난 1년간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 불과한 반면 공무원들이 부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무려 69%에 달한다. 일본, 호주, 홍콩 등도 실제 부패를 경험한 사람들보다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차이가 한국보다 훨씬 작다.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사람들이 실제 부패를 경험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한국보다 크게 낮다.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간 괴리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괴리의 정도는 한국이 매우 심한 편이다.

## 맺음말

공직 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시기와 조사대상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다. 부패인식은 정권의 주기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권 초기에는 부패인식이 개선되다가 정권 후기에 권력형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패인식이 악화되고 그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부패인식이 개선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공직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조사대상별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인구집단별로 이처럼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인식에 의존한 부패 수준 측정으로는 객관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 등 여러 기관들의 부패인식조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부패인식이 악화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미디어를

통해 발표되면 국민들은 그것을 객관적인 실태로 이해하고 공직 사회 부패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으로 측정한 부패경험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부패인식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상 금품을 수수하는 일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스스로 돈만 받지 않으면 청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인식을 개선해야 할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하여 단지 금품을 받지 않는 것뿐 아니라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민주성 등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Mishler, W., & Rose, R. 2001.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 30–62.

Mauro, P. 1995. "Corruption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681–712.

Rothstein, B. 2013.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hy the Fish Rots from the Head Down." *Social Research* 80(4): 1009–1032.

2017 Glossary

Korean Social Trends 2017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부록 용어해설

## Ⅰ 인구

**결혼이민자:**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

**고령사회:**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국적 회복:**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기대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다문화가정:**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등록외국인:**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베이비부머 세대:**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출생한 세대,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함.

**사망력:** 건강, 경제사정, 보건의료혜택 등을 고려한 사람들의 사망수준을 의미함.

**연령집단별 출산율:** 특정연도의 15~49세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수를 해당 연령의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text{연령집단별출산율} = \frac{\text{산모의 연령집단별 출생아수}}{\text{해당연령집단의 여자 인구}} \times 1{,}000$$

**외국인 근로자:** 한국 국적을 지니지 않고 지자체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인구고령화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말함.

**조사망률:**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사망자의 수.

$$\text{조사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사망자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혼인율:** 연간 혼인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혼인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초저출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현상.

**출산력:**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아이를 실제로 출산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가진 생물학적인 임신능력, 즉 가임력(fecundity 또는 natality)과는 다름.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산출함.

$$\text{합계출산율}(TFR) = \frac{\sum_{i=15}^{49} (ASFR)_i}{1{,}000}$$

## Ⅱ 가족과 가구

**1세대가구:**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 + 기타 친척).

**1인가구:** 1인으로 구성된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 이상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 양친(또는 한부모), ② 양친(또는 한부모) + 자녀 및 그 배우자 + 손자녀 등).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가구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비혈연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가정양육수당:**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에게 연령별로 10-2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함.

**경제활동참가율:** 만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64세 인구}} \times 100$$

**고용률:** 만 15-64세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text{고용율(\%)} = \frac{\text{취업자수}}{\text{15-64세 인구}} \times 100$$

**노인가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

**노인단독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살고 있는 가구임.

**분거가족:**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 구성원의 일부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가족.

**성역할:** 말하는 형식, 언행의 버릇, 품행, 의복과 동작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나 태도 등에서 남녀별로 적절한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의미함.

**유배우 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 유배우 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유배우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text{유배우 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유배우 인구}} \times 1{,}000$$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초등돌봄교실:** 2004년부터 초등학교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종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주로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가족의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돌봄(방과후~17시), 저녁돌봄(17~22시) 교실 운영함.

**친족:** 법률 용어로서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함.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이루어짐.

**평균가구원수 :** 가구형태를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고 평균가구원수는 총가구원수를 총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핵가족가구 :** 1세대 가구 부부, 2세대 가구 부부 + 미혼자녀, 부(또는 모) + 미혼자녀 가구를 말함.

## Ⅲ 건강

**1차 보건의료:** 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공되는 기본적 의료를 말함. 최근에는 1차적인 접촉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의 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함.

**2주간 유병률:**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인구의 비율.

**강제호기량:**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으로 내쉴 수 있는 공기의 양. 일반적으로 폐활량의 몇 퍼센트를 내쉬었는가로 표시함.

**고위험음주:**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인 음주.

**건강수명:** 평균수명에서 건강 문제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수명.

**고혈압 유병률:** 만 30세 이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혈압 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의 백분율.

**공복혈당:** 식사 전에 측정한 혈당 수치.

**기대여명(life expectancy):** 특정 연령의 인구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지인, 이웃 등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정서적, 신체적, 금전적)의 도움을 말함.

**당뇨병 유병률:** 만 30세 이상으로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의 백분율임.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지름 10㎛ 이하의 먼지. 사람의 폐로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비만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가 일정 수준(25kg/㎡, 30kg/㎡ 등) 이상인 인구의 비율.

**사망율:**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임.

**스트레스 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

**신체활동실천율:** 만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했거나, 또는 몸이 약간 힘들거나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임.

**우울감경험률:** 성인 인구(만 19세 이상)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사람들의 비율임.

**유병률(prevalence rate):** 전체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조사된 이환자의 비율.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인구의 비율임.

**체격:** 근육, 골격, 영양상태로 나타나는 몸의 외관적 형상의 전체.

**체력:** 인간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신체능력.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 지표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평균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활동제한율:**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인구의 비율.

**흡연율:** 만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 중 현재 흡연자의 비율임. 현재 흡연자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말함.

## Ⅳ 교육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함.

**고등교육이수율:** 25세 이상 64세 미만 인구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을 말함.

**과잉 학력:** 자신의 학력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학력보다 높은 경우임.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급별 총 학생수를 총 교원수로 나눈 값임. 학생수는 재적학생수(휴학자 포함) 기준임. 교원수는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장, 교감, 교사, 전문상담, 사서, 실기, 보건교사, 기간제 교원 등을 포함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학)장,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을 포함하는데,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원은 대학원 소속 교원만

해당함. 수치가 낮을수록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 시험으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과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함.

**대학설립준칙주의:** 기존의 대학설립인가제를 폐지하고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조치로 1995년에 도입되어 1996년부터 시행됨.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됨.

**보편교육:** 선별주의적 특수 엘리트 교육에 대비되는 용어로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사회적 계급이나 경제적, 지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한국에서는 보편교육의 확대를 위해 중학교 교육 의무화와 더불어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사교육:** 공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사교육 참여율:** 해당 학교급별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

**졸업정원제:** 정부가 1980년에 도입한 대학입시제도로서 신입생을 정원보다 30% 늘려서 뽑았다가 이후 원래의 정원대로 졸업시킨 제도.

**진학률:**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의 비율.

$$\text{진학률}(\%) = \frac{\text{상급학교 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취원율:** 전국의 만 3–5세 유아 중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비율.

**취학률:**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 중 취학자의 비율. 취학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임.

**특성화고:** 농업, 제조, 디자인, 컴퓨터 및 정보처리, 요리, 제과, 관광,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의상, 미용, 전통문화 등의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학교.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가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글 이해력),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하고자 3년마다 시행하는 프로그램.

**QS 세계대학평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 (Quacquarelli Symonds)에 의해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전 세계 4,800여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1,000위까지 순위를 매김. 연구, 교육, 졸업생, 국제화의 4개 영역에서 학계 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교수 1인당 학생 수, 졸업생 평판도, 외국인 교수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의 6개 지표로 평가함.

## V 노동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임.

**고용률:** 만 15–64세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15~64세 인구}} \times 100$$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함.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고용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다른 근로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은 없으나 한국에서는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함.

**사회보험:** 국민의 생활불안(질병, 사고, 실직 등)이나 노후를 대비하여 보험 원리를 적용한 국가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포함됨.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일용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

**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됨.

**저임금 근로자:**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종사상지위:** 취업자의 취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기준의 하나로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포함하는데,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으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 종사자로 구분됨.

**중위임금:** 근로자를 임금수준에 따라 나열했을 때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고임금 근로자의 정 중앙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임금.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임. 최저임금은 노사 및 공익 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

**특수고용:** 사용자와의 관계가 직접고용에 비해 느슨하며 시공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가 있음.

## Ⅵ 소득과 소비

**가계수지:** 각 가정에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돈(명목소득)과 쓴 돈(지출)을 비교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나타낸 것임.

**가계흑자비율(가계흑자율):** 가계의 총 소득에서 소비지출액과 비소비지출액을 뺀 금액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총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 으로 나눈 값.

**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소득은 일정한 소득을 말하고 비경상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을 말함.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됨.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함.

**명목소득:** 측정 당시 화폐액으로 나타낸 소득으로 화폐소득이라고도 함. 명목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계열비교나 국제비교에 적합하지 않음.

**명목소비:** 측정 당시 화폐액으로 나타낸 소비지출로

명목소득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짐.

**비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소득은 일정한 소득을 말하고 비경상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을 말함. 비경상소득에는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퇴직금, 유산, 장학금 등이 포함됨.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가구 간 이전 등 소비지출이나 자산 구입이 아닌 지출.

**사업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

**소득 5분위 배율:**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임. 즉, 도시근로자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임.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소득분위:**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특정 구간으로 등분한 것을 말함.

**소비자물가지수:** 도시가계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소비지출:** 생계나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

**실질소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화폐소득, 즉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소득임.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줄어들게 됨.

**실질소비:** 실질소득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비지출임.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비는 줄어들게 됨.

**이전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 공적 보조금(연금 등)과 사적 보조금을 합한 소득.

**재산소득:** 가구 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예 · 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등이 포함됨.

**주택연금:**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

## Ⅶ 문화와 여가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회를 1년에 1번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문화예술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문화시설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기타 문화시설로 구분됨.

**생활체육:** 직업이 아닌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스포츠 관람률:** 각종 스포츠를 1년에 1군데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시간빈곤층:** 인구 중위 여가시간의 60%(186분/1일) 이하 여가시간을 갖는 사람들.

**여가만족도:** 여가활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있는 여가활용에 대해 종합적인 주관적 만족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

**여가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 의무시간(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그리고 노동 관련 이동시간) 그리고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시간(수면, 식사, 위생 및 치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여가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각종 문화생활과 운동 스포츠 및 야외활동, 컴퓨터와 인터넷활용시간, 취미(취미를 위한 학습시간, 교양강좌시간), 독서와 음악감상, 그밖에 다양한 유희적 활동(음주, 가무, 흡연 등).

**오락문화비:**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도서구입비, 휴가비 등 문화여가생활 지출을 말함.

## Ⅷ 주거와 교통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함.

**보증부월세:**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월세로 지불하는 임대 방식.

**보편적 이동권:** 사회구성원 누구나 모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사글세:** 세입자가 1년 또는 10개월 등 일정기간의 집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지칭함.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 자가가구의 중위 주택가격을 중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 임차가구의 중위 월임대료를 중위 월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임대료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주택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인구 대비 주택호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증가하면 주택 수급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것임.

**주택보급률:**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보통가구수}} \times 100$$

* 보통가구수: 일반가구수에서 비친족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임.
* 주택수: 다가구주택을 1호로 간주함.

**평균통근시간 :** 통근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 통근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의미함.

## Ⅸ 환경

**기후변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기후현상을 말함. 기후변화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변화 등 지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조성의 변화나 지구 표면상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함.

**노케미족:** 화학물질(Chemical)을 거부(No)한다는 의미의 노케미(No-Chemi)에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의 무리'를 뜻하는 족(族)이 합해져 만들어진 신조어로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되도록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임.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지름 10㎛ 이하의 먼지. 사람의 폐로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수질오염:** 인간의 활동이 호수, 강, 해양, 지하수 등의 수질에 끼치는 악영향을 의미함. 수질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량(DO) 등이 있음. BOD 기준에 따라 수질오염도는 1-5급수와 급수 외로 나누어짐.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 물 · 지열 · 강수 ·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임.

**아황산가스($SO_2$):** 석탄과 석유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황분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기체로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임.

**오존:** 산화력과 살균력이 강하고 특히 표백 살균력이 강한 특이한 냄새를 지닌 푸른 기체. 성층권에서 태양 자외선의 광화학 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지상 20㎞ 지점에 가장 많음. 최근 냉매제로 사용되어 온 CFC가 오존층의 오존을 급격히 파괴시켜 남극과 북극 상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의 자외선 양이 증가하여 피부암 발생 증가, 피부 노화 촉진, 농작물 생산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됨.

**온실가스:**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말함.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_6$)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임.

**위해우려제품:**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어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평가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고시한 제품.

**재생 가능 에너지:** 태양이나 소수력, 풍력, 지열 등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얻은 에너지임.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 폐유,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 및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이에 해당됨.

**질소산화물(NOx):**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 중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의 형성과 파괴에 중요한 역할을 함.

**케모포비아(chemophobia):**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과 혐오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해져 만들어진 신조어로 화학성분에 대한 공포를 이르는 말임.

**환경보호지출:** 정부, 기업, 가계가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지출한 금액.

**황산화물(SOx):** 황(S)과 산소의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산화황, 황산, 황산염 등이 이에 해당됨.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로서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여 말라죽게 함.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이에 해당됨.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임. 정유 · 도료 · 도장 공장의 제조와 저장 과정, 자동차 배기가스, 페인트나 접착제와 같은 건축자재,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에서 주로 발생함.

**BOD(Biochemical OxygenDeman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질 속 박테리아가 일정 시간 내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데 소비하는 산소량. BOD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의미함.

**COD(Chemical Oxygen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 COD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의미함.

**총인 농도(Total Phosphorus density, TP):** 하천이나 호소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물 속에 포함된 인의 농도임.

## X 안전

**산업재해:** 직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말함.

**살인범죄율:**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건수.

**외인 사망:**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사망. 외인사망의 3대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임.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함.

**인적 사고:**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고로 시설물이나 기계기구의 비정상적 작동, 인간에 의한 오작동, 화학물질 또는 에너지 과다 노출 등으로 인해 발생함.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대표적임.

**특별법:** 형법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형사사건 또는 특별히 엄하게 다스려야할 사건에 적용되는 법.

**폭력범죄:** 협박 · 폭행 · 상해, 성폭력, 강도(노상강도, 주거침입강도) 등을 포함함.

**형법범죄:**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이 포함됨.

## XI 사회통합

**대인 신뢰:** 사회신뢰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이 그 사회의 구성원 일반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말함.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국제투명성기구가 각국의 공무원과 정치인 부패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지수로 0–10점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며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것을 의미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신뢰 또는 네트워크를 의미함.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회구성원에게 공유된 행동규범과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함.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인이 가족, 친구, 동료, 지인, 이웃 등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정서적, 신체적, 금전적)의 도움을 말함.

**선거투표율:**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투표를 한 사람들의 비율임.

* 선거인: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함.

**주관적 웰빙:** 객관적, 물질적 삶의 풍요나 안정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이 풍요로운 정도를 가리킴. OECD는 주관적 웰빙을 전반적 삶의 만족,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경험,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등 세 차원에 걸쳐 측정함.

#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영역별 논문 주제

| 영 역 | 주 제 | 연도 | 집필자 |
|---|---|---|---|
| 인 구 |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 2008 | 박경숙 |
| |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 2009 | 김두섭 |
| |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 2010 | 김두섭 |
| | 인구 영역의 주요 변화 | 2013 | 김두섭 |
| |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 2014 | 김두섭 |
| |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 2015 | 김두섭 |
| |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 2016 | 김두섭 |
| |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 2008 | 전광희 |
| |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 2008 | 윤인진 |
| |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 2009 | 이상림 |
| |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 2009 | 김두섭 |
| | 혼인 양상의 변화 | 2010 | 김정석 |
| |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 2010 | 김두섭 |
| | 지역별 인구분포와 수도권 인구집중 | 2012 | 최슬기 |
| | 가족의 분산과 가구구성의 변화 | 2012 | 이민아 |
| | 체류 외국인의 증가 | 2012 | 정기선 |
| | 인구고령화의 지역별 차이 | 2013 | 김현식 |
| |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이상자녀수 | 2013 | 송유진 |
| | 이혼의 확산과 이혼자들의 삶 | 2013 | 김정석 |
| |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변화: 국내동향과 국제비교 | 2014 | 계봉오/김두섭 |
| | 국내 인구이동의 특성과 유형 | 2014 | 이희연 |
| |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의 비교 | 2014 | 전광희 |
| | 무자녀 가정의 추이와 특성 | 2015 | 계봉오/김두섭 |
| | 고령화와 노인 삶의 변화 | 2015 | 김주현 |
| |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 2016 | 변미리 |
| |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및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 2016 | 최율/김두섭 |
| 가족과 가구 |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 2008 | 박경숙 |
| |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 2009 | 한경혜 |
| |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 2010 | 한경혜 |
| |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 | 2013 | 한경혜 |
| |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 2014 | 한경혜 |
| |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 2015 | 한경혜 |
| |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 2016 | 한경혜 |

| 영 역 | 주 제 | 연도 | 집필자 |
|---|---|---|---|
| 가족과 가구 |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 2008 | 이선이 |
| |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 2008 | 이성용 |
|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 2009 | 정기선 |
| |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 2009 | 한경혜 |
| |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 2009 | 홍승아 |
| |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 2010 | 진미정 |
| |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 2010 | 이혜경 |
| | 1인가구의 추세와 특색 | 2012 | 이윤석 |
| | 한국의 연령과 부부관계만족도 | 2012 | 이윤석 |
| |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 | 2012 | 송유진 |
| | 맞벌이 부부는 무엇이 다른가 | 2012 | 송유진 |
| | 세대관계의 변화 | 2013 | 한경혜 |
| |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 2013 | 차승은 |
| |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요인 | 2014 | 한경혜 |
| | 여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과 사회적 지원 | 2014 | 한경혜 |
|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 2014 | 홍승아 |
| | 미혼율 증가의 사회적 의미 | 2015 | 한경혜 |
| | 기능 저하 노인의 돌봄과 지원 | 2015 | 정경희 |
| | 가족가치관의 변화 | 2016 | 한경혜 |
| | 분거가족의 실태와 특성 | 2016 | 성미애 |
| 건 강 |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 2008 | 조병희 |
| |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 2009 | 조병희 |
| |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 2010 | 조병희 |
| |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 | 2013 | 조병희 |
| |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 2014 | 조병희 |
| |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 2015 | 조병희 |
| |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 2016 | 조병희 |
| | 나아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 2008 | 정진주 |
| | 과다한 의료비 부담 | 2008 | 권순만 |
| |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 2009 | 조병희 |
| | 자살의 급증과 원인 | 2009 | 김명희 |
| |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 2010 | 김홍수 |
| | 건강불평등 | 2010 | 조병희 |
| |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분포 | 2012 | 김중백 |
| | 의료기관별 만족도 격차 | 2012 | 김중백 |

| 영 역 | 주 제 | 연도 | 집필자 |
|---|---|---|---|
| 건 강 | 우리시대의 병 아토피 질환 | 2012 | 권호장 |
| | 서구형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 2012 | 박재현 |
| | 건강검진의 추이와 실천요인 | 2013 | 조성일 |
| | 음주수준과 건강과의 관계 | 2013 | 김광기 |
| |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 2013 | 장세진 |
| | 흡연율 추세와 담배규제정책의 효과 | 2014 | 조홍준 |
| | 의약품 사용양상 | 2014 | 변진옥 |
| | 사회자본과 건강 | 2014 | 조병희 |
| | 한국인의 정신건강 | 2015 | 조병희 |
| | 대사증후군의 유병 실태와 사회적 비용 | 2015 | 조영태 |
| | 증가하는 신종감염병 | 2016 | 조병희 |
| |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의 변화 | 2016 | 조성현 |
| 교 육 |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 2008 | 강상진 |
| |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 2009 | 강상진 |
| |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 2010 | 강상진 |
| |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와 특성 | 2011 | 김태헌 |
| | 교육 영역의 주요 변화 | 2013 | 김경근 |
| |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 2014 | 김경근 |
| |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 2015 | 김경근 |
| |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 2016 | 김경근 |
| |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 2008 | 김경근 |
| |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 2008 | 강상진 |
| |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 2009 | 김경근 |
| |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 2009 | 김경근 |
| |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 2009 | 채창균 |
| | 교육의 경제적 성과 | 2009 | 강상진 |
| |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 2010 | 김경근 |
| |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 2010 | 강상진 |
| |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 2010 | 김경근 |
| | 취학전 아동 보육 및 교육 | 2011 | 서문희 |
| | 학교급별 학업중단의 실태와 추이 | 2011 | 김경근 |
| | 대학 등록금 추이와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 2011 | 김경근 |
| |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향 | 2011 | 김한별 |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실태 | 2013 | 김경근 |
| |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 2013 | 황여정 |

| 영 역 | 주 제 | 연도 | 집필자 |
|---|---|---|---|
| 교 육 | 학생들의 스트레스 | 2013 | 황여정 |
|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정서적 특성 | 2014 | 김경근 |
| | 청소년의 가정배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 2014 | 황여정 |
| | 가구 교육비 지출 실태 | 2015 | 김성식 |
| | 대졸 취업자의 과잉교육 실태 | 2015 | 채창균 |
| | 학생들의 일상생활 차별 경험 | 2015 | 황여정 |
| | 교육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도 | 2016 | 김경근 |
| |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실태 | 2016 | 황여정 |
| 노 동 |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 2008 | 장지연 |
| |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 2009 | 장지연 |
| | 노동 영역의 주요 변화 | 2013 | 장지연 |
| |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 2014 | 장지연 |
| |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 2015 | 권현지 |
| |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 2016 | 권현지 |
| |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 2008 | 장지연 |
| |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 2008 | 장지연 |
| | 청년층 노동시장 | 2009 | 방하남 |
| | 노사관계의 변화 | 2009 | 방하남 |
| |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 2009 | 방하남 |
| |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 2010 | 박시내 |
|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 2010 | 이규용 |
| |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 2010 | 방하남 |
| | 여성의 취업변화와 근로환경 | 2011 | 홍승아 |
| |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노동시장 은퇴 | 2011 | 박시내 |
| | 근로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임근수준 비교 | 2011 | 박영실/한승훈 |
| | 근로빈곤과 저소득층 소득지원 | 2013 | 장지연 |
| | 최저임금의 준수와 상대적 수준 | 2013 | 전병유 |
| |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위험 | 2014 | 김영옥 |
| |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실태와 시사점 | 2014 | 권혜자 |
| | 노동시장의 질과 고용보호제도 | 2015 | 권현지 |
| | 경제위기와 이직자의 취업이행 | 2015 | 권혜자 |
| | 기업규모 및 원하청에 따른 노동 일터의 격차와 불평등 | 2016 | 전병유 |
| | 일자리 변화의 최근 동향 | 2016 | 권현지 |
| 소득과 소비 |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 2008 | 박찬임 |

| 영 역 | 주 제 | 연도 | 집필자 |
|---|---|---|---|
| 소득과 소비 |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 2009 | 이현송 |
| |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 2010 | 이현송 |
| |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변화 | 2013 | 박정수 |
| |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 2014 | 박정수 |
| |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 2015 | 박정수 |
| |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 2016 | 박정수 |
| |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 2008 | 박찬임 |
| |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 2008 | 박찬임 |
| | 자산의 분포와 구성 | 2009 | 강석훈 |
| | 소득원천별 구성 | 2009 | 강석훈 |
| |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 2009 | 이현송 |
| | 한국 국민의 구매력 국제비교 | 2010 | 정규승 |
| |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 2010 | 이현송 |
| |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 2010 | 유경원 |
| |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변화 | 2011 | 김신호 |
| | 가계 저축률 감소와 그 원인 | 2011 | 김순미 |
| |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 | 2011 | 강석훈 |
| |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 2013 | 김진영 |
| | 소득분배의 지역적 양상 | 2013 | 이정민 |
| | 인구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 2013 | 홍석철 |
| | 가계부채의 변화와 분포 | 2014 | 홍기석 |
| |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변화 | 2014 | 홍석철 |
| | 소득분위별 자산의 분포와 구성 | 2015 | 유경원 |
| | 출생 코호트를 통해 본 소비지출의 변화 | 2015 | 이정민 |
| | 계층별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의 변화 | 2016 | 유경원 |
| |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 2016 | 문성만 |
| 문화와 여가 |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 2008 | 최샛별 |
| |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 2009 | 서우석 |
| |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 2010 | 서우석 |
| |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변화 | 2013 | 서우석 |
| |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 2014 | 서우석 |
| |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 2015 | 서우석 |
| |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 2016 | 서우석 |
| | 문화예술 향유실태 | 2008 | 최샛별 |

| 영 역 | 주 제 | 연도 | 집필자 |
|---|---|---|---|
| 문화와 여가 |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 2008 | 최석호 |
| | 여가생활과 만족도 | 2009 | 서우석 |
| |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 2009 | 이호영 |
| |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 2010 | 심수진 |
| | 인터넷 중독 실태 | 2010 | 전종수 |
| |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 2011 | 윤소영 |
|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의 부상과 확산 | 2011 | 최항섭 |
| | 문화산업의 정체와 성장 | 2011 | 서우석 |
| | 청소년 여가 | 2013 | 서우석 |
| | 생활체육 참여실태 | 2013 | 황선환 |
| |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과 특성 | 2013 | 조현성 |
| | 여행과 삶의 질: 소득분위별 관광경험 차이 | 2014 | 이훈/박정숙 |
| |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삶의 만족도 | 2014 | 심미선 |
| | 청년층 1인가구원의 여가활동 | 2015 | 서우석 |
| | 여가활동의 동반자 | 2015 | 윤소영 |
| | 여가시간의 변화와 격차 | 2016 | 차승은 |
| | 스마트폰 과의존의 실태와 문제 | 2016 | 배 영 |
| 주거와 교통 |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 2008 | 최진호 |
| |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 2009 | 최진호 |
| |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 2010 | 최진호 |
| |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 | 2013 | 손경환 |
| |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 2014 | 손경환 |
| |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 2015 | 장수은 |
| |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 2016 | 장수은 |
| |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 2008 | 김재익 |
| |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 2008 | 최진호 |
| | 주거 빈곤 가구 실태 | 2009 | 최진호 |
| |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 2009 | 김호정 |
| |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 2010 | 이창무 |
| |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 2010 | 최진호 |
| | 수도권 거주자의 출근전쟁 | 2012 | 이재훈 |
| | 주거안정성 | 2012 | 신인철 |
|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빈곤가구의 실태 | 2012 | 장세훈 |
| | 도로의 지역간 불균형 | 2012 | 양광식 |
| |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 실태 | 2013 | 손경환 |

| 영 역 | 주 제 | 연도 | 집필자 |
|---|---|---|---|
| 주거와 교통 | 가구특성과 주거소비 | 2013 | 정의철 |
| | 교통복지실태 | 2013 | 이상민 |
| | 전월세 시장의 변화 | 2014 | 정의철 |
| |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 2014 | 박천규 |
| | 승용차의 대형화와 녹색교통정책의 실태 | 2014 | 김회경 |
| | 아파트 주거 확산의 실태와 전망 | 2015 | 전상인 |
| | 지역 간 교통수단의 고속화와 국민생활의 변화 | 2015 | 장수은/정동재 |
| | 1인가구의 증가와 주택시장 및 주거형태의 변화 | 2016 | 이영성 |
| |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사회적 영향 | 2016 | 장수은 |
| 환 경 |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 2008 | 김선희 |
| | 환경 영역의 주요 변화 | 2013 | 김종호 |
| |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 2014 | 김종호 |
| |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 2015 | 김종호 |
| |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 2016 | 김종호 |
| |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 2008 | 공성용 |
| |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 2008 | 공성용 |
| | 친환경 소비성향 | 2009 | 윤순진 |
| |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 2010 | 강성진 |
| | 기후변화 문제와 대응 추이 | 2011 | 김해동 |
| | 개선된 체감환경, 정체된 친환경 행동 | 2011 | 박희제 |
| | 에너지 소비를 통해 본 한국사회 | 2011 | 박진희 |
| | 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 | 2013 | 조영탁 |
| | 화학물질 노출실태 | 2013 | 신용승 |
| | 미세먼지와 건강 | 2014 | 권호장 |
| |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 2014 | 박창석 |
| | 환경 불평등과 환경 복지 | 2015 | 김종호/추장민 |
| | 생활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의 실태 | 2015 | 신상철 |
| |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 | 2016 | 이미숙 |
| | 미세먼지의 대기농도 현황과 특성 | 2016 | 공성용 |
| 안 전 |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 2008 | 이재열 |
| |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 2009 | 이재열 |
| |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 2010 | 이재열 |
| |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 2012 | 이재열 |
| |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 2013 | 이재열 |

| 영 역 | 주 제 | 연도 | 집필자 |
|---|---|---|---|
| 안 전 |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 2014 | 이재열 |
| |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 2015 | 박두용 |
| |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 2016 | 박두용 |
| |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 2008 | 이재열 |
| | 증가하는 '흉악범죄' | 2008 | 윤옥경 |
| |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 2009 | 박순진 |
| |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 2009 | 민수홍 |
| | 산업재해의 변화 | 2010 | 이경용 |
| |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 2010 | 민수홍 |
| | 청소년 범죄의 발생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 2012 | 민수홍 |
| | 사이버 세계의 그림자 | 2012 | 민수홍 |
| |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012 | 박순진 |
| | 높아지는 재난재해 위험과 응급안전시스템 | 2012 | 박순진 |
| |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유해요인노출 | 2012 | 이경용 |
| |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추세 | 2013 | 민수홍 |
| |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성 | 2013 | 김지선 |
| | 범죄피해의 실태와 변화 | 2014 | 김지선 |
| | 한국의 대형 인적재난 | 2014 | 정지범 |
| | 살인, 강도, 강간의 지역 간 발생률 비교와 변화 | 2015 | 민수홍 |
| |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 2015 | 설재훈 |
| | 산업재해의 발생 추이 | 2016 | 박두용 |
| | 노인 범죄의 실태와 변화 | 2016 | 민수홍 |
| 사회통합 |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 2008 | 이재열 |
| |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 2009 | 이재열 |
| |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 2010 | 장덕진 |
| |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화 | 2013 | 한 준 |
| |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 2014 | 한 준 |
| |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 2015 | 한 준 |
| |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 2016 | 한 준 |
| |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 2008 | 배 영 |
| |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차이 | 2008 | 김 욱 |
| | 가치와 이념 갈등 | 2009 | 강원택 |
| |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 2009 | 장지원 |
| | 정치와 사회 참여 | 2009 | 장덕진 |

| 영 역 | 주 제 | 연도 | 집필자 |
|---|---|---|---|
| 사회통합 | 사회적 신뢰의 수준 | 2010 | 장덕진 |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 2010 | 김병로 |
| | 이타적 행위: 기부와 자원봉사 | 2010 | 이희길 |
| | 한국의 노인자살 | 2012 | 이민아 |
| |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 2012 | 김석호 |
| |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 2012 | 김석호 |
| |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 2012 | 정재기 |
| | 한국의 공정성 | 2012 | 정재기 |
| |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 | 2013 | 한 준 |
| | 투표와 정치참여 | 2013 | 김석호 |
| | 노년층의 사회통합 | 2014 | 김지범 |
| | 자살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 2014 | 박형민 |
| | 세대 간 격차의 수준 | 2015 | 한 준 |
| | 사회적 관용의 수준과 변화 | 2015 | 가상준 |
| |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 2016 | 김희삼 |
| | 정치 태도와 행위의 세대 간 차이 | 2016 | 김석호 |
| (복 지) |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 2008 | 조병희 |
| |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 2008 | 정무권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 2008 | 정무권 |
| | 빈곤층의 분포와 특성 | 2011 | 강신욱 |
| | 노후준비 방법의 변화 | 2011 | 정순둘 |
| |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의 동향 | 2011 | 고경환 |

## 한국의 사회동향 2017 연구진

| | |
|---|---|
| 연구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 연구책임자 |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영역담당 공동연구자 |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br>**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br>**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br>**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br>**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br>**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br>**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br>**장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br>**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br>**박두용**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br>**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편집담당 공동연구자 |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br>**이주희** (통계개발원 사무관)<br>**조은숙** (통계개발원 주무관)<br>**김대훈**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개발실장)<br>**신인철**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기획연구실장)<br>**이상운**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통계자료팀장) |
| 연구간사 | **김월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박상영** (통계개발원) |